

인권정보자료실  
R1.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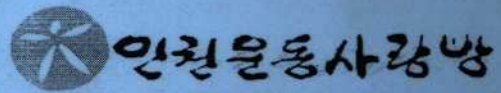
# 인권하루소식

(제2367호 ~ 제2485호)

합본 21호  
(2003년 7월 ~ 12월)

인권하루소식  
(제2367호 ~ 제2485호)

합본 21호  
(2003년 7월 ~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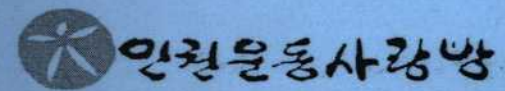


인권운동사랑방

110-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 8-29 3층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인권정보자료실  
R1.1.21



인권운동사랑방



# 용화여고 학생들과 함께 권 '학생인권' 쟁점 네이스 반대 촛불문화제, 학생인권 투쟁 현장 찾아가

'NO NEIS와 정보인권수호를 위한 촛불문화제'가 29일 서울 용화여고 근처 창동 문화마당에서 열렸다.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네이스 반대를 위해 지난 8월 27일부터 매주 수요일 열리고 있는 촛불문화제는 서울 곳곳을 순회하며 어느덧 9회를 맞이했다.

이날 촛불문화제에는 용화여고 학생 80여명과 전교조 조합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네이스 반대와 파면된 용화여고 진용용 교사의 복직을 촉구하는 촛불을 불태웠다.

용화여고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 비판글을 올린 허성해 학생을 퇴학시켜 물의를 빚은 데 이어 지난 9일에는 학생의 인권을 옹호하고 재단비리를 비판해 온 진용용 국어담당 교사를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을 깨우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시켜 '보

복성 인사조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진 교사가 파면된 이래 이 학교 학생들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1백여명이 참여하는 교내집회를 열며 싸우고 있다. 이처럼 반인권적 행정을 일삼고 있는 용화여고 측에 항의하기 위해 이날 촛불문화제도 마련됐다.

무대에 오른 용화여고 최재욱 학생회장은 "모든 학생들이 편하고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회장 자리에 임했는데, 정작 선생님이 쫓겨나고 다른 친구들이 이에 항의하는 상황에서는 혼자만의 생각 뒤에 숨어있었다"며 "앞으로는 선생님이 복귀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해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네이스 반대와 청소년의 권리를 주제로 한 '청소년이 주인이다'와 '현실'이란 두 곡을 경쾌한 랩으로 풀어낸 청소년

랩퍼 박훈식 씨의 공연에 이어 용화여고 사태를 다룬 영상물도 상영됐다. 학생들은 학교 관계자가 나올 때는 아유를 보냈고, 진 교사가 나올 때면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자신의 존재를 잊지 않고 함께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감사하다는 진 교사는 "학생인권을 주장하고 학교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잘못일 수는 없다. 반드시 학교로 돌아갈 것이다"며 결의를 다졌다. 이에 학생들은 "선생님 사랑해요"를 외치며 진 교사를 응원했다. (임국현)

(이면에서 이어짐) 밝지만은 않다.

권 변호사는 "현행 집시법에는 11조뿐 아니라 5조 등 경찰의 자의적 법 해석을 가능케 하는 여러 가지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어 얼마든지 특정 단체나 특정 주제의 집회를 통제할 수 있다"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폭적인 집시법 개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장 집회신고를 통해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당장 삼성해복투가 이날 현재 결정이 나오자마자 삼성본관과 삼성생명 건물 앞 집회신고를 내려고 했을 때, 이미 삼성직원 명의로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캠페인'이 같은 장소에서 향후 1년간 신고돼 있어 집회를 또다시 봉쇄당했다.

집회 원천봉쇄 위한 위장신고 관철 등

헌법재판소가 이번 결정에서 "집회장소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고 하면서도 1백미터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것으로 허용된다"고 밝힌 점도 향후 넘어야 할 장벽이다.

이와 함께 집회·시위의 자유 수준을 현행보다 더욱 후퇴시키려는 갖가지 법 개악 움직임도 저지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집회금지 장소에 '종묘공원'을 추가하는 집시법 개정안 △집회금지구역 1백미터에서 3백미터로 확대하는 집시법 개정안 △초·중·고교와 대학 부근의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집시법 개정안 △집회·시위에서 8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할 시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소음및진동규제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 2003년 11월

### (제2446호 ~ 제2466호)

## "국정원에 더 포악한 무기 들려줘서는 안돼" 민가협 목요집회, 테러방지법 반대 목소리 터져 나와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30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아래 민가협) 목요 집회에 모인 인권사회단체들은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의 권력만을 강화해 주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민가협 회원 서경순 씨는 "국정원이 2001년에는 월드컵을 핑계삼아 졸속으로 입법하려 했다가 국민적 저항으로 무산되었던 테러방지법 제정을 최근 파병정국을 틈타 다시 밀어붙이고 있다"고 할난하고 "국가보안법도 폐지되지 않은 마당에 국민을 억압하는 또 다른 악법이 필요하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정형근 의원과 같이 정보기관에서 인권유린을 일삼던 이가 대테러를 빌미로 국정원의 권한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천만부당한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정원이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지 않고 스피드 슬랩 이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한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상임활동가는 "군대출동, 국가대테러대책회의 설립 등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국정원에 집중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은 국가 안전이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공포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테러가 과연 무엇이며 왜 일어나는가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등 중동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테러의 양상을 보면 테러가 '강대국에 대한 약소국의 절망적 항거'임을 일깨워 준다며 "국가기관의 물리력 강화가 결코 테러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국회가 이러한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주목할지, 아니면 국정원에 더 포악한 무기를 들려주는 길을 선택할지 주목된다. (김정아)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11월 1일(토)

제 244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20만 이주노동자 '인간사냥' 앞뒤

### 31일 등록 마감·강제추방시 생존권 박탈·정치적 박해 위험도

'11월 16일 이후 3년 이상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출국을 강력하게 시행한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체류자를 신고해 단속추방에 협조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 지급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조치 내용이다. 31일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등록 기간이 마감됨에 따라,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된 20여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은 이 같은 '인간사냥'에 내몰리게 됐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선전국장 쏜나 씨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조치가 발표되면서 이를 두려워한 사업주들이 무더기로 해고를 자행하고 있다. 길거리로 내몰린 이주노동자들은 단속추방에 대한 공포 속에서 공단밀집지역이 아닌 외진 곳으로 계속 숨어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쏜나 씨는 또 "강제추방은 인간사냥이다. 사람들을 토끼몰이 하듯이 몰아서 잡아가고, 공포 속에서 쫓겨다니게 만든다. 불법체류자로 규정된 이들에게 가해질 구타와 폭행, 폭언은 너무나 일상적이 될 것"이라며 이주노동자들 앞에 놓인 공포스러운 현실을 경고했다.

버마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의 사린 씨는 "한국에 와 있는 3천여 명의 버마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이 4년 이상 체류한 상태"라며 "지금 버마에서는 군부독재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는커녕 생명의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강제추방은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이러

한 절박한 현실 속으로 다시금 내던져 버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더구나 "버마대사관에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1년에 50만원씩 세금을 강요하고 있으며, 재입국 시에는 150만원~200만원 까지 돈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본국에 가족들이 남겨져 있는 형편에서 이를 거부하기는 힘들다"며 버마 이주

노동자들이 남아있기도 귀국하기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일하고 있는 '피난처' 이호택 대표는 "대표적 인권 침해 국가인 이란, 버마, 파키스탄, 시리아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은 강제추방될 경우 자국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임금체불과 인권침해를 매일같이 겪어야 했던 이주노동자들에게 이제 남겨진 것은 빚더미와 강제추방의 위협뿐이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갈 본국에서는 가혹한 경제난과 정치적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 (양승훈)

〈논평〉

### 역시 무서운 국정원

감시의 명수, 국정원의 꼬리가 또 다시 잡혔다. 파키스탄 출신 귀화 한국인이 국정원으로부터 '정보원' 역할을 강요받다 이 같은 사실을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것이다. 국정원이 이슬람사원에 모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동향을 알아오라 했단다. 테러리스트를 잡아주면 집을 사주겠다고 했단다.

힘없는 사람 약점 잡아 '프락치' 삼으려 하는 국정원의 못된 버릇은 여전하다. "통상적인 동향 파악이었다"고 뻔뻔스런 혀를 내두르는 것 역시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대체 국정원이 과거에 비해 무엇이 달라졌단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감시 대상 목록에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까지도 추가되었다는 점인가? 이제껏 '대공수사'로 먹고살았다면, 이제는 '대테러'란 먹이 하나를 더 찾아냈다는 점인가?

이슬람계 외국인 노동자란 이유로 테러 위험 인물로 낙인찍고 감시대상으로 삼는 것은 극심한 인종주의가 관철된 나치 독일을 연상케 한다. 미국에서도 9·11 이후 아랍계 외국인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관리한다던데, 이런 것마저 미국을 쫓아 하는 건가? 이번에 덜미가 잡힌 곳은 안산과 부평이지만, 다른 곳이라고 국정원의 감시망으로부터 안전지대였을 리 없다. '대테러'를 빌미로 그들 손에 들어간 정보가 무엇이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국정원이 '해외와의 정보교류'를 부쩍 강조하는 걸 보면, 외국의 정보기관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국정원은 이것으로도 성이 차지 않는 모양이다. 테러방지법을 기어 이 만들어 다른 행정기관의 정보업무까지 장악하고 대테러활동 지휘하며 목소리를 키우려고 하는 걸 보니 말이다. 통신검열 갈자루 휘두르는 데 '반국가활동'이란 핑계 하나로 모자라 '테러'까지 포함시키려는 걸 보니 말이다. '테러 우려'를 빌미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규제제한까지 가지려고 하는 걸 보니 말이다. 소름이 돋는다. 역시 무서운 국정원이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로 고인의 뜻 이어가겠습니다. 고 이용석 님의 명복을 빕니다.



# 이달의 인권 (2003년 10월)

## 흐름과 쟁점

### 1. 정부와 자본이 '기획'한 노동자들의 죽음

손배·가압류를 악용한 노조 압살의 희생자들이 또 다시 줄을 이었다.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은 129일째 홀로 고공농성 중이던 지프크레인에서 목을 뺏고(10/17), 세월테크 이해남 지부장은 분신으로 향거했다(10/23). 뒤이어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이용석 광주전남본부장이 분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엄혹한 현실을 세상에 알렸다(10/26). 이에 민주노총은 "살아서 함께 싸우자"고 호소하면서도 있던 자살 향거를 부른 정권의 노동탄압정책과 비정규직 차별정책을 강력 규탄했다(10/27). 범국민대책위와 인권단체들도 시국농성으로 노동자들의 절규에 연대했다(10/29). 그러나 이러한 외침을 철저히 외면한 채, 3개부처 장관은 손배·가압류 납용을 억제하고 관련법을 마련하겠다는 미봉책만을 제시해 "정부부터 정규직화와 가압류 취하에 앞장서라"는 노동자들의 분노를 샀다(10/29). '기획 분신' 발언으로 파문을 빚은 영등포경찰서장이 결국 직위해제 되었지만, 이것으로 죽어간 이들의 아픔을 위로할 수는 없었다(10/30).

### 2. 점령군 보내며 부끄러운 줄도 모르나

이라크 정부조사단에 참여했던 박건영 교수가 조사활동이 부실했음을 알리자, 조사단 파견이 '파병을 위한 수순 밟기'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10/6). 이에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고, 인권단체들은 '추가 조사단 대신 이라크의 자치와 재건을 위한 민간지원단 파견'을 주장했다(10/8). 이라크 점령과 파병에 반대하는 함성이 전국 곳곳서 메아리쳤으나(10/11), 유엔안보리에서는 미군 중심의 다국적군 편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10/16). 이는 "점령군의 확대에 불과하다"는 각계의 비판에도(10/17), 대통령은 파병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한 지 단 하루만에 파병을 전격 결정했다(10/18). 러·프·독 3국과 파키스탄이 파병을 거부한 데 이어 방글라데시, 태국, 터키 등도 잇따라 파병 철회 뜻을 비쳤지만, 한국정부만은 '나홀로 파병'을 고수하고 2차 이라크 조사단을 파견했다(10/31).

### 3. 부활한 전향제도, 으르렁대는 국가보안법

송두윌 교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그의 추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자, '교수·학술단체 대대위'는 '추방과 전향을 전제로 한 수용'에 모두 반대한다고 밝혔다(10/7). 인터넷에서도 국가보안법과 송교수 처벌에 반대하는 온라인 1인시위가 시작됐다(10/9). 검찰 수사가 송교수 저서·강연의 이적성 여부로까지 확대된 가운데(10/10), 인권단체들은 송교수를 '간첩'으로 모는 여론제 판과 검찰의 '전향서' 강요를 강력 규탄했다(10/14). 송 교수가 노동당 탈당과 헌법 준수의 뜻을 밝혔음에도(10/14), 보수언론들은 보다 철저히 '전향'하라고 으르렁댔다(10/15). 송교수가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10/22), 석방을 요구하는 1000인 선언이 발표됐다(10/23). 대한변협은 검찰이 송교수의 전향을 유도하고 있다는 진정을 받아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10/30), 서울지법은 검찰의 변호인 입회 거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10/31).

### 4. 국정원이 쏘아올린 '감시 위성',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내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거세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엠네스티도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시키는 테러방지법의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10/10). 국가인권위원회도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원안보다 더 개악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제정 반대 의견을 채택했다(10/22). 비판이 이어지자 국회 정보위원회는 11월 3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10/28).

### 논평

- 송두윌을 국가보안법의 제물로 삼지 말라 (10.11)
- 유엔안보리 결의안과 이라크 점령군 파병 (10.18)

### 인권이야기

- 손상열 - 전쟁을 거부할 권리와 전쟁세 거부운동 (10.7)
- 최은아 -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는 인권운동 (10.14)
- 박하순 - 죽어간 자들의 가장 진실했던 순간 (10.28)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시디롬」 (10.11)
-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들」 (10.24)

### 기획연재 -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 ③ 구조조정 정책, 저임금·고용불안 부추겨 (10.2)
- ④ "정부부터 비정규직 없애라" (10.9)

### 기획 -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 ① 세계를 휩쓴 광기, '테러와의 전쟁' (10.15)
- ② 테러방지법이 약속하는 '공포사회의 테러' (10.17)
- ③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 새 날개 단다 (10.23)
- ④ 테러로부터의 안전, 평등과 평화로부터 온다 (10.28)

###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전 국토가 노예특구 될 때까지 침묵할 셈인가 (10.10)
- 학원의 돈벌 자유에 외면당한 청소년 인권 (10.17)

### 현장

- 합법화 시한 한 달 앞둔 이주노동자들을 만나다: 불안과 분노에 떠는 이주노동자들(10.2)
- 김주익 지회장 떠나보낸 한진중공업: '보람과 미래' 대신 죽음 내몬 탄압만(10.21)
- 10일째 맞은 삼성생명 해고자 단식농성: "이번에는 길고 긴 투쟁의 끝을 봐야지요"(10.23)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11월 4일(화)

제 244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KAL기 실종사건, 안기부 조작 의혹”

### 대책위·가족회, 진상규명 촉구 천주교 신부 115인 선언 발표

1987년 대선 정국을 뒤흔들었던 KAL858기 '실종'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움직임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지난 2001년 조직된 '김현희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지난 16년 동안 진상규명에 매달려왔던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김현희 KAL858기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천주교 신부 115인 선언'을 발표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전열을 다시 가다듬었다.

1987년 당시 바그다드에서 서울로 향하던 KAL858기는 버마 상공에서 갑자기 종적을 감춰 지금까지 시신은커녕 잔해 한 조각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탑승자는 승무원과 승객을 합해 모두 115명. 당시 정부는 "북한의 김정일이 88올림픽을 방해하려고 북한 공작원 김현희에게 친필 지령을 내려 폭파시킨 것"이라고 발표하고 시신만이라도 찾아달라는 가족들의 울부짖음을 묵살한 채 김현희의 자백만으로 수사를 종결짓는다.

대책위와 가족들은 우선 KAL기 '폭파범'으로 내세워진 김현희라는 인물에 강한 의혹을 던진다. 정부가 제시한 △김현희의 어릴 적 사진의 귀 모양(동그란 귀)과 체포 당시의 모양(칼귀)이 전혀 다른 점 △사필진술서에서 사용한 단어가 북한에서 쓰지 않는 단어라는 점 △김현희의 아버지 양골라주제 북한 무역대표부 수산대표 김원석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점 등은 김현희가 '조작된 북한 공작원'이라는 의혹을 뒷받침해준다.

또한 버마의 카렌족 거주 지역이 유

력한 불시착 지역이었는데도 갑자기 조사지역을 안다만 해역으로 바꿔버리고 이마저 10일 동안의 짧은 조사로 끝낸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

KAL858기가 '폭파'되었다는 것도 아무 증거 없는 정부의 일방적 '발표'였을 뿐이다. 당시 이란-이라크전이 벌어지고 있던 바그다드의 삼엄한 경비 속에서 폭발물을 비행기에 장착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폭발물의 종류와 양도 항공기를 흔적 없이 가루로 만들어버릴 만큼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대책위와 가족들은 바로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 역시 '수지김

사건'처럼 안기부의 조작극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이며 수사책임자였던 현 정형근 의원을 비롯해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 등 관련 책임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진상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책위와 가족들은 자체 진상규명을 위해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서울지법이 이를 기각해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이날 선언에 참여한 대책위 집행위원장 신성국 신부는 "최근 대책위 활동이 활발해지자 국정원 충북지부장이 내가 소속된 천주교구 주교를 찾아가 '이미 끝난 사건이고 반박 내용도 북한 주장과 같다'며 대책위 활동을 중단시킬 것을 종용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의혹투성이인 사건을 애써 묻어버리고 하는 국정원의 태도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김정아)

## 법무부·국방부도 “테러방지법안 우려”

### 국회 정보위 공청회 열어...유관 정부부처내 이견 확인

현재 국정원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해 유관 정부부처내에서조차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테러방지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법무부 김경수 검찰3과장은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가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테러방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아랍권의 동향이나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상존하고 있는 북한의 테러 위협에서 찾아야 한다"는 정형근 의원(정보위 한나라당 간사)의 주장에 대해 김 검찰3과장은 "북한의 테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이미 마련돼 있는데 테러방지법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과잉입법이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테러위험의 환경이 미국이나 영국과는 다르고 국가보안법마저 마련돼 있는 상태에서 굳이 '북한의 테러 위협'을 내세워 테러방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는 주장인 것. 김 3과장은 또 "2조 '대테러활동'의 개념, 법안 곳곳에 등장하는 '관계기관'의 개념, 8조 '외국인의 동향 및 테러자금 지원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에서의 '확인'의 개념 등이 불분명해 대테러기구가 방대한 권한을 갖게 될 위험성이 있다"면서 남용의 우려가 있는 조항들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 3과장은 "국정원법으로 설치된 국정원 내에 독립적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대테러센터를 테러방지법을 통해 두는 것은 법 체계상 (=2면에 계속)



### ●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 탈안보론적 사고와 실천

전통적으로 안보란 "영토 혹은 그 영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국가는 이를 위해 군사적 수단을 포함해 여러 가지 수단들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간단한 정의와는 달리, 안보론은 매우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아무리 의미 있는 사회적 논쟁이나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정부가 '안보' 혹은 '국익'이라는 말만 들고나오면, 사회적 논쟁과 투쟁은 여지없이 격파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정치세력들 또한 국익이나 국가안보에 대해 어떤 나름의 답변을 갖고 있지 못하면 책임성 없는 정치주체로 치부되곤 한다.

안보론의 효과는 올 초 파병반대 투쟁에서도 드러났다. 미국의 이라크전쟁에는 반대하지만, 한국군 파병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시민들의 이중적 태도는 어디에서 기인했는가? 나는 당시 불거져 나온 북핵문제의 해결을 운운하며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과 파병이 불가피하다고 설교했던 정부의 안보론이 먹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전쟁은 반대하지만 파병에는 찬성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론조사에서 그 이유를 '안보'와 '국익'에서 찾은 바 있다.

안보론은 안보결정권자로서 국가를 강조하고, 그 수단으로서의 군사력을 강조한다. 이것이 안보론이 국가주의나 군사주의와 서로 공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또한 안보론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특정한 형태로 재구성하는 젠더 위계체계와도 공명한다. 예를 들어, 가부장제가 형성시키는 '사내다움'이라는 남성성은 안보론이 설교하는 '전쟁영웅의 이미지'나 '어머니와 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남성전사'의 이미지와 매우 친화적이다.

나아가 안보론은 이 사회에 뿌리박혀 있는 여러 차별의식과도 공명할 수밖에 없다. 안보론의 논리 회로는 나와 타자의 분리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가 아닌 타자의 존재와 활동을 위협적인 내지 공포스러운 무엇으로 부각시킨다. 그리하여 위협과 공포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결국 힘과 강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안보론의 논리 회로는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들을 빗대어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논리, 이주노동자들을 빗대어 시민과 비시민을 나누는 논리가 안보론의 논리 회로와 닮아있다.

'국익'과 '안보' 논리로 치장된 이라크 추가 파병을 대면하고 있는 우리에게, 탈'안보론'적 실천을 기획하는 일은 반전운동의 또 하나의 과제로 사고되어야 한다. 물론 그 첫걸음은 '안전'을 그들이 아닌 우리와 이라크 민중의 입장에서 다시 정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일상 속에 뿌리박힌 여러 안보론의 논리 회로들을 해체하는 인권운동이 함께 해야 한다. (손상열 남은 평화인권연대 활동가입니다.)

(이면에서 이어짐) 맞지 않으며, 차라리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에서 떼어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대테러센터에 '대테러활동의 기획·지도·조정' 권한을 주는 것도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주간인권흐름

(2003년 10월 27일 ~ 11월 3일)

#### 1. 간다, 총파업으로!

세원테크 부지회장 등 구속자 3인, 대구구치소에서 "노조 탄압 중지" 단식농성 돌입(10.27) / 한진중공업 조합원 곡재규 씨, 김주의 지회장 목맨 크레인 옆 제4도크 바닥으로 떨어져 숨져...파업 불참 죄책감으로 자살 추정(10.30) / 분신 후 치료받던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이용석 광주전남본부장 끝내 숨져(10.31) /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투쟁계획 결의...9일 10만 노동자대회, 12일 전 조직 총파업(10.31) / 민주노동당 당대회 비상시국선언, "노동총파업" 결의(11.1) / 노동자 학생 2000여 명 '노동탄압반대·이라크파병반대 범국민대회'로 결집...경찰 강경 진압(11.1) / 경제5단체, "노동계가 손배·가압류 폐지 요구하며 총파업 계획하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손배·가압류 제한하려는 정부방침은 노조의 불법행위 부추길 것"(11.3)

#### 2. 이라크 '저항의 날들'

이라크 저항세력, 국제적십자 바그다드 사무소와 경찰서 등 동시다발 공격...43명 사망 200여 명 부상(10.27) / 팔루자 경찰서 차량폭탄공격 받아 6명 사망(10.28) / 바그다드 중심부 박격포 공격, 바그다드 대학 구내에서도 터져...키르쿠크 미군소소 로켓포 공격(10.28) / 모술 미군기지 로켓포 공격받아(10.30) / 유엔, 외국인 직원 바그다드에서 완전 철수 결정(10.30) / 이라크 반미시위대 미군과 충돌, 이라크인 14명 사망(10.31) / 폴란드인 여론조사 결과, 57%가 폴란드 부대의 이라크 주둔 '반대'(10.31) / 부시 미 대통령 철군 주장 일축... "조기 철군은 테러분자들에게는 용기를, 미국에게는 위협 가중"(11.1) / 미군 치누크 헬기 격추, 15명 사망 21명 부상(11.2) / 정부, 미국에 '파병 협의단' 파견하기로...4일 출국 예정(11.2)

또 다른 참고인으로 나온 국방부 법무과장 고석 대령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의 군사작전의 효율적 수행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테러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특수부대 요청시 군통수권 체계에 혼란이 와서는 안 된다"고 말해 대테러센터의 장인 국정원장에게 특수부대 출동 요청권을 부여하는 현 법안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정형근 의원과 함승희 의원(정보위 민주당 간사)은 테러방지법안에 반대 의견을 밝힌 진술인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질문의 형식을 빈 반론'을 부여 반축을 했다. 두 의원은 특히 '법안에는 별 문제가 없으며 테러예방을 위해 정보기관인 국정원 내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 일상불란한 대테러활동의 수행을 위해 테러방지법을 별도 제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해 공청회 개최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나마 김덕규 정보위원장(열린우리당)이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폭넓게 의견을 듣고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것만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우려하는 이들에게 작은 위안이 됐다.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개념조작 그만하고 파병 철회하라"

### 파병반대농성 돌입...국회의원 37명도 "전투병 파병 반대"

"명분 없는 침략전쟁에 앞장서서 자존과 독립을 위해 싸우는 이라크 시민들과 총부리를 맞대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이 국제사회의 비난과 냉소 속에 이유도 모르고 피를 흘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민주적 힘과 자주 평화의 열망으로 미국의 파병압력을 막아내고 노무현 정부의 무모한 파병결정을 반드시 철회시킵시다."

이라크 추가 파병의 규모와 성격, 지역과 시기 등 실무 문제를 미국과 논의하기 위한 정부의 파병협의단이 4일 오전 출국한 가운데, 360여개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아래 비상국민행동)은 같은 날 정부의 파병 결정 철회를 촉구하며 서울역에서 비상시국농성에 돌입했다.

#### 파병반대 시국농성 돌입

비상국민행동은 '이라크 파병반대 평화캠프'를 설치하며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는 한국정부의 굴종적 태도를 비롯하여 하등, 너나 없이 이라크 파병을 거부하고 심지어 일부 파견되었던 병력들도 철수하고 있다"면서 "나홀로 파병'으로 확인되는 한국정부의 근시안적인 굴종적 외교는 또 다시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한국과 함께 대규모 파병을 요구했던 인도와 파키스탄은 일찌감치 파병 거부 의사를 밝혔고, 터키 역시 지난달 말 파병 포기 쪽으로 돌아설 것임을 시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만이 파병을 고수하는 굴종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비상국민행동은 또 최근 미군은 물론

국제기구와 서방구호단체들, 친미성향의 이라크 인사들에 대해서까지 저항세력의 공격이 계속되고 공격의 내용도 더욱 정교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라크 시민들은 약탈자인 점령군의 편에서 재건이니 평화니 하는 말장난을 하지 말고 어서 이라크를 떠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노무현 정부는 숫자놀음과 개념조작으로 명백하게 예견되는 현실을 숨기고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차라리 민간긴급구호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이라크의 진정한 재건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파병 아닌 민간구호활동 지원해야"

기자회견에 참석한 천영세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정부는 미국에 실무협상단을 파견하고 오는 17-18일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럽스펠드 미 국방장관과 파병문제를 최종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전투병과 비전투병을 구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어떤 형태의 파병이든 온 국민의 힘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향후 비상국민행동은 파병반대 평화캠프를 중심으로 집중적 투쟁을 벌여나가는 한편, 오는 15일을 '파병결정 철회 총결기의 날'로 선포하고 서울시청 앞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파병반대 동시다발 집회를 열 예정이다.

#### 15일 파병결정 철회 총결기의 날

한편, 이날 김영환(민주당), 김성호

2003년 11월 5일(수)  
제 244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열린우리당), 김홍신(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37명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가닥을 잡고 있는) 혼성부대 또한 사실상 전투병과 마찬가지로"면서 "정부가 전투병이나 혼성부대 파병을 추진할 경우 국회의동의 거부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국제사회가 외면하고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하는 명분없는 전쟁에 우리 정부만 전투병을 파병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우리의 국익을 내세워 이라크 국민들에게 총을 들이대는 전투병 파병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성명에 참여한 의원들 대부분은 올해 초 파병 논의 당시 '비전투병 파병도 안된다'는 파병 절대 불가론의 입장을 취한 바 있다.

#### 의원 37명 "혼성부대 파병도 반대"

이에 대해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그 동안 정계개편의 소용돌이 속에서 침묵하고 있던 반전평화 의원들의 목소리가 되살아나고 조직되고 있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다른 국회의원들도 책임있는 자세로 파병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실장은 또 "이번 성명 발표를 계기로 전투병 파병 결정을 철회시켜내고 이라크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지원이 무엇인지 찾아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침묵하는 국회의원들 입 열어야"

지난 3일 <문화일보>에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가 파병에 반대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응답자의 52.0%에 달했다. 이처럼 국민 여론도 '추가 파병 반대' 쪽으로 돌아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고 실무협상단을 미국에 파견하든 등 파병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배경내)



# 다시 빼앗긴 '집회·시위의 성역'

## 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위장 집회신고 기승

그 동안 '집회·시위의 성역'으로 여겨져 왔던 '대사관 주위 100미터 이내' 공간들이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민들의 품으로 되돌아오게 했더니 잇따른 위장 집회신고로 다시 빼앗기고 있다.

현재 미 대사관이 위치해 있는 블록은 '반핵반침공민대회'와 '민주참여네 티준연대'라는 보수단체에 의해 2007년까지 행진이 예정되어 있으며, 미 대사관 뒤편에 자리한 이머빌딩과 대립빌딩 앞은 각각 해당건물 사업주에 의하여 2004년 말까지 집회가 잡혀있다. 철레대사관이 들어서 있어 그 동안 집회·시위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흥국생명 빌딩 앞 역시 사측의 '자사 상품 판매를 위한 직원 결의대회'가 내년 말까지 잡혀 있는 상태다.

삼성생명과 삼성본관 앞에서 강제 정리해고에 항의하는 집회·시위를 개최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 이번 현재 결정을 이끌어냈던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정작 당일 삼성측이 내년 말까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캠페인'이라는 명목으로 집회신고를 미리 접수하는 바람에 삼성건물 앞 집회를 원천봉쇄 당했다.

그러나 신고된 대로라면 지난 1일부터 열렸어야 할 이들 집회·시위는 지난 3일 조선일보 건물 앞에서 개최된 전국 언론노동조합의 집회를 제외하고는 4일 오후 현재까지 어떤 곳에서도 열리지 않고 있다. 이처럼 실제로는 열리지 않는 허위 집회·시위 신고가 1년이 넘는 장기간 접수돼 있는 실정이다.

장기간 집회·시위 장소를 독점하기 위한 허위 집회신고가 남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민주노동당 법률위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국가기관, 관변단체, 보수시민단체에 의한 위장 집회 신고가 만연하고 있어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방어적인 목적으로 안정적인 장소 확보를 위해 또다시 장기 신고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조선일보사와 동아일보사는 각각 내년 말까지 '조선일보 홍보 캠페인'과 '사육주

변 환경정비' 명목으로 사육주위에 집회신고를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특정 단체 주최나 특정 주제의 집회를 봉쇄하기 위한 위장 집회 신고와 이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8조 2항에서 발견된다. 이 조항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둘 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으로 보아서도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00년 이전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는 경찰이 집회 신고를 접수할 때 장기간 집회를 일정하게 사전조율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조항이 본격적으로 악용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0년 아셈(ASEM)대회를 전후해서부터다. 권 변호사는 "아셈대회 당시 경찰 당국의 권고로 회의장 주변 기업들이 장기간

집회를 신고하면서부터 집시법의 맹점이 터지기 시작했다"며 현 사태에 대한 경찰의 책임을 묻고, "집시법 8조 2항을 합리적으로 해석해 특정장소에서 동시집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1년 인권사회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한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는 실제 집회를 개최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집회신고에 대해 집회방해죄를 적용,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반면 지난 2001년 11월 박종희 의원(한나라당)에 의해 발의돼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중인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와 시위 기간을 1회당 7일로 한정하고, 이를 취소하지 않고 개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 기간동안 동일목적의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민변의 김도형 변호사는 "이번 현재 결정을 계기로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다 많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합의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국현)

### "유엔이 인권 위협하는 대테러조치 감독하라"

#### 국제인권단체들 공동선언 채택...유엔 감독 메커니즘 설치 촉구

국제인권단체들이 최근 테러와의 전쟁을 발미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와 인권보장 수준의 후퇴를 제어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감독 메커니즘 설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제법률가위원회(ICJ)와 국제앰네스티, 인권감시(HRW) 등 12개 국제인권단체들은 지난달 31일 '인권과 반테러에 관한 국제 감독 메커니즘의 필요성에 관한 공동 선언'을 발표하고, 유엔이 나서 인권에 관한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국가들의 행위를 감독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 자료 3-4면>

국제인권단체들은 선언에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국가들이 국제인권법 등 국제법적 의무에 배치되는 각종 조치들을 채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어떠한 국가도 테러행위가 가진 사악한 성격과 극도의 위험성을 국제법상의 의무 위반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들 국제인권단체들은 내년 3월과 4월에 열리는 60차 유엔인권위원회가 '인권과 테러와의 전쟁' 문제에 관한 독립적 감독 메커니즘의 설치를 최우선적인 의제로 다루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세계 각국과 국제 비정부기구들의 서명 참여를 열어두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대테러활동을 발미로 인권을 크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회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배경내)

<자료> 국제인권단체 '테러와의 전쟁과 인권'에 관한 공동 선언

# 인권과 반테러 문제에 관한 국제 감독 메커니즘의 필요성에 관한 공동선언

이 문서에 서명한 우리 비정부기구들은

모든 국가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보호, 그리고 향상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을 고려하고,

2002년 12월 18일의 유엔총회 결의 57/219호, 2003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456호와 2003년 4월 25일 유엔인권위원회 결의 2003/68호가 국가가 취한 어떠한 대테러조치도 국제법, 특히 국제인권법과 난민법, 인도법에 따른 의무에 부합하도록 해야 함을 확인하고 있음을 상기하며,

모든 국가가 반테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갖고 있음을 유념하면서도, 각국이 그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인권법과 국제인도법, 난민법, 법의 지배 원칙과 형법상의 원칙들로부터 파생되는 의무들을 비롯하여 국제법상의 다른 모든 의무들 또한 명백히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어떠한 국가도 테러행위가 가진 사악한 성격과 극도의 위험성을 국제법상의 의무 위반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반테러조치들 못지 않게 국제법상 의무를 파생시키는 기준들 역시 인간의 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국가들이 인권법과 국제인도법, 난민법, 법의 지배 원칙과 형법상의 원칙들을 존중해야 할 국제적 의무에 명백히 배치되는 조치들을 채택 혹은 발표하고 있는 현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각국 정부에 의해 채택 혹은 구상되고 있는 특정한 반테러조치들, 그 중에서도 특히 사법심사 없는 행정명령에 따른 구금 조치; 장기간의 독방 감금; 강제불송환 원칙이나 망명에 관련

된 원칙들을 위반하면서 고문당할 위험에 놓인 사람들을 이송, 송환, 인도, 입국 금지 또는 추방하는 조치; '테러리즘' 또는 '테러리스트 단체'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법적 원칙들을 위반하고 기본적 자유를 행사하는 합법적 행위를 범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치;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와 처벌, 생명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 보호장치의 제거; 공정한 재판과 결사의 자유, 기본적 노동권, 망명권과 비차별의 원칙 등을 침해하는 조치의 채택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식해 왔거나 향후 침식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하며,

수많은 특별절차 메커니즘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특정 반테러조치들이 인권옹호자, 이주민, 난민신청인, 난민, 국가적·민족적·종교적·언어적 소수자들, 정치활동가들과 언론인들의 권리 향유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 결과들에 대해서도 우려하며,

여러 유엔 인권조약 기구들과 유엔 인권위원회의 특별절차 메커니즘이 반테러조치들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감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 고무되고, 특히 시민·정치적권에 관한 국제규약 4조에 관한 자유권 위원회(인권이사회)의 일반논평 29호; 조약상 당사국의 의무는 결코 유보될 수 없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는 2001년 11월 22일 고문방지위원회의 성명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인종차별과 반테러조치에 관한 성명서; 많은 나라에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인권의 실질적 향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법률, 조치들이 잇따라 채택되고 있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2003년 6월 27일 특별보고관들의 공동성명서가 가진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국가가 각 인권조약의 당사국은 아니기에 인권조약에 대한 감독체계가 전세계를 포괄하지는 못하며, 조약기구의 활동이 보고서 제출 주기에 따라 제약을 받고 있어 시의적절한 감독을 하기 힘들며, 그리하여 일례로 자유권 위원회(인권이사회)의 경우 일년에 기껏해야 15개국의 보고서만을 검토할 수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며,

유엔인권위원회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주제별 특별절차에 따른 감독도 그 임무의 성격이 제한적이고 특수화되어 있어 크게 제한당하고 있음을 또한 고려하며,

'인권 향상과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가 임명한 테러리즘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가 양자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과 소위원회가 결의 2003/15호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정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인권기준과 반테러조치의 양립가능성을 추가 연구하기로 했다는 점에 고무받으면서도, 현재 위임받은 임무와 권한이 제한돼 있는 소위원회가 특정 국가에 대한 감독을 수행할 수는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하며,

유엔총회 결의 57/219호와 유엔인권위원회 결의 2003/68호에 따라 인권 고등판무관이 반테러조치를 취할 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상하고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에 관한 일반 권고를 발표할 것을 요구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하여 인권고등판무관실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73호 6항에 따른 보고서 제출을 위한 지침 및 세부지침'과 '대테러활동 시 인권 보호에 관한 유엔과 지역기구의 법체계 요약' 등 이미 취한 조치들을 환영하며,

인권과 반테러조치와 관련하여 지역적 차원에서 기울인 다양한 노력, 특히 유럽의회 각료위원회의 '인권과 테러와



의 전쟁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미주인권위원회의 '테러리즘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에 대해 흡족하게 생각하나, 대다수 국가들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지역 감독 메커니즘도 활용할 수 없으며, 기존의 정부간 지역 인권체제들 내에는 각국의 반테러조치가 국제인권 의무와 규범에 부합하는지를 지역적 차원에서 감독할 메커니즘이나 절차가 없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반테러위원회가 지금까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인권적 분석을 수용하길 거부했고, 다양한 전문 자문진 가운데 한 명의 인권 전문가조차 임명하지 않았으며, 유엔 총회와 유엔인권위원회는 물론 다른 어떠한 유엔기관도 이 분야에서 각 회원국들이 취한 조치들을 검토할 수 있는 특정한 임무를 부여받은 인권 감독 메커니즘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실망하며,

각국이 취한 국내의 반테러조치들, 특히 2001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73호의 이행과 관련된 조치들이 국제규범과 인권에 부합하는지를 감독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유엔 메커니즘이나 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인권조약기구들과 유엔인권위원회의 특별절차 메커니즘에 따라 실행된 감독 내용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깊이 우려하며,

1.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채택하거나 구상하고 있는 국내 반테러조치들이 국제규범과 인권의무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지원할 유엔 메커니즘의 설치가 긴급하고 필수불가결함을 강하게 확신한다.

2. 2004년 60차 유엔인권위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인권과 반테러조치 문제에 관한 독립적 메커니즘을 설립할 것을 촉구한다.

3. 유엔인권위원회가 설립될 메커니

즘에 각국의 대테러 활동이 국제인권 의무에 부합하도록 감독하고 지원하는 임무를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

4. 포괄적인 인권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그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현장 방문(situ visits)을 실시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b)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73호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각국이 인권적 의무를 보다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반테러위원회와 대화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c) 자유권위원회(인권이사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사회권위원회 등 모든 관련 조약기구들의 분석과 견해, 권고를 고려하며 연관지어 활동해야 한다.

(d) 유엔인권위원회와 인권위원회의 특별절차, 인권의 향상과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를 비롯하여 유엔현장에 기반을 두고 있는 모든 관련 기관들의 분석과 견해, 권고를 고려하며 연관지어 활동해야 한다.

(e) 인권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위원회, 유럽의회, 유럽 고문방지위원회, 유럽인권재판소, 유럽연합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독립 전문가 네트워크, 미주인권위원회, 미주인권재판소, 유럽안보협력기구의 민주주의 인권 사무국 등 지역기구들의 분석과 견해, 권고 또한 고려하며 연관지어 활동해야 한다.

(f)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 활동을 조율해나가야 한다.

5. 지역의 정부간 기구들, 특히 아프리카연합, 아세안, 유럽의회, 유럽

연합, 아랍연맹, 유럽안보협력기구, 미주기구, 이슬람회의기구 등 현재 반테러조치와 연관된 기구들은 각 회원국들이 채택하거나 구상하고 있는 반테러조치들이 국제인권법과 인도법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 시스템을 개발하고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초동 서명 단체)

- 국제 고문반대 비정부기구 연합 (The Coalition of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gainst Torture, CINAT)
- 국제엠네스티 (Amnesty International)
- 고문방지연합 (Associa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 고문철폐를 위한 국제 크리스찬 행동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tion by Christians for the Abolition of Torture)
- 국제법률가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 고문 피해자를 위한 국제 재활회 (International Rehabilitation Council for Torture Victims)
- 국제: 고문생존자를 위한 배상추진기구 (Redress: Seeking reparation for Torture Survivors)
- 세계고문방지기구 (World Organization against Torture, OMCT)
- 국제인권연맹 (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Ligues des Droits de l'Homme, FIDH)
- 인권감시 (Human Rights Watch)
- 국제인권서비스 (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
- 세계퀘이커친우협의회 (Friends World Committee for Consultation, Quakers)

(번역: 배경내/이주영)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11월 6일(목)  
제 244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우리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 노동인권탄압 증언대회 열려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야 이 나라의 노동정책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지난 달 26일 분신해 31일 끝내 숨진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이용석 광주전남본부장은 노대통령에게 남긴 유서에서 이렇게 경고했다. 5일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29개 인권단체들이 주최한 ‘노동탄압 증언대회’에는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는 절규가 근로복지공단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증언하는 노동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 ‘식물인간’ 만드는 손배·가압류

지난 달 17일 목을 맨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이 유서에서 “노동조합을 식물노조로 노동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든다”고 고발한 손배·가압류는 다른 사업장에서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효성해북투 정용준 씨는 “해고자들의 기본 몸값이 100억은 된다”고 말을 꺼냈다. 2001년 113일 파업투쟁을 벌였다가 패배한 효성 노동자들은 해고된 평조함원들 마저 350억 원이 넘는 가압류의 사슬에 묶였다. 정 씨는 “손위 동서 명의로 되어 있는 전세 아파트까지 가압류 돼 처갓집 갈 때마다 피해 다니는 신세가 됐다”며 “구속은 육체만 묶어 놓지만 손배·가압류는 정신까지 묶어 놓는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태광 정리해고저지투쟁위 김형욱 씨도 “2001년 파업 이후 2년이 지났는데도 사측은 해고자들에게 117억 원의 손배·가압류를 걸어 놓고 있다”면서 “딱다른 곳에 이르렀다는 심정이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지난 달 31일자 집계에 의하면 50개 사업장 1496억 원의 손배·가압류가 노동자들의

목을 죄고 있다.

#### ‘노조죽이기’ 나선 정부와 자본의 결탁

노조 탄압의 다른 한 축에는 정부가 있다. 서울대공원 시설관리노조 노동자들은 “노조탈퇴서 가져오면 고용승계를 해주겠다”는 용역업체에 맞서 200일 넘게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만 해체하면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겠다”는 고집의 배경에는 “노사관계로 문제가 생기면 용역을 해지할 수 있다”는 용역계약 조항이 도사리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정락준 부위원장도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공언하는데도 정부 산하기관인 공단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태생이 다르다’며 무시한다”고 고발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는 ‘근로’는 있어도 ‘복지’는 없

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탄압에 맞서 투쟁을 결심한 노동자들에게는 경찰병력이라는 공적 폭력과 용역강제 투입이라는 사적 폭력이 기다린다. 2001년 파업에 돌입한 효성노조에는 전기봉과 식칼로 무장한 용역강제가 투입돼 농성 노동자들을 공장 밖으로 몰아냈다. 같은 해 6월 공장을 탈환하기 위해 모인 노동자들 앞을 가로막은 것은 일만여 명의 전경들이었다. 이 투쟁으로 구속된 노동자는 23명에 이르렀지만 당시 폭력을 일삼았던 용역강제들은 경찰의 형식적 수사 끝에 일괄 무혐의 처리됐다. 올해 노동부 국감자료에 의하면 구속 노동자는 144명에 이르지만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된 사업주는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정부의 편파성은 극에 달해 있다.

한편 6일 1차 총파업과 12일 전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12일 이전에 △정부 자신이 제기한 400억대의 공공부문 손배·가압류를 즉각 취하하고 △정부기관의 비정규직을 먼저 정규직화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강성준]

## 만화사랑방

이동수



“우리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 노동인권탄압 증언대회

· 때: 11월 5일(수) 오후 2시 · 곳: 명동 향린교회 1층강당



# "되살아난 전향제도 무덤으로 돌려보내야"

## 학술·인권단체 긴급토론회... "검찰 자백강요는 사실상 전향강제"

송두울 교수에 대한 구속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5일 학술단체협의회와 민교협 등 9개 학술·인권단체들은 "전향"과 인권-송두울 교수 구속 사건과 전향의 법·사회화"이라는 제목의 긴급 토론회를 열고 전향제도의 반인권성을 날같이 해부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정기 교수(전남대 사회학)는 "검찰이 처벌의 수위를 반성과 참회의 수준과 연계시키는 것은 사실상의 전향 강요"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줄 알았던 전향제도가 송교수 사건을 통해 잡초와 같은 생명력을 보이며 부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전향제도는 "한 인간의 사상을 통제하고 그것을 이유로 처벌함으로써 분단체제와 권위주의체제를 지탱해 온 중요한 장치였다"며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는 전향제도와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처벌 수위와 연계시킨 반성=전향"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김은주 신문 모니터위원장은 언론이 여론제판을 통해 전향몰이에 나서고 있는 점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수구언론은 확대과장보도와 무책임한 의혹제기를 사실인 양 받아쓰는 '따옴표 저널리즘'으로 국민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송교수에게 전향을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전향을 해야 선처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준사법기관의 역할까지 자임했다"고 분석했다.

토론자로 나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정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내부에 국가보안법이 강고히 존속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며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내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남북한 화해교류시대에 노동당에 가입한 것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변호사는 또 "형사절차에서 자백강요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번처럼 드러내놓고 검찰이 구속을 자백강요의 수단으로 삼은 적은 없었다"며 "송교수에게 정치적 후보위원임을 자백하면 전향으로 봐

주겠다는 식으로 강요하는 것은 '자백을 증거의 왕'으로 보아왔던 구시대적 형사사법체제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노동당 가입한 게 뭐가 문제되나"

이상영 교수(방송대 법학)는 지금과 같은 야만적 현실에 직면하여 "송교수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묵비권의 행사였을 것"이라며 "송교수의 삶을 날같이 따지려 하지 말고 과거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좀더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전향제도의 부활을 막아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사상전향의 작동 메커니즘과 언론의 반인권적 매카시즘 공세를 제어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나

# "입시제도에 의한 사회적 타살, 이제 멈춰야"

## 수능시험 중 여고생 자살한 가운데 수능반대 페스티벌 열려

수능시험이 끝나고 수험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던 5일 오후 6시.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는 30여명의 학생, 시민들이 모여 수능반대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모든 학생들을 경쟁시키고 심지어 죽음으로 몰아가는 현 교육제도에 반대해 문화연대와 전교조, 학벌없는 사회 등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학생들의 노래와 춤, 극 등의 공연과 함께 5일 수능시험 도중 자살한 여고생의 추모제가 열렸다.

"10월 이후 벌써 4명 째의 희생자 생겼다. 이들을 죽인 건 바로 입시제도를 유지해 온 사회다. 언제까지 이런 현실을 방치해야만 할 것인가?"라는 사회자 김관중(품 청소년문화공동체 회원)씨의 발언이 마로니에 공원에 울려 퍼지면서 현 교육체제에 대한 비판과 토로, 그리고 자살을 선택해야했던 녀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붓물처럼 쏟아졌다. 자유발언에 나선 한성여고 백혜선 씨는 "오늘 자살한 언니는 12년 동안 입시의 고통을 참으며 살았을 텐데, 그 끝을 보지 못하고 죽어 너무 안타깝다"며 흐느꼈다. 전교조 김정욱 교사는 "네이스 반대 투쟁에 나서면서 든 촛불의 의미는 '인권'이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촛불은 한 학생의 넋을 기리는 촛불이 되어버렸다. 왜 우리는 우리의 인권을 짓밟는 현실을 타파하지 못하는가"라고 토로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계속되는 발언 속에 추모제장은 어느새 울음바다로 변했고, 참가자들은 현 교육체제에 대한 대안모색을 결의하며 자리를 마무리했다.

현 교육체제 하에서 사라져간 무수한 '넋'들과 시험도중 자살을 선택해야했던 여고생, 그리고 수능반대 페스티벌은 우리 사회에 잔잔한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 하지만 현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대안모색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참담한 '사회적 타살'을 우리는 더 오랜 기간 동안 지켜봐야 할지도 모른다. (임국현)

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독일 뮌스터대 사회학과 H. J. 크리스만스키 명예교수도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크리스만스키 교수는 "송교수에 대한 혐의 내용이 국제사회가 인정한 인권과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이며 그의 빠른 석방을 기대한다는 하버마스 교수의 전언을 갖고 왔다"며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경계인'이 귀중한 역할을 수행했듯이 화해를 통해 분단을 극복해야 할 한국에도 경계인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계인 존재, 분단극복 위해 필요"

한편, 이날 오전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주나 자해의 우려가 없는 송교수에게 수사 도중 포섭과 수갑을 강제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며 △변호인 입회를 거부하고 자백강요를 통해 사실상의 전향을 강요한 것 역시 절차적 정의에 어긋난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인터뷰> '제국의 심장부에서 날아온 평화운동가, 새라 플라운더스' "미국의 그 모든 '전쟁'에 저항한다"

"미국은 이라크전에 대한 국내 반대운동이 거세어지자 이를 모면하려고 각국에 파병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비전투병은 안전하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현재 이라크 전역은 열화우라늄탄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이 모든 생명체를 위협하고 있고 이라크인들의 저항 공격도 하루 25-30건씩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전투병들이라고 이런 위험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국제행동센터(International Action Center)의 공동 사무국장 새라 플라운더스 씨는 한국정부의 파병 추진 계획을 이렇게 비판했다. 걸프전 이후 이라크를 5차례 방문해 '열화우라늄탄의 피해'를 조사해 온 그녀는 이러한 내용을 한국에 알리고 반전운동에 결합하기 위해 국제민주연대 등 국내 인권단체들의 초청으로 지난 5일 방한했다.

국제행동센터는 91년 걸프전 직후 만들어진 미국의 대표적 반전운동단체다. 이들이 주목하는 전쟁은 '미국이 일으키는 전쟁'. '89년 소련 사회주의체제가 막을 내리자 많은 미국인들은 냉전이 끝나고 평화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우리는 미국이 일으킬 패권전쟁의 기운을 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반전운동을 경험한 활동가들이 걸프전이 일어나자 공동의 행동을 조직한 것입니다.' 국제행동센터의 창립 배경을 플라운더스 씨는 이렇게 회고한다.

국제행동센터는 9.11이 발생하자 신속히 'A/N//S/W/E/R'라는 전국반전네트워킹을 만들어 '테러와의 전쟁' 음모를 경고했고, 그후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터졌다. "9.11을 누가 일으켰는지 미국의 군사 패권주의자들은 이를 통해 '전쟁 명분'을 쟁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그 다음 목적으로 미국은 북한을 지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테러와의 전쟁'은 미국 내에서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의회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된 '해국자법'은 수많은 외국인을 추방하고도 청, 감시모니터 설치, 의료·신용카드 기록 조회 등 모든 것을 국가가 감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평화운동단체들은 집기를 빼앗기고 자금이 동결되어 문을 닫고 있고, 심지어 도서관의 대출 내역까지 국가에 보고해야 합니다." 플라운

2003년 11월 7일(금)

제 245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더스 씨는 이러한 국가정책에 반대하여 도서관 사서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대출 리스트를 없애는 불복종운동을 벌이고 있고, 100여 개의 시의회는 '해국자법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풀뿌리운동이 전개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녀가 말하는 또 하나의 전쟁터는 바로 감옥이다. "미국내 재소자는 약 2백만 명입니다. 소년원과 구치소를 포함하면 5백만이 넘습니다. 세계 최대규모입니다. 아직도 많은 주에 사형제도가 있고 심지어 어린이를 사형하는 곳도 있습니다. 감옥은 인종, 정치적 억압의 산실이기도 합니다. 흑인 남자 1/4이 감옥에 있고 그들 중에는 수많은 정치범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형수 무미아 아부자말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플라운더스 씨는 (☞ 2면에 계속)

클릭! 인권정보자료

## 동화 속에서 찾아내는 인권퍼즐 - 『사람답게 이름답게』

지은이: 차병직/ 펴낸이: 바다출판사/ 2003년 10월/ 247쪽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작은 이씨들」, 「말괄량이 삐삐」 등 우리에게 친근한 동화 속 등장인물의 삶을 통해 인권을 느끼게 하는 단행본이 출간됐다. 저자 차병직 변호사는 정의롭지만 딱딱하기 짝이 없는 '인권'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인권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책에는 생명권, 평등권, 사회권, 아동권 등 총 12가지 주제의 '동화로 읽는 인권이야기'가 나온다. 저자는 총 50여 편에 이르는 동화를 적절히 인용하면서 각각의 주제에 대한 인권적 해석을 담았다. 책을 읽다보면 때론 퍼즐을 맞추는 심정으로 인용된 동화에 어떤 인권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궁금해진다.

「홍당무」의 아버지와 아들의 편지를 보자. "오늘 아침에 받은 네 편지를 읽고 깜짝 놀랐다. ...뭐가 뭐지 알 수 없구나." 아버지가 문자 홍당무는 대답한다.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시입니다." 누구든지 표현의 욕구와 자유를 갖고 있음을 홍당무를 통해 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성냥팔이 소녀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길에서 죽어 가는 사람들에게 과연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질문하고, 파랑새를 찾아 길을 떠나는 치르치르와 미치르르 행복이란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인권'이나 '권리', '법'을 직접 말하지 않으면서 인권을 생각하고 느끼게 할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해보고 대답하는 가운데 이 글을 썼다고 말한다. 그 때문인지 동화 속 인권이야기는 긴 여운 속에서 오랫동안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다. (최은아)



# "비정규직화와 빈곤화는 아시아 공통의 고통" 아시아지역 노동조합 연대회의, 신자유주의 맞선 연대 모색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11개국 노조 대표자들이 서울에 모여 신자유주의에 맞선 노동운동의 대안찾기에 나섰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아시아 지역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를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번 '아시아지역 노동조합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5일부터 7일까지의 일정으로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열리고 있다.

6일 열린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비정규직, 비공식화 그리고 빈곤화'라는 주제별 워크숍 참석자들은 "90년대 후반 아시아를 강타한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각국에서 대량해고가 자행되고 비정규직이 대폭 확대됐다"고 입을 모았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노동조합 투노 위원장은 "사용자들은 위기를 변명거리로 삼아 노동자들을 대거 해고한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더 짧고 값싼 노동자들을 모집했으며,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정부가 나서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을 선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와 기업연합체가 비밀 회의에서 결정하는 최저임금이 모든 노동자들의 '표준임금'이 됐다"며 처박한 현실을 개탄했다.

태국 '여성노동자단결'의 플로엔피트 스리시리 사무처장은 "태국은 97년 경제위기로 특히 섬유와 전자산업의 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비정규직 가내 하청노동자로 전락했다"며 그로 인해 "아이들까지 학교를 포기하고 엄마를 도와 일을 해야 근근히 먹고 살 수 있는 지경"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화, 빈곤의 심화로 이어져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와 생존권 파괴를 목표로 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기 위해 아시아 각국 정규직 노동조합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민주노총 이상화 정책국장은 "민주노총도 비정규직 노동을 철폐하기 위해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정규직 조직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남반구노조연대(SIGTUR) 코디네이터

롭 램버트 씨는 "세계화에 대해 노동자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분노와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서 "노조는 이들과 연대해 보다 광범위한 운동을 만들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노조 활동가들이 여타 사회운동에 노동자들이 참여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사회운동과 연계해 노동자들이 소집단을 만들고 이들이 네트워크를 이뤄 작업장 안팎에서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시민들 고통과 연대해야

민주노총 이창근 국제부장은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일국 노동운동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으며, 단순히 각 노조가 처한 상황을 공유하는 추상적인 국제연대를 넘어서 공동의 대응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이번 회의를 기획하게 됐다"면서 "아시아의 진보적인 노조들이 블록을 만드는 첫

단추 역할을 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7일 열리는 최종회의에서는 △초국적기업 대응 △반전평화 사업 △각국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참가자들은 최근 잇따른 한국노동자들의 분신, 자결 소식을 접하고 회의 일정을 변경, 7일 오전 '노동탄압저지' 서울역 농성장과 근로복지공단 앞 농성장을 방문해 연대의 뜻을 밝히기로 했다. 이어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귀국 후 행동계획을 발표한 이들은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강성준)

(1면에서 이어짐) 양심수 석방운동과 사형반대 운동이 무미아와 같은 사형수들의 생명줄이라고 말한다.

6일 플라운더스 씨는 '이라크전과 열화우라늄탄의 피해'에 관한 방한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국회 앞에서 열린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집회에도 참가했다. 7일 미대사관 앞에서 '파병반대 1인 시위'와 '열화우라늄탄의 피해에 관한 토론회' 등에 참석한 후, 8일 출국한다. (김정아)

## 화성 외국인보호소 직원 면회 신청인 폭행

### 이주지부, 사과와 재발방지 촉구...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산하 화성 외국인보호소 직원이 면회를 신청하려고 간 사람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자행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31일 평등노조 이주지부 조합원 등 15명은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돼 있는 이주노동자 비두, 자말 씨에 대한 특별면회를 신청했다. 이주지부 김선희 투쟁국장에 의하면, 당시 직원 이모(공의요원) 씨는 면회인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던 김현주(대구성서공단 노동조합 이주노동자 사업부장)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몇 차례나 가격해 코뼈를 부러뜨렸다. 더구나 현장에 있던 다른 직원들은 이러한 폭력행위를 지켜보기만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보호소의 한 관계자는 "이 일은 개인간에 일어난 폭행사건일 뿐이며 당사자들끼리 풀 문제"라며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어떠한 책임도 질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평등노조 이주연 교선국장은 "보호소장이 사건 발생 직후 가진 항의면담에서 사건일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해 놓고서 지금에 와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개인간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등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이주지부 등 관련단체들은 "이번 폭력사건은 공공기관이 자행하는 집단적 폭력과 공권력 남용의 현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며, 현 시기 한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모두에게 가해지고 있는 정권의 폭력과 동일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보호소측에 △공식 사과 △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재발방지 약속 △김 씨에 대한 보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면회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양승훈)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11월 8일(토)

제 245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성실정양원, 기도원 빙자 감금·착취

### 인권단체들 기습 방문조사·불법감금·착취 사실 드러나

한 기도원이 정신질환자 등을 수용하면서 불법감금과 폭행 등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었던 사실이 기습조사를 통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운동사랑방, 국회 김홍신 의원실은 언론사 취재진과 함께 개신교 기도원인 경기도 양평 성실정양원(원장 김학남)을 기습 방문했다. 조사단은 수용시설을 시찰하고 수용자 100여 명을 대면조사해 감금과 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를 확인했다. 이번 조사는 성실정양원에 수용돼 있다 나온 모 씨의 제보로부터 시작됐다.

정신과 진단서 없이 불법감금 자행

75년 문을 연 성실정양원에는 현재 정신분열증 환자와 알콜중독자 등 총 204명(남자 175명, 여자 29명)이 수용돼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사람들도 다수 감금돼 있었다. 조사단이 확인한 입소대장에는 정신과 진단서가 아예 없거나 입소일보다 훨씬 오래된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정신과와 상관없는 외상 진단서가 첨부돼 있기도 했다.

실제로 서울에서 동거하다 가출한 후 남편에게 붙들려 성실정양원에 갇힌 김모 씨는 "남편이 4월말에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해서 기다렸는데 남편이 지났지만 연락 한번 없다"며 "내가 왜 여기 갇혀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울먹였다. 김 씨는 "정신과 진단은 물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단 한번도 없는데도 보호자 동의 없이는 나갈 수 없어 꼼짝없이 갇혀 지내야 했다"면서 "제발 나가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게다가 수용자들이 가족을 면회할 때 관리자가 배석해 대화내용을 일일이

기록한 문서도 발견됐다. 이에 대해 조사단은 즉석에서 "정양원 실태를 외부로 알리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실제로 수용자들은 관리자 없이 이루어진 면담조사에서 "수용자 중에 프락치가 있을지도 모른다"며 말을 아끼는 등 공포에 떨고 있었다. (※2면에 계속)

## 〈논평〉 노동자들 가슴에 꽂힌 '칼'

"노동자가 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 아찔한 지상 35m 창공, 사랑하는 가족과 안타까운 동지들 얼굴 하나하나 떠올리며 자신의 목에 밧줄을 둘러매야 했던 한진중공업 김주의 지회장에게 이 땅은 그런 나라였다.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항거해야만 쥐꼬리만한 권리라도 그나마 얻을 수 있는 나라. 그러나 그를 떠나보내야 했던 사람들은 어깨 들썩이며 이렇게 흐느꼈다. 작업복 넘머처럼 기워 입고 쥐새끼마냥 뒹굴며 감전으로 혈관이 터져 죽고 떨어져 죽고 통통 불어 죽어도, 조선소 짬밥 20년에 100만원 받아도 참을 걸 그랬다고 "노예가 품었던 인간의 꿈. 그 꿈을 포기해서라도 그가 돌아올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고.

그런데도 푸른기와의집에 들어앉은 늙으신 그 양반은 이 땅 노동자들을 사지로 떠민 것도 모자라 또 다시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 죽지 못해 사는 자들의 가슴에 칼을 꽂는다. "지금처럼 민주화된 시대에 노동자들의 분신이 투쟁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다. 지금이 전태일이 살던 시대도 아닌데 사실이 계속되는 것은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았던 영등포경찰서장. 삼급단체들이 '근로자의 사망사건'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던 경총. 그 바통을 이제는 대통령이 이어받았다.

청춘을 다 바친 직장에서 그냥 내쫓길 수는 없다고 파업 한번 해볼라 치면 온갖 '불법' 딱지 붙고, 용역강제에 두들겨 맞고, 구속 수배에 해고도 모자라 친지를 집과 선산까지 가압류당하고 배 째 째 굶으며 눈치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땅 노동자들의 아픈 현실이다. 정규직의 절반밖에 안 되는 임금 받으며 온갖 멸시 다 참아내고 작업장에서 죽어나가도 목숨값마저 절반밖에 안 되는 것이 이 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며 세상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동료의 주검을 가슴에 묻고 거리로 나온 이들에게 곤봉과 방패를 휘두른다.

이런 노동자들에게 손해·가압류 납용 제한하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겠다는 정부의 거듭된 약속은 한낱 공수포에 불과하다. 정부가 나서 공공부문 사업장에 400억원 손배·가압류 때리고, 노동부 직원의 절반을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그 누가 정부의 약속을 믿을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또다시 '시대'와 '불법' 운운하며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전에 자신에게 되물어야 한다. '민주화된 시대'라는 노무현의 시대에 왜 70년 전태일의 유서와 오늘 죽어간 이들의 유서가 같을 수밖에 없는지를. 내놓을 것이라곤 목숨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절규가 무엇인지를 말이다.



# "전쟁 끝나도 열화우라늄탄의 재앙은 계속된다" 이라크에서 최고 2200톤 사용...주한미군도 보유 의혹

"설사 열화우라늄탄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라크전쟁은 명백히 불법이며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화우라늄탄은 전쟁의 참혹성을 증거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이번 전쟁이 인간의 삶과 환경에 얼마나 지속적이고도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이라크전과 열화우라늄탄으로 인한 피해"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미국 평화운동가 새라 플라운더스 씨는 이렇게 말했다. 인권단체 평화권모임과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걸프전과 발칸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에 이어 이번 이라크 전쟁에서, 그것도 인구밀집 지역에 대량 투하된 열화우라늄탄의 비인도적 성격이 집중 조명됐다.

열화우라늄탄은 원자력발전소 운영이나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얻기 위해 천연 우라늄을 농축하는 과정에서 생긴 우라늄 찌꺼기로 만든 무기이다. 일종의 핵폐기물이라고 볼 수 있는 열화우라늄탄은 미국의 핵산업계와 군수산업계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개발, 생산되고 있는 대표적 무기로, 91년 걸프전 당시 처음으로 실전에 사용된 이래 미국이 일으킨 전쟁에서 잇따라 사용되면서 파괴력을 뽐내고 있다.

미 핵산업계와 군수산업계의 합작품 평화인권연대 손상열 상임활동가는 "전문가들은 이번 이라크 전쟁 기간에 미군과 영국군에 의해 사용된 열화우라늄탄의 양이 1000톤에서 최고 2200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이라크 전쟁에서는 인구밀집 지역에서 전투가 발생해 방사능으로 인한 오염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걸프전에서 사용된 300여 톤에 비해 최고 7배를 넘는 양이다.

걸프전 비해 최고 7배 넘게 사용돼

미 육군환경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사용된 열화우라늄탄 한발을 손에 쥐게 되면 단 한 시간만에 연간 방사능

노출 한계치의 두 배에 달하는 약 200렘에 노출되게 된다. 이에 따라 열화우라늄탄은 각종 암과 면역체계의 파괴, 만성피로, 피부질환, 유전자 돌연변이에 따른 기형아 발생 등을 불러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행동센터 공동 사무국장 새라 플라운더스 씨는 "91년 걸프전에 참전했던 7만여명의 미군 중 (3면에 계속)

(1면에서 이어짐)

기도원은 '재산증식' 수단일 뿐?

한편 정양원 측은 가족이 '보호비' 명목으로 보내주는 한 달 30만원의 돈(전체 약 6000만원)을 받아 챙기면서도 수용자들을 시설 증축과 주변 농사일에 무임금으로 동원해 일당을 갈취해 왔다. 관리자들은 "하고 싶은 사람이 '대민지원'을 목적으로 '자원봉사 동의서'를 쓰고 하는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수용자들은 "유일하게 바깥에 나갈 수 있는 기회라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액도 본인에게 주지 않고 정양원측이 착복해 온 것도 통장 확인 결과 밝혀졌다.

또 조사단이 확인한 정양원 건물의 외벽에는 쇠창살이 달린 창문만 높이 달려 있었고 출입구는 두꺼운 철문으로 가로막혀 있었다. 또 10명 내외가 생활하는 2평 남짓 방에는 따로 화장실 없이 한 구석에 변기가 놓여 있었다. 밤에는 방문을 밖에서 잠그면서도 대피통로는 확보해 놓지 않는 등 화재 발생 시의 대책이 전무했다.

게다가 2층에는 '발방' 역할을 하는 2개의 교육방이 있었다. 수용자 김모 씨는 "말썽을 부려 교육방에 갇히게 되면 낮에도 나올 수 없고 심한 경우 팔다리를 침대에 묶어 놓기도 한다"면서 "한 달이나 갇혀 있었던 사람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기도원이니 예배 강요는 당연?

또 수용자들은 아침 5시 20분에 일

어나 저녁 8시에 잠들기까지 하루 4번의 예배에 무조건 참여하도록 강요받아 왔으며, 이를 거부하면 '교육방'으로 직행해야 했다. 또 두 눈을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들어갈 정도로 찌르는 안수기도가 치료 명목으로 행해졌다. 관리자들은 "원하는 사람한테만 실시된다"고 해명했지만 수용자들은 "말 안 들으면 안수기도 받는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조사단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강력하게 항의하자, 감리교 목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관리자는 "사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길 수 없다"면서 "종교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어이없는 태도를 보였다.

심층 실태조사 실시하고 합법화해야

이렇게 '종교시설'로 시작한 기도원이 정신질환 시설로 운영되는데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데에는 정부의 허술한 대책이 한몫을 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월부터 석 달간 시행한 '미신고 복지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008개의 미신고 시설이 노인과 아동 등 1만7170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중 정신질환 시설은 21개로 907명을 수용하고 있다. 이중에서 20개 시설이 2005년 7월까지 요건을 갖춰 양성화하는 조건으로 신고해 현재 시설 개·보수비 지원대상으로 지정됐다. 성실정양원도 그 중 하나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경기도지사 명의의 성금이 두 차례나 전달되는 동안에도 정양원은 인권침해 실태를 숨겨오면서 '반합법' 상태로 계속 운영돼 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박숙경 팀장은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시설의 운영자가 합법화라는 면죄부를 받게 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며 "양성화 대책이 실효성 있게 진행하려면 민간단체와 전문가의 감시 아래 심층 실태조사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실정양원을 담당하고 있는 양평군 보건소 관계자는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철저한 지도관리를 해나가 는 등 최대한 빨리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성준)

# "정부는 노동자들 절규에 귀 닫지 말라"

## 장기투쟁 사업장 노동자들, 이틀째 열린우리당 점거농성

차가운 겨울을 앞두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을 찾지 못한 노동자들의 처절한 목소리가 정치권을 향해 터져 나오고 있다. '당리당락을 위한 더러운 싸움을 그만두고, 이제 비참한 현실에 짓눌려 죽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직시하라'는 투쟁의 외침이다.

지난 6일 50여 곳이 넘는 전국 장기투쟁사업장을 대표하여 7개 사업장(효성해복투, 태광정리해고저지투쟁위, 리베라호텔노조, 제능교사노조, 흥국생명노조, 삼성해복투, 부천성기병원노조, 축협노조) 38명의 노동자들은 열린우리당 대표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손배·가압류 철폐 △비정규직 차별 철폐 △구속노동자 석방 △해고자 원직 복직 △장기투쟁사업장 문제해결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열린우리당에 '구체적 당론을 제시하고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농성 이틀째를 맞은 7일까지 열린우리당 측에서는 별다른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7일 오전 농성단은 열린우리당 김영대 노동위원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사업장별 노동탄압 실태를 고발했다. 이에 김 노동위원장은 농성단에게 이날 오후 김근태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주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당 내부 사정을 이유로 김 원내대표와의 면담은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열린우리당, 책임있는 답변 안 내봐

이러한 외면에도 불구하고 이번 점거농성에 임하는 노동자들의 의지는 결연하다. 태광 정리해고저지투쟁위원회 김형욱 씨는 "손배·가압류 등 현 시기 노동탄압의 문제는 단위 사업장별로는 해결될 수 없다. 실질적인 여당이나 다름없는 열린우리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와 대통령에게 직접 살아있는 현장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이번 점거농성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효성해복투의 서진상 씨도 "손배·가압류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우리 노동

자들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10년, 20년 벌어도 갚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금액을 가압류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해 버리는 것"이라며 "이러한 악랄한 노동탄압정책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투쟁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삼성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원순덕 씨는 "죽음을 각오하고 단식농성을 시작한 지 26일이 지나도록 사측은 어떠한 교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지금까지 5년 넘게 싸워 왔지만 사측도 정부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 우리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사회단체 대표들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생명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노동자들의 죽음을 방관한 채, 최소한의 생존권 요구

(2면에서 이어짐) 절반 가량이 대부분 30대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라크 보건부의 조사 결과 걸프전 이후 이라크에서 암 발병률이 5-6배 증가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면서 "열화우라늄탄이 낳는 비극은 전투원과 민간인,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열화우라늄탄은 모두를 겨냥한다

플라운더스 씨는 또 "열화우라늄탄의 위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미 국방부가 놀랍게도 열화우라늄에 오염된 장비나 지역에 75m 이내로 접근하는 사람에게 호흡기나 피부를 보호하는 장비를 착용하도록 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해 두고 있다"면서 이러한 내부지침이야말로 열화우라늄탄의 위험성을 미 정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유엔환경계획이 지난 4월 열화우라늄탄의 사용 여부와 오염 상황을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미국은 조사를 거부했으며, 열화우라늄탄에 의해 남겨진 잔해물을 제거할 계획도 미국에

조차 외면하고 있는" 삼성생명 사측을 강력 규탄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

농성단을 이끌고 있는 민주노총 신승철 부위원장은 "현재 50여 곳이 넘는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구속, 수배, 해고를 당한 상태에서 계속 싸우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사측은 일체의 대화 통로조차 단절한 채, 손배·가압류와 노조말살을 통한 노동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신 부위원장은 "손배·가압류 문제를 비롯하여 정권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면 노동탄압으로 인해 죽음이 일상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정치싸움만 일삼지 말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탄압은 죽음의 일상화 초래할 것"

농성단은 열린우리당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 의지를 표명할 때까지 농성을 무기한 진행할 예정이다. (양승훈)

국에게는 전혀 없다"면서 더 큰 희생을 방치하고 있는 미국의 방침을 강력히 비판했다.

미 내부지침, 열화우라늄 위험성 고백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한미군 역시 열화우라늄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 양이원영 부장은 "2001년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이 보낸 질의에 대해 주한미군이 '한국에 열화우라늄탄이 있기는 하지만 위험성도 없고 훈련에 사용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적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도 열화우라늄탄 보유"

이에 대해 플라운더스 씨는 "98년 오키나와에서는 광범위한 저항이 일어나 당시 주일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열화우라늄탄이 결국 제거된 적이 있으며, 열화우라늄탄이 실험 발사돼 왔던 푸에르토리코 비에케스 섬에서도 미군철수운동이 전국민적으로 전개돼 올해 미군이 철수하기에 이르렀다"며 "저항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경찰, 노동자들 울분에 '곤봉세례'

### 노동자대회 유혈 폭력진압으로 부상자 속출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노동자대회가 피로 일룩졌다. 9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한 5만 여 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은 본대회를 마치고 광화문까지 거리행진에 나섰다. 경찰은 93개 중대 1만여 명의 전경을 투입해 진압에 나섰다.

종로1가 인도에서 시위를 구경하던 김 모 씨는 방패로 밀어붙이는 전경들에게 항의하다 전경대열 속으로 끌려가 집단 폭행 당했다. 주위 사람들이 구급차를 불렀으나 전경대열에 에워싸인 김 씨는 30분 넘게 길바닥에 쓰러져 있어야 했다. 시청 근처에서는 전경들이 사수대로 나선 70여 명의 노동자들을 진압한 뒤 피를 흘리며 진행되는 노동자들의 등을 방패로 내려찍기까지 했다. 이날 진압으로 50여 명이 중상을 입었고 100여 명이 부상당했으며 113명이 연행됐다.

이날 경찰폭력 감시단으로 활동한 평화인권연대 손상열 상임활동가는 "시위가 일부 폭력적으로 흐르더라도 경찰 진압은 법적 한계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찰이 아무런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까지 방패와 곤봉으로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긴급구호가 필요한 부상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분명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이날 경찰의 진압은 최근 이어진 분신 자결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지 않은 채 폭력진압만을 고집해온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난달 29일 종묘공원에서 열린 노동단합 규탄대회에서는 행진 차로 확보 문제로 신경전이 벌어졌다가 경찰이 시위대를 기습해 투석전이 벌어

졌고 평화행진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에 들어간 노동자들을 방패로 툭툭 치고 반발하는 사람을 가격하는 등 충돌을 유발했다. 이어 이날 6일 대학로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 후 탑골공원까지 거리행진을 벌이던 노동자 중 50여 명은 방패와 곤봉에 맞아 척추와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날 연행된 민주노총 이정영 조직국장 등 두 명은 이후 구속됐다.

하지만 전날 시위에 대해 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폭력시위는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천명해야 한

다"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매도했다. 게다가 같은 날 최기문 경찰청장도 시위에 화염병이 등장한 것을 빌미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10일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노동자들을 줄줄이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손해배상 가압류와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 할 수 있는 400억 대의 공공부문 손해배상 가압류를 취하고 정부가 사용자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앨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노동자대회에서 경찰폭력 감시 활동을 벌였던 다산인권센터 등 29개 인권단체들은 '노동탄압분쇄 범대위'와 공동으로 11일 12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할 예정이다. (강성준)

## "파병 압력 목적 립스펠드 방한 반대한다"

### 파병반대국민행동, 미 노골적 파병 압력 강력 규탄

이라크 전황 악화와 더불어 미국의 한국군 파병 압력이 갈수록 거세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골적인 파병 압력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뜨겁다.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아래 비상국민행동)은 10일 미대사관 옆 파병반대 철야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의 파병 압력을 강력 규탄하는 한편, 오는 15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참석차 방문하는 립스펠드 미 국방장관의 방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은 지난 5~6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 이라크 추가파병 협의회에서 한국에 5000명선의 전투병 파병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이라크에서의 민주주의는 곧 실현될 것이며 이는 중동 전역의 민주주의 실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부시 미 대통령의 바

라프는 달리 미군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저항이 갈수록 강력해져 미군 희생자 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미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이라크전쟁 발발 이후 모두 388명의 미군이 사망했으며 이 가운데 250명은 사실상의 종전이 선언된 5월 1일 이후 사망자다.

이에 대해 비상국민행동은 "5000명 이상의 전투병 파병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행동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한국에 더욱 강한 파병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이 명백한 립스펠드의 방한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김근래 부위원장은 "일제시대 실리 등의 이유로 한국청년들에게 대동아 전쟁에 참가하라고 역설했던 많은 사람들이 (☞2면에 계속)

## ○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

### '강남불패신화'의 완패를 바란다

연일 신문지상을 장식하는 부동산 관련 뉴스는 많은 서민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지금도 서울역 지하 보도에 잠을 청하는 노숙자와 쪽방에 거주하는 사람, 월세·전세값 인상에 눈물짓는 사람을 비롯하듯 하듯 이른바 '강남불패신화'는 주춤거릴 뿐 사라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 근처에는 정부의 10·29 부동산 안정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지며 안정적으로 시행되겠냐는 의문이 자리잡고 있다. 아파트 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앞으로 두고 볼 일이지 않나 이미 불 장 다 본 판에 '엄포용'으로 내놓은 정책은 아파트 값 폭등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람에게나 상대적 박탈감으로 분노와 허탈을 동시에 느껴야 하는 사람에게나 땀 흘려방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까? 단지 세금 몇 푼을 거두어 해결할 성질이 아닌 바에야 토지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토지란 아무리 수요가 있다고 해서 이에 상승하는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원이 아니다. 다른 재화와는 달리 인류가 무한적으로 확대재생산하여 만들어 낼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토지에 대한 독점적 소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토지의 소유로 인한 소득을 모두 세금으로 걷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토지는 형식적으로는 개인 소유이나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공유자산이 되며, 토지의 소유로부터 생기는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1976년 유엔 벤쿠버 인간정주회의는 주거권을 실현시키기 위해 토지 사용에 대한 정부의 공적인 규제가 필수적임을 선언했다. "토지는 인간 거주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장에 방치되는 보통의 자산으로 취급될 수 없으므로 국가전체 이익을 위한 규제 하에 있어야 한다. 토지의 소유, 이용, 개발을 공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환경보전,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불가결한 것이다."

이처럼 사회불평등의 근원을 제거하고 적절한 주거권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 토지를 공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구상은 외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80년대 후반 투기세력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토지와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전세값이 폭등하자 정부는 89년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개발이익환수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제법 등 3개 법률을 제정했다. 핵심은 토지 소유의 독과점을 제한하고, 토지 보유와 개발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후 이 법률들은 사적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집단적인 조세저항, IMF 이후 경기부양정책 등에 밀려 98년을 전후해 폐기·개정됐다.

최근 보유세와 양도세 몇% 인상하고, 주택거래 신고제와 허가제를 도입한다고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아마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몇몇 관료뿐일 것이다.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서 토지에 대한 공적인 규제와 이를 통한 주거권의 확대가 필요한 시기이다.

(최은아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입니다.)

## 주간인권흐름

(2003년 11월 3일 ~ 11월 10일)

1. 물러설 곳 없는 노동자, 출구는 '곤봉질'  
한진중 노동자, 열린우리당 영도지구당 창당대회 항의 방문(11.2)/ 업무복귀명령제를 빼대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 강력 반발(11.4)/ 기아특수강해고노동자 50m 굴뚝 고공농성 돌입(11.6)/ 29개 인권단체 주최로 노동인권 탄압실태 알리는 "우리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증언대회 열려(11.6)/ 효성해북투 등 7개 장기파업사업장 노조원 39명 열린우리당 점거 농성 돌입...손배가 압류 철폐, 비정규직 철폐, 구속자 석방 등 요구(11.6)/ 노무현 대통령, "지금처럼 민주화된 시대에 노동자들의 분신이 투쟁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망발한 것으로 알려지(11.6)/ 민주노총 120여개 사업장 12만여명의 조합원 4시간 경고 파업(11.6)/ 노 대통령 광주 방문 앞두고 민주노총 광주지부 1200명 노동자 격렬 시위(11.6)/ 전국노동자대회 5만 참가...경찰폭력으로 노동자 50여명 중상, 연행자 110여명 달해(11.9)/ 민주노총 조직국장 구속(11.10)/ 서울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강영규 기동단장, 기동대 홈페이지에 '노동자대회 진압' 치하문 게재 물의(11.10)

2. 지금은 '블랙호크 다운' 중  
정부 대미 파병 협의단 출국(11.4)/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서울역 광장 파병반대평화캠프 설치(11.4)/ 조영길 국방부장관 망발...이라크 전사나 사망자 보상 2억2천만원으로 인상(11.6)/ 미국 평화운동가 세라 플라운더스 방한...열화우라늄탄의 피해사태 발표, 국내 평화운동 합류(11.6)/ 이라크 주둔 폴란드군 병사, 작전 중 첫 사망(11.6)/ 이라크 외곽 팔루자에서 이라크 게릴라 공격으로 미군 헬기(블랙호크) 추락(11.7)/ 사우디 리야드에서 폭탄 테러 100여명 사상(11.8)/ 2차 정부 이라크 합동조사단 귀국해 조사결과 발표... "이라크 치안 불안하다", "전후복구 사업 지원 절실"(11.9)/ 이라크 주둔 미군, 어린이 손까지 핏몸 뚫는 인권침해 자행(11.10)

(☞1면에서 이어짐) 지금은 매국노로 평가받고 있다"며 "한미 동맹론, 국익론을 동원하며 미국의 이라크전쟁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거 그들의 행동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회를 맡은 민주노동당 윤영삼 평화군축운동본부장은 "미국이 대규모 파병을 요청한 인도·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은 이미 모두 공식적으로 파병거부를 선언했고, 터키조차도 파병결정을 철회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당시 말했던 것처럼 미국에 NO!라 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비상국민행동 대표들은 미대사관측에 파병 압력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비상국민행동은 앞으로 15일까지 각계각층의 사회단체들과 함께 미대사관 앞에서 노상 노숙농성을 계속 이어나가는 한편, 오는 15일에는 서울 시청 앞에서 파병결정 철회 국민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후 16~17일에는 립스펠드 미 국방장관 방한반대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임국현)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정부 '봉쇄용 집회신고' 종용 의혹

### 미대사관·정부대전청사 경비업체, 광화문 일대 내년까지 선점

정부가 광화문 일대 행진을 봉쇄하기 위해 미대사관과 정부대전청사를 관리하는 경비용업체를 내세워 '집회 봉쇄용 집회'를 신고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광화문 한국통신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아래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지난 10일 청와대 앞까지 도보행진을 하기 위해 집회신고를 냈다. 하지만 경찰은 행진 경로가 이미 신고된 집회·행진과 겹친다는 이유로 금지를 통고했다.

하지만 행진경로를 선점한 (주)신천개발은 미대사관과 정부대전청사의 경비용업체여서 최근 잇따르는 노동자 집회 등에 대비해 정부에서 미리 손을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이 업체는 11월초부터 내년 말까지 매일 일출에서 일몰까지 집회와 행진을 신고해두었다. 1980년 설립된 (주)신천개발은 인근 현대상선 건물 등 광화문 주요 건물과 함께 주한 미8군의 경비업무도 맡고 있다.

금지 통고 이유에 대해 관할 종로서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부터 서울경찰청, 사직공원까지의 행진이 내년 말까지 매일 신고돼 있어 파병반대국민행동의 행진경로와 겹친다"며 "단 한 군데라도 행진 경로가 겹치면 집회 신고를 받지 않는 것이 규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중연대 정영섭 기획부장은 "두 집회의 행진경로 교차점은 단 하나밖에 없었다"면서 "신천개발 측에 오후 1~2시 사이에라도 이 지점을 통과할 수 있도록 조정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집회 방어용 집회냐고 물어보니 방어용

집회 맞다, '건물주'들이 압력을 넣는다고 대답하더라"고 말했다.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신천개발 관계자는 "국가중요시설물을 경비하는 특수 경비업체가 미화나 설비 등 검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 소식을 듣고 반대집회를 계획하게 됐다"고 해명하면서도 "찾은 집회와 시위가 심한 소음을 일으키고 보행에도 지장이 된다"면서 "건물 관리를 맡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 업무상 필요해 신고한 측면도 부인하지는 않겠다"고 밝

2003년 11월 12일(수)

제 245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혀 의혹을 더했다.

김승환 교수(전북대 법학)는 "현행 집시법 해석으로도 양자가 충돌할 경우 경찰은 쌍방의 이익이 조화되도록 조정해야 할 의무가 있고 당사자들도 조정 협의에 응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먼저 신고된 집회가 뒤에 신고된 집회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신고된 집회라면 집시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8월 전북지역 단체들이 전북도청 앞에서 열고자 했던 경제자유구역법 관련 집회가 같은 장소에서 새만금 방조제 찬성 집회가 약 3개월간 신고돼 있어 금지통고를 받았다가 이후 주최측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상황을 조정해 달라"고 경찰에 이의를 신청해 받아들여진 바 있다. (강성준)

## 고삐 풀린 정부, 힘 모으는 인권단체

### 30개 인권단체들, '압류당한 인권 되찾기' 공동행동 나서

다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30개 인권단체들이 노무현 정부의 계속되는 반인권적 정책에 맞서 11일 공동행동에 돌입했다.

정부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손배·가압류에 대한 뚜렷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폭력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편, 미국의 전투병 파병 요구를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이려는가 하면 테러방지법 제정까지 추진해 인권에 대한 총체적 압살을 기도하고 있어 공동행동에 나서게 된 것.

인권단체들은 그 첫 번째 행동으로 11일 낮 경찰청 앞에서 '노동탄압분쇄 범대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잇따른 경찰의 폭력진압을 강력 규탄하고 폭력진압 현장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제1기동대의 해체를 요구했다.

인권단체들은 또 경찰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경찰장비사용규정'이 현실에서

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위 규정은 △경찰장비를 최소 범위에서 사용하고 △방패의 모서리나 기타 표면에 날카로운 부분이 없는지 안전검사를 실시하며 △경찰장비의 사용으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의 존재를 비롯이라도 하듯 최근 경찰들의 폭력은 도를 넘어하고 있다. 지난 6일과 9일 경찰의 폭력으로 부상당한 노동자 수는 190여명에 달한다. 심지어 해폐기장 건설로 주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고 있는 부안에서는 지난 7일 술 취한 경찰들이 주민들에게 술병을 던지는 등 비이성적인 폭력을 행사해 주민 40여명이 부상당했다. 이에 폭력진압의 대명사인 제1기동대 홈페이지에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경찰은 이 사이트를 폐쇄시켜 버렸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각종 (2면에 계속)

## '다른 세계'가 찾아온다, 영화와 함께!

### 14일부터 7회 노동영화제...신자유주의에 맞선 투쟁현장 한자리

7회 노동영화제가 오는 11월 14~16일, 21~23일에 걸쳐 대학로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열린다 (http://www.lnp89.org/7th).

그 동안 노동영화제는 열악한 물적, 인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노동 영상운동의 혁혁한 성과를 조망해 볼 수 있도록 연대의 장을 형성해왔다. 7회 영화제에서도 역시 신자유주의 질서가 일상 곳곳을 침탈한 오늘날, 노동자들의 삶과 생생한 투쟁의 현장들을 전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를 꿈꾸며 자본의 세계화를 전복시키고자 벌어지고 있는 변혁운동의 숨겨진 지형들을 포착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특히 기존 체제와 친밀하게 조응하며 '같은 사고'를 조장하고 있는 주류 미디어에 대항하여 역사의 한 칸에서 끊임없이 움직여 왔던 대안 미디어의 어제와 오늘을 검토해 보는 작품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 전세계 변혁운동 주체들의 '공공의 적'이라 규정할 수 있는 주류 미디어에 맞선 대안 미디어가 혁명적인 상황과 어떻게 결합하여 드러나는지를 고찰하는 작품들, 그리고 대안적 세계화를 일구어 내는 데에 새로운 상상력을 불어넣는 단편 비디오 액티비즘의 최신작들을 맛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올 한해 완성된 국내 노동영화들도 상영된다.

빈집은 우리들의 것. <점거하라!>

수억, 수십 억을 호가하는 고급 주택들은 위세를 떨치며 줄지어 모여 있고, 갈수록 치솟는 집세에 전전공공하는 이들은 주거 마련을 위해 정당한 권리를 저당 잡힌다. 빈부격차의 심화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호화 주택과 주택난의 불합리한 공존. <점거하라!>는 캐나다의 몬트리올 등지에서 경제적인 궁핍과 정치적인 소외를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이들이 시내의 빈집을 점유하며 자율적인 공동체를 꾸려 나가는 스쿼터(Squatter) 운동의 역동성을 따스한 시선으로 담고 있는 다큐멘터리다.

미혼모, 노숙자 등 기존의 사회체제 내에서 배제의 아픔을 지속적으로 겪어왔던 소수자들에게 스쿼터 운동은 생존과 직결되는 주거권의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할 뿐 아니라, 사회보장제도가 결코 보증해 줄 수 없는 안정되고 활기찬 일상의 영위와 자신감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이기도 하다.

작품은 지난한 과거사를 안고 있는 개별 주체들이 수평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스쿼터를 건설하기 위해 적잖은 내부적 진통이 따른다는 것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삶의 양태를 정교하게 파괴시키려는 보수 세력들의 공세를 보여줌으로써 무정부주의를 표방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사유재산제를 거부하고자 하는 스쿼터 운동의 위력을 입증하고 있다.

동시에 전세계 수백만 명이 동참하고 있으며 1개를 탄압하면 10개가 새로 재조직된다는 스쿼터 운동이 정치권과 주류 미디어의 담합이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인 강력한 풀뿌리 운동임을 시사한다. 교묘하게 외연을 바꿔가며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만 같은 자본주의 체제에 도전하는 반자본 직접행동이 발산하는 유쾌한 에너지를 느껴볼 수 있는 작품이다.

제3세계 영화 복원한 수작. <레이문도>

아르헨티나의 실업자 운동,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 혁명, 콜롬비아의 게릴라 저항, 볼리비아의 코카 재배농민 운동 등 일련의 정치 경제적 위기에 응대하며 등장한 민중운동들 때문에 '21세기 변혁 운동'의 리트머스 무대라고 평가받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 대륙. 미국의 뒷마당을 자처한 독재 정권의 억압과 혁명적 상황을 동시에 겪어온 라틴 아메리카의 피로 얼룩진 현 대사는 당대의 현실에 실천적으로 개입한 일련의 영화들을 탄생시켰다.

<레이문도>는 1976년 아르헨티나의 군부에 의해 납치, 살해된 아르헨티나 출신의 감독 레이문도 글레이저의 인생을 씨실로 하되, 라틴 아메리카의 역동적인 현대사를 날실로 교차시키면

서 쿠바, 브라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등지에서 나타났던 영화운동의 의의를 되새긴다.

영화는 1492년부터 압제에 시달려야 했던 라틴 아메리카 대륙의 정치적 지형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변혁에 기여하고자 했던 6, 70년대 라틴 아메리카에서 제작된 영화들의 일부 장면들을 레이문도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며 삽입시켰다. 또 레이문도의 삶의 조각들이 담겨 있는 사진들과 동영상, 그리고 다큐멘터리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애니메이션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산업적 논리에 종속되어 소비로서의 영화를 강요하는 현 체제 내에서는 흔적조차 발견하기 어려운 제3세계 영화의 역사적 복원을 시도한 수작이다.

그 외 농치기 아까운 작품들

자본에 대항한 517일간의 치열한 싸움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외면과 천대를 감내해야 했던 한국통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다룬 <이중의 적>,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중운동의 현장을 유려한 수사로 포착하며 대안적 세계화 운동의 공고한 구축을 꾀한 <제4차 세계대전>,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을 전복하려는 쿠데타와 이에 대한 민중의 반격을 통해 급진적 상황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혁명적 미디어의 중요성을 입증한 <혁명은 TV에 나오지 않는다> 등 농치기 아까운 작품들도 즐비하다. (이진영)

(11면에서 이어짐) 집회현장에서 벌어지는 경찰 폭력을 모니터하고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평화인권연대 손상열 상임활동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장비 안전교육 실시여부와 함께 분사기와 같은 경찰장비의 경우 사용시 작성토록 되어있는 보고서가 작성돼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며, 장비를 동원한 과잉진압을 하지 못하도록 여론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향후 △12일 노동인권실태 보고서 발표와 노동부장관 항의방문 △13일 여의도 각 당사 앞 테러방지법 추진 항의시위 △17일 국가인권위 진정과 위원장 면담 △18일 청와대 앞 시위 등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임국현)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테러방지법 '3당연합안' 국회 제출

### 본질적 문제점 놔둔 채 부분 뺄기...인종주의적 발상 드러내

지난 10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홍준표(한나라당), 함승희(민주당), 김덕규(열린우리당) 의원이 새로운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정보위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3당연합안'은 지난 8월 국정원과 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민주당이 발의했던 테러방지법 수정안과 내용 면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지만 3당이 연합해 마련한 법안이어서 정보위 심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가깝게는 14일 오전 10시 정보위 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번 3당연합안에서 8월의 수정안과 달라진 점을 찾아내기란 '숨은 그림 찾기'보다 힘들다.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여전히 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테러활동'을 비롯한 불명확한 개념을 삽입해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가능케 한 조항들도 버젓이 버티고 있다. 또 테러예방을 방지하여 외국인에 대한 자의적인 감시와 출입국 규제 등을 가능케 한 조항과 시민들의 통신에 대한 자의적 감청을 가능케 한 조항들도 전혀 손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계수 교수(울산대 법학)는 "이번 법안에서도 국정원 산하의 대테러센터는 의연히 살아남아 '법률적 승인'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국정원은 국민적 개혁 요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또 "테러위협이 헌법까지 무력화시키는 마법의 주문은 아니"라면서 "테러에 대한 막연한 공포에 기반해 비밀정보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내·외국인에 대한 일상적 감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안은 결코 통과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번 안에서 달라진 점이라고는 △대테러센터의 권한 중 '대테러활동의 기획·지도 및 조정'에서 '지도'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시설 보호와 경비 위해 동원된 군병력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국방부장관에게 부여하며 △테러와 관련된 허위사실의 신고·유도 등에 관한 대테러센터 직원들의 수사권을 삭제하도록 한 것 정도에 불과하다. 그 동안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물론 정부 내에서조차 비판을 받아온 조항들을 손질한 셈이다.

그러나 이는 국회 통과를 겨냥한 '눈 가리고 아웅'식의 부분 뺄기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상임활동가는 "지도"라는 단어가 삭제되었다 해도 엄청난 정보력을 갖고 있는 '음지의 권력기관' 국정원이

2003년 11월 13일(목)

제 245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다른 국가기관들을 사실상 지휘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동원된 군병력의 지휘·명령권이 국방부장관에게 있다고 해서 시민들의 일상생활 한 가운데 군부대가 드나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꼬집었다.

심지어 이번 3당연합안은 발의 이유를 "북한·이슬람 등의 국내외 테러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신체를 보호하기 위해"라고 밝혀 낡은 냉전적 인식과 인종주의적 편견마저 드러내고 있다. 이는 남북관계를 냉전시대로 회귀시키자는 것일 뿐만 아니라 12억 이슬람인들을 모두 테러위협분자로 규정하는 신인종주의적 발상이다.

이와 관련해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13일 낮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항의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배경내)

### ◎ 바로잡습니다 ◎

12일자 '봉쇄용 집회신고' 관련 기사에서 (주)신천개발은 '정부종합청사'가 아닌 '정부대전청사' 경비를 맡고 있습니다.

## 만화사랑방

이동수



## "정부, 국제인권원칙 위반·노동인권 침해 앞장"

### 인권단체들, 손배·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 발표

최근 노동자들의 잇따른 분신과 자결 사태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노동기본권 실태보고서'(아래 보고서)를 내고 본격 대응에 나섰다.

12일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30개 인권단체들은 '2003년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를 내고 "노동조합과 운동가들에 대한 살인적인 손배·가압류와 각종 부당노동행위, 각종 차별에 시달려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헌법과 노동관계법, 그리고 국제인권원칙에 명백하게 위배된다"면서 "한국정부가 인권침해의 가해자로 앞장섬으로써 국제인권원칙에 따른 국가의 책무를 스스로 방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측은 "파업을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고 파업이 시작되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등의 구실로 손배·가압류를 청구한 뒤 이를 무기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파업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을 사전·사후적으로 봉쇄하는 행위"라며 "살인적인 청구액은 인권의 바탕인 생존권 그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며 건강권, 아이의 교육권 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제반 권리를 송두리째 박탈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보고서에 집계된 바에 따르면, 공공부문 손배·가압류 규모가 394억 7천만 원으로 전체 액수의 26.4%에 이르러 인권보장에 힘써야 할 정부가 오히려 생존권 박탈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전체 노동자의 50%가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부정책도 국제인권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1년 '유엔 경제·사회·문화권리 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 2차보고서 심의 후 채택한 최종견해(아래 최종견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연금혜택, 실업, 의료혜택, 직업안정성 등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차별적인 대우

를 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9월 노동부가 발표한 이른바 '노사관계 개혁방향'은 △동일노동·동일임금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기간제 노동의 사용 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기간(2년)만 제한해 주기적 해고사태를 예고하고 있으며 △몇 개 업무만을 제외하고 파견노동을 전면 허용하는 등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어 위원회의 권고와 배치된다.

한편 최종견해는 "파업행위를 범죄시 하는 정부의 접근방식은 전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것"이라며 "대량해고에 의해 유발된 최근의 노동 관련 시위에서 과도한 경찰력이 사용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폭력을 이용한 정부의 '사용자 편들기'는 여전했다. 올해 들어 7개 사업장에 경찰력이 투입됐고, 지난달 24일 현재 구속자가 144명에 이르렀지만 부당노동행위 사업주는 단 한 명도 구속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권단체들은 "한국정부는 사회권규약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하고 있어 2006년 3차 보고서 심의에서 사회권 침해 국가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다시 그 예전의 무권리의 노예상태로 돌아가라는 자본과 정권에 대해 우리는 인권의 이름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권단체들은 17일 국가인권위에 노동기본권 관련 조사활동을 촉구하는 진정을 제출하고, 18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 인권운동 역량을 총결집해 항의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성준)

## '법 위의 경찰', 거리서 무고한 시민 폭행

### 인양 경찰, 적법절차 무시도 모자라 폭력·폭언까지 행사

최근 집회현장에서의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경찰이 불심검문 도중 무고한 시민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공무집행을 방자한 경찰의 '폭력' 행사가 단지 시위현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일상화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5일 밤 11시경 이모 씨는 인도를 통해 오토바이를 끌고 가다가 안양역고 박달삼거리 부근에서 경찰 세 명에게 불심검문을 당했다. 이 씨에 따르면, 당시 경찰들은 자신들의 신분은 물론 불심검문의 사유를 밝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짜고짜 이 씨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몸수색을 자행했다. 이에 이 씨가 항의하자 그 중 노모 경장은 "가만히 있어! 이 씨발 놈야. 확 쳐버릴라. 법만 없으면 확 죽여버리는데..."라는 욕설을 퍼부으며 팔을 잡아 꺾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결국 이 씨는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져 안양 중부지구대로 연행되었고, 신원조사를 받고 나서야 풀려났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자행된 경찰의 폭력으로 오른팔에 상처를 입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해 안양경찰서 중부지구대의 한 관계자는 "제복을 착용하고 있어 따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뿐"이며 "당시 오토바이 날치기 사건이 많이 발생했고 정황상 이 씨에게 의심 가는 점이 많아 연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엄연히 불심검문 및 동행요구 시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경찰은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오직 의심이 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며 불법연행을 자행한 것이다.

이 씨는 "어떻게 법치국가라는 이 나라에서 길을 가다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개처럼 끌려가는 모욕과 부당한 폭행, 체포를 당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양승훈)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한국정부는 우리들 죽음 원함니까”

### 이주노동자 죽음으로 떠미는 단속추방 중단 촉구

노동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몸을 불사른 지 33년이 되는 13일, 최근 이주노동자들을 잇따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단속추방정책의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 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이날 오전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은 한국정부의 추방정책에 따른 구조적 타살"이라면서 단속추방정책의 즉각적인 중단과 불법체류자에 대한 전면 합법화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지난 11일 단대오거리 전철역에서 전동차에 치여 숨을 거둔 다르카 씨와 12일 자신이 일하던 김포의 한 공장에서 목을 맨 내팔 비꾸 씨는 모두 강제추방을 앞두고 극도의 심적 고통을 겪다 죽음을 '선택'하도록 등을 떠밀린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르카 씨의 주변 동료들은 그가 월급 110만원 중 80만원을 고국인 스리랑카로 피박피박 부칠 정도로 성실히 생활해 왔지만, 10월말 체류기간이 4년이 넘어 합법화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이후 심적 고통을 겪어왔다고 전했다. 또 8년간 한국에 체류했던 방글라데시 출신의 비꾸 씨는 최근 정부 방침에 따라 일하던 공장에서 해고되고, 동생의 한국 입국 과정에서 빚어진 송출비로 생겨난 빚을 갚아야 하는 막막한 처지에서 죽음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평등노조 이주지부 사별 지부장은 한동안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잘 잊지 못하다가 "한국정부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노동자의 죽음을 원하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이 같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50개 전담 단속반을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추방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자진 출국자를 제외한 단속 대상자 수를 11만명으로 잡고 있지만,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들은 20여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놓지 않는다면, 그 동안 온갖 인권유린을 겪어왔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

'인간사냥'이 현실화될 예정이다. 평등노조 이주지부 쏘나 선전국장은 "일부는 이미 해고를 당해 공장밀집지역을 벗어나 외진 지역을 찾아 떠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쏘나 선전국장은 또 "정부가 이후 불법체류 신분의 이주노동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거나 은행계좌를 막아 버리는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며 이에 따라 제2, 제3의 죽음이 잇따르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정부의 추방조치에 맞서 전면적으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염 대표는 "이번 단속추방 조치로 생산직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인 성산업으로 유입되지는 않을까(=2면에 계속)

#### 클릭! 인권정보자료

**교회도 성폭력 예외지대 아니다 - 「기독교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지침서」**  
지은이·펴낸이: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기독교여성상담소/ 2003년 8월

교회내 성폭력이 무엇이고 그 유형과 특징을 분석한 후, 예방지침 및 대처방법을 소개한 자료집이 발간됐다. 이 자료집은 그 동안 감추어졌던 교회 내 성폭력의 실상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성폭력 해결을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을 담고 있다. 기독교여성상담소는 가정, 교회, 사회에서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 피해를 당하는 교회여성을 돕기 위해 1998년 설립되었고, 이 자료집은 그간 상담활동을 통해 얻어진 성과물이다.

자료집에서 기독교여성상담소는 교회내 성폭력을 "교회나 기독교기관 등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성폭력"으로 정의한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나 목회자가 종교적인 특수성이나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여 신도나 고용된 목회자에게 성폭력이나 간음 또는 그와 유사한 성적 행위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자료집에는 신도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성서 오용의 예를 보여주면서 올바른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 기독교여성상담소는 교회가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상담·치료할 수 있는 교회법을 제정하고, 각 교단이 성차별과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지침서를 만들어 교육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른 성폭력 사건도 다를 바 없지만 특히 교회 내 성폭력은 쉽게 은폐되어 왔다. '종교행위'를 빙자해 사건은 가려졌고, 설사 피해자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사건이 세상에 알려져도 피해자는 교회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분열주의자라는 낙인을 얻고 명예훼손으로 고발되기 일수였다. 이런 현실은 성폭력 신고율이 6%에 지나지 않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료집은 교회내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교육 자료로 쓰일 수 있다. (최은아)

## 송두울 교수 대책위 중축 새단장

김철·국정원 '피의사실 유폐', 정형근 의원 등 고소·고발키로

송두울 교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범사회적 대책기구가 결성됐다. 100여 개 학술·인권·종교단체들이 '송두울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결성하고, 귀국 이래 송 교수에게 가해진 매카시즘적인 공격과 인신공격, 전향공작 등 공간기관의 인권침해에 맞서 나가기로 뜻을 모은 것.

13일 대책위는 서울 변호사회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책위 결성을 공식 천명하고, 검찰과 국정원의 피의사실 유폐에 대한 고소, 고발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송두울 교수 사건 교수·학술연구자 비상대책위원회'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 두 단체가 주축이 되어 송 교수 구명활동을 벌여왔으나, 앞으로는 13명의 상임대표, 31명의 공동대표, 39명의 고문, 100여개의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대표와 단체들로 꾸러진 이 대책위를 중심으로 활동을 벌여나가게 된다.

대책위는 앞으로 송 교수의 학문·사상·양심의 자유를 지키고 국가보안법과 같은 냉전잔재의 청산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송교수 석방 구명활동 △법률구조 △사건 백서와 홍보 책자 발간 △홈페이지(freesong.jinbo.net) 운영 △내달 4일 '송두울 교수 학문과 삶'을 주제로 한 학술 콜로키움과 후원의 밤 개최 △국제연대활동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사업이 예정돼 있다.

특히 대책위는 검찰, 국정원, 정형근 의원에 대한 고소,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주리 사무국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고발인단을 구성하여 피의사실 공표의 책임을 물어 오는 18일 오전까지 검찰과 국정원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할 예정"이며 "20일 이후에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과 몇몇 언론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검찰과 국정원은 수사도중 혐의사실을 언론에 유포시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했다. 또 정형근 의원은 지난달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송두울 교수가 노동당의 지도기관 성원임을 고백했다'고 하는 등 검증되지 않는 내용의 발언으로 송 교수를 대어급 간첩으로 몰아갔다. 조선, 동아일보를 비롯한 몇몇 언론들은 한술 더 떠 '국외 추방론'을 외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민가협 어머니들도 참여해 자신들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송두울 교수의 가족들을

응원했다. 민가협 임기란 고문은 "우리들은 더 심한 박해를 견뎌왔습니다. 힘내서 싸워 이겨 송 교수님과 함께 담소하는 시간이 오길 바랍니다"라는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한편 오는 20일 송 교수의 구속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조만간 구속기소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임국현)

=====

(1면에서 이어짐) 우려된다"고 말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정진우 공동대표는 "정부 방침에 순순히 따르는 않을 것"이라며 "역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운동주체들이 적극적으로 투쟁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진영)

## 급물살 탄 테러방지법, 의사봉 돌진 막아라

테러방지법대공동행동 여의도 돌며 항의...각당 당론조차 없어

국회 정보위원회(아래 정보위) 소속 민주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3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14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또 하나의 반인권 약법이 입법 일정의 급물살을 타고 의사봉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 98개 단체들이 연대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이 물살을 되돌려 놓기 위해 13일 온종일 국회, 민주당, 한나라당을 찾아다니며 "테러방지법 반대"를 목이 쉬도록 외쳤다.

공동행동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찾아가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의 입법에 반대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에 정녕 귀를 들어막을 것인가"라고 강하게 항의하며 "테러방지법 폐기를 당론으로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경청하는 의원들은 보이지 않고 전경들만 이들의 목소리를 이중 삼중으로 에워쌌다.

'국가의 안전'을 위해 제정한다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어이없게도 각 당은 당론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보위 의원 12명의 손에 '국가의 안전'이 맡겨져 있는 꼴이다. 게다가 정보위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과 국정원 사이에 어떤 '합의'가 오고 갔는지 국민은 알 도리가 없다.

공동행동은 이날 정보위 의원들에게 췌기를 박아두자는 계획도 실천에 옮겼다. 특히 이 법의 제정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정형근 의원은 반드시 만나야 할 인물. 다행히도 이들은 12명의 의원 중 그를 유일하게 대면할 수 있었다.

정 의원은 "테러방지법은 여당에서 발의했으니 거기 가서 항의하라"며 "나는 1차 법안 발의 때 반대했던 사람"이라며 한 발 뺐다. 그렇다면 2차 제정에 그렇게 적극적인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는 "이 법의 제정은 유엔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핑계를 늘어냈다. 사실 상당수 정보위 의원 보좌관들은 유엔의 권고를 법 제정의 정당성으로 들이댔다. "유엔 권고는 각국이 테러 위협에 적절히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지 '테러방지법 제정'을 독촉한 것은 아니"라는 한 인권활동가의 지적에 대해 정 의원은 "논리가 되는 좋은 말씀"이라는 엉뚱한 답을 내놓기도 했다. 최종적으로 그는 "(10일 3당의원들이 공동 제출한) 수정안은 많이 수정돼 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 찬성"이라는 의견을 확실히 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 법에 반대해 인권사회단체들과 개인이 발표한 성명과 의견만도 24건에 달한다. 국민적 반대라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도 정보위가 테러방지법 입법에 박차를 가할지 14일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김정아)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제2의 국가보안법 탄생 초읽기

### 테러방지법안, 국회정보위 만장 일치 통과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며 인권사회단체들의 강력히 반대해온 테러방지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아래 정보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정보위는 14일 오전 10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0일 홍준표(한나라당), 함승희(민주당), 김덕규(열린우리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른바 '3당연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보위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오직 테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의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대로 법률이 제정되면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대테러활동의 기획 및 조정"(제4조) 등을 담당하도록 해 국정원에게 날개를 달아주게 된다. 또 제안이유에서 북한과 이슬람을 테러위협세력으로 거론하면서 테러단체를 "UN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 및 이 단체와 연계된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제2조)이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규정, 국내 사회단체들마저도 국정원의 먹이감이 될 수 있다. 게다가 '테러'의 개념도 여전히 모호하다.

또 법안은 대테러센터에서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그 소재지, 국내 체류 동향 및 테러자금 지원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제8조1항)할 수 있도록 한다. '사실확인'을 한다는 구실로 국정원이 수사까지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외국인은 잠재적인 '테러용의자'로 취급받는다. 게다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상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조건인 "반국가활동에 '테러"

2003년 11월 15일(토)

제 245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이번 법안 통과를 국정원 개혁과도 상반된다. 이계수 교수(울산대 법학)는 "군사정권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국정원의 제도적 개혁은 국회에 정보위를 설치하는 것이 고작이었다"며 "93년 여야합의로 박탈됐던 수사권이 97년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로 회복되는 등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위 국회의원들은 국정원에 대한 문민적 통제를 스스로 포기한 셈"이라고 규탄했다.

(☞2면에 계속)

### <논평> 임박한 이주노동자 '사냥'에 반대한다

정부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사냥'이 임박했다. 자진출국하지 않은 4년 이상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 등 11만 명이 그 사냥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50개의 단속반을 만들어 내년 6개월까지 전국을 샅샅이 뒤지고, 사냥에 걸린 이주노동자들은 강제 추방하겠다고 한다.

그들이 산재보상을 못 받았거나 체불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그들이 이대로 고국과 가족 곁으로는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딱한 사정도, 인력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체 고용주들의 사정마저도 고려의 대상이 못된다. 다라카, 비꾸 씨가 절망 가운데 자살을 했음에도 그런 것으로는 정책 변경은 있을 수 없다는 단호함마저 배어 나오는 인간사냥 방침 앞에 이주노동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잠적'해 들어가고 있다.

다라카와 비꾸 씨의 코리안 드림의 비극적 결론은 이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부터 예고되었던 것이다. 노예제도와 다름없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존속시키고, 단기간의 고용을 순환적으로 허용한 이 법률에는 이주노동자들이 누려야 할 사업장 이동의 자유, 노동3권이나 사회복지 혜택은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다. 이런 법률에 근거하여 4년 이상 불법 체류자는 자진 출국 기간을 설정한 뒤에는 봐주지 않고 단속해 강제추방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단속추방이라는 전근대적이고 야만적인 인간사냥을 통해 값싼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교체하기 위한 것이 이 법률의 제정 취지이고, 이번 단속의 배경이다.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굳어진 이주노동에 대해 국제사회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발효시키고 있는 마당에 대한민국은 이주노동자들의 고향을 짚낼 야만적인 방법만을 '합법'이란 이름 아래 강행하려 한다.

강제추방으로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알팍한 정책당국자들의 단속 강행이 불러올 비극은 이미 예상될 수 있다. 그 비극을 막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강제 추방 방침을 철회하고, 이주 노동자들을 전면적으로 합법화하라. 노동허가제를 근간으로 하는 이주노동자 노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 인간사냥은 어느 때고 인류의 양심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 환자 간병, 병원과 정부가 책임져라

### 간병인 문제 해결, 의료 공공성 확보 공청회 열려

지난 1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간병제도의 사회적 책임 확보를 위한 공청회'가 보건 의료 단체 등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서울대병원 간병인 문제 해결 및 공공병원으로서 제자리 찾기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 주최로 개최되었다. 이 공청회는 지난 9월 1일 서울대병원이 간병인 무료소개소 폐지한 것으로 계기로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기 시작한 간병문제와 관련하여 간병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현 보건의료정책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였다.

혈세로 돈벌이에 바쁜 서울대병원

이날 공청회에서 첫 발제를 맡은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간병인 운영위원장 김정순 씨는 "서울대병원이 무료소개소를 폐지한 것은 간병업무에 대한 병원측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며,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간병인들을 탄압하기 위한 악랄한 수단"이라 규탄하였다. 병원측이 오직 돈벌이를 위해 환자의 건강권과 간병인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였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이종규 정책위원은 지난 10월 서울대병원이 강남구에 개설한 건강검진센터를 언급하며, "이 센터는 월 임대료 2억에 관리비만 8천만원이고, 프리미엄 건강검진비가 320만원(60대 남성 기준)이나되는 그야말로 극소수 부유층만을 위한 돈벌이용 건강검진센터"라 비난하였다. 또한, 이종규 씨는 "서울대병원은 연간 400억원 정도의 국고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매년 운영비가 2400만원에 불과한 간병인 무료소개소는 폐지한 채, 부자들만 누릴 수 있는 값비싼 의료만을 개발해 서민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자활후견협회 사업지원센터 사무국장 윤연옥 씨는 "의료는 공공의 영역이고, 국민의 건강권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간병 부분을 개인의

영리활동으로 국한하지 않고 사회에서 제공해야 하는 보건복지 서비스라는 인식을 가지고 간병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간병, 국가와 병원이 책임져야

이날 공청회를 통해 참가자들은 △서울대병원 무료 간병인 소개소 폐쇄 결정 즉각 철회 △간병인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공공의료기관 무료 간병인 소개소 설치 의무화 △간병인 업무를 정부와 병원이 책임질 것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보건의료정책을 개선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 사람 모이는 곳이면 평화의 놀이를

### 전국순회 유랑단 '평화바람' 발족

한반도를 평화의 땅으로 바꾸기 위해 유랑단 '평화바람'이 14일 발족했다. 문정현 신부를 단장으로 구성된 평화바람은 앞으로 전국을 돌며 노래와 춤으로 평화의 바람을 일으킬 예정이다.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발족식을 가진 평화바람은 문 신부 이외에 전주, 인천,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7명의 활동단원으로 구성됐다.

유랑단은 기존의 투쟁단, 순례단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등장했다. 과거의 '약장수'처럼 사람들이 모인 곳곳을 돌아다니며 만담을 늘어놓고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는, 그러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유랑을 하는 것. 유랑단 결성에 관해 문 신부는 "107일간 부안 폐쇄기장 반대시위를 해오면서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함께 생각을 나누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라며 유랑단 발족의 의미를 설명했다.

평화바람은 앞으로 최소 1년 동안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과 평화의 비둘기를 그림으로 꾸며놓은 유랑버스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게 된다. 전국을 돌며 평화바람은 평화를 담은 그림과 영상물 등의 불거리와 파전 등의 먹거리 마당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노래방, 난타와 같은 놀거리도 마련한다. 특히 난타는 공연자와 관객의 구분없이 누구나가 전쟁 반대와 평화실현의 구호를 외치면서 막대, 강통, 드럼, 장구 등을 두드리며 진행된다. 오뚜기 유랑단원은 "난타는 소리로서 저항하는 것"이라며 "민중들이 마음속에 쌓여있던 분노를 표출하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라고 설명했다. 김보리 단원은 "부안에서는 주민 수 천명이 밤새면서 신나게 두드렸다"며 난타가 이미 검증된 대중놀임을 밝혔다.

그러나 럽스펠드 미 국방장관의 방한문제 등, 시급한 파병정국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평화바람은 당분간 서울에 머물러 있을 계획이다. 파병반대를 위해 유랑단은 15일에 개최되는 이라크 파병결정철회 국민총궐기대회를 비롯 럽스펠드 미 국방장관 방한반대시위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발족식에는 평화박물관 추진위, 평화인권연대, 가톨릭 노동사목 회원 등 30여 명이 모여 평화바람의 성공적인 유랑을 기원했다. (임국현)

한편, 공청회 지정토론자로 참석이 예정되었던 보건복지부 정책담당자는 이날 불참, 참관인들의 빈축을 샀다. (양승훈)

(1면에서 이어짐)  
한편 정보위 통과에 앞서 이날 오전 9시 50분경 평화인권연대 손상열 활동가 등 인권사회단체 활동가 9명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정보위 법안 상정 소식을 듣고 긴급히 모인 이들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테러방지법 제정시도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다 국회경비원들에 의해 전원 연행됐다. 영등포서와 방배서로 나뉘어 조사 받은 연행자들은 이날 오후 늦게 모두 귀가조치 됐다.

(강성준)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이주노동자 무차별 검거에 수감까지

### 단속반 인권침해 속출 우려...이주노동자 농성투쟁 활발

"우리는 쓰레기가 아니에요. 너무 힘들지만 끝까지 싸울 거예요. 죽어도 한국에서 죽을 거예요."

17일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 단속'이 시작된 가운데 강제추방 위기에 몰린 이주노동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농성을 전개하며 맞서고 있다.

#### '노예사냥' 하듯 마구잡이 검거

법무부는 17일부터 전국을 50개 지역으로 나눠 경찰,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50개 전담반을 투입해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이날 낮 12시 경 안산역에서는 30여 명의 합동단속반이 지나가는 외국인에 대해 무차별 검문을 실시해 11명을 체포했다. 경기도 마석에서도 오후 4시 30분 경 단속반이 성생공단으로 들어와 3명을 체포해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송했으나, 그 중 2명은 단속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풀려나기도 했다.

단속장면을 목격한 마석 '살림의 집' 이영 신부에 따르면, 단속반은 지나가는 외국인들을 무조건 잡아 봉고차에 태운 후 신분을 확인했으며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이들에게까지 수감을 채워 지켜보던 주민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기본적인 인권 원칙마저 무시한 마구잡이식 검거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신부는 "범죄자도 아닌데 '현대판 노예사냥' 하듯이 끌고 갔다"면서 "고용허가제 통과 이후 단속추방에 대한 정부 측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지만 자진 출국자 수는 예상보다 적어 향후 무리한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속

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렇게 강제추방 위기에 몰린 이주노동자들은 명동성당 등 전국 곳곳에서 '강제추방 반대, 미등록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주노동자 헌신짝 취급하나?"

명동성당 들머리에는 15일 저녁 8시부터 이주노동자와 연대단체 회원 200여명이 모여 철야 농성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정부는 또다시 미등록노동자 문제를 강제추방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들고 있다"며 "그간 수없이 실시했던 단속과 강제추방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오랫동안 한국사회를 위해 땀 흘려온 노동자들을 내쫓고 새로운 인력을 들여오겠다는 정부의 비열한 '토사구팽' 정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며 강제추방 정책의 즉각 철회와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전면 합법화 등을 요구했다.

#### 이주노동자 농성 전국화

소공동 성공회 서울대성당에는 17일 아침부터 버마, 파키스탄 출신 노동자 50여 명이 모여 철야농성에 돌입했고,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에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출신 노동자 60여 명이 지난 12일부터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마석에서는 방글라데시, 필리핀 출신 노동자 100여 명이 16일부터 '살림의 집'에 자리를 잡았다. 이 밖에도 대구와 전주, 창원 등지에서도 농성이

2003년 11월 18일(화)

제 245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벌이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등 농성 투쟁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우리가 뭐 대단한 것 원하니까?"

17일 명동성당에서 열린 '강제추방 분쇄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쟁취 결의대회'에서 평등노조 이주노동자부 사멸 타파 지부장은 "우리는 인간이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슨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일하면서 노동3권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여러분은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노동자로 당당하게 나섰다"고 격려하며 "강제추방을 막기 위해 한국노동자들도 함께 투쟁하겠다"고 약속했다.

#### 제조업만 당분간 제외한다?

이처럼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음에도 법무부는 17일 "중소 제조업 종사자는 당분간 단속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미봉책을 내놓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성공회 대성당 농성단 대표인 버마 출신 푸라 씨는 "한국정부는 고용주가 우리를 더 잘 이용해 먹도록 배려하는 데만 관심을 쏟고 우리에게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김재근 사무차장도 "일선 단속반은 '제조업 종사자라 하더라도 공장에서 일할 때 단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출퇴근 시 길거리 단속까지 면제받는 것은 아니'라고 우기면서 계속 잡아들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단속 대상인 3년 이상 체류자 12만4천여 명 중 겨우 19%인 2만3천여 명이 출국시한 전에 자진 출국했다. 정부 집계만으로도 최소 10만 명 이상의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추방 위협에 떨고 있다. [강성준]

## 3천명 추가 파병, 한미간 큰 틀 합의 럼스펠드 방한 규탄 그림자 시위 곳곳 이어져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열린 3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아래 한미안보협)에서 한국군 추가 파병 문제에 관한 한미간 공식 합의가 큰 틀에서 이뤄졌다.

17일 국방부에서 개최된 한미안보협에서는 구체적인 협상안 도출은 실패했으나, 한국정부가 내민 3000명 규모의 비전투병 추가 파병안을 미국이 사실상 받아들임으로써 양국간 파병문제에 관한 큰 틀에서의 합의는 도출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한국측 협상안에 그다지 만족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등 향후 미국의 전투병 파병 추가 압력도 우려된다.

회의 결과가 알려지자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은 긴급 성명을 내고 "이번 한국군의 대규모 이라크 추가파병 합의는 미국에 맞서 우리의 주권과 국민자존심을 지키기를 바랐던 우리 국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자,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한목소리로 규탄해 온 이라크 민중을 비롯한 전세계 평화애호 민중들에 대한 배신 행위"라며 이번 합의의 무효화를 위해 강력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한미안보협에 참석하기 위해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방한하면서 시작된 사회단체들의 럼스펠드 방한 반대시위가 17일에도 온종일 이어졌다. 오전 8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머무르고 있는 신라호텔 앞에서 진행된 1인 시위를 필두로 파병반대국민행동 소속 사회단체들은 그가 가는 곳곳을 따라다니며 '그림자' 시위를 벌였다.

회의가 예정돼 있던 오전 10시 국방부 앞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평택시 주민 등 50여명이 모여 럼스펠드 방한 반대시위를 개최했다. 이들은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전투병 파병과 주한미군 영구 주둔을 목표로 회의에 참여하고자 한다"며 그의 방한을 규탄했다. 또 민주노동당 김혜경 부대표는 "카드 빛에, 생활고에 자살하는 농민, 노동자들이 수두룩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은 젊은이들을 보내 또 국민들을 죽이려고 하는가"라며 현 정부의 파병 고수 방침을 강하게 규탄했다.

국방부 후문으로 도망치듯 달려나간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도착한 국립 현충원에는 이미 파병반대 피켓을 든 15명의 시위대가 마중 나와 있었다. 짧은 참배 후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 그가 청와대에 도착할 무렵, 근처 정부합동청사 앞에서는 참여연대, 다함께 회원 등 70여명이 모여 파병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한미안보협에서 파병 계획을 공식적으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노무현 대통령은 파병 결정을 철회하고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를 방문한 럼스펠드 국방장관에게 "이라크가 민주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파병을 통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혀 이들의 요구를 끝내 묵살했다.

<근조> 지난달 23일 장기파업 사태의 해결과 노동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며 분신한 세원테크 이해남 지휘장이 17일 오후 1시 32분경 끝내 운명하셨습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주간인권흐름

(2003년 11월 10일 ~ 11월 17일)

1. 테러방지법 급물살 되돌려라  
국회 정보위원회 홍준표(한나라당)·함승희(민주당)·김덕규(열린우리당) 의원, '3당연합' 테러방지법 수정안 발의(11.10)/ 테러방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 국회 항의방문... '3당연합 수정안도 결사 반대'(11.13)/ 인권단체 활동가 9명, 테러방지법안 정보위 통과 저지 시위 중 연행(11.14)/ 테러방지법안, 정보위 만장일치 통과(11.14)/ 테러방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 열린우리당 항의방문(11.17)

2. 죽음 내모는 이주노동자 추방 정책  
강제출국 비판 치란 다르카 씨, 8호선 단대오거리역에서 열차에 치어 스스로 목숨 끊어(11.11)/ 네팔 비주 씨도 자신이 일하던 김포 공장 안에서 목매(11.12)/ '외국인이주노동자 단속추방정책반대, 연수제도 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 단속추방정책의 즉각적 중단과 불법체류자 전면 합법화 촉구(11.13)/ 중국조선족동포 5천여명 한국 국적 신청서 제출...국적 회복 헌법소원 제기(11.13)/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조합원 등 이주노동자들, 명동성당에서 '강제추방 저지와 전면 합법화 쟁취' 집단체회 열림(11.15)

3. '압류 당한 인권', 돌리도!  
인권단체공동행동, '2003 노동인권실태보고서' 발표...노동부에 보고서 전달(11.12)/ 한진중 노동조합 손배가압류 철폐 등 노사합의(11.14)/ 노동탄압분쇄 범대위, 1만여명 참가한 가운데 서울시청 앞 범국민 켈기대회 개최(11.15)/ 손배가압류 철폐 외치며 자결한 한진중공업 김주익·곽재규 씨 장례식, 부산 한진중 투쟁광장에서 거행(11.16)

4. 파병압력, 럼스펠드 방한 반대!  
문정현 신부 주축으로 파병반대 유랑단 '평화바람' 발족...무기한 전국일주 반전평화 유랑 시작(11.14)/ 서울시청 앞 파병반대 국민 총궐기대회 열려(11.15)/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미군기지확장반대 평택대책위 등,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참석차 방한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 규탄시위 국방부 앞 등에서 전개(11.17)

'럼스펠드 그림자 시위'는 그가 떠나는 19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당장 18일 오전 그의 숙소인 신라호텔 앞에서 1인시위가 계속되며, 미2사단 앞에서는 규탄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오후 럼스펠드의 방한 예정지인 평택 미군기지 앞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평택주민 주축로 '미군기지 평택 총집결·전쟁무기 배치·이라크 파병 강요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 방한 규탄대회'가 준비돼 있다. [임국현]

◎ 오늘 <인권이야기> 쉽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11월 19일(수)  
제 245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폐쇄 공간 속 기약없는 감금

### 인권단체들, 은혜기도원 인권유린 현장 확인

“철컹” 열쇠가 채워졌던 철문이 열리자 퀴퀴한 냄새와 냉기가 쏟아져 나온다. 창문도 없는 방안에는 담요 하나를 뒤집어 쓴 여자가 문 쪽을 노려본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진다. “왜 여기 갇혀 있습니까? 나가고 싶습니까?”

지난 13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운동사랑방, 한나라당 인권위는 언론사 취재진과 함께 충남 연기군에 위치한 은혜기도원(원장 전철순)을 현장 조사했다. 조사단은 숙소, 식당, 교회 등 수용시설을 돌아보고 수용자 중 80여 명을 대면조사해 열악한 수용시설과 감금·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를 확인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5일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다.

82년 설립된 은혜기도원은 정신질환자와 알콜중독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13일 현재 131명(남자 101명 여자 30명)을 수용하고 있다. 기도원은 보호자가 보내주는 매달 40만원의 위탁금으로 운영된다. 원장의 아들이 총무를 맡고 기타 직원들도 가족들이 나눠 맡는 전형적인 ‘족벌운영’ 시설이었다.

수용자가 수용자 폭행하며 관리

기도원 측은 수용자 중에서 관리자와 방장을 뽑아 수용자들을 통제하고, 수용자가 규칙을 어기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관리자가 벌칙을 가하도록 하고 있었다. 조사당일 아침에도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2명이 관리자에게 폭행 당했다는 증언이 면담조사에서 줄을 이었다. 조사단은 시설 시찰 중 피해자들이 얼굴에 상처를 입은 채 방에 누워 있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 대

면조사에서 7씨는 “예전보다 더 구타가 심해져 사람들이 보는데도 공공연하게 욕하고 때린다”며 “방장들도 공공연하게 구타를 일삼는다”고 증언했다.

지옥 같은 ‘보호관찰실’

벌칙 중에서 수용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보호관찰실’의 감금. 남자 숙소 한편에 마련된 9개의 보호관찰실은 쇠창살로 된 문을 밖에서 잠그도록 되어 있었다. 수용자들은 예배시간에 들어가거나 사소한 규칙을 어기게 되면 하루에서 일주일까지 가두고 ‘금식’을 명분으로 밥도 주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기도원 측은 “심한 발작의 경우 등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만 집어넣고 한 두끼 금식기도를 하는 정도”라고 해명했지만 대면조사에서 99년 입소한 1씨는 “수용자들이 집단 탈주했던 99년에는 금식을 3일 이상 안 시키고 구타도 드물었는데 관리자가 바뀐 요즘에는 5일 이상 금식시키고 구타도 사람들이 보는데서 이뤄진다”고 증언했다.

언제 나갈 지 모르는 사람들

은혜기도원은 관리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미신고 시설’이었다가 지난해 복지부 지침에 따라 2005년 7월까지 요건을 갖춰 양성화하는 조건으로 신고한 ‘조건부 신고시설’이다. 정기적인 정신과 의사의 검진이나 치료도 없다. 작년에 입소한 2씨는 “징역가면 만기일이 있지만 여기서는 보호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영원이 나갈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울분을 토했다.

게다가 수용자들의 입소 서류에는 진단서가 누락된 경우도 있었으며 그나마 있는 진단서도 입소 시기와는 상관없이 1차 조사 직후인 9월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 조사단과의 대면조사에는 참여했던 수용자가 기도원 수용자 명단에는 없는 경우가 10여 건 발견되기도 했다.

또 외부와는 편지도 전화 연락도 맘대로 할 수 없다. 편지는 봉하지 않은 채 관리실에 맡기도록 하고 전화도 관리실에서 원장이나 총무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어떻게 할 것인가?

조사단의 문제제기에 대해 원장은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조건부 허가시설’이란 점을 감안해 달라”며 “시설을 확충, 정식 허가를 받은 시설로 바꾸고, 나머지 시설은 개방기도원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지난 4월 경기도 양평 성실정양원 조사에 이어 기도원을 빙자해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사례가 또 발견됐는데도 2005년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일”이라며 시급한 대책을 촉구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박숙경 팀장은 “민간의 기습조사에 놀란 복지부에서 일제 실태조사를 곧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시·군·구로부 터 자료만 취합받는 식으로는 실태를 알 수 없다”며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의 실태조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다음 주 기자회견을 통해 ‘조건부 신고시설’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18일 은혜기도원 측은 문제의 보호관찰실을 폐쇄하고 여성 수용자들을 형편이 나은 방문자 숙소로 옮기는 등 일부 문제점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강성준)

## "근조 인권", 인권단체들 대통령에 항의

### 대통령은 시위 강경 대처 지시 잇박자

30개 인권단체들이 18일 죽음을 상징하는 국화와 관을 들고 ‘謹弔 인권’ 선언을 했다. 다산인권센터, 사회진보연대, 평화인권연대 등 ‘노동기본권 탄압 중단과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소속 회원 50여명은 청와대 근처 정부민원청사 앞에서 ‘謹弔 인권 선언 및 청와대 해결 촉구 인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선언했다. 인권단체들은 선언문을 통해 대통령에게 △정부부터 공공부문 손배·가압류 철회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시행할 것 △이라크 민중 학살하는 파병 반대 △민주주의와 인권 유린하는 테러방지법 제정 중단 △경찰의 과잉폭력진압 중단과 집회시위자유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인권단체 회원들은 현 상황에서 벌어지는 인권문제에 대하여 총체적인 비판을 가하였다.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의장은 “테러방지법이야말로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되어 모든 통일, 민주운동을 탄압하는 빌미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를 비판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파병문제와 관련, “자신의 신념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이라크 민중들과 싸울 수는 없다”며 단 한 명의 군인도 파병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평화인권연대 손상열 활동가는 “노무현 대통령 집권 이후 144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되고 7차례에 걸쳐 파업 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됐으며 시위현장에는 방패와 곤봉으로 무장한 공권력이 투입됐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정부는 노동자들의 화염병 시위에만 초점을 맞춰 노동자 탄압에 열을 올린다”고 비난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인권단체들은 공동서한과 국화를 들고 청와대로 진행하려 했으나 경찰의 봉쇄로 4명의 대표자만이 청와대 민원실을 방문, 항의서한을 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의 이 같은 외침에 대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시위문화 4대 원칙’으로 응답했다. 노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합법적 시위는 철

저히 보장하되 불법폭력시위는 반드시 추적 책임을 묻고 주동자와는 어떠한 협상도 하지 말 것 등을 지시, 경찰의 시위 강경진압을 옹호했다. 이로써 경찰은 지난 9일 노동자대회 때 등장했

던 화염병 시위 관련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노동자대회에서 100여명의 노동자를 현장 연행, 42명을 구속한 데 이어 지난 17일 화염병 시위 연루 혐의로 금속연맹 노조 간부 및 노조원 1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민주노총과 금속산업연맹 집행부에 대해서도 3차 소환장을 발부한 상태다. (임국현)

## “강제 출국 당해도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 이주 노동자들 농성 4일째, 소두무 씨와 라다 씨의 경우

정부가 10만 명 이상의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단속 추방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명동성당을 비롯 안산, 마석,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등을 외치는 이주노동자들의 농성이 어제로 4일째를 맞았다.

소공동 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농성중인 버마 출신의 소모두 씨는 약 9년 전, 버마에서 대학에 다니다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그는 “버마는 군사 정부의 통치 아래 놓여 있는데, 군사정부가 친인척 등을 동원하여 관료 자리를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 “한국에서 송금하는 돈으로 가족들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 같이 쫓겨날 수도 있지만, 자진 출국을 할 수는 없다”고 자신의 처지를 설명했다.

1962년부터 군사독재 체제 아래에 있는 버마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버마로 진출하려는 다국적기업들의 비호를 군사 정부를 지탱하는 주요한 원인이다. 군사 정부와 외국 자본의 공생 관계로 형성된 버마의 불안정한 정치, 경제적인 상황은, 현지 사람들에게 ‘이주’를 강요하는 동시에, 한국의 이주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이다.

명동성당에서 농성 중인 네팔에서 온 여성 노동자 라다 씨 역시 본국에서 대학 다니다가 한국에 오게 되었다. 그는 농성장에서 내내 큰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몸이 아프지만, 같이 싸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강제 출국을 앞두고 집의 보증금도 받지 못해 모든 짐을 그대로 집에 둔 채 농성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한국에 첫 발을 디딘 지 어느새 10년이 지났는데 “초기에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까지 강도 높은 노동을 했기 때문에 골병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사측에서 별다른 보상을 해주지 않아, 생계마저 여의치 않았지만, 같이 생활하던 이주 노동자들의 도움으로 한국에서 생활을 꾸려나간 것”이라고 밝혔다. 본국에 있는 13살의 자식이 몹시 그리지만, 네팔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걱정을 끼칠까봐 현재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로서 겪고 있는 본인의 상황은 얘기조차 꺼내지 못했다.

라다 씨는 이주 노동자이면서 여성 노동자로 살아가는 데에 이중, 삼중의 고통이 따른다고 호소한다. “생리 휴가를 보장받지 못한 것은 물론, 주변에서 성폭행의 상시적인 위협에 시달리는 많은 친구들을 보아왔다”고 전한다. “당장 다음달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친한 동료는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속 추방 때문에 몸을 숨겨야 하는 처지”라고 전했다. 또한 주변의 이주여성 노동자들 역시 “별다른 대책이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아기와 함께 집을 지키고 있다”며 상황을 말했다.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평등노조 이주지부 소속 노동자들은 농성 첫날 노숙을 한 덕에 감기가 걸린 채로 변변한 난방도구도 없이 천막 농성을 계속해나가고 있지만, “강제 출국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진영)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서울 뒤흔든 400만 농민의 분노

### 전국농민대회 10만 참가·농정실패·개방정책 맹공

19일 여의도 둔치공원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은 이 땅 400만 농민들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10만여 농민들의 분노와 함성으로 가득 채워졌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8개 농민단체들로 결성된 전국농민연대가 주최한 이날 전국농민대회에서 농민들은 정부의 기만적 농업정책과 농산물 개방정책을 강력 성토했다.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김인호 회장은 "지난 우르콰이라운드 협상 이후 350만명이 농촌을 떠나갔다. 청춘을 바쳐 일하며 거둔 것은 눈덩이처럼 늘어가는 농가부채와 좌절, 서러움과 절망뿐이었다"고 "전국 각지에서 한해 100여명이 넘는 농민 형제들이 막다른 죽음의 길에 내몰려 농약을 마시고 있다"며 울분을 토해냈다.

전남 영암군에서 올라온 한 농민 역시 "뼈빠지게 일하고도 남은 것은 빚뿐이다. 이번에 정부가 119조원을 투자한다고 나불대지만 어차피 빚만 더 지우겠다는 짓거리"라며 "농민들을 살리려면 부채부터 먼저 탕감해줘야 마땅한 게 아니냐"고 되물었다. 지난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정부가 향후 10년간 농촌에 총 119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농업투자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이는 절망과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농민들을 기만하는 짓거리에서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춘 바쳐 얻은 것은 빚과 절망뿐"

경북 철곡에서 올라온 한 농민은 "개방해서 외국 농산물이 마구 쏟아져 들어오면 농민들은 다 죽는다. 그런데도 윗놈들은 정경유착해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 궁리만 하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지난 10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안이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안전으로 상정된 사실에 대한 불안과 울분을 토로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전국농민회총연맹 정현찬 의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이 땅의 농업을 팔아먹고, 4500만 민중들의 생명을 팔아먹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농민들의 절규를 외면하는 썩은 정치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자"고 외쳐 농민들의 환호를 받았다.

전국농민연대 송남수 상임대표 역시 "지금 우리 농업은 수십 년 간 지속되어 온 농정실패와 농산물 수입개방의 확대, WTO 농산물협상과 자유무역협정 추진 등 개방 공세로 인해 생사존망의 기로에 처해 있다"고 밝히며 "우

2003년 11월 20일(목)

제 245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리 농업이 살아날 유일한 길은 400만 농민이 단결하고 전 국민이 함께 정부의 농업개방론자들과 투쟁하는 길밖에 없다"며 투쟁 결의를 드높였다.

자유무역협정은 생명줄 팔아먹는 짓

전국농민연대는 이번 대회를 통해 △WTO/DDA 농업협상 등 개방정책 반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강행 즉각 중단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대책 수립 △근본적인 농업·농촌의 회생을 위한 정책 마련 등 10대 요구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성의있는 시행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대회를 마친 농민들은 각각 대오를 형성해 여의도 둔치공원~공덕동 로타리, 둔치공원~국회 앞, 마로니에공원~종묘공원으로 거리 행진을 벌였다. 하지만 경찰이 이를 가로막아 극심한 충돌이 발생, 상당수의 농민들이 부상을 입었고, 100여명의 농민들은 연행되기도 했다. 이에 전국농민연대는 철야 노숙투쟁을 거쳐 20일 국회 앞에서 항의집회를 재개할 예정이다. (양승훈)

## 검찰 "송두율 반성없다" 끝내 구속기소

### 국보법 위반 혐의에다 '사기미수' 혐의까지 덧붙임

검찰이 낡은 냉전 잣대를 들이대 송두율 교수를 기어이 구속 기소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조야한 인권수준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고백했다.

송두율 교수(독일 뮌스터대)의 구속 시한 만료일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 지검 공안1부(오세현 부장검사)는 송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송 교수가 △73년 자진입북해 반국가단체인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91년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주체사상 전파 등의 활동을 수행했고(반국가단체 가입 및 지도적 임무 종사 혐의) △94년 7월

김일성 주석 장례식 참석과 6차례 학술회의 참석 등 73년부터 올해 초까지 총 22차례 입북하여 북한 관계자들과 접촉하였으며(특수탈출 및 회합통신) △생일축하 명목으로 이른바 '충성 맹세문'을 보내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이번 공소장에서 지난 98년 송 교수가 자신을 '김철수'라는 가명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지목한 황장엽 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사기미수 혐의까지 추가, 송 교수의 도덕성을 깎아 내리려는 치졸한 전략까지 구사했다. (☞2면에 계속)

## '발 묶고 입 막는' 집시법 개악안, 행자위 통과

### 주요도로 행진 금지 등 독소조항 수북...집회의 자유 먹구름

사실상의 '집회 허가권'을 경찰에 부여하여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집시법 개악안이 1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자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8일 경찰청이 제시한 의견을 대폭 수행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전국 주요도로에서의 행진 금지 △폭력 발생 시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시위와 동일 목적의 집회·시위 금지 △학교나 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 △사복 경찰관의 집회장 출입 허용 등 위헌적 성격의 조항들이

대거 삽입돼 있다.

행자위는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집회일 경우 확성기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이를 위반할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수의 침묵시위를 제외한 대다수 집회에 경찰이 함부로 간섭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이에 앞서 전국민중연대와 인권운동사랑방은 각각 행자위에 긴급 의견서를 제출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집시법 개정안의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나, 이 개악안은 심의 이틀만에 해당 상임위를 유유히 통과했다.

### '집시법 개악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1) 주요도로 행진 금지

: 주요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 장애 발생이 예상될 때 행진을 금지할 수 있다. → 아무리 주요도로라 하더라도 행진까지 막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다. 종로, 대학로, 광화문 등 집회가 주로 열리는 곳에서의 행진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발상의 소치이다.

(2) 한번 불법이면 영원히 집회 금지

: 신고된 집회가 집단적 폭행·손괴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할 경우,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시위와 동일 목적의 다른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 → 단 한번의 전력만으로 향후 특정 집단이 주최하는 집회·시위가 전면 불허될 수 있다. 나아가 전력이 있는 집단으로 하여금 신고를 꺼리게 만들어 오히려 불법집회를 조장할 수도 있다.

(3) 학교·군사시설 주변 집회·시위 금지

: 초·중등 학교시설이나 군사시설의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 등의 보호를 요청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 → 미군기지 주변이나 학교시설 주변에서의 집회·시위가 원천 봉쇄될 수 있다. 경찰이 시설보호요청서만 받으면 얼마든지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허가권을 갖게 된다.

(4) 소음 규제를 이유로 한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과 처벌

: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할 경우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고 이를 어길 시 6월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한다. → 확성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회에 대한 자의적 규제가 가능해진다. 소수의 침묵시위 정도만 허용될 위험성이 높다.

(5) 사복 입은 경찰관의 집회·시위 감시

: 사복경찰관이 집회·시위 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주최자 및 참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 참석자들에 대한 경찰 채증이 더욱 자유로워지며, 집회의 내용과 형식, 진행 등에 사사건건 개입할 수 있다.

통과된 개악안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이 개정안은 집회금지법안에 다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집회·시위의 허용 여부를 경찰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맡김으로써 경찰에 밍보인 특정단체들의 집회는 아예 원천봉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운동사랑방도 비판 의견서를 통해 "국회 행자위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위헌적인 요소가 많은 개악안을 통과시켰다"며 "만약 이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하고, 이 법률에 대한 불복운동을 통해 무력화하는 방안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단체들은 20일 오전 11시 명동 향린교회에서 집시법 개악 움직임에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전국민중연대도 오후 1시 같은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연다. (배경내)

(☞이면에서 이어짐) 더구나 이날 서울 지검 박만 1차장검사는 "본인이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어 구속기소가 불가피했다"고 말해 그간 '선처'를 미끼로 검찰이 송 교수에 대해 사실상 전향을 강요해 왔음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에 이돈명 변호사 등 58명의 송 교수 변호인단은 "검찰이 구시대적인 국가보안법의 형식논리만으로 송 교수를 구속기소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향후 △송 교수에 대한 혐의가 사실과 다르거나 처벌할 수 없는 것임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 △부당한 구속상태 해제를 위해 노력하고 △피의사실 공표죄와 위법한 계구사용 등에 대한 법적 조치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시민모임'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해 "송 교수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악법을 동원하여 송 교수를 구속기소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사상의 자유가 없다는 부끄러운 고백"에 불과하다며 송 교수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한편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이날부터 송 교수에 대한 피의사실을 유포해 그를 간첩으로 몰아간 검찰 등 공안당국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고발인단 모집에 들어갔다. (배경내)

◎ 오늘 <만화사랑방> 쉽니다.



# 국회 법사위, 테러방지법안 일단 제동

##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 제정반대국민행동, "입법 강행시 국정원장 퇴진 요구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테러방지법안의 급행 처리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국회 법사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찬반 논란을 벌이다 제2법안심사소위에 넘겨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했다.

법사위원들, "테러방지법 문제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국정원강화법,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은 "국정원은 정보기관으로 정보수집활동을 해야지 행정권의 집행에 해당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며 "대테러센터는 국정원 소속 하에 둔다는 것은 인권침해나 권력남용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필요한 경우 국정원 소속 하의 대테러센터의 장이 특수부대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국정원이 다른 기관들에 대해 기획·조정하는 대테러센터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지난 2001년 12월 통합방위법이 제정돼 통합방위본부가 구성·운영됨으로써 모든 국가방위요소가 총동원체제로 되어 있는데 법사위에서 따로 테러방지법을 놓고 논란을 벌일 필요가 있느냐"며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과잉입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가뜩이나 높아진 테러 준동의 표적에서 한국이 자유롭지 않고 테러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정원이 기획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며 국정원의 권한 확대를 정당화했다. 함 의원은 정보위 소속 위원이자, 지난 14일 정보위에서 통과된 테러방지법안의 공동 발의자이기도 하다.

테러방지법안이 논의될 제2법안심사소위 개최 날짜는 각 당 간사들의 조정

속에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27~28일 무렵 잡힐 예정이다. 2소위는 김용균, 심규철, 최연희, 함석재(한나라당), 함승희, 조순형(민주당), 최용규(열린우리당)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열린우리당, "법사위 통과 막겠다"

법사위 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우리당은 정책위원회를 열고, 법사위에서의 테러방지법안 통과를 막기로 했다. 테러방지법이 여러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데 따른 것이다. 김근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현재의 테러방지법은 우리 참여정부의 기본적인 국정 철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고 회의에 참가했던 천정배 의원이 전했다. 열린우리당은 추후 정책의 총을 열어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열린우리당은 '테러방지법 수정안 지지'를 당론으로 정한 것으로 보도돼, 인권·시민·사회·민중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와 관련, 18일 김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당론으로 정한 바 없다"며 "미리 법안의 문제를 알고 대처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열린우리당이 뒤늦게나마 법사위에서 테러방지법안의 통과를 막기로 결정한 것을 주목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빠른 시일 안에 정책의총을 열어 '테러방지법안 입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대한 공론 과정을 통해 '법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국정원 포로됐다

한편, 이날 낮 2시 공동행동 소속의 민변 최병모 회장 등은 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과 이용철 비서관을 만나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안이 무리하게 입법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과거의 국정원과 지금 국정원을 오버랩 시키지 말라", "국정원이 악용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등 국정원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 또 "국회 법사위까지 간 마당에 정부가 할 역할은 별로 없다"며 국가 운영의 민주성이 걸린 중대한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행정부처들의 반대 여론도 수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한번 만들어진 악법은 폐지하기가 어렵고 이번 정부로 끝나지 않는다"며 "노무현 정부가 이 법의 제정을 방조한다면 개혁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국정원장 퇴진 요구도 불사"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의 입법 시도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국정원장의 퇴진 요구까지 나올 전망이다. 공동행동은 이날 아침 10시 의원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적 인사가 국정원장인데 무슨 격정이냐고들 하지만, 이는 정보기관의 속성을 모르는 순진한 발상일 뿐"이라며 "국정원이 (계속) 테러방지법의 입법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국정원장의 퇴진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를 향한 각성의 목소리도 높았다. 공동행동은 "국정원의 권력 확대 음모에 장단 맞추며 국정원강화법의 제정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은 반인권·반민주 의원이란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는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국민의 여망인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 작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주영)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불법체류자도 인권의 울타리에!

### "무차별 검문·수갑 사용 안돼"...보호시설 처우도 개선 필요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무리한 단속과 수용시설 부족이 불러올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속 첫날인 지난 17일 안산역에서는 30여 명의 합동단속반이 지나가는 외국인에 대해 무차별 검문을 실시, 11명을 연행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또 경기도 마석에서는 단속반이 생생공단으로 들어와 3명을 체포해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송했으나 그 중 2명은 단속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풀려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수갑을 채워 충격을 준 바 있다.

'불법체류자 단속'을 발미로 외국인이면 무차별적으로 검문하고 일단 연행한 뒤 신원을 확인하는 관행에 대해 조영선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연행하면 불법연행이 되며 단속대상이 되는지 입증할 책임은 단속반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단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방법까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도 "불법체류자는 형사범이 아니라 강제퇴거의 대상일 뿐"이라고 전제하고 "현행법 다루듯이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위법이 될 수 있다"면서 "수갑을 채우는 것도 도주의 우려나 공무집행 방해 등 엄격한 요건이 갖춰져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관이나 고시원에 불쑥 들어가서 방마다 일제 검문하는 방식의 합법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됐다. 이 변호사는

추가 범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보호명령서'만으로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수색과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등을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단속과정에도 엄격한 요건 지켜야

또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해

연행하더라도 강제출국 전까지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도 충분치 않다. 19일 경기도 화성 외국인보호소를 시찰하고 수용자들을 면담하는 등 실지 조사를 진행한 인권위 관계자는 "조사 당시 106명이 수용돼 있었고 하루만에 5~60명이 잡혀올 예정이어서 이번 단속으로 인한 과밀 수용이 불러올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상주 의료인력이 의사 1명, 간호사 1명에 불과했고 입소시 인권위 진정 절차에 대한 고지도 없었다"고 전했다.

게다가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있는 보호실까지 총동원 (2면에 계속)

클릭! 인권정보자료

### '정보감옥'에서 탈출하기 - 『파놉티콘-정보사회 정보감옥』

지은이: 홍성욱/ 책세상 / 2003년 7월 / 163쪽

네이스(NEIS), 주택가 내 CCTV 설치, 작업장 감시 등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감시기제가 끊임없이 출현하며 그 위용을 뽐내고 있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 삶의 진보로 이어지기보다 새로운 유형의 인권침해를 양산하는 이 때, '전자정보사회'가 가지는 '정보감옥'의 성격을 규명한 책이 나왔다.

'파놉티콘'(panopticon)은 '모두(pan)-본다(opticon)'란 의미로 18세기 영국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만든 말이다. 일종의 원형감옥으로 중앙에서 모든 죄수의 동향을 감시할 수 있게 꾸민 구조를 말한다. 이 책의 저자 홍성욱 씨는 전통적인 감옥이 수인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공간이라면, 전자정보사회는 기술로 '정보'를 통제해 모든 사람들의 삶을 감시하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저자는 정보사회의 파놉티콘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예를 들어 지하철, 직장, 은행, 관공서 등에 설치된 CCTV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녹화하고, 기업은 할인과 경품, 멤버십 카드, 품질보증서 등의 혜택을 제공하면서 소비자에게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종용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파놉티콘에 갇혀 움짱달짝 할 수 없이 살아가야 하는가? 이에 대해 홍 씨는 권력이 우리를 감시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여 우리 역시 권력을 감시할 수 있다고 말한다. 국내에서는 민간단체들이 해왔던 정보공개운동과 인터넷을 통한 언론감시운동에서부터 국제적으로는 멕시코 사파티스타가 인터넷을 통해 벌여온 신자유주의 저항운동에 이르기까지 그 사례는 다양하다. 결국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느냐는 기술과 다양한 사회세력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다. 그 상호작용의 하나인 '역파놉티콘'은 행정 및 사법 권력에 대한 감시, 대기업의 횡포와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감시, 의정과 언론에 대한 감시, 정보수집을 제한하는 프라이버시법 제정 등이 결합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최은아)



# "집시법 개악안, 유신시대로 회귀하나"

## 각계 단체들, '집회 원천봉쇄' 움직임 강력 규탄

크고 작은 집회에서 경찰의 폭력진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경찰의 입장이 고스란히 반영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 개악안이 통과되자, 각계 사회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개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오전 11시 30여개 인권단체들은 명동 향린교회에서 '경찰폭력 고발 및 집시법 개악음모 규탄대회'를 열고,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유신 시대로의 회귀를 꿈꾸며,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요도로 행진 금지 △폭력시위 전력 이 있는 단체의 집회 금지 △학교·군사시설 주변 집회·시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이번 개악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사실상 집회 허가제"가 되어 사회적 약자들의 표현 수단인 집회가 원천 봉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또 "경찰의 과잉, 폭력진압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오히려 정부는 정반대의 해법을 내놓았다"며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이번 개악안이 최근 폭력진압을 일삼고 있는 경찰의 입장을 대폭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시위대처 4대원칙' 지시 직후 가결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국회 행자위가 대통령의 의중을 업고 평소 집시법을 개악하려던 경찰청의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같은 날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열린 '집시법 개악을 규탄하는 제 민중·시민·인권·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도 집시법 개악안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민주노총 김영탁 부위원장은 집시법 개선을 요구했더니 경찰의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만 대폭 확대한 개악안으로 응수한 경찰과 국회에 "뉘듯수를 맞은 기분"이라며 분노를 표시했다.

게다가 이번 집시법 개악안이 시행되면 불법으로 재단되는 집회, 시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집시법이 경찰의 폭력 진압을 정당화시키는 합법적인 틀거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단체들은 이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불법종운동을 전개하며 온몸으로 반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진영]

# "인권 내팽개치고 국정원 밥그릇만 챙겨주나"

## 인권단체들, 테러방지법 앞장선 4인 의원 '반인권 의원' 선포

"지난 14일 테러방지법을 의결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인권이 심각한 위협에 빠지도록 선동한 이른바 국회 정보위원회 김덕규, 정형근, 함승희, 홍준표 의원을 '반인권 의원'으로 선포한다."

20일 겨울을 알리는 차가운 비가 내리는 가운데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소속 50여명은 국회 앞에 모여 테러방지법 제정에 앞장선 4인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반인권 의원 선포식'을 개최했다.

공동행동은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국민을 일상적인 감시체제 하에 편입시키기 위한 반인권적 음모이며 반민주적인 악법을 만들어내는 폭거"라고 규정하고, 따라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선 의원들은 이미 국민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앞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대테러센터설치법'에 불과한 테러방지법의 제정에 앞장서는 의원들이 나온다면 그들 역시 '반인권 의원'으로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장유식 협동사무처장은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테러방지가 가능하며 국정원 개혁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9일 공동행동 대표단과의 면담과정에서 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의 "국정원의 대공수사분야가 폐기됐기 때문에 직원들이 쌓아온 경험을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발언을 인용, "(이처럼)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직원들의 밥그릇을 챙겨주기 위한 법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형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테러방지법 상의 테러예방에는 철도, 항공 등 여러 산업의 안전예방도 포함된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노조활동을 광범위하게 구속하게 될 것"이라며 테러방지법으로 인한 노동기본권의 후퇴를 우려했다.

선포식 참가자들은 모든 발언이 끝난 후 반인권 의원 4명의 이름과 '테러방지법'이 적혀 있는 풍선을 발로 밟아 터트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편 민변 최병모 회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함세웅 신부, 민가협 조순덕 상임의장 등은 21일 오후 2시 국정원장과 면담을 갖고,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를 중단하라는 인권단체들의 요구를 전달할 예정이다. [임국현]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11월 22일(토)

제 246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현역 군인 "파병결정 철회" 농성

## 강철민 이등병, 자대 복귀 거부...기독교회관 농성 들어가

"어젯밤 늦게 부모님께 제 결심을 말씀 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생각했던 것만큼 걱정은 안 하셨습니다. 이라크 전쟁터로 보내진 다른 전우들이 목숨 잃고 다치게 되면 그 부모님들 마음은 더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겠냐고 말씀 드렸습니다. 아버님은 아무 말 없으셨고 어머니는 몸조심하라며 내복을 꺼내 주셨습니다."

이등병 계급장 달고 첫 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이 자대 복귀를 거부한 채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를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전남 장성 상무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이등병 강철민 씨. 4박5일 휴가의 마지막날인 21일, 그는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아래 KNCC인권위) 사무실에서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결심을 밝혔다.

강 씨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께 드리는 이등병의 편지'를 낭독하고 "자국의 군대가 자국의 국토와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는 것 이외에 침략전쟁의 도구로 쓰여진다면 그것은 이등병인 제가 아니라 어느 누가 보아도 틀린 결정"이라면서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이라크 파병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군, 침략전쟁 도구 되어선 안돼"

대구가톨릭대학교 철학과에 재학하다 올 7월 입대한 강 씨(00학번)는 이라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통이 계속 마음에 사무친 데다 정부의 추가 파병 결정까지 나오자 수많은 고민 끝에 같은 결심을 굳히게 됐다고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오종렬 공동대표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격려의 말을 전했다.

KNCC인권위원회 정진우 목사는 "강철민 씨는 자신의 고통과 희생을 통해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하는 행동에 나섰다"며 "이 '평화의 불씨'를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연대회의' 집행위원장 한홍구 교수는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침략전쟁 동참으로) 헌법을 어기고 최말단의 이등병은 그래선 안된다고 말하는 현실에 가슴이 아프다"며 "군복을 입은 시민에게서도 파병 반대 목소리가 나온 (2면에 계속)

# 〈논평〉 '민주화된 시대'의 '계엄' 대통령

'불법 폭력시위로'는 어떠한 성과도 얻을 수 없다. 반드시 주적해 책임을 묻고 처벌문제를 협상대상으로 삼지 않겠다. 당사자들과 진행중인 협상도 중단한다.' 18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이른바 '불법·합법시위 분리대응 4대 원칙'이다. 통기타 치고 '상륙수' 부르며 눈물 흘리던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 눈치 볼 것 없나 보다. 노동자, 민중들을 향해 눈에 핏대를 세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죽음을 예감하는 우리의 눈에도 핏발이 선다.

인구 2만3천의 부안 읍내에 '치안유지'를 하겠다며 경찰 8천이 눌러 앉았다. 아예 주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 주민들의 정당한 시위를 "민주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폭력적 파괴행위로 이미 시위의 수준을 벗어났다"고 협박한다. 군민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군의회 결정도 무시한 채 핵폐기장 유치를 신청한 군수에게는 "고생이 많다"고 격려해 주었으면서도 말이다. 녀 달 넘게 촛불을 밝혔고 대화기구를 만든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질질 시간만 끈 것도, 대책위가 제안한 주민투표를 거부한 것도 정부였으면서 말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저항이 두려웠는지 이제는 집시법까지 개악해 불법집회 전력자의 집회는 물론 동일한 목적의 다른 집회도 금지시킨다. 소음 기준을 정해 확성기를 쓸 수 없게 만들고 사복경찰이 집회장을 확보하는 어이없는 관행을 합법화시키겠다. 그 동안 술한 집회에 '불법' 딱지를 붙여온 집시법이 이제 노골적으로 민중들의 손발을 묶고 엮어 입마저 틀어막으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카드는 대통령 직속 국정원에 새 날개 달아주는 테러방지법. 이미 막강한 정보수집 능력을 갖고 있는 비밀정보기관 국정원에 '테러'를 빌미로 다른 부처활동을 기획·조정하고 계엄령 없이도 군대를 동원하며 법원 허가 없이도 광범위한 감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쥐어주려 한다. 예산과 조직 공개, 수사권 완전 폐지 등 국정원에 대한 개혁과 민주적 통제 요구는 온데 간데 없이 내팽개치고 비밀의 장막 뒤 무소불위의 권력만 강화시켜 주겠다고 한다.

'대화'와 '타협'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도 '독재'를 일삼는 대통령이 기뻐 웃은, 역대 독재정권이 그러했듯 경찰의 물리적 폭력과 비밀 정보기관의 공작 뿐이었나 보다. 참다못한 민중들이 꿈틀하니 '폭도'로 매도하는 것도 이전 정권들을 꼭 빼닮았다. '참여'는 온데 간데 없고 대통령의 독선만 남았으니 이 정권이 심판 받을 날도 멀지 않았다.



# 시장화에 맞서 사회공공성 힘모아 지켜내자

## 의료·문화·교육 공공성 쟁취 과제 모색 토론회 열려

21일 서울 성공회대성당 강당에서는 범국민교육연대 등 5개 사회단체의 주축으로 '의료·문화·교육을 중심으로 한 사회공공성 투쟁의 현실적 의미와 당면 투쟁 과제'를 짚어보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내년 'WTO 서비스협상'이 마무리되는 시기를 앞두고 자본의 개방논리와 시장화라는 커다란 위협 앞에 직면한 사회공공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연대 투쟁의 결의를 모아내기 위한 자리였다.

민중의료연합 강동진 씨는 "지금 우리 사회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만 50만 명이고, 건강보험료 조차 낼 수 없는 빈곤층이 150만 가구에 달한다. 더욱이 하루 1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치료비가 없어 죽어가고 있다"며 시장논리에 종속된 의료제도가 낡은 비참한 현실을 토론했다. 더욱이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재정이 1조 원이나 흑자를 달성했음에도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을 발미로 내년 보험료를 다시 9% 올리고, 의료시장 개방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는 등 불평등한 의료체계를 더욱 악화시키려고 하는 상황이다. 강 씨는 "현 시기의 의료시장개방을 매개로 진행되는 영리법인 도입기도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기도를 저지하고, 전 민중의 건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연대투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호소했다.

문화연대 최준영 정책위원은 "WTO 서비스 협상이 예정대로 2004년까지 완료되고, 2005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발효된다면, 시장개방으로 인한 거대 다국적기업의 진출로 국내 문화 기반의 붕괴현상이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본과 정권이 주도하는 일방적인 개방정책이 공공의 문화영역 또한 위협하고 있다는 것. 최 정책위원은 "WTO 서비스협상 및 자유 무역협정 체결 저지 투쟁을 통해 사회적 연대의 틀을 더욱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범국민교육연대의 천보선 정책실장은 "WTO 서비스협상과 맞물려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예술체육교과 구조조정, 외국인학교특별법 제정 시도, 교육특구 지정 등 교육에 대한 자본의 전면적 공세 속에서 지금 우리 교육도 개방화·시장화나, 공공성 강화나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범국민교육연대는 올 하반기 신자유주의 시장화 정책과 WTO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의식을 형성, 내년 '반WTO 투쟁과 공교육개편운동'을 범사회적으로 전면화할 예정이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사회공공성의 문제들을 WTO체제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항하는 노동자·민중운동의 중심으로 재정립해내고, 광범위한 대중투쟁을 이끌어내기 위한 공동의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양승훈)

(1면에서 이어짐) 것을 소중하게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강 씨는 한 교수와 성공회대 학생들로부터 하루 앞선 생

일케익을 건네 받은 뒤, KNCC인권위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농성에 들어갔다. 이곳은 89년 군 최초의 양심선언이었던 이동균 대위·김종대 중위의 군명예선언, 90년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현 기무사) 민간인 사찰 양심선언 등이 이루어진 곳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군무이탈'로 처리돼 군법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에 준하는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민변의 임종인 부회장은 "헌법을 위반하는 침략전쟁 동원에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재판에서 강 씨의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침략전쟁 동원 저항 무죄"

강 씨에 앞서 지난 13일 평화주의 신념에 기반하여 병역거부를 선언했던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지원연대' 임창근 사무국장은 "강철민 씨의 선언을 계기로 우리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만든 군대가 다른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 쓰이는 모순적 상황에 대한 성찰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사무국장을 비롯한 병역거부자들은 강 씨와 함께 연대농성에 결합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후부터 군은 가족들을 동원해 강 씨의 복귀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내)

## 서울고법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책임 없다"

### "연기군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사무 처리한 것"...1심 판결 뒤엎어

양지마을 사건과 관련해 2심 재판부가 지난해 1심에서 인정했던 국가배상 책임마저도 부인하는 어이없는 결정을 내렸다.

20일 서울고법 제16민사부(재판장 이흥권)는 충남 연기군에 위치한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퇴소자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재판에서 "연기군청 공무원이 양지마을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 것은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연기군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강제노역, 구타, 불법감금 등 자신들이 당한 인권유린은 시설 감독 책임이 있는 연기군 공무원이 눈감아주었기에 가능했다며 국가배상을 요구해 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측 이덕우 변호사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연기군청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이라고 해도 국가의 업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국가업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판례를 뒤엎고 재판부가 이를 부인하는 법리를 편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은 사실로 인정되나, 경찰과 공무원들이 시설수용과정에서의 불법 납치·감금을 알고도 묵인하였거나 비호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밝혀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했다.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 시린 겨울, 일임장 최저생계비

### 최저생계비 현실화·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농성

각계각층이 다양한 사안을 걸고 농성중인 서울역 앞에 새로운 농성캠프가 자리를 잡았다. '빈곤문제 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단'은 24일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일간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들장애인아간학교 등 26개 단체로 구성된 농성단은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생활법)이 대부분의 빈곤층을 수급권자에서 제외시키고, 낮은 생계급여제공 등으로 저소득 빈곤계층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어 자살을 부추기고 있다"며 △최저생계비 현실화 △주거급여 인상 △비수급 빈곤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전면 확대 시행 △노숙인에 대한 긴급생계급여 지원 등을 골자로 한 10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기본생활권쟁취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현실화를위한연석회의' 유의선 사무국장은 "당장 다음주인 12월 1일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공포되고 2일 내년도 예산안 의결이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정부의 빈곤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 공동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먹고살고 치료받게 해달라"

올해 1인 기준 최저생계비는 35만6천원에 불과하다. 이보다 소득이 낮은 수급권자들이 받는 급여수준도 자연히 필요생계비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농성에 참여하는 한진구 씨(1급 장애인 수급자)는 "기초생활법으로 현금 31만원과 장애인 연금 8만원만 받지만 관리비와 공과세, 치료비로 이미 35만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어 주위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다"

며 비현실적인 수급 기준을 비판했다. 특히 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장애인들에게 의료급여의 확대는 절실한 사안이다. 급여를 받더라도 의료비의 35%-46%를 자신이 지불해야만 하는 현실에서 대다수 장애인들이 의료비로 엄청난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구원수에 따라 2만3천원~5만1천원 정도 지급되는 주거급여도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은 "짜다고 하는 영등포 쪽방조차 한달 25만원이 있어야 살 수 있다"며 주거급여를 현실화할 것을 주장했다.

노숙인에게도 급여 지급해야

농성단은 또 수급자에서 제외된 650만 명에 달하는 차상위계층(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에도 급여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류정순 소장은 특히 "(현행 기초생활법) 노숙인 등 주민등록증 말소자들을 차상위계층으로

2003년 11월 25일(화)

제 246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분류, 수급권을 발탁함으로써 그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의선 사무국장은 "정부가 노숙인 특별대책으로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고 '긴급급여' 신청을 받겠다고 발표했지만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소득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승용차 등의 재산을 소득에 합산시키는 소득인정액 제도와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추정소득제도 역시 빈곤계층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민주노총 김형택 부위원장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문제는 실업 위기와 불안정한 노동현실이 계속되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투쟁도 함께 벌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성단은 향후 농성장을 중심으로 선전전을 벌여나가게 된다. 26일에는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27일에는 노숙인들과 함께 긴급급여를 신청할 계획이다. 또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공포되는 내달 1일에는 1인가구 최저생계비를 실제 물품으로 바꿔 대통령에게 그것만으로 한번 살아보라고 전달할 예정이다. (임국현)

## 주민투표로 '달힌 부안' 열자!

### 각계 2000인, 경찰력 철수·주민투표 실시 촉구

경찰 8천여명이 부안에 상주해 핵폐기장 백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가운데 이에 항의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강원릉 목사, 고은 시인 등 각계 원로와 각계 단체 대표자들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안 핵폐기장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2000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는 유일하게 부안군수의 유치신청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부안군의

회가 유치신청을 부결한 사실과 절대 다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과도한 경찰력의 즉각 철수와 주민투표 중재안 수용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민변 최병모 회장은 "대책위가 격을 끝에 받아들인 주민투표안을 오히려 정부가 거부해 대화가 결렬됐다"며 "한 달 정도면 면단위 동단위 설명회도 가능한데 홍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굳이 7월까지 미루려 했다"고 정부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2면에 계속)



○ 선미의 인권이야기 ○

거리에서 겨울을 나는 사람들

내가 어렸을 때, 학교에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길 이 있었다. 어느 겨울날 그 길에 '거지'가 등장했다. 추위 서인지 술을 마쳐서인지 분간이 안될 정도로 벌건 얼굴을 하고는 부리부리한 눈으로 등교하는 아이들을 노려보던 그 아저씨는 어떤 건물 계단에 앉아서 떠나지 않았다. 학교에 는 그 아저씨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다. 어린아이를 잡아먹 는 식인종 괴물이라는 소문까지 나돌았을 정도이다. 자기 도 모르는 사이에 소문 속에서 유괴범도 되고 괴물도 되었 던 그 아저씨는 겨울이 끝나자 다른 곳으로 떠났다.

나는 그 아저씨가 불쌍하면서도 한편으론 한심했다. 그 때 나는 "사람은 노력하는 만큼 성공한다"는 말을 무작정 믿고 있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무능한 게으름뱅이라고 생각 했다. 대중매체가 보여주는 성공한 사람과 대비되는, 행색 도 불품없고 아이들한테까지 무시당하는 그들에게 나는 어 린 나이에 참으로 가담치도 않은 냉소를 보내곤 했다.

나이가 들면서 나는 그 아저씨가 '노숙자' 혹은 '홈리스' 라고 불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단 순히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 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경제위기 때문에 사업이 망했을 수도 있고,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이 개인의 능력 여부 이전 에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사 회적인 대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랬던 것처럼 노숙자 들이 개인의 무능함 때문에 그런 처지에 놓인 것이니 자력 구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물론 노숙자들 본인 의 의지가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문제, 청년실업 문제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 노숙자가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

노숙자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것이 IMF가 닦았던 지난 97년이었음에도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서울역에는 낮이면 광장에서 담배를 태우다가 밤에는 박스 한 장에 몸을 의탁하는 사람들이 많다. 노숙자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 두되면서 기본적인 위생문제나 식량문제는 개선이 되었을 지 모른다. 하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듯하다. 정부에서는 노숙자를 위한 재사회 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노숙자 문제를 보다 근본 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작은 상처는 기다리면 저절로 치유가 되지만 큰 상처는 가릴수록 더욱 커지게 마련이다. 큰 상처는 드러내놓고 치 료를 해야만 한다. 노숙자 문제는 이 사회에서 큰 상처에 해당한다.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이제라도 공개적인 논의 를 통해 노숙자들을 사회의 상처가 아닌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또 추운 겨울이다. 이 추운 겨울을 거리에서 보내야 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선미 님은 청소년의 힘 회원입니다.)

주간인권흐름

(2003년 11월 17일 ~ 11월 24일)

1. '집시법 개악' 과속질주 노무현 대통령, '불법시위대처 4대 원칙' 지시(11.18)/ 국회 행정자치위, 경찰청 제시 의견 전적으로 수용한 집 시법 개정안 통과...주요도로 행진 금지, 확성기 사용 규 제, 사복경찰관 출입 허용 등 사실상 경찰에 집회 허가권 쥐어줘(11.19)/ 29개 인권단체 집시법 개악 움직임 규탄 기자회견 개최..."유신시대로 회귀하려나"(11.20)/ '집시법 개악을 규탄하는 제 민중·시민·인권·사회단체', 국회 앞 기자회견..."불복종운동 벌여나갈 터"(11.20)

2. 테러방지법 저지, 일단 한숨 돌려 인권단체공동행동 청와대 앞 집중 집회 개최..."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하라!"(11.18)/ 테러방지 법 제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및 각계 기자회견...국회 법사위에 "국정원 강화 테러방지법안 심의 즉각 중단" 촉구(11.19)/ 국회 법사위, 테러방지법안 일단 제동...법안 심사소위로 넘겨(11.19)/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테러방지법 제정에 적극 나선 4인 국회의원에 대한 '반인 권 의원' 선포식 개최(11.20)

3. 압력만큼 거세어지는 파병반대 합성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이라크에 3000명 규모의 비전투병 추가 파병 큰 폭 합의(11.17)/ 파병반대국민행동 등, '럼스 펠드 방한 반대시위' 곳곳 개최(11.17)/ '평화와 통일을 여 는 사람들'과 평택주민 주최, 미군기지 평택 총집결...이라 크 파병 강요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 방한 규탄대회 열려(11.18)/ 강철민 이등병, 파병결정 철회 촉구하며 자대 복 귀 거부...기독교교회관에서 농성 돌입(11.21)/ 동화작가 박 기범 씨, 파병 반대 단식농성 시작(11.22)

(이면에서 이어짐) "정부가 주민투표안을 받아들이고 투표시 기를 결정해 협의를 시작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 회장은 부안대책위와 정부 사이의 대화기구가 별다른 진척없이 난항을 겪자, 중재인 자격으로 지난 14일 연내 주민투표로 핵폐기장 유지 여부를 결정하자는 중재안을 내놨다. 그러나 반대표가 많이 나올 것을 두려워 한 정부는 시기 문제를 핑계로 이를 거부해왔다.

이에 분노한 부안주민들은 17일과 19일 항의집회를 열고 서해안 고속도로 점거와 부안군청으로의 행진을 시도했으나 경찰은 폭력진압에 나섰다. 경찰은 또 석 달 넘게 촛불집회 가 이어진 부안수협 앞 '반핵민주광장'을 봉쇄하고 주민들의 통행마저 막았다. 이어 21일 노무현 대통령은 "먼저 부안의 질서를 회복해야 주민투표도 고려할 수 있다"고 고집을 부렸 고, 22일 경찰은 읍면 대책위와 농민회 사무실을 전격 수색, 시위용품을 압수해 주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25일 부안주민과 부상자가 상경, 청 와대·경찰청·언론사를 항의방문하고, 29일 부안군민대회를 여는 등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강성준]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11월 26일(수)

제 246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대인지뢰 한강둔치 10년간 쌓아둬

유실위험 높아...대인지뢰대책회의, 근본대책마련 촉구

M14 플라스틱 대인지뢰 374발이 한 강둔치에 무단으로 야적되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 국대인지뢰대책회의(KCBL, 아래 대 책회의)는 25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에서 '한강둔치 대인지뢰 불법야적 규 탄 기자회견'을 열고, 군부대가 위험 한 대인지뢰를 해체작업도 없이 유실 가능성이 높은 한강둔치에 무려 10여 년 동안이나 방치해 온 사실을 공개하 고 이를 강력 규탄했다.

대책회의에 따르면, 김포지구 한강 둔치에 위치한 지뢰야적지대는 김포시 와 인근 신도시를 잇는 다리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곳에 쌓인 374 발의 지뢰는 김포시 장릉산에 위치한 공군기지 주변 매설지대에서 지난 94 년에 이전된 것으로 밝혀졌다.

장릉산은 한국전쟁 이후 미군과 한 국군에 의해 710여발의 지뢰가 매설됐 던 지역으로, 84년에는 폭우로 토사가 유실, 230발의 지뢰가 폭발하는 바람 에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당시 산사태로 주민들의 가옥이 손실되자 주민들은 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대법원 승소판결을 얻어냈는가 하면 군부대 자체의 이전을 주장하는 등 지뢰문제에 의해 주민과 군부대의 마찰 이 끊이질 않아 왔다. 그러자 군부대 측은 94년 지뢰 매설 지대를 포크레인 으로 퍼올려 이곳 김포지구 한강둔치 에 쏟아부은 것이다.

이 지역은 팔당댐 방류량이 5000톤만 넘어도 강물 수위가 경계수위를 넘어 야적된 지뢰가 강물에 떠내려갈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2000년 홍수 당시 에는 경계수위에 육박했고, 2001년에는

경계수위를 넘기도 했다. 대책회의 이 시우 집행위원은 "2002년 강화 석모도 에서 3명이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었는 데, 이 한강둔치의 지뢰가 유실된 것으 로 추측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책회의는 군의 한강둔치 야적 행위를 '특정재래무기금지조약' 3조, 즉 지뢰탐지장비로 탐지가 불가능한 대인 지뢰의 사용 및 이전을 금지하는 조항 을 어긴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책임부 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책회의 조재국 집행위원장은 "홍수 때마다 떠내려가는 플라스틱 대인지뢰 를 국군이 수색, 회수하는 것이 불가 능했기 때문에 부대에서도 어쩔 수 없 이 포크레인을 동원, 한강 둔치에 야

적한 것"이라며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한국군의 지뢰제거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39개 방공기지를 지뢰 지대로 규정한 제 최소한의 예산으로 순차적으로 한 군대씩 지뢰제거 작업 을 벌이고 있는 현 합동참모본부의 정 책으로는 지뢰를 제대로 제거할 수 없 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산을 확충하여 현장에서 지뢰제거작업을 40년간 '불 법적'으로 벌여온 민간인 지뢰제거 전 문가들을 양성화함으로써 이들이 지뢰 제거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는 게 대책회의의 주장이다.

조 집행위원장은 또 "군 당국은 항상 지뢰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 하지만, 실제로는 지뢰관리와 취급에 소홀하고 지뢰사고에 대한 정확한 대책 이 없다"며 지뢰관리와 제거에 소극적 인 군당국을 비판했다. 그 대안으로 군 사상 필요없는 모든 대인지뢰를 제거대 상으로 규정하고 대인지뢰제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수립을 내용으로 하고 있 는 '대인지뢰제거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안이 이번 국회 회기동안 통과되어 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국현]

이용석 씨 분신 한달 맞은 근로복지공단 파업

비정규노조 위원장 단식돌입...노동부·공단측 무대책 일관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근로복지공 단 비정규직노조 이용석 광주전남본부 장이 분신한 지 오늘로 꼭 한달째를 맞는다. 하지만 그 이틀날인 지난달 27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 근로복지공 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직까지 이 본부장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 사 측의 불성실 교섭으로 한달 가까이 노 숙농성을 벌여오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는 그 동 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이용석 열사 대책 수립 등을 촉구하며 공단 본 부 앞에서 3백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노숙농성을 진행해 왔다. 하지 만 공단측은 오늘까지 10여 차례의 실무 교섭과 세 번의 본교섭을 거치는 동안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며, 책임 을 감독기관인 노동부에 떠넘기는 데만 급급해왔다. 사실상 문제 해결의 열쇠 를 쥐고 있는 노동부 역시 사태를 수수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종우 노조위원장은 25일 오후 1시 40분경 본교섭 석상에서 "우리 노조 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 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선언하고 공 단내 교섭장에서 단식을 (2면에 계속)



# 무식한 정부 · 막무가내 대통령, 정신차려! 부안주민 상경...경찰청, 청와대 앞 항의집회 열어

“국민 없는 나라가 어딴어? 이런 대통령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인정해? 도둑놈 잡으란 게 법인데 아무 죄 없는 사람들 방패로 찍고 맥주병으로 치는 게 이게 법이여?”

25일 청와대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부안주민 장명순 할머니는 이렇게 울부짖으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부안의 경찰폭력 피해자 20여 명을 포함한 부안주민 70여명은 이날 상경해 정부종합청사와 청와대, 경찰청 앞에서 차례로 항의집회를 열고 “이제는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며 절박한 상황을 알렸다.

격포에 사는 김옥순 할머니는 “저녁마다 들어선 전경들이 노란색 잠바만 입어도 두들겨 패고 시장에 가려고 해도 집으로 돌아가라 한다”며 “이젠 까마귀때(전경들)만 봐도 가슴이 두근두근해 못살겠다”고 하소연했다. 환자복을 입고 나선 황인기 씨는 “야당 시절에 민주화 부르짖으며 투쟁하던 노무현이 없는 사람 위해 살겠다고 대통령 되더니 이젠 못사는 우리 국민 말살하고 다 죽이려고 한다”면서 “노무현이는 각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녹색대안국장은 “정부가 이렇게 미련하고 무식할 줄 어느 누가 알았겠냐”며 “노 대통령은 원칙과 역지를 구별할 줄 모르는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방패와 곤봉이 아니라 촛불과 삼보일배가 이길 것”이라며 “폭력경찰로부터 주민들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기 위해 부안으로 내려가 ‘인간방패’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까마귀때만 봐도 가슴이 두근두근”

이어 경찰청 민원실에 다다른 주민들 앞을 전경들이 가로막자 주민들 사이에서 “이놈들도 똑같은 놈들”이라는 고함소리가 터져 나왔다. 휠체어를 탄 채 상경한 김용현 씨는 “우리가 막대기라도 들면 폭도라고 하고 지명수배를 때리면서 전경이 곤봉에 방패로 때리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다니 말이 되

나?”면서 “요즘 읍내에 달아놓은 현수막과 깃발을 전경들이 때 기는데도 어쩔 도리가 없어 밤에 잠이 안 올 지경”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 그는 “우리는 발전 같은 건 원하지도 않는다”며 “예전처럼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더라도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다”고 울먹였다. 지난 19일 진압경찰의 방패와 곤봉에 맞아 허리와 다리를 다친 김 씨는 “우리는 공권력도 방패도 총도 안 무섭다”, “결사항전을 각오했다”면서 경찰청장이 직접 나와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입원해 있다 상경한 김유찬 씨는 경찰의 음주집압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씨는 “아들 마중하러 가는 길에 전경들이 길을 막아 항의하다가 전경이 휘두른 맥주병에 머리를 맞았다”며 “따지도 않은 맥주병으로 맞아 맥주가 흘러나왔고 나중에 보니 전경들 있던 길거리에 맥주병이 아예 박스로 놓여 있더라”고 증언했다.

고집 못 버리는 대통령

한편 노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폭력적 집단행동 때문에 절차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원칙과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받아 결국 무력한 정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해 주민투표 실시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당달아 김종규 부안군수도 “지난 수개월간 일방적인 반대운동으로 부안 주민들은 균형 있는 정보로부터 차단돼 주민들이 자유롭게 자기의견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내년 4월 총선 후 6월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며 연내투표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부안대책위 고영조 대변인은 “물리적으로 못할 이유가 없는데도 시간을 끌려 한다”면서 “대통령이 지난 넉 달 간 이어진 부안 주민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끝내고자 한다면 원칙적인 말만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김 군수에 대해서는 “군

민 의사도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유치 신청을 했던 그가 이제는 주민투표를 하자고 한다”며 “이미 군수 취급을 받지 못하는 김종규의 말에 논평할 가치도 못 느낀다”고 밝혔다. (강성준)

(☞1면에서 이어짐) 시작했다. 뒤이어 조합원 30명도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서울지방노동청을 항의방문하고, 노동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며 청장실 하루 점거농성을 진행했다.

정 위원장은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죽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노동부도, 그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분노를 표하고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문제가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척도가 될까 우려해 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 위원장은 또 “노동부와 공단측에 해결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하기 위해 무기한 단식농성을 결의하게 됐다”면서 “향후 발표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비정규직을 없앨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인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들끓는 분노와 해결 촉구에도 정부의 외면과 침묵은 초겨울 뱀찬 바람만큼이나 차갑다. 그러나 올해 처음 노조를 만들고 곧이어 30일째 파업을 벌여오고 있는 조합원들의 결의도 그만큼 굳건하다. (배경내)

## 12·1 평화수감자의 날 문화제 부러진 총 이야기

- 때: 12월 1일 (월) 저녁 7시
- 곳: 고려대 제2학생회관 강당
- 행사 내용
  - 군사주의와 전쟁 풍자 판소리
  - 병역거부운동의 역사 대화마당
  - 영상물 상영
  - 평화의 몸짓 퍼포먼스
  - 재활센터 밴드 공연

http://corights.net/brokenrifle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11월 27일(목)  
제 246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단체협상 요구 노조에 형사법 적용

### 검경, 건설산업연맹 수사 전국으로 확대

검찰이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건설산업연맹)의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공갈협박과 금품갈취’ 혐의가 있다며 집행부를 구속 기소해 ‘건설노조 말살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5일 안산경찰서는 경기서부건설노조(위원장 이준모) 전현직 조합간부 20명에게 일제히 소환장을 발부했다. 지난 달 2일에는 대전충청지역 건설노조(아래 대전노조) 위원장 등 6명이 “원청회사를 협박하며 단체협상을 요구하고 전임비를 갈취했다”는 혐의로 구속됐고 천안건설노조(아래 천안노조)에서도 같은 혐의로 2명이 구속된 바 있어 집단 소환장을 받은 경기서부건설노조도 마찬가지로 혐의를 받고 있음이 확실시되고 있다. 또 용인, 의정부 등 전국 곳곳에서 검찰이 공사 현장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대전과 천안 검경의 주장은 △하도급 회사 소속인 건설노동자들이 교섭대상이 아닌 원청회사에 교섭을 요구했으며 △노조 활동가가 사측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단체협상 체결을 요구했고 △노조 전임비를 받아낸 것이 갈취에 해당한다는 것.

이에 대해 건설산업연맹 백석근 부위원장은 “건설현장 인력의 90% 이상이 하도급 회사에 소속돼 있고 휴일이나 임금, 현장 출입 등 노조활동 보장에 실권을 가진 것이 원청 회사이므로 원청과 단협을 체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 “산업안전법과 근로기준법 준수 점검은 노동조합 고유활동 영역”이라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김없이 고소고발을 하는 것

은 당연한 일인데 협박이라니 가당치 않다”고 말했다. 백 부위원장은 “전임비 수령이 갈취”라는 주장에 대해 “마치 전임자 개인이 사측을 협박해 갈취를 한 것처럼 몰아세우는 것은 일용직 중심인 건설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도 “원청회사가 하청회사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노동조건 등 온갖 권한을 행사하며 노동에 따른 이익도 원청이 가져가면서 단체교섭은 실권이 없는 하청으로 미루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노동조합을 조직폭력배로 몰아 노동법도 아닌 일반 형사법으로 노조를 왜곡시키는 과거 군사정권의 탄압방법이 재연되고 있다”고 어이없어 했다.

수사 과정 또한 짜맞추기 식으로 무리하게 진행돼 물의를 빚고 있다. 건

설노조에 따르면 교섭 당사자인 사측 관리과장이 조사를 받으러 가보면 이미 4장 정도의 진술서가 작성돼 있고 진술서 내용과 다른 대답이 나오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몇 시간이고 조사를 한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2일 구속된 대전건설노조 이성휘 위원장은 95년에 산재를 당한 장애 1급 노동자로 명백히 도주의 위험이 없는데도 구속됐으며 천안건설노조 노선균 부위원장은 구속 후 공갈협박 혐의가 없음이 인정돼 풀려나기도 했다. 경기서부건설노조에서 소환장을 받은 사람 중에는 인큐베이터에 아이가 있는 산후 30일 밖에 안된 산모와 그 남편이 포함돼 있고 결혼을 앞두고 이미 청첩장까지 돌린 새신랑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백 부위원장은 “혐의 사실이 근거가 없는데도 1급 장애인인 이 위원장의 보석까지 기각시키면서 무리하게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은 건설자본의 청탁을 받은 공안검찰이 비정규직 건설노조를 현장에서 분리시키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2면에 계속)

## 만화사랑방

이동수





#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인 집회와 시위를 철저히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25일 '집시법 개악에 반대하는 민중·시민·인권·사회단체'의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의 위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회 행자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악안을 한 입으로 통렬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개악안 이전의 집시법 역시 "경찰당국이 집회의 '허용' 여부를 먼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 뒤에, 불허한다면 그 근거를 집시법에서 적당히 찾는다" 경찰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부여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이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주요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사실상 도시지역 전체에서 경찰의 허가 없이 집회와 시위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철저히 배제된 법안을 제시하며, 집시법을 둘러싼 의제 설정 자체를 절대적으로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소음 규제 조항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면 이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로 의제되어 자동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며 이번 법안이 실행되면, 노동권을 극한적으로 위협한다고 증명된 손배·가압류가 재현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사복 입은 경찰관의 집회·시위 감시의 허용되면 불법적으로 사진을 수집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개인정보의 침해가 심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경찰청의 입김이 확연히 작용한 집시법 개악안은 그 입법 절차에서부터 "헌법상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법안이라는 점도 논의되었다.

집시법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인권관련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의 과정이 없었던 것은 물론, 입법 예고나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과정마저 결여된 채, 행자위

에서 통과되었다는 것이다.

건국대 법학과의 한상희 교수는 이번 집시법 개악안이 "과연 법치국가라 불릴 수 있는 사회에서 나올 수 있는 법안인가" 반문하면서, "최소한의 명분상 요건도 채워지지 못한 저차원적인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전국민중연대 박석운 집행위원장도 이번 개악안에 폭력집회 금지, 소음규제, 학교·군사시설 주변 집회·시위 금지 등 유신 시절에도 없었던 독소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후진적이라고 평가하였고, 참여연대 장유식 협동사무처장은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는 폭압적 정치권력이 득세할 때나

출현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오전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집시법 개악안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고, 오늘 오후 2시에는 여의도에서 '테러방지법·집시법 개악안 사망 선포식'을 연다. (이진영)

(1면에서 계속) 실제로 건설업 인사 담당자들이 모인 '건인회'는 작년 11월 노동부에 건설일용노동자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8월부터는 '전임비 반환 청구소송'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정탁에 따른 기획수사' 의혹을 더하고 있다.

현재 건설산업연맹은 건설시공, 건설중장비, 타워, 레미콘 등 건설업에서 일하는 사무직과 현장 일용직 노동자 2만 5천명을 포괄하고 있으며 산하에 46개 기업노조와 40여 개의 지역, 업종노조를 두고 있다. (강성준)

## 정부에 이라크 파병계획 철회 간곡히 호소

### 농성 현역군인 강철민 씨 28일 청와대로 행진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며 지난 21일부터 기독교회관에서 농성 중인 현역 이등병 강철민 씨는 오는 28일 파병 반대 농성 지지자들과 함께 청와대까지 평화행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26일 농성 6일째를 맞아 함세웅 신부, 정진우 목사 등 각계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 씨는 '대통령에게 드리는 두 번째 편지'를 통해 "우리의 군대는 우리의 국가를 방어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지만 침략군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며, 정부에 파병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다.

또한, 강 씨는 "이제 곧 감옥에 가겠지만 저의 마음만은 감옥 밖의 이 세상에 전달되길 바란다."면서 "대화를 통해 직접 자신의 의지를 대통령에게 전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농성지원단 실무총괄을 맡고 있는 김정식 씨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평화를 위한 소신을 밝히려는 한 젊은이의 숭고한 결단에 정부와 대통령은 응답해야 할 것"이라며, "강철민 씨와 함께하는 평화를 위한 행진에 많은 분들이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다.

한편, 이러한 강 씨의 파병 반대 농성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움직임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문화연대 등 20개 단체로 구성된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문화예술단체모임'이, 25일에는 평화인권연대 등 28개 평화·인권 단체들도 25일 공동성명서를 발표, "이라크 침략전쟁의 도구로 한국군이 사용되는 것에 반대해 부대 복귀를 거부하고 농성에 들어간 강철민 씨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침략전쟁을 거부할 양심의 자유 보장과 파병계획 철회"를 정부에 촉구하였다.

또한, 강 씨의 농성장인 한국기독교회관 7층 복도에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남겨놓은 지지와 격려의 메시지들로 가득하다. 강 씨는 하루 1백 명 이상으로 늘어난 이들 농성 지지 방문자들과 함께, 24일부터 매일 저녁 7시 시 낭송과 음악공연, 영화상영 등 비록 작지만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제와 촛불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양승훈)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11월 28일(금)

제 246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송두윌 '간첩 만들기 3인방 고발'

### 745인, 피의사실공표죄로 정형근 의원 등 고발

피의사실을 마치 진실인 양 계획적으로 공표해 송두윌 교수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그를 거물 간첩으로 '만들어온' 정형근 의원과 박정삼 국가정보원 제2차장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송두윌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27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며 피의사실을 계획적으로 공표해 온 핵심 3인방을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제126조)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세균 교수(서울대 정치학)를 비롯한 745명에 의해 고발된 3인은 박정삼 국가정보원 제2차장, 정형근 의원(한나라당), 박만 서울지검 제1차장 검사다.

고발장에 따르면, 정형근 의원은 지난 9월 30일 박정삼 국정원 제2차장으로부터 수사내용을 보고받고 관련 자료를 제시받은 뒤, 당시 국정원이 준비중이던 기자회견을 취소하도록 하는 대신 10월 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원 감사 때 가진 중간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통해 송 교수가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등의 피의사실을 계획적으로 공표했다.

이에 대해 고발인들은 "국회 정보위원으로서 감사대상 기관이 국가정보원 핵심간부인 박정삼과 결탁하여 의도적으로 피의사실을 기자들에게 공표"한 것은 "형사피의자인 송 교수의 인권을 철저히 무시한 채 자신의 영달과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며 강력 비난했다.

또 박정삼 국정원 제2차장은 지난달 2일 송 교수가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에 대해 잘못 알려진 점을 해명하자, 바로 이튿날인 3일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들을 식사자리에 '초청'해 '송두윌이 노동당에 가입했고 정치국 후보위원

23위 김철수라는 자백을 받았다"는 등의 피의사실을 알려 언론에 대서특필되게 함으로써 송교수의 도덕성과 진실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고발인들은 주장했다.

또한 박만 검사는 송 교수가 검찰에 송치된 그 이튿날인 10월 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연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의사실을 공표했을 뿐만 아니라, 송 교수가 반성을 하지 않아 구속한다는 내용까지 브리핑하여 "공공연하게 송교수에게 자백의 압력을 가하기까지 했다.

고발인들은 "분단으로 인한 대결의 기억이 남아있는 우리 사회에서 국가보안법 사건의 피의사실이 공표될 경우, 피의자는 제대로 항변조차 하기 전에 언론과 정치권으로부터 여론재판을 받고 일반인들은 피의사실이 유죄인 양 인식하게 된다"면서 이로 인해 송 교수가 받은 고통은 그의 주장이 진실로 밝혀진다 해도 결코 완전히 치유될 수 없다

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송 교수 변호인단 가운데 하나인 송호창 변호사는 "형사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형사법을 공공연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야만이고, 언론이 부화뇌동하여 호흡을 맞추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향후 피고인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이 미리 공표되면 재판과정의 공정성이 어떻게 담보될 수 있겠냐"고 되물으며 "이는 재판절차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또 "이번을 계기로 피의사실을 공공연히 공표하는 수사관행을 일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만 검사는 지난 19일 송 교수를 구속 기소하면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송 교수가 "아직도 김일성을 존경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송 교수 발언의 진의를 왜곡, 전달해 '색깔 덧씌우기'라는 비난을 산 바 있다.

당시 수사과정에 입회했던 송 변호사에 따르면, 송 교수는 김일성을 존경하느냐는 수사관의 반복적인 질문에 "역사적인 인물이요 한 시대의 정치인으로서 적극 평가한다"고 답변했을 뿐이었다. (배경내)

## "정신요양시설 인권침해, 보건복지부 뭐하냐"

### 조건부 신고시설 인권유린 속속 확인...대책 마련 절실

알콜중독자와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조건부 신고' 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자체 조사결과 드러난 인권침해 실태를 폭로하고 보건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7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운동사랑방 등 7개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아래 공동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양평 성실정암원(원장 김학남)과 충남 연기군 은혜사랑의집(원장 전월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대위는 지난 4일과 13일 두 시설을 차례로 방문, 수용자들과 면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관련기사 본지 2003년 11월 8일, 19일자 참조>

조사결과, 이들 시설에서는 △전문의 진단서도 없이 수용자를 감금하고 보호자 동의 없이 절대 풀어주지 않았고 △수용자가 반항할 경우 징벌방에 가두었으며 △알콜중독자와 정신질환자를 함께 수용해 상대적 약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폭력이 난무했다. (☞2면에 계속)



# "테러방지법과 집시법 개악안은 무덤으로"

## 인권사회단체들, 국회 앞 두 악법 사망선포식 열어

테러방지법안과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7일 전국민중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테러방지법안과 집시법 개악안의 사망 선포식을 개최하고, 두 법안의 사망을 알리는 화형식을 진행했다.

단체들은 선포문을 통해 테러방지법 제정과 집시법 개악 시도는 "민중의 피와 목숨을 바친 투쟁의 결과로 쌓아 올린 소중한 인권과 민주주의를 그 근거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조치"이며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리는 것이요, 군사정권 시절로 회귀하는 조치"라고 선언했다.

참가자들은 국민의 인권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는 악법이 두 개씩이나 국회에 상정되었고, 더군다나 여론조성과정도 없이 날치기 식으로 법안통과가 기도되고 있는 데 대해 분노를 표했다. 참가자들은 "테러방지법-인권포기법"과 "국민에게 집회의 자유를" 등의 팻말을 들고 두 법안에 대한 '절대 반대'의 뜻을 밝혔다.

발언에 나선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은 "국정원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테러방지법을 동원해 국민 기본권 발목잡기에 나서는가"라며 국정원의 권력 확장욕을 비판했다. 민가협 임기란 전 상임의장은 "과거 우리와 함께 투쟁했던 고영구 국정원장은 이제 테러방지법을 절대적으로 옹호하기에 여념이 없다"며 테러방지법 입법 저지는 결국 민중의 몫임을 강조했다.

집시법 개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져 나왔다. 민가협 박성희 간사는 "집시법이 개악되면 우리는 100명 이하만 모여 침묵시위를 벌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악법은 아예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재군 상임활동가도 "경찰이 집시법 개악안을 내놓자 행자위는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1년 동안 한번도 열리지 않았던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경찰의 들러리 역할을 한 국회를 비판했다.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이 아닌 국정원과 경찰을

대변하는 조직"이라며 "앞으로 국정원 개혁과 집시법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임국현)

(1면에서 이어짐) 법적 검토에 나선 김철준 변호사는 "가족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진단 없이 강제수용한 행위, 6개월마다 계속치료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계속 수용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위반이며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돼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징벌방 문제에 대해서도 "격리 외의 방법으로는 위험을 회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전문의 진단을 받고 격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폭행문제에 대해서는 "가해자는 물론 폭력을 방조하며 이를 시설 질서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면 운영자도 처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인권침해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두 시설이 계속 운영될 수 있었던 구조적인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제공했다. 이들 시설은 각각 75년과 82년부터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다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의 '미신고 복지시설 조건부 신고' 지침에 따라 2005년 7월까지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지금까지 '반합법' 상태로 운영돼 왔다.

이에 대해 성실정양원을 관리감독하는 양평군 보건소 관계자는 "당시 보건복지부 지침이 시설기준과 관리인력만 갖춰지면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었고 2005년 7월까지 처벌이 유예되어 있는 상태"라면서 "시설 내 인권유린이 드러나도 행정기관에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경로나 이행촉구 정도밖에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대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공대위는 "조건부로 등록된 시설들이 향후 서류 조건만 갖춰 합법화되는 것은 볼 보듯 뻔하다"며 "문제시설 관계자 형사처벌과 시설 폐쇄, 입소자 사후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에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사후조치를 마련하고 △시설 생활자와 운영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세우며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양성화정책을 전면 제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강성준)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지구촌 불평등 겨울 - '불평등한 세계를 바려보는 123가지 방법'

지은이: 밥 서트클리프 / 옮긴이: 박길성·윤상우 / 펴낸이: 문화디자인 / 2003년 11월 / 304쪽

시각적인 방법을 통해 지구상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책이 출판됐다.

이 책은 한마디로 '지표를 통해 본 지구촌 불평등 지수'라고 할 만하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불평등을 총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인데 생산, 노동, 소득, 출생, 건강, 죽음, 토지, 농업, 식량과 기아, 국제경제, 성, 인종, 난민과 이민, 억압과 차별 등 123가지 방법을 통해 불평등한 지구촌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전 세계 구석구석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불평등의 양상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며 심지어 시간이 흐를수록 불평등이 좁혀지기는커녕 점점 넓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로 정교하게 정리된 방대한 분량의 시각 자료는 불평등에 관한 그 어떤 글보다 불평등한 현실과 그 심각성을 입체감 있게 보여주기엔 충분하다. 그래서 이 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을 비추는 거울처럼 다가온다. (최은아)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11월 29일(토)

제 246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법원, 네이스 시디 제작 중지 결정

### "고3학생 정보인권 침해"...교육부 불복 뜻 밝혀 비난

전국 60만 고3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시디(CD)로 제작해 전국 대학에 제공해 온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권침해 관행에 법원이 쐬기를 박았다.

28일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흥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전교조가 성모 씨 등 고3학생 3명의 위임을 받아 교육부를 상대로 낸 '네이스 관련자료 시디 제작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시디 제작·배포 행위는 "법률적 근거 없이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평온 및 형성의 자유, 정보관리통제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며 배포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교육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함부로 침해해 온 교육부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향후 네이스 시행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1997년 말부터 별다른 법적 근거나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전국 고3 수험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를 시디로 만들어 전국 380여 개 대학에 일괄 제공해 왔다. 이 시디에는 전국 고3학생들의 성적, 질병, 징계기록, 가족관계, 학생 성향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 등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가 모두 수록돼 있어 정보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교육부는 최근 이 시디 제작을 명분으로 현 고3학생들의 정보를 네이스에 입력하라는 압력을 교사들에게 행사해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 25조의 규정을 들어 "교육부장관은 생활기록부 작성, 관리에 관한 기준만을 설정할 권한이 있을 뿐,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관리 권한은 각급 학교장에

있"으며 결국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할 권한도 각급 학교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육기본법 23조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사용할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또 시디의 복제와 해킹이 용

이하고 보안방식이 쉽게 무력화될 수 있음을 근거로 "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만일 유출될 경우 그 피해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시디 제작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판결이 나오자 전교조,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48개 교육인권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정보인권 보호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한 획기적 결정"이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2면에 계속)

### <논평>

## 죽음과 침묵

한 노동자가 차가운 냉동고 속에 누워있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 노동자 이용석. 그가 몸에 불을 붙이고 죽은 지 어느새 한달 가까이 됐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는 뒷집만 지고 있고, 노동자들의 속앓이는 계속되고 있다.

이용석 씨의 요구는 '비정규직 철폐'였다. 아주 예외적으로 일시적인 일이 아닌 다음에야, 노동자를 물건처럼 썼다 잘랐다 하는 '비정규직'이란 고용형태가 비인간적인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고유업무를 갖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도, 매년 새로 계약서를 써야 했고 적은 임금을 감수해야 했다. 그리고 이들의 임금은 인건비가 아닌 재료비로 책정됐다. 관리자들은 '태생이 다르다'며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일쑤였다. 이용석 씨는 "우리 마치 인간이 아닌 재료처럼, 필요한 기계로만 인식되어 있다"고 이러한 현실을 한탄했다.

이는 다른 아닌 비정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노동부 산하기관, 근로복지공단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이곳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업무를 보는 노동자 중 32%가 비정규직이다. 이들은 기본 업무량이 과거보다 훨씬 늘어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린다고 한다. 그럼에도 공단 측은 신규 채용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하고 현재의 비정규 노동자도 정규직화하라는 지극히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시간만 끌고 있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노동부는 나몰라라다.

지난달 29일 노동부장관 등이 1주일 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연내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깜깜 무소식이다. 그들의 시계는 우리와 다른 것인가. 노동자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부터 비정규직을 착취하고 있는데야 이미 말은 다했다.

방법은 한가지다. 정부부터 노동자에게 '정규', '비정규' 딱지 붙여서 줄 세우고 갈라 치고 차별하는 정책을 버려야 한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 노동자 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가 정부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냉동고 속 주검은 편안히 흙 속에 묻힐 수 있을 것이다.



# 국가인권위, 집시법 개악·금물살 제동

## “개정안 집회의 자유 침해”...국회에 반대 의견 표명키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집시법 개악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개악시도를 가로막고 나섰다. 이에 앞서 25일 대한변협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악안 '위헌' 의견서를 낸 바 있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제1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개악안의 일부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를 침해한다”며 국회의장에게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인권위는 개악안이 집회·시위가 집단적 폭행 등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할 경우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시위와 동일목적의 다른 집회·시위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집회의 목적을 기준으로 금지통고를 하는 것은 모든 집회를 예방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또 인권위는 개악안이 초중고 학교시설과 군사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보호요청이 있을 때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로 수정해 ‘명확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주요도로에서의 행진까지 금지함으로써 도심집회를 사실상 ‘원천봉쇄’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법은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 원칙적으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 금지할 수 없다(제12조)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악안은 “질서유지인을 두고 행진하는 경우에도 심각한 교통불편이 있으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에 대해 인권위는 “예외규정을 무력화시켜 집회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는 침해최소의 원칙에 반한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또 개악안이 집회·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기준을 대통령령에 정해 사실상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 데 대해 인권위는 “헌법에 따라 집회의 자유는 법률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음기준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악안이 사복경찰관이 집회·시위현장에 출입해 주최자 및 참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집회의 자유 침해 정도를 높이며 주최자 및 참가자에 대한 포괄적 명령권을 국가권력에 부여한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집시법 개악안은 내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어서 이번 인권위의 의견 표명이 국회에 미칠 영향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인권위의 의견이 경찰의 자의적인 집회금지 관행을 일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집회·시위

의 사전 제한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게 현재 결정의 취지”라며 “현행법 하에서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라는 단서가 경찰의 자의적 집회금지를 정당화해 왔는데 인권위 권고에도 이런 표현이 포함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성준)

(1면에서 이어짐) 하지만 교육부는 이날 법원 결정의 의미를 예써 축소하며 가치분 신청을 낸 학생 3명의 자료만 제외한 채 시디 제작과 배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교육부가 사법부의 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자행하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시디 제작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범국민적 규탄운동은 물론 교육관료 퇴진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응수했다. (배경내)

### “파병반대의 신념, 꺾지 않겠습니다”

#### 농성 벌여온 현역군인 강철민 씨, 청와대 평화행진 중 결국 연행

“청와대로의 행진 도중 연행된다 하더라도 저는 신념을 꺾지 않을 것입니다. 군검찰과 법정, 교도소에서도 파병반대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파병반대 농성 8일째를 맞은 28일, 현역군인 강철민 씨는 오전 11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농성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를 위한 양심과 신념’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이제 곧 연행되어 차가운 감방에 수감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그의 모습은 그를 지지하고 격려하기 위해 모여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목격하게 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지지자들과 함께 ‘평화의 밥상’을 나누는 강 씨는 오후 1시 무렵 농성장을 나와 기독교회관 앞에서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약식집회를 가졌다. 오후 2시경부터는 청와대를 향한 그의 ‘마지막’ 평화행진이 시작됐다.

하지만 평화행진은 100미터도 못 가 경찰병력에 가로막혀야만 했다. 참가자들은 “양심의 자유는 군법에 우선한다”, “헌법에 위배되는 파병계획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병력과 30분 가량 대치했으나, 별다른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다. 강 씨는 대치상태가 길어지자 지지자들에게 작별인사를 보낸 뒤 대열 앞으로 혼자 걸어나갔다. 곧바로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대 소속 사복 수사관들이 그를 둘러쌌다. 강 씨가 진행되는 모습을 지켜보던 참가자들의 눈시울은 붉어졌고 가슴에는 멍울이 맺혔다. 이후 그는 이덕우 변호사와 삼촌이 동행한 가운데 광주 31사단 헌병대로 이송돼 차가운 감방에 수감됐다.

그가 연행되자 행진 참가자들은 정리집회에서 “강철민 씨와 함께 걷는 길은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라며 “향후 강철민 씨의 법정 투쟁을 지원하고 출소될 때까지 후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진우 목사를 비롯한 농성지원단 대표자들은 그가 쓴 ‘노무현 대통령에게 드리는 마지막 편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강철민 씨 변호인단의 이덕우 변호사는 향후 법정에서 “정상을 참작해 달라”는 식의 변론은 하지 않을 것이며, 군법의 상위법인 헌법의 정신에 따라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을 펼 것”이라 밝혔다. (양승훈)

# 인권하루소식

## 2003년 12월

### (제 2467호 ~ 제 2485호)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12월 2일(화)

제 246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내년 1인 최저생계비 36만원

### 농성단 “이 돈으로 살 수 있나 대통령이 한번 살아보라”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올 최저생계비 35만6천여원에서 단지 1만원 가량 인상된 수준으로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올 최저생계비에서 물가인상률 3.6%를 반영해 내년 최저생계비를 36만8223원으로 발표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빈곤과 최저생계비 문제 해결을 요구해 온 농성단은 이 같은 소식에 “생계형 자살이 속출하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발표”라며 분노를 표하고 이에 항의하는 행사를 가졌다.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보건복지민중연대 등 26개 단체로 구성된 농성단은 오전 11시 한 달치 최저생계비로 구입한 쌀, 배추, 계란 등의 물품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를 향했다. 이들은 “겨우 3.6% 인상돼 봤자 빈곤계층의 고통스런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며 기초생계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책정을 강력 규탄했다.

민중복지연대 유의선 사무국장은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전물량방식으로 일률적으로 책정되어 물가인상률만을 반영해 왔다”며 “최소한의 필요물품의 총합인 전물량방식은 빈곤계층의 절망적인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물량방식에 따르면, 올해 최저생계비는 식료품비 14만원 외에 주거비 7만원, 전기·수도·난방비 2만1천원, 의료비 1만9천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유 사무국장은 “7만원으로 어디서 집을 구하고 2만1천원으로 어떻게 겨울을 나겠냐”고 꼬집은 뒤 “134만 명의 최저생계비 수급자가 실제로는 평균 16만원만을 받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올 최저

생계비 35만원에 주거비 7만원까지 보태 물품을 사왔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이걸로 한 달만 살아 보라”고 외쳤다.

이어 농성단은 “이것으로 한 달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정부는) 상대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정하고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선진국과 같이 상대적 빈곤선을 평균임금의 50% 정도로 정하고, 여기에다 도시·농어촌의

지역별 차이와 장애·환자·노인가구 등 가구유형별 차이까지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저생계물품을 청와대로 직접 전달하고자 한 농성단의 계획은 경찰의 방해로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농성단이 청와대를 방문하려 하자 경찰은 “여러 명이 함께 움직이면 행진이 되기 때문에 집시법 위반”이라며 이들을 가로막았다. 청와대로 물품을 전달하려는 농성단과 대표 2-3인만을 허용하겠다는 경찰 측과의 다툼 끝에 경찰은 배추, 계란 등 생계물품을 내던지며 ‘과도한 저항을 한’ 5명을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했다. 장애인 2명을 포함한 이들 연행자들은 이날 밤 10시 현재까지 풀려나지 못했다. (임국현)

## 법 제정 55주년에 터진 국가보안법 사건

###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 옥인동분실로 연행돼

국가보안법 제정 55주년을 맞은 1일, 또 한 사람의 희생양이 이 악법의 그 물망에 걸려들었다.

1일 오후 3시 50분경,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체포돼 옥인동분실로 연행됐다. 현재 민 사무처장은 과거 범민련 활동 당시 추진했던 ‘조국통일3대 기념탑’ 건립사업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과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7년 범민련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던 중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99년 출소한 민 사무처장은 이듬해 범민련 사무처장으로 복귀했지만, 지난해 6월 활동을 그만두고 올해 초부터는 통일연대 사무처장으로 활동해 왔다.

이날 옥인동분실을 방문해 민 사무처장을 접견하고 돌아온 이덕우 변호사는 “이미 지난해 범민련 활동을 그만둔 사람을 이제 와서 왜 체포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국가보안법에 대한 현 정

권의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송두율 교수 사건 이후 다시 세가 확장되기 시작한 반공이데올로기를 등에 업은 공안세력이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실적 올리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99년 출소 이후 민 사무처장의 행적과 관련한 엄청난 자료들이 확보되어 있는 것 같다”며 오래 전부터 도·감청을 비롯한 치밀한 사찰이 진행되어 왔음을 암시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국가보안법 폐지국민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보안법의 즉각 폐지 △송두율 교수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의 석방 △한총련·범민련에 대한 이적규정 철폐를 촉구했다.

이날 민가협이 집계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9개월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는 총 58명으로 이 중 7조(찬양, 고무 등) 위반 구속자는 전체 구속자의 93.1%에 해당하

(배경내)



# 이달의 인권 (2003년 11월)

## 흐름과 쟁점

### 1. 희생 커져도 한국군은 이라크로 간다

이라크 게릴라들의 저항이 미군뿐 아니라 동맹국과 민간인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대미 파병 협의단을 파견해 파병의 규모·성격·시기를 조율했다(11/4). 이어 2차 정부 합동조사단은 "치안 불안으로 전후복구사업 지원이 절실하다"며 파병을 합리화했으며(11/9), 럽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는 3천명 규모의 비전투병 추가 파병이 큰 틀에서 합의됐다(11/17). 이에 따라 파병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저항도 갈수록 고조됐다. 휴가 나온 이등병 강철민 씨는 자대 복귀를 거부하고(11/21) 파병결정 철회를 촉구하며 8일간 농성을 진행하다 결국 헌병대에 연행됐다(11/28). 동화작가 박기범 씨의 단식농성도 이어졌다(11/22). 이 와중에 이라크 저항 세력의 공격은 갈수록 치밀해져 피해규모가 확대됐다. 바그다드의 이탈리아 대사관은 로켓포에 피격됐고(11/27), 미군 하도급자 콜롬비아인 1명이 살해됐으며(11/29), 일본 외교관 2명도 티크리트 인근에서 피살됐다(11/29). 마침내 한국의 오무전기 소속 직원들도 고속도로에서 총격을 받아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 최초로 한국인 희생자까지 발생했다(11/30). 이에 파병결정을 철회하라는 각계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왔지만, 대통령은 이번 사건으로 파병 결정이 영향을 받지 않는 양을 짓기라며 끝내 고집을 부렸다(12/1).

### 2. 강제추방 내몰린 이주노동자들의 처절한 절규

강제출국 시한(11/15)이 임박하자 이주노동자들이 잇따라 죽음으로 향했다. 스리랑카 출신 다르카 씨가 지하철 선로로 뛰어내렸고(11/11), 방글라데시 출신 비꾸 씨도 일하던 공장 안에서 목을 뺐다(11/12). 러시아 출신 안드레이 씨는 귀향선을 타고 가다 바다로 몸을 던졌고(11/20), 우즈베키스탄 출신 브르혼 씨도 인천의 한 공장 화장실에서 목을 매는(11/25) 등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대로 내쫓길 수는 없다"는 이주노동자들은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며 안산(11/12), 경남(11/14), 명동성당(11/15), 마석(11/16), 성공회서울대성당(11/17) 등 전국 곳곳에서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명동성당 농성단은 "이따른 죽음이 교역의 브로커 비용과 강제추방정책이 맞물려 만들어진 타살"이라며 추모집회를 열고 농성 지속을 결의했다(11/29).

### 3. 테러방지법과 집시법 개악안, 급물살 탄 양대 악법

국회 정보위가 테러방지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11/14) 인권시민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테러방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이 국회를 항의방문하고 결사 반대 뜻을 밝힌 데 이어(11/13), 인권활동가 9명은 국회 본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연행됐다(11/14). 청와대 앞 반대집회를 개최한(11/18) 이권단체들은 이어 법 제정에 적극적인 국회의원 4명을 '반인권 의원'으로 선포했다(11/20). 대한변협도 법사위에 반대 의견을 냈다(11/24). 반면 고영구 국정원장은 국정원 직원을 대동하고 열린우리당을 방문, 테러방지법의 연내 통과를 재촉하는 등 부지런을 떨었다(11/24).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불법시위 대처 4대원칙'을 지시하자(11/18), 국회 행사위는 사실상 경찰에 집회 허가권을 쥐어주는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11/19). 이에 인권사회단체들은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개악시 불복종운동을 결의했다(11/20). 대한변협은 법사위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고(11/25), 국가인권위도 반대의견을 냈다(11/28). 두 악법이 제정 급물살을 타자 인권사회단체들은 '테러방지법과 집시법 사망 선포식'을 열고 '결사 저지'의 결의를 다시금 다졌다(11/27). 두 안은 현재 국회 파행으로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 논평

- 역시 무서운 국정원(11.1)
- 노동자들 가슴에 꽂힌 '칼' (11.8)
- 임박한 이주노동자 '사냥'에 반대한다(11.15)
- '민주화된 시대'의 '게임' 대통령(11.22)
- 죽음과 침묵(11.29)

## 인권이야기

- 손상열 - 탈'안보론'적 사고와 실천(11.4)
- 최은아 - '강남불패신화'의 완패를 바란다(11.11)
- 선미 - 거리에서 겨울을 나는 사람들(11.25)

## 인권정보자료

- '사람답게 인간답게' (11.7)
- '기독교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지침서' (11.14)
- '파놉티콘-정보사회 정보감옥' (11.21)
- '불평등한 세계를 바라보는 123가지 방법' (11.28)

## 인터뷰 - 평화 운동가 새라 플라운더스

"미국의 그 모든 '전쟁'에 저항한다" (11.7)

## 자료 - 국제인권단체 '테러와의 전쟁과 인권'에 관한 공동 선언

인권과 반테러 문제에 관한 국제 감독 메커니즘의 필요성에 관한 공동선언 (11.5)

## 만평

- '수능, 그의 미래를 삼키다' (11.6)
- 구원(?)의 발길 (11.13)
- 21세기 한국, 19세기 닮은 꼴(11.27)

## 기타

- 노동인권탄압 증언대회, "우리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11.6)
- 성실정양원, 기도원 빙자 감금·착취 사실 드러나(11.8)
- 검찰, 송두율 교수 끝내 구속기소(11.20)
- 법원, 네이스 시디 제작 중지 결정(11.29)

지면사정상 인권이야기는 수요일자로 나갑니다.

# 2003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1)

-올 한해 <인권하루소식>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인권하루소식은 올 한해 주요 인권소식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10대 인권소식 선정작업은 올해의 인권흐름을 되짚어보며 다가오는 새해의 인권과제를 설정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의미있는 사건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10가지만 선택해 빈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설문항목에 없는 사건 중 반드시 10대 소식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기타란에 적어주세요. -응답지 접수는 ①팩스(02-741-5364) ②이메일(humanrights@sarangbang.or.kr 또는 rights@chol.com) ④전화(02-741-5363)로 합니다. 접수는 12월 5일(금)까지이며, 설문 결과는 12월 10일자에 발표됩니다.

## <사상·양심의 자유>

- ( ) 1. 새 정부 첫 사면, 양심수 1% '선별사면' 그쳐...기결수 13명 석방, 미결수와 병역거부 양심수 1164명은 제외
- ( ) 2. 대법원,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대구지법, 11기 한총련에도 이적단체 규정 적용
- ( ) 3. '진보의력' 이적단체 판결, 건대생 2명 이적표현물 제작 등 유죄...새 정부 국보법 구속자 58명 이르러
- ( ) 4. 법무부, 제2의 사상전향제로 비판받은 준법서약제 폐지키로
- ( ) 5. 대검 공안부, 한총련 수배자 중 79명 선별 불구속수사 하기로
- ( ) 6. 37년만에 고국 찾은 송두율 교수, 국가보안법으로 끝내 구속기소...여론재판·전향강요 이어져

## <집회·시위의 자유>

- ( ) 7. 헌법재판소, "대사관 1백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는 위헌"...삼성본관 앞 등 집회봉쇄용 위장 집회신고 기승
- ( ) 8. 집시법 개악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통과...경찰에 집회 허가권 부여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 ( ) 9.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 강행...학생, 학부모, 교사, 인권단체, 국가인권위 잇달은 중단 요구
- ( ) 10. 대검, 수사정보 유출자 색출 명목 출입기자 통화내역 조회해온 것으로 드러나

## <생명·안전권>

- ( ) 11. 대구지하철 참사로 수백 명 사망·실종...1인승무원 제도와 지하철 안전대책 부재가 피해규모 키워
- ( ) 12. 부안주민 의사 무시한 채 핵폐기장 기승 선정...핵폐기장 백지화 촉발 활활 타올라

## <노동인권>

- ( ) 13.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씨 해고와 손배·가압류 등 노조탄압에 분신으로 항거
- ( ) 14. 대법원, "정리해고 반대 파업은 불법"...원심 파기하고 업무방해 유죄 판결
- ( ) 15. 헌법재판소, '불법파업 제조기'로 악명 떨쳐온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 합헌 결정
- ( ) 16. 공공연맹 등 인권노동단체 실태조사 결과, 정부가 앞장서 저임금 용역노동자 양산
- ( ) 17. 화물연대 파업 관련, 건설교통부 '업무복귀명령제도' 도입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 ( ) 18. 민영화로 가는 2개 철도구조조정법 국회 통과...통과 저지 위한 철도노조 파업에 대량징계, 97억 손배·가압류
- ( ) 19. 근로복지공단, 7년 노조탄압으로 정신질환 얻은 청구성심병원 조합원 전원 산재 인정
- ( ) 20. 주5일제 빌미 근로기준법 개악...생리휴가 무급화 등 노동조건 대폭 후퇴
- ( ) 21. 대법원, "불법파견되었다면 이미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도급 위장한 불법파견 관행에 쫓겨
- ( ) 22. 삼성생명 해고자들, 부당해고 철회 촉구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 ( ) 23. '2003년의 전태일들' 잇단 자살 항거...김주익, 이용석, 이해남 씨 등 몸뚱아리 던져 노동탄압 항거

## <건강권>

- ( ) 24. 보건복지부, 백혈병 치료제 글리백 한알당 2만3045원 책정...환자 "사형선고에 다름없다"며 인권위 농성 들어가
- ( ) 25. 근로격계 직업병 집단요양 신청 줄이어...규제개혁위, 근로격계 질환 인정 까다롭게 변경

## <사회보장권>

- ( ) 26. 노동자위원 전원, 최저임금위원회가 되레 저임금구조 온존시킨다며 사퇴...최저임금 56만7천원으로 결정
- ( ) 27. 생활고 비판 자살 잇따라...내년 정부예산안 중 사회보장예산 9.2% 증액 그쳐, 최저생계비 36만8천원 책정



# 2003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2)

### <신자유주의 세계화>

- ( ) 28. 1차 WTO 개방계획서에 성인교육·대학부문 개방 포함...외국교육기관 설립 특별법(안)도 입법예고
- ( ) 29.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통과...인천 등 전국 곳곳 경제자유구역 신청 붐물
- ( ) 30.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WTO 5차 각료회의 합의 무산...농민 이경해 씨, 자살로 농업개방 항거
- ( ) 31. 정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서명...농민들, 국회 비준 거부 촉구

### <평화>

- ( ) 32. 미국의 이라크 침략으로 민간인 학살 속출...한국군 1차 파병 이어 2차 파병까지 추진되자 항의 잇달아
- ( ) 33. '미 스트라이커부대 전쟁훈련 반대' 평화시위 벌이다 13명 구속...12명 집행유예, 1명은 실형 선고

### <국가기구나 인권>

- ( ) 34. 전·의경 구타·사망사고, 군내 성폭력 잇따라
- ( ) 35. 노동자 집회서 경찰폭력 기승...제1기동대 해체·경찰폭력 방지 요구 잇따라
- ( ) 36. 국정원 강화 테러방지법안 국회 정보위 통과
- ( ) 37. 반인권·비리 전례 류국현 신임 인권위원 사임...곽노현 인권위원, 국가인권위 쇄신 요구하며 위원직 사임

### <과거청산>

- ( ) 38. 삼청교육대 피해자, 명예회복 요구 서울도심에서 할복...법원, "특별법 약속 안 지킨 국가가 위자료 지급해야"
- ( ) 39. 광주지검, 97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 사망사건과 관련 의문사위원회가 고발한 경찰 무혐의 처리
- ( ) 40.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범국민위·유족회,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 요구 농성
- ( ) 41. 제주4·3항쟁에 관한 정부 진상조사보고서 채택...노 대통령, 제주도민에 공식 사죄
- ( ) 42.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개시...장준하, 박창수 사건 등 30건의 진상규명 불능 사건 등 추가 진상조사
- ( ) 43. 원폭2세환우 공대위 출범...원폭 재앙이 낳은 고통의 대물림 해결 촉구
- ( ) 44. 서울지법, 안기부 조작으로 간첩누명 쓴 수지검 가족에게 국가배상 판결...고영구 국정원장, 가족들에게 사죄
- ( ) 45. KAL858기 진상규명 대책위·실종자 가족회, 안기부 조작 의혹 제기하며 진상규명 촉구

### <시설수용자와 인권>

- ( ) 46. 법무부, 재단법인 '아가페'와 교정업무 위탁 체결...민영교도소 도입 본격화
- ( ) 47.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청송 피감호자 단식농성, 출소자 상경투쟁 이어져...법무부, 보호감호제 개선 고집
- ( ) 48. 한 교도소 재소자가 466일간 가족수감 등 계구 착용했던 것으로 밝혀져
- ( ) 49. 에바다 민주 이사진, 1년 6개월간 구재단측에 불법점거됐던 에바다농아원 되찾아
- ( ) 50. 대법원, "교도관 방해로 소송 못하면 그 동안 시효 중지"
- ( ) 51. 성실정양원·은혜사랑의집 등 정신요양 시설 인권침해 속속 드러나

### <사회적 약자>

- ( ) 52.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 2차 보고서 심사 후 차별금지과 교칙개정 등 촉구
- ( ) 53. 참교육학부모회 상담사례 분석 결과, '원시적 인권침해'인 체벌 아직도 심각
- ( ) 54. 보건복지부, 18세 이하 집회 참가 막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 ( ) 55. 장애인 추락 참사 계속돼...장애인이동권연대, 광화문역 선로 점거 등 투쟁 지속
- ( ) 56. 국가인권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삭제 권고
- ( ) 57. 동성애자 윤현석 씨, 차별없는 세상 그리며 목매 자살...인권단체들 "사회적 타살" 주장
- ( ) 58. 산업연수제 온존시킨 고용허가제 법안 국회 통과...4년 이상 불법체류자 20여만명 강제추방 위기
- ( ) 59. 법무부, 호주제 폐지·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 민법개정안 입법예고...소수자 가족·정보인권 등한시

기타 ( )

수고하셨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12월 3일(수)

제 246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검찰의 '사리졌어야 할 정열'

### 송두율 교수 첫 공판...검찰측 혐의 강력 부인

지난달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의 첫 공판이 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송 교수는 '정치국 후보위원', '주체사상 전파' 등의 주요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송 교수의 부인과 둘째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이날 공판에는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 관계자 60여명과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우익단체 회원 70여명이 참여해 팽팽한 긴장이 흘렀다. 송 교수가 재판장에 나타나 한편에서는 응원의 박수가, 다른 한편에서는 "빨갱이 놈들"이라는 욕지거리가 흘러나왔다.

송 교수는 피고인 모두진술을 통해 "37년만에 귀국했지만 한 마디도 하기 전에 여론몰이가 이루어졌다"며 우리 사회의 비민주성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역사 속으로 이미 사라졌어야 할 것에 수많은 정열이 쏟아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새 것(의 등장)을 막기 위해 관성적으로 달려왔던 것을 멈추고 우리는 '일단정지'해야 한다"며 재판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다.

송 교수가 지적한 '정열'을 아낌없이 보여준 검찰은 300개가 넘는 피의자 심리 조항을 준비해 왔는가 하면, 신문과정에서도 '지령', '체제 선전' 등 가치 판단을 교묘히 집어넣은 질문에 답변을 요구해 변호인단의 반론을 받았다.

검찰의 신문은 다음 두 가지를 중심으로 송 교수의 활동 내역을 '친북행위'로 규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하나는 송 교수가 94년 이후 정치국 후보위원

감철수로 활동했는가, 또 하나는 95년부터 송 교수가 의욕적으로 관여해 온 남북학술회의의 이적성 여부였다.

먼저 노동당 가입 여부와 정치국 후보위원 감철수인지 여부에 대해 송 교수는 "나는 노동당원도 아니고 정치국 후보위원도 아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송 교수는 "절차상 가입했을 뿐, 한번도 당원으로 생각한 적 없다"고 답했다. 또 "94년 김일성 장례식장에 감철수, 송두율 두 개의 이름이 기재된 것을 처음 확인했다"며 "당시에는 분위기가 어쩔 수 없이 넘어갔으나 95년 이후에는 감철수라는 이름 사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남북한 통일학술회의에 대해서도 감

철은 북한의 체제와 주체사상을 선전하기 위한 장으로 몰아갔다. 북한 학자의 발언 내용만을 모아 학술회의의 이적성을 강조하려는 검찰의 신문이 한 시간 넘게 계속되자, 변호인단은 "남한측 15명, 북한측 6명이 참여한 회의에서 오직 북한 인사의 특정한 발언만 모아서 공소사실화 하고 있다"며 검찰의 균형감각을 요구했다.

한편 공판에 앞서 대책위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학자로서 남북의 화해교류를 추진했던 송 교수의 처벌은 남북화해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유럽의 각계 인사 92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독일의 '한국협회' 라이너 베르링 회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현존한다는 것에 말문이 막힌다"며 이 법의 폐지를 요구했다. 그는 또 "유럽 지식인들 모두는 송 교수 석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송 교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임국현)

## 내몰린 간병인들, 피난처 찾아 인권위 농성

### 서울대 사설업체 가입 종용 계속...출입마저 가로막혀

"마지막 피난처를 찾아 인권위까지 왔습니다."

2일 오전 10시 20분경 서울대병원(병원장 박용현) 간병인 10여명이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 9층 회의실을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 9월 1일 병원 측이 15년 동안 운영되던 무료 간병인 소개소를 일방적으로 폐쇄하자, "환자부담을 늘리고 간병인 생존권을 박탈한다"며 지금까지 본관 앞 농성투쟁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병원측은 간병인들에게 사설업체로 소속을 바꿀 것을 종용해 한때 70여 명에 이르던 조합원이 현재 25명으로 줄어들었다. 간병인노조 정원자 대표는 "병원측이 환자들에게 '사설

업체 소속 간병인을 쓰지 않으면 치료에 지장을 받게 된다"는 식으로 협박하면서 노조를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고발했다.

게다가 병원측은 지난 10월 간병인들을 상대로 '진료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달 21일 서울지법 민사 50부(재판장 이흥훈 부장판사)는 △서울대병원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유료소개소는 소개수수료 등으로 환자측에 웃돈을 요구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무료소개소 폐지 이유가 노조활동과 무관하지 않으리라는 의심이 간다고 인정하면서도,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병원 내 시위와 농성, 건물 내 출입 등을 금지해 이들의 의사 표현까지 틀어막았다. (2면에 계속)



### ○ 박하순의 인권이야기 ○ 농성장들을 돌며 든 생각

전국민중연대 광화문 농성장엔 갔다. 정광훈 의장 등 몇 분이 '비정규직 철폐', '한-철레 자유무역협정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등 몸 벽보를 두르고 앉아 있다. 천막도 못 치게 해서 길 위에 스티로폼만 깔고 농성을 한다.

30분인가 있자니 민중연대 조직위원장이 시청 앞에서 열리는 청계천 노점 철거 규탄 기자회견에 가잔다. 가는 도중 그는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투쟁이 매우 힘겹게 진행되고 있다고 토로한다. 이용석 씨가 분신한 후 버티기로 일관하다가 대오가 줄어드는 것을 보고 공단은 계속해서 이전보다 좋지 않은 협상안을 던지고 있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이 모양이니..." 그가 한숨 섞인 넋두리를 내뱉는다.

겹겹이 경찰차로 둘러싸인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끝내니 몇 분의 노점상들이 시청 문을 발로 걷어차며 강제철거에 대한 분풀이를 한다. 전경이 몰려오자 슬슬 물러났다.

오후엔 명동성당을 들렀다. 이제껏 와보지 못해 못내 마음이 걸렸는데 밀린 숙제를 하는 심정으로 이주노동자 농성장을 방문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지원단체 활동가들과 비교적 밝게 생활하고 있는 듯했다. 단속추방 탓에 갈 데 없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농성텐트가 그나마 안온한 보금자리인지도 모르겠다. 전국에서 약 2000여명이 농성을 하고 있다.

사무실로 들어가는 도중 서울역 농성텐트촌에 들렀다. 빈곤문제 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장애인들이 보인다. 오늘은 청와대로 내일은 국회로 몰려다니며 싸운다. 민주노총 텐트에는 난로를 가운데 두고 단병호위원장을 비롯해 몇 분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힘이 많이 빠져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다. 조합원의 자결과 분신이 이어져 투쟁을 했음에도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밤 9시쯤 집엘 가려고 남대문 근처에서 버스를 갈아타려는데 이번엔 삼성 해고노동자들과 맞닥뜨렸다. 5-6명의 해고노동자들이 봉고차를 농성장 삼아 농성을 하고 있었고, 1명씩 돌아가며 삼성본사 근처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들은 40일 넘게 단식을 하기도 했다.

이들만이 아니다. 대구에서는 세월테크 투쟁이, 부안에서는 해폐기장 반대투쟁이 몇 달째다. 한국의 거의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라크 파병 반대투쟁도 있다.

이들 투쟁에서 제기되는 요구는 모두 아주 초보적인 것들 뿐이다. 최소한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핵 위협에서 벗어나고 싶다! 무고한 이라크 민중들을 학살하는 데 동참하지 말고 우리 젊은이들을 희생시키지 말라!

그러나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주는 기업주대로 이런 정당한 권리주장에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배언론들은 이에 더해 악다구니를 쓰면서 힘있고 가진 자들의 이익 수호에 혈안이 되어 있다. 기성정치권에서 바랄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노무현 정권 아래서 우리 민중들의 삶과 민주주의가 이 정도 수준이니 앞으로의 일이 참으로 암담하다. 뭔가 생각을 달리 해보아야 한다.

(박하순님은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이십니다)

### 공공문화의 생산기지를 살리자 활력연구소, 서울시 재정지원 철회로 폐관 위기

경제논리에 사로잡힌 천편일률적인 영상문화가 일상 깊숙이 침투한 현실에서 문화적 권리의 획득이나 공공문화 창출을 부르짖는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로 치부되기 십상이다. 4호선 충무로 역사에 위치한 '활력연구소'는 주류 문화의 틈바구니에서 벗어나 독립문화를 접할 수 있는 희귀한 공간인데, 자칫 폐관될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해 11월 개관한 활력연구소는 서울시의 '지하철문화공간조성사업계획'의 일환으로 한국독립영화협회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영상미디어센터이다. 그러나 애초 합의와는 달리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운영비 지원을 철회해 끊임없는 재정 압박에 시달려 왔다. 공공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조차 부족한 서울시를 상대로 지리한 싸움을 계속해 왔던 활력연구소는 결국 올 7월 서울시와 공공 영상미디어센터의 취지에 걸맞은 새로운 운영자를 공모하자 데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서울시는 구체적인 사업목적이나 방향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자체적인 운영비 마련을 강조한 공모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 문화정책 개혁과 충무로영상센터 활력연구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는 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 방침에 따라 운영업체가 선정될 경우 "공간의 공공성을 심대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활력연구소는 그간 재정 부족으로 40% 정도의 프로그램밖에 가동하지 못하는 실정에서도 1만3000여명에 이르는 회원을 보유하면서 영상교육과 저렴한 비용의 독립영화들을 제공해 왔는데, 이마저도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다양한 문화를 저렴한 비용으로 향유할 수 있는 공적인 문화공간이 수익성만 내세운 상업적인 소비공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활력연구소 운영팀의 김완 씨는 이번 서울시와의 마찰은 "공공의 영역에서 '미디어센터'를 어떻게 다뤄줄 것인가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말한다. 미디어센터는 주류 미디어에서 좀처럼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소통하게끔 만드는 대안 미디어의 산실로서, 광화문의 영상미디어센터를 비롯해 전주, 울산 등 지역에서도 미디어센터 추진운동이 일고 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의 미디어 센터가 지자체나 여타의 정부기구와 관련을 맺고 있어 활력연구소를 둘러싼 갈등이 앞으로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비대위측은 "활력연구소의 프로그램들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겠다"며 "공공 영상미디어센터의 설립 목적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운영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막아낼 것"이라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진영)

(◀이면에서 이어짐) 또한 이들은 지난 10월 7일 인권위에 서울대병원장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지난 1일에야 인권위 조사가 진행됐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인권위 조사가 끝나는 6개월 후면 이미 사설인력업체가 모두 장악한 후 일 것"이라며 신속한 조사를 요구했다. (강성준)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12월 4일(목)  
제 246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세계 장애인의 날' 참혹한 풍경들

### 장애인들, 곳곳서 권리 확보 투쟁 벌여

12월 3일은 유엔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법과 인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이다. 이날 한국의 장애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얻어내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현장을 둘러봤다.

####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돼야'

'세계장애인의 날 근조' 현수막을 내건 장애인들이 휠체어에 쇠사슬을 두른 채 쌀쌀한 바람이 몰아치는 도로 한복판으로 나섰다. 3일 오후 2시 15여명의 장애인들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최저 생계 보장하라"를 외치면서 용산역 부근 육교와 8차선 도로를 점거하며 약 30분간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에 앞서 이들은 서울역 앞에서 열흘간 진행했던 '빈곤문제 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 해단식을 가졌다. 이 날은 2001년 뇌성마비 1급 중증장애인이었던 최옥란 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받는 한달 생활비 28만원으로는 도저히 생존해 나갈 수 없다며 농성을 시작한 날이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빈곤을 조장하는 이 법의 허울은 변함이 없고 내년 최저생계비는 고작 36만여원으로 책정됐다.

민중복지연대 유의선 사무국장은 "빈곤은 주거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노동권, 의료권이 박탈된 총체적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 실업률 70%가 대변하듯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노동권은 물론, 여타의 사회적 권리의 획득을 위한 기초적인 이동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장애인들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며칠 전 경남 고성

한 할머니가 정신지체아 손녀의 의료비 문제로 고통에 시달리다 결국 손녀에게 독극물을 떠먹이고 스스로 자살을 시도하는 비극을 낳기도 했다. 이들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생계형 자살과 범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농성을 마무리한 이들은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국회에도 사회보장예산의 확보와 증대를 요구할 계획이다.

#### ▶"전동휠체어는 너무 먼 당신"

장애인들이 자신의 발인 휠체어를 불태웠다. 정부가 휠체어 값으로 5년에 한 번 고작 24만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화형식을 집행한 단체는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국민건강보험 확대적용 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 10여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추진연대는 3일 오후 2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중증장애인들에게 전동휠체어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추진연대는 이날 오전에도 공청회를 열어 전동휠체어가 중증장애인에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했다.

10년 전 사고로 지체장애인이 된 이선희 씨는 외출이 거의 불가능했다가 전동휠체어를 구입하고 나서야 비로소 외출이 가능해졌으며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거라는 사회의 시선과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좌절감이 따라다니는 장애인에게 무언가를 혼자서 해냈다는 게 얼마나 뿌듯한 일인지 아무도 모를 것"이라며 울음을 터트렸다.

이처럼 전동휠체어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자유의 발'이 되고 있지만 비싼 가격 탓에 널리 보급되지 못하고 있

다. 장애인편의시설축진시민연대 배용호 정책실장은 "가격이 최저 300만원이어서 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도 안되는 중증장애인들이 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전동휠체어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은 4만여 명이지만, 실제 보급률은 1천대도 되지 않는다"며 "전동휠체어에 대한 건강보험금 보조지급액 상한선을 500만원 정도로 책정해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연대는 향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투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 장애인콜택시노조 싸움이 위기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이 지난달 26일 장애인콜택시노조 간부 6명을 포함해 콜택시 노동자 11명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해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조설립 필증을 교부받은 지체 2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노조의 주요 간부 대부분이 공단측에 의해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싸늘해질 위기에 처한 것.

이와 관련해 3일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계약해지 조치는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노조를 말살하려는 명백한 노동탄압 행위"라며 공단측을 맹렬히 비난했다.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콜택시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고용안정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장애인 이용자들에게 있어 서비스의 질 개선과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전했다. 또 "허울좋은 운전봉사이란 명칭은 노동차취를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장애인들을 봉사나 받는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행위"라며 비난했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노조는 이달 5일 단체교섭을 통해 △계약해지 철회 △정규직으로의 전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공단측에 요구할 (2면에 계속)



# 오마이뉴스에 더 이상 기사를 실지 않는 이유 기자회원 탈퇴하고 하루소식 기사 제공 중단키로

인권운동사랑방은 3일 오마이뉴스 기자회원을 탈퇴하고 이 신문에 기사를 실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2000년부터 인권운동사랑방은 '진보언론'의 닷을 올리고 출발한 이 신문이 형식과 내용 모두에 있어 보수언론과는 다른 정신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고 <인권하루소식> 기사를 정기적으로 게재해 왔다.

그런데 지난달 20일 오마이뉴스 메인 화면에 내걸린 팝업 창에는 '한-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촉구하는 경제5단체의 의견광고가 버젓이 실렸다. 1주일 가량 같은 내용의 배너광고도 현판처럼 게시됐다. 그 후 기자계시판과 자유계시판에는 이에 대한 실명과 분노를 표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인권운동사랑방 역시 현실의 권력관계에서 사회적 약자인 농민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떠미는 '특정 정책의 홍보 광고'를 실는 것은 오마이뉴스의 창간 정신과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판단, 기사 제공을 잠정 중단하고 오마이뉴스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전화 통화에서 오마이뉴스 측은 "기사와 광고는 별개"라며 향후에도 유사한 의견광고가 실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광고 게재 건과 관련해 불거져 나오고 있는 비판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히고, "그런 목소리는 소수의 의견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은 오마이뉴스 측에 다시 한번 질의서를 보내 '광고 게재 원칙'과 '이번 사태와 관련한 비판에 답변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질의서는 "광고와 기사는 별개라는 논리는 지극히 실용주의적인 잣대"라며 "이미 상당히 높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오마이뉴스가 '언론권력'으로서의 자성과 긴장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면, 광고주에 휘둘리며 기존 언론사들이 걸어갔던 보수화의 길을 똑같이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수의 논리"를 내세워 내·외부의 비판에 무시로 일관하는 것은 이미 권력화한 오마이뉴스의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 측은 이 질의에도 답변을 내놓지 않는 오만함을 보였다.

결국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하루소식> 기사가 더 많은 독자와 만날 수 있었던 소중한 공간을 기꺼이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오마이뉴스가 언론학의 정설로 자리잡은 '언론과 자본, 언론과 광고주의 관계'를 애써 외면하며 이번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반성하고 바른 언론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인권운동사랑방은 경제5단체가 이 광고를 오마이뉴스에 신고자 했던 이유가 된 이 신문의 사회적 영향력은 '다른 언론'을 만들기 위해 땀과 열정을 바쳐온 수많은 기자회원들의 노력의 결실이라는 점도 잊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배경내)

(2면에서 이어짐) 예정이며, 공단측이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향후 적극적인 투쟁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 ▶장애인권리조약 제정 발걸음

장애인의 인권을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내법뿐 아니라 국제법의 정비도 절실하다. 이와 관련 최근 활발

히 일고 있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아래 조약) 제정 움직임은 주목할 만하다.

조약은 지난 2001년 유엔총회에 공식 상정된 후 유엔특별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어 올 7월 열린 제2차 유엔특별위원회에서 장애인조약 초안을 만들기 위한 실무

분과(Working Group) 구성이 결의되면서 지역별 제정 논의가 활발해졌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지난 6월 '아태지역전문가회의'를 연 데 이어 10월 각국 정부와 민간단체가 모인 워크숍을 개최, '방콕초안'을 채택했다. 초안은 비장애인들에게 보장된 권리가 장애인들에게도 보장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조약 이행을 위한 독립적인 국가기구의 설립 △장애인 영향평가제도 도입 △조약이행감독기구의 설치 △개인 청원권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9월 한국장애인연맹 등 13개 민간단체들이 모여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추진연대'를 결성하고 '방콕초안'을 기초로 '한국 민간단체안'을 작성, 내년 초 열린 실무분과 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연맹 이석구 사무처장은 "조약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장애인이 제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에 민간단체 공동으로 실무분과 제출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진영/임국현/양승훈/강성준)

## 만화사랑방

이동수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12월 5일(금)

제 247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이라크 파병 국민토론회' 정부에 제언

### 인권·시민사회단체들, '테러방지법 저지' 주장

정부의 '지체없는' 파병추진에 반대하고 테러방지법의 '연내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 및 집회가 잇따랐다.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4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4당의 이라크 파병강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파병저지 국민행동 계획'을 밝힌 데 이어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국정원 강화법, 테러방지법 제정 추진 중단 및 파병결정 철회 촉구 집회'를 열었다.

국민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라크에서 한국인 피살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조사단과의 면담자리에서 "지체없이 파병안을 마련하고 서둘러 4당대표와 만나겠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파병반대의 원칙을 재천명했다.

### "이라크 점령 미군이 생명 위협"

10월 29일부터 지난달 29까지 이라크 2차 현장조사활동을 벌였던 민간인 조사단도 현지의 분위기와 한국군 파병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의견을 전했다. 이라크에서 의료·조사활동을 벌였던 김재복 수사는 "학생, 시민 400여명을 조사하고 면담활동을 벌였지만 이들 가운데 미국을 칭찬했던 사람들은 단 한사람도 없었다"고 밝히고 실제 생명의 위협은 "이라크인에게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작정 총을 들이대는 미군으로부터 느껴졌다"고 강조했다. 김재복 씨와 함께 이라크 현지조사활동을 벌였던 전미선 씨는 "이라크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미국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라고 밝히며 "이라크인들의 이와 같은 민심을 읽었다면 노 대통령은 즉각 파병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국정원 강화법, 테러방지법 반대

지난 21일부터 대학로에서 '소망의 나무'를 키우고 있는 시민단식모임 회원들은 미대사관 옆 한국통신 건물 앞에서 열린 '국정원 강화법, 테러방지법 제정 추진 중단 및 파병결정 철회 촉구 집회'에 참여하여 정부의 파병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평화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망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소망의 나무를 키워나가고 있는 동화작가 박기범 씨는 단식 13일째 임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참여, "우리가 조금 더 잘살겠다고, 조금 더 갖겠다고 다른 나라 국민들을 죽이는 건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없는 조직 부러 만들어 학생운동 씨 말리나

### 아주대 재학생·졸업생 등 8명, 국보법 조직사건으로 연행

아주대 2004년 공과대 부학생회장으로 선출된 주경태 씨를 포함해 아주대 재학생과 졸업생 등 8명이 지난 3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가입(7조 3항) 혐의로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연행됐다. 연행자들 가운데는 현재 군인 신분인 2명과 회사원 2명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현재 수원 남부서와 중부서에 분산돼 '아주대 자주대오' 조직 활동과 관련해 집중 조사를 받고 있으나,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제정반대를 외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공동행동은 지난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대테러대책위원회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협조를 거듭 당부"하기로 하는 등 정부가 테러방지법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연합 이천재 공동의장은 "수지 김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간첩사건을 조작해온 범죄집단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으로 권력을 강화하려 한다"며 정부의 법 제정 방침을 거세게 비난했다.

파병철회와 테러방지법 제정반대를 위한 사회인권단체들의 행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행동은 '이라크 파병에 대한 국민대토론회'를 대통령과 여야 각 정당 및 각계에 공개제안하고, 오는 6일 시청 앞 '2003 민중대회'에 이어 20일 광화문에서 '반전평화실현 인 간담회'를 대규모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테러방지법제정 반대공동행동은 다음 주 법사위에서 테러방지법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법률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을 적극화해나갈 계획이다. (임국현)



# 허울뿐인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비판

## 공공부문 비정규직 토론회, 구조조정 지침부터 바뀌어

“비정규직 차별 없앤다는 정부가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의 파업이 한 달을 넘긴 가운데, 4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실태 발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단식 4일째를 맞은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조합원 50여명이 참가해, 토론자로 참여한 노동부 관계자와 격론을 벌일 것이 예상됐으나 토론회 시작 30분전에 갑자기 불참을 통보해와 빈축을 샀다.

노동부 산하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IMF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대책이 실시되면서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채용했다.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이상엽 사무처장은 “공단 전체직원의 30%에 이르는 비정규직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고 계약도 대부분 자동 갱신돼 평균 2.5~3년씩 계속 일하고 있다”며 “임금은 정규직의 60%인데도 예산 상 인건비가 아닌 ‘일용잡급’으로 편성돼 인건비 상승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병원과 학교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공공영역에서도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공공병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97년 11.1%에서 올해 22.9%로 늘어났으며 특히 국립대 병원은 평균 30%가 넘었다. 국·공립교의 경우에도 비정규직 교원은 99년 3백명에서 2002년 1천85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대부분 기간제 교원과 시간강사인 이들은 방학 중 월급을 못 받으면서도 겸직은 금지 당해 방학 중 실업 상태에 놓여 있다.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하병수 사무국장은 “교육부는 전교조와 비정규직을 최소화하겠다고 합의했으면서도 법정정원수에 못 미치는 예산을 지역교육청에 분배해 비정규직 교사확대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01년 경상북도교육청은 “과원이 발생한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10%를 넘지 않을 경우 과원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이렇게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만연하고 있는 근본원인은 97년 이후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가 주도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인력감축과 정원동결이 공공부문 전체에 관철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필수불가결한 공공사업에서조차 정규직이 줄어들고 그 빈자리를 비정규직이 메웠다. 게다가 정부는 실태조사 미비를 이유로 대책수립을 미루고 있다. 2003년 노동부 국감자료에 의하면 기획예산처는 지난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시작했으나 결과 발표를 늦추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주진우 비정규사업실장은 “담당자들의 현황 이해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나선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용석 씨가 사망한지 한 달이

넘었지만 근로복지공단 측과 비정규직노조의 교섭은 사측인 근로복지공단의 고집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노조 측은 그동안 정규직화 방법으로 7급직제 신설을 요구했으나 최근에는 “비정규직 채용중단과 고용안정 보장”을 수정안으로 제시해 한걸음 물러섰다. 하지만 공단은 “비정규직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 씨 사후대책도 직원들만 접근할 수 있는 사내통신망에 유감의 뜻을 밝히는 정도로 마무리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강성준)

===== (1면에서 이어짐) 것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준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11기 한총련과 한총련합법화 범사회인대책위는 5일 오전 11시 연세대에서 아주대 조직사건 음모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던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은 4일 구속이 확정됐다. (배경내)

### 클릭! 인권정보자료

## 해외진출기업 감시활동 결산 - 『해외진출기업인면현황 백서』

지은이: 윤효원 외/ 엮은이: 국제민주연대/ 2003년 10월 / 302쪽

1995년부터 시작된 해외진출한국기업 감시운동 7년의 역사가 한 권의 백서로 묶여 나왔다. 자료집에는 현지조사와 기업감시를 통해 밝혀진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활동이 담겨 있다. 전세계적으로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도 활발해지고 있는 이 때, 이 자료집을 통해 우리는 ‘자본의 세계화’에 맞선 노동자의 눈물겨움과 세계화된 자본을 인권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고민을 읽을 수 있다.

자료집은 해외진출 한국기업이 자행하는 가장 큰 문제로 노동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든다.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를 자의적으로 해고하며, 노동시간을 초과하여 강제노동을 시키는 점 등이다. 질 낮은 음식을 제공하고,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는 등 노동조건이 열악함도 보고되고 있다. 최근 2~3년에는 베트남, 중남미 등 한국기업이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이 생기자, 현지 공장폐쇄와 이전 과정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등 새로운 양상의 인권침해도 이 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제민주연대는 1990년대 중반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섬유의류업체가 집약된 나라를 방문하여 현지 조사를 했고, 그 문제점을 국내외에 알려내는 활동을 전개했다. 또 한국이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이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준수와 개선에 초점을 맞춰 기업감시 활동을 전개했다. 그 활동의 결과가 고스란히 자료집에 정리되어 있다. 그밖에 다국적기업 규제를 위한 국제기구의 활동과 해외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다룬 글도 눈여겨볼 만하다. (최은아)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12월 6일(토)

제 247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백혈병환자들, 복제약 수입 비상

### 인도특허청, 노바티스에 글리벡 독점판매권 부여

백혈병 환자들이 또다시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됐다.

지난달 인도특허청이 인도 내 글리벡 독점판매권을 ‘인도 노바티스’사에 부여함에 따라 값싼 인도산 글리벡 복제약을 복용해온 전세계 백혈병 환자들이 더 이상 약을 구하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인도는 2005년으로 예정된 WTO 지적재산권협정(TRIPs)에 가입하기 전까지는 특허를 인정하지 않아 복제약의 생산이 가능한 나라이다.

한국의 백혈병 환자들은 환자 1인당 1년에 최소 3240만원(1일 네 알 기준)에 이르는 글리벡 약값을 감당하지 못해 인도에서 생산되는 값싼 복제약을 개인적으로 직수입해 왔다. 특히 급성골수성 백혈병 환자처럼 보험적용에서 제외된 환자들은 아직까지 안정성이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가격이 글리벡의 1/10인 2500원에 불과한 복제약을 복용할 수밖에 없었다. 백혈병환우회 권성기 사무국장은 “인도 내에서 복제약을 판매할 수 없게 된 제약회사들이 생산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 환자들이 약을 구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인도특허청의 결정이 한국 환자들의 목을 죄게 된 것은 한국정부가 초국적 제약자본에 대한 저항을 스스로 포기한 데서 비롯됐다. 글리벡의 국내 판매가 허용된 것은 지난 2001년 6월. 정부는 같은 해 11월 한 알 당 원료비가 845원 정도에 불과한 글리벡의 약값을 1만7862원으로 고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특허권을 무기로 공급을 일시 중단하며 약값 인상을 고집한 노바티스에 결국 굴복, 2002년 1월 약값을 2만3045원으로 결정해 환자들

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다.

이후 보험적용이 말기뿐 아니라 초·중기 환자에게까지 확대되고 본인부담률도 기존 30%에서 20%로 낮아졌으

나 약값은 그대로 유지됐다. 결국 국민 주머니를 털어 초국적기업인 노바티스의 이익을 보장한 꼴이 됐다.

이러 특허청마저도 지난 3월 보건의료단체들의 글리벡 강제실시 요구에 대해 “글리벡 공급이 현재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며 자기치료 목적의 수입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불허했다. 강제실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목적으로” 특허권자의 허락 (2면에 계속)

### 〈논평〉 ‘차라리 식물국회’를 바라게 하지 말라

정쟁(政爭)의 소용돌이 속에서 개점폐업 상태에 들어갔던 국회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제야 국회의원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시급한 민생현안들을 해결하겠구나 씽수를 들고 기뻐해야 할 판에, 가난하고 배제된 자들의 마음에는 먹구름이 깃든다. 정상화된 국회가 민생현안 처리는 고사하고 우리에게 칼을 빼드는 일부러 하지는 않을까? 이것이 지난 열흘간의 ‘식물국회’를 바라보며 이들이 오히려 가슴을 쓸어내렸던 바로 그 이유다.

아니나 다를까. 정상화를 코앞에 둔 지난 3일 국회의장과 4당 총무들은 농민들의 비탄을 뒤로 한 채 한 걸레 자유무역협정의 연내 처리부터 합의를 봤다. 파병동의안의 조속 처리를 주문하는 대통령의 요청을 국회가 얼씨구나 받아들이며 또 다시 지난 4월의 ‘참혹한 결정’을 되풀이할까 평화를 사랑하는 이들, 남의 생명 빼앗아 내 배 불릴 수 없다는 이들도 밤잠을 설친다.

어디 그뿐인가. 침략전쟁에 힘 보태는 파병 결정을 철회하면 될 것을, 피를 보고서도 기어이 점령군을 보내겠다고 고집하며 이 기회에 국정원의 힘 키우고 국민감시체계 강화하는 법안도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테러방지법안이 ‘대테러대책’이라는 띠를 두르고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할까 민주주의와 인권을 걱정하는 이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힘없는 자들의 마지막 의사표현 수단인 집회와 시위에 족쇄를 채우고 ‘허가권’을 틀어쥔 경찰 앞에 납작 엎드릴 것을 강요하는 집시법 개악안은 또 어떠한가. ‘날치기 처리’를 자신의 사명인 양 아는 국회의원들이 이 두 법안에 대해서도 저력을 발휘할까 많은 이들의 가슴은 까맣게 타서 숯덩이가 됐다.

국회가 행정부의 독단과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기는커녕 거기에 장단 맞추고 제 잇속만 차린다면, 그것을 어찌 대의제 기구라 부를 수 있을까. 청송 피감호자들의 피와 눈물로 얼룩진 야만의 사회보호법을 역사의 장에서 퇴출시키는 일, 가난한 이들이 차가운 거리로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사회보장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일, ‘인간사냥’의 탓에 결려든 이주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노동권을 되돌려주는 일,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고 진상을 규명하는 법률들을 시급히 제정하는 일. 국회가 눈 돌리고 귀 열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기다. 그것이 대의제 민주주의가 인정받을 수 있는 최저선이다.

많은 이들이 두 눈 부릅뜨고 국회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다. 국회가 2003년 오늘을 기어이 ‘겨울공화국’으로 만들어 놓을 것인지 아닌지를 말이다.



# 아주대 조직사건 연행자 6명 구속 확정 2명은 불구속...각계 공안탄압 규탄 목소리 확산

실체도 불분명한 이적단체를 구성했다는 혐의로 지난 3일 아주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8명이 연행되자, 공안탄압을 규탄하는 사회적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5일 오전 11시 연세대학교에서는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대책위원회」와 11기 한총련 주최로 '아주대학교 조직사건 조작음모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각계 대표자들은 "학생운동을 말살하고 국민을 기만하려 들고 있는 공안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구시대적 공안탄압을 일삼는 보안수사대를 해체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자들은 기자회견 후 공안탄압에 항의하는 서한을 경찰청에 전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3시 수원에 있는 경기도경 보안수사대 앞에서는 「아주대 조직사건 조작음모 분쇄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주최한 기자회견과 규탄집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경기민중연대(준),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당 경기지부 등 지역 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학생 약 50여명이 참여해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고 연행자 전원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의 결과는 이러한 외침을 참담히 외면한 것이었다. 주경태, 황영석 2명의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6명 모두 구속이 확정된 것. 또한 아주대 비상대책위 김모 집행위원장은 "경찰측 관계자로부터 이들 8명 외에

도 3명의 아주대 학생들을 더 연행해 갈 계획이며 이들 중 2명에게는 이미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태라고 전해들었다"고 말해, 사건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양승훈)

(1면에서 이어짐) 없이 제3자에게 이익을 생산하게 하거나 복제약을 수입할 수 있게 하는 조치다. 가난한 환자들에게는 강제실시가 마지막 희망이었으나, 이마저도 좌절된 것.

이에 대해 남희섭 변리사는 "특허청 결정은 환자 개개인이 알아서 복제약을 수입하라고 방치한 셈이었는데 결국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인도특허청의 이번 결정은 한국정부가 그랬듯이 노바티스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는 의혹이 지배적이다. 인도특허청은 1995년 이후 외국에서 특허 출원된 의약품에 대해서만 인도시장에서 독점판매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글리벡 특허는 93년 스위스에서 출원돼 애초부터 독점판매권 부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번 결정은 지금까지 15건의 독점판매권 신청이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의혹을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복제약을 생산해온 인도의 낮고(Natco), 선(Sun) 등 6개 제약회사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보건료단체인연합 등 8개 보건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글리벡 공대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국정부의 글리벡 강제 실시 결정을 다시 요구하고, 내년 1월 인도에서 열리는 세계사회포럼에 참가해 세계 사회단체들과 '인도 노바티스'사를 항의방문할 계획이다. (강성준)

## 2003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 때: 12월 8일(월) 10시-17시
- 곳: 국가인권위배움터2
-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노무현정부 1년 인권상황 총평가"
- "노동문제에 대한 법·제도적 대안과 사회적 비용지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안 모색"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12월 9일(화)  
제 247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이용석 씨 장례식 38일만에 치러

### 비정규직 철폐 뜻 받들고 '전국 노동자장'으로

"살아있음을 부끄럽게 만들어 놓고 가버린 사람아... 편히 잠드소서..."

10월 26일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외치며 분신한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동자 고(故) 이용석 씨의 장례식이 8일, '전국노동자장'으로 치러졌다. 노동조건 개선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한 근로복지공단 노사간 합의가 지난 6일 성사됨에 따라 고인이 운명했던 10월 31일로부터 38일이 지난 이날에서야 장례식을 치르게 된 것이다.

노동자장에는 7백여 명의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조원들을 비롯해 노동자와 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여하여 고인의 넋을 기렸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위원장은 조사를 통해 "고인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비정규직 차별이 당연시되고 비인간적인 삶이 강요되고 있다"며 "당신이 몸을 살았던 비장한 각오로 그 뜻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고경대 열사 아버지 강민조(현 유가협 회장) 씨는 "자식 잃은 부모는 평생 그 슬픔과 눈물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밝힌 뒤 참가자들에게 "죽어서 열사가 되지 말고 차라리 살아서 투사가 되자"고 호소했다.

고인의 형인 이병우 씨는 "홀어머니 남겨두고 떠난 동생아, 다음 세상에 다시 형제로 태어나 못 다 나눈 정 마저 나누자"며 흐느꼈다. 이병우 씨의 애절한 외침이 장내에 울려 퍼지자 고인의 유가족들의 오열과 노동자들의 흐느낌이 장내를 가득 채웠다. 모든 참가자들의 분향과 헌화가 끝난 후 고인의 영정은 5·18 묘역에 묻히기 위해 광주로 향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는

지난 6일 사측과 △고 이용석 비정규직 노조 광주전남본부장을 6급 정규직 명예직원으로 추중 △향후 비정규직 직원 확대 중단 △정규직 채용시 50%는 비정규직에서 채용 등에 합의했다. 이는 고 이용석 지부장이 분신한 다음날인 10월 27일부터 비정규직노조의 전면과

업, 정종우 위원장의 단식농성, 이달 1일 조합원 집단단식농성 등 힘겨운 투쟁을 통해 간신히 얻어낸 성과였다. 이러한 과정은 공단 측의 회유와 부당노동행위, 교섭회피와 불성실한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좌절을 겪어야만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고 이용석 지부장이 분신한 지 이날로 43일째, 그의 스러져간 외침은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희망, 하나의 불꽃이 되어 그 힘겨운 고통과 좌절을 이겨내게 해 주는 힘이 되어 줄 것이다. (임국현)

## "부안 주민의 인권과 삶을 파괴하지 마라"

### 인권단체, 경찰폭력 조사 보고서 발표·책임자 고발

평화인권연대, 다산인권센터, 원불교 인권위원회 등 27개 인권단체들은 8일, 경찰력에 의한 부안 주민의 인권 침해를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폭력 책임자들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들은 경찰력의 과도한 진압이 "부안 주민들의 인권과 부안 공동체의 총체적인 파괴를 불러 일으켰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에 부안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단체들은 부안에서 벌어진 기존의 경찰 폭력진압 자료들을 취합하고, 새롭게 209명의 군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대면조사를 실시, 이번 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집회와 시위 진압과정에서 경찰의 과도한 폭력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7명을 포함한 약 5백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들 중 1/3 정도는 얼굴과 머리 등에 부상을 당했는데,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조사결과가 '경찰 측이 시위대를 향해 과도한 폭력을 휘둘렀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 활동가는

"현재 부안에는 50여개 중대 약 5천여 명의 경찰이 상주하고 있으며 자의적인 검문이 일상화되고 통행이 제한되는 등 기본권 제약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 시위자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여경을 동반시키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진압과 연행 과정 등에서 수시로 언어·신체적 성폭력을 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더욱이 지속적으로 핵폐기장 반대 시위에 참여했던 부안 군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고, 경찰력 주둔으로 관광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군민들 역시 피해 당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경찰 폭력을 정당화하는 경찰 측의 보고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청은 지난달 말 '부안 지역 시위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시위대의 폭력성은 부각시키는 한편 '경찰은 충분한 교양을 실시하고 내부의 원칙을 준수하기 때문에 핵폐기장이 주장하는 폭력 진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경찰의 폭력 진압을 입증할 수 있는 증언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개선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경찰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2면에 계속)

## 열린우리당, 사회보호법 폐지법안 발의

### 당론으로 확정...치료감호제도 개선 법률안도 함께 추진

열린우리당이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9월 1일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이 사회보호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이후 두 번째다.

열린우리당(아래 열우당)은 지난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사회보호법 폐지와 치료보호법 제정을 당론으로 확정하는데 이어 5일 열우당 의원 48인과 민주당 의원 2인 등 총 50인의 발의로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열우당은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 별도 입법이 불가피한 치료감호제도와 관련해, 현행 구금위주의 치료감호를 정신질환 범죄자들에 대한 치료와 보호 위주로 개선한 '치료보호법' 제정 법률안을 동시에 제출했다.

두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최용규 의원은 "사회보호법에 대해서는 법관들 역시 이중처벌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두 법안은 "내년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9월 당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사회보호법 폐지를 결의한 한나라당도 사회보호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

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사회보호법 폐지는 이미 당론으로 확정된 거나 진배없다. 다만 형식적인 절차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안이 다음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등 사회보호법 폐지와 관련한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이러한 정치권의 행보에 대해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논평을 발표하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대위는 "사회보호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인권침해법"이라며 "열린우리당의 당론 확정과 한나라당의 전향적인 움직임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바"라고 밝혔다. 또한 "사회보호법 폐지와 함께 발의된 '치료보호법'의 입법 청원도 높이 평가한다"고 평했다.

한편 지난 9월 정기국회에 사회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던 법무부는 장관 자문기구인 정책위원회 내에서 사회보호법을 둘러싼 존치 및 폐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사회보호법에 대한 입장을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다. (유해정)



### ◎ 고근에의 인권이야기 ◎ 지하철 단상

지하철에서 장애인·노약자 자리를 비워주는 젊은이들이 주인공으로 한 모 광고가 텔레비전에 나온 이후 확실히 장애인·노약자 자리는 그 정해진 주인에게 돌아가고 있다. 다 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로 인해 노약자 자리에 앉아 눈을 말뚱말뚱 뜨고 나이든 어른을 쳐다보는 뻔뻔하고 민망한 젊은이(?)들이 줄어든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보다 더 국민적 실천을 불러온 광고가 있을까 싶을 정도다.

그런데 지하철에서 흔하게 목격되는 장면 중 하나는 장애인·노약자 자리를 찾아서 흔들리는 지하철에서 발걸음을 떼는 나이든 어른들과 나머지 긴 의자에는 젊은 사람들만 모여 앉아 있는 광경이다. 서 있는 노인이 긴 의자에 앉은 사람들에게 시선이라도 보내면 '노약자 자리로 가지 왜?' 하는 듯이 노인을 외면하는 모습. 더욱이 노약자 자리에서 노인이 호통이라도 치는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의 표정은 그야말로 다양하게 변한다. 이런 표정 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밀려든다. 눈에 보이는 '공경'과 보이지 않는 이 '거리감' 사이에서 느끼는 씁쓸함.

노약자 지정석을 마련하는 배려는 할 수 있지만, '어느 곳에나 앉을 수 있다'는 노인에 대한 이해는 점점 멀어지는 듯하다. 문득 그 텔레비전 광고는 목적인 공익성과 상반되게 부정적인 효과, 바로 '노인과의 분리'를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 든다.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장애인·노약자 석에 나이든 어른만 모여 앉아 있고, 나머지 자리에는 그보다 젊은 사람들과 아이들이 모여 앉아 있는 모습은 분명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다. 노인과 그 외 사람들의 단절된 일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전체 인구 중 65세 노인 인구가 7%를 넘어선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노령 인구는 증가 추세이지만, 노인을 바라보는 그보다 나이 적은 사람들의 이해는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노인의 노동이나 노인의 여가, 건강, 교육 등에 대한 관심은 아직 노인이 아닌 이들의 관심 대상이 아니다. 개인과 가족에 맡겨진 노인의 문제, 아니 '노인에 관하여'는 모두가 함께 논의할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셈이다. '소외된 노인'은 가끔씩 일간지 귀퉁이를 장식하는 기사가 될 수는 있어도 사회적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그 텔레비전 광고는 어쨌든 노인을 생각하게 한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하지만 노인에 대한 인식 자체를 긍정적으로 만들었는지는 계속 드는 의문이다. 노인의 '존재'를 잊게 하는 역효과라고 할까?

노인을 바라볼 때 무엇보다 '그들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노인 복지 체계가 갖추어져야 하고 그 속에서 노인이 자신 있게 일하고, 여유를 가지고 건강하게 삶을 영위해야 한다고 말한다. 당연한 말쑤! 하지만 우선은 '아직 노인이 아닌 사람들'과 노인을 분리하는 우리의 일상부터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고근에 남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입니다.)

###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소위권

경제5단체, 집시법 개악 촉구 눈총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를 기습 통과할 위기는 일단 넘겼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19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끊임없는 위헌 논란과 법사위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을 의식한 때문인지, 전체회의는 이 개정안을 법안심사제2소위에 넘겨 추가 심의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의 논의 과정에서 오히려 집시법을 더욱 개악한 안이 마련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과 천정배 의원은 적극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반면,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불법폭력시위를 엄단하기 위해서는 법안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집시법의 추가적인 개악을 주문했다. 또 이날 회의에는 법사위 전문위원실이 마련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되었는데, 그 중에는 함 의원의 주문처럼 집시법의 추가적인 개악을 요청하는 의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심사제2소위는 오는 10일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집시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오후 전국경제연합회 등 경제5단체 부회장은 서울 송파구의 국립경찰병원을 찾아 부상당한 전·의경을 위문하는 과정에서 '현행 집시법이 시위대만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거나 집시법 규제가 약하다'는 등의 발언을 통해 집시법의 조속한 개악을 공공연히 촉구했다.

이러한 압박용 경제5단체의 행보에 대해 전국민중연대 주체준 조직국장은 "손배·가압류 등을 통해 노동자를 식물노동자로, 노동조합을 식물노동조합으로 만든 장본인들이 노동자들의 분노로 촉발된 집회와 시위를 가로막기 위해 법을 개악하고자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배경내)

(이전면에서 이어짐) 기자회견에 이어 단체들은 부안 군민들에 대한 폭행, 가혹행위, 불법체포 등을 이유로 행정자치부장관, 경찰청장, 전북 지방 경찰청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또 9일에는 부안 주민들의 인권 침해상황에 대한 대안 제시를 촉구하는 질의서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진영)

### ◎ 인권이야기 필진 교체 ◎

오늘부터 '인권이야기'가 새로운 필자들과 함께 찾아갑니다.

- 고근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조이여울 (<일다> 편집장)
- 장호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 교수)
- 오두희 (평화유랑단 '평화바람' 단원)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12월 10일(수)

제 247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단속추방 잔혹성 도를 넘었다

### 생사 위기도 외면...새벽 기습에 합법체류자도 일단 연행

9일 단속추방에 내몰려 생을 마감한 두 이주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또다시 전해졌다.

이날 오전 5시 20분경 서울 종로구 혜화교가 인근 도로변에서 재중동포 김모 씨가 동사한 채로 발견됐다. 김 씨는 이날 새벽 119와 112에 전화를 걸어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낮 12시경, 경기도 남양주시 성생공단에서도 단속을 피해 혼자 숨어있던 방글라데시인 자카리아 씨가 심장마비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부터 절망의 나락으로 내몰린 이주노동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고 있는 한편, 생사를 오가는 고통 속에서도 아무런 도움의 손길도 얻지 못한 채 죽어나가는 이들도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단속추방 과정의 잔혹성도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달에 이어 지난 8일부터 2차 합동단속에 들어갔다. 1차 단속에서 합동단속반은 서울 성수동과 경기도 일산, 마석 등 조직화된 노동자들이 대거 밀집해 있는 지역을 표적 단속한 데 이어 여기저기서 목표량을 채우기 위한 마구잡이 단속에 나서 어이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줄을 잇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명동성당 농성을 지원하고 있는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남규 활동가는 "의정부에서는 새벽녘에 경찰이 밖에서 자물쇠까지 절단하고 들어가 잠자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잡아간 일이 있었고, 제조업 종사자들은 단속을 유예해준다는 말만 믿고 일하던 노동자들이 공장 앞이나 기숙사에서 대거 연행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심

지어 임금체불 문제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려 가던 이주노동자들이 인근 전철역에서 대기하고 있던 단속반의 그물망에 걸려든 경우도 있었다.

경기도 안산 원곡동에서는 지난 4일 단속반원들이 상점에 들이닥쳐 물건을 고르던 이주노동자들을 승합차에 실어 가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게다가 신분확인 절차도 없이 마구잡이로 이주노동자들을 연행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합법체류 자격을 획득

한 이들에게 무차별 연행되고 있다. 일단 모두 잡아들였다가 추후 신분이 확인되면 풀어주는 방식인 셈이다. '신분을 어떻게 확인해 불법체류자만 단속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출입국관리소의 한 관계자는 "겉모습만 보면 불법체류자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다"고 했다. 다가가 슬그머니 전산조회로 말을 돌렸다.

실사 신분확인절차를 거치더라도 사업주가 신분증을 압류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이들이나 신고된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 와 있는 이들도 '일단 연행'의 대상이 된다.

김남규 활동가는 "이런 잔인한 단속은 내년의 고용허가제 시행을 위해 자진출국을 유도하려는 위협용"이라며 "이 모든 상황의 근본 원인인 고용허가제를 폐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경내)

## "간헐 몸이라도 환자는 환자로 대우해야"

### 국가인권위,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보장 청문회 열어

9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자리에서 지난 8월 청송 제2보호감호소에서 출소한 조석영 씨는 "아픈 걸 죄에 대한 응보로 여기는 시선을 감내한 채 몇 시간 동안이나 포승에 묶이고 수감자 채워진 상태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느냐"며 수용자 건강권을 바라보는 시선에 의문을 제기했다. 의사와의 충분한 상담은 기대조차 하기 힘들고 약물만 과다 투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한 조 씨는 "수용자의 재활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도 한 건강권 문제를 구금시설에서 적극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도 검찰이나 교정직원이 수용자를 구금하는 것 자체만을 중요한 목적으로 여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자유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건강권까지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수용자의 건강권을 제약하는 또 다른 주요 요인으로 시설내 상주 의료인력의 부족과 예산부족 등의 문제가 거둬 제기되자, 법무부 교정국의 김용석 관리과장은 "내년에 수용자의 건강권 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증액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객석에 있던 인권운동사랑방 유해정 상임활동가는 "법무부가 몇 년째 실제 추진도 안될 계획들만 되풀이 내놓고 있다"고 비판한 뒤 "고민과 관심만 있으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구체적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했다. 유 활동가는 수용자 자가진단 교육이나 보건소 등 지역 의료사회와의 연계망 구축, 전문가위원회 설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나아가 점차적으로 "교도소를 지역사회에 개방하면서 수용자의 인권 문제를 둘러싼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진영)



#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3년 10대 인권소식 (1)

10월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2003년 10대 인권소식'을 발표합니다. <인권하루소식>은 독자와 인권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올 한 해 동안 발생한 주요 인권사건(전체 59문항)에 대해 12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설문조사를 벌였으며, 이번 조사에는 모두 97명의 독자와 인권활동가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편집자주)

## 1. 네이스 반대투쟁,

### 정보인권 수호 대장정 닷 올라 (85.6%)

올 한해 뜨겁게 전개됐던 네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반대투쟁은 전자화된 국민감시시스템에 경종을 울리며 우리 사회에 '정보인권'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안겼다. 정보인권수호를 위한 이 대장정은 지난 3월 교육부가 국민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네이스를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에 2만 여명의 학부모, 학생들이 개인정보 입력 동의거부서를 교육부에 전달했고, 교사들은 인증·입력 거부로 맞섰다. 인권사회단체들도 자기정보통제권 침해가 불려올 감시통제사회의 도래를 경고하며 네이스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

뒤이어 5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프라이버시권 침해 요소를 지적하며 개인정보영역의 삭제를 권고, 네이스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인권위 권고를 존중하겠다는 애초 약속을 반복, 6월 1일 네이스 시행 여부를 개별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하며 교육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해 개인정보영역을 재검토하겠다는, 한참 뒷걸음질친 시행지침을 내놓았다.

이를 계기로 네이스 반대 투쟁은 사회전반으로 더욱 확산됐다. 졸업생들은 손배소송을 통해 개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국가의 위법한 '정보도독질'에 저항했고, 인권활동가들은 단식농성으로 네이스가 중대한 인권침해 시스템임을 폭로했다. 전교조는 연가집회를 단행했다. 7월부터는 48개 인권사회단체들이 네이스반대공대위를 구성해 결집된 투쟁을 시작했다. 공대위는 교육정보화위원회에 참가해 잘못된 정부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한편, 촛불집회와 서명운동 등을 통해 네이스의 반인권성을 국민들과 학생들에게 알려나갔다.

12월 15일로 예정된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은 네이스 투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새로운 전기가 되겠지만,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학교 담을 넘는 한 반대의 불길은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네이스 반대투쟁은 국가와 자본에 의해 추진되는 전자국민감시시스템에 맞선 대장정의 서막이었다.

## 2. 미 이라크 대량학살전 개시

### ...한국군, 침략군 일원 자처 (83.5%)

2003년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침략을 감행, 인권과 평화를 죽음의 수렁에 몰아넣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침략전쟁을 부인한 헌법조차 묵살하며 침략군의 일원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

3월 20일 미국은 국내·외 반전평화 염원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이라크에 대한 대량 학살전을 시작했다. 전 세계는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외침으로 들썩거렸고, 국내에서도 이러한 뜻에 동조하는 시민·노동자·학생들의 한국군 파병 반대 시위와 농성이 도심과 국회 앞을 뜨겁게 달궜다. 이라크와 요르단 현지에서 평화운동가들이 보여준 뜨거운 국제연대의 정신은 국내 반전 분위기를 촉진하는 불씨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른바 '국익'과 '안보' 논리를 앞세우며 파병방침을 고수했고, 국회도 4월 2일 결국 파병안을 통과시키고야 말았다. '이라크인의 절반이 어린이'라는 현실을 알면서도 한국은 '그들의 피'를 선택한 것이었다.

4월 10일 이미 12년간의 경제봉쇄로 쇠약해져 있던 이라크 바그다드는 전쟁 시작 3주만에 미국에 의해 함락됐고, 많은 민간인 사상자와 폐허가 된 도시만이 남겨졌다. 그러나 다시금 이라크 민중들의 게릴라 식 저항에 직면한 미군은 세계 각국에 추가 파병을 요청하고 나섰다. 9월 9일 한국 정부도 미국의 전투병 파병 요청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속속 이어지는 다른 나라들의 파병 거부 혹은 철회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나 홀로 파병'을 고수하자, 10월 31일 4백 개 남짓한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을 중심으로 파병반대 운동이 다시금 점화됐다. 이 밖에도 11월 21일 휴가 나온 이등병 강철민 씨가 자대 복귀를 거부하고 22일 동화작가 박기범 씨가 단식농성을 진행하는 등 파병 반대 움직임은 계속 퍼져나갔다. 마침내 11월 30일 최초로 이라크 현지 한국 노동자 피격 사건이 발생하자, 파병 결정을 철회하라는 요구는 더욱 강하게 터져 나왔다.

그러나 12월 3일 정부는 파병동의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이라크인과 한국민의 안전을 모두 위협하는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기를 재촉하고 있다.

## 3. 반핵 깃발 아래 하나된 부안,

### 정부 밀실행정에 경종 (80.4%)

90년 안면도, 94년 굴업도에 이어 2003년에는 전북 부안에서 반핵 깃발이 휘날렸다. 7월 11일, 바로 전날까지 핵폐기장 반대입장을 밝혔던 김종규 부안군수가 핵폐기장 유치를 기습 신청하고 24일 산업자원부가 위도를 최종 후보지로 발표하자, 군수의 독단과 정부의 밀실행정에 분노한 주민들이 생업마저 포기한 채 '핵폐기장 백지화'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7월 26일 주민들이 스스로 '반핵민주광장'이라 이름 붙인 부안수협 앞 광장에서 켜진 촛불은 한여름 거센 태풍에도 꺼

#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3년 10대 인권소식 (2)

지지 않고 매일 타올랐다. 주민들의 분노는 차량시위, 고속도로 점거시위, 해상시위로 점점 확장됐고 친목회, 체육회 등 각종 주민 모임에서도 지지성명을 발표해 뒤를 받쳤다. 8월 25일부터는 초중고 학생들까지 집단 등교거부에 나섰다. 군의회마저 '군수 사퇴 권고안'을 통과시키고 등원을 거부하는 등 부안군 전체가 반핵 깃발 아래 하나가 됐다. 게다가 위도 내 활성단층의 존재와 해수유입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정부의 졸속 지질조사에 대한 비판도 거세게 일었다.

완강한 저항에 맞닥뜨린 정부는 10월 3일 주민대책위 측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기구 구성에 합의했지만, 속내를 바꾸지는 않았다. 대책위는 "연내 주민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르자"는 최병모 변호사의 중재안을 받아들인 데 반해 정부는 "찬반토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이를 거부해 빈축을 샀다. 대화기구가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한 채 한달 넘게 '시간 끌기'를 계속하자 참다못한 주민들이 11월 17일 부안군청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정부는 인구 2만3천의 부안 읍내에 경찰 8천여 명을 투입, 평화로운 촛불집회마저 원천봉쇄하고 항의하는 주민들을 폭행했다.

12월 1일 현재 구속 31명, 불구속 76명 등 총 316명이 사법처리됐고 3명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500여명이 부상당했다. 하지만 "위험한 핵에너지만 고집 말고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라"는 주민들의 요구는 식을 줄 모른다.

## 4. 송두울 37년만의 귀국,

### 유린당한 양심 (78.4%)

분단과 냉전, 군사독재에 의해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던 재독학자 송두울 교수의 귀국이 37년만에 이루어졌다.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던 해외 민주인사들의 묶인 발을 풀고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인권사회단체들이 일구어낸 작은 결실이었다. 특히 송 교수는 해외 민주인사의 대명사로 국내에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올 9월 그의 귀국은 그 자체로 반민주와 반인권으로 점철됐던 과거의 매듭을 한 가닥 풀 수 있는 역사적인 계기였다.

그러나 공안세력은 이러한 역사의 진보를 그저 보고만 있지 않았다. 국정원은 송 교수를 재물 삼아 국가보안법의 건재를 과시했고, 이미 폐기처분된 전향공작을 교묘하게 부활시켰으며, '거물급 간첩'을 만들기 위해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서슴지 않았다. 검찰은 한술 더 떠 수사과정에 성실히 응해 왔던 송 교수의 완전한 전향을 유도할 목적으로 10월 22일 아예 그를 구속했고, 더욱 철저한 반성과 자백을 요구하며 한 달여만에 끝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결정했다. 조중동 등 수구언론들은 송 교수를 아예 간첩으로 낙인찍고, '전향 없이는 처벌'뿐이라는 입맛에 맞는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설파했다.

이 과정에서 양심·사상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등 송 교수 개인의 인권은 무참히 유린당했으며, 그의 귀국을 계

기로 화해와 평화, 인권의 시대로 한 걸음 나아가길 희망했던 국민들의 바람은 여지없이 짓밟혔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사법처리'는 절대 반대한다'는 인권단체 등 각계각층의 요구는 처음부터 무시됐다.

송 교수에 대한 '빨갱이 사냥'은 국가보안법의 끈질긴 생명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고, 노무현 참여정부의 시대에도 공안세력이 화려하게 활개를 칠 수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증명했다.

## 5. '2003년 전태일들', 몸동아리 내던져

### 노동탄압에 항거 (74.2%)

새해 벽두, 처참한 노동탄압의 현실에 항거하며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가 자신의 몸을 불살라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었다.

10월에 들어와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과 객재규 조합원, 세원테크의 이해남 위원장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신종노조탄압의 대명사로 떠오른 손배·가압류를 죽음으로 고발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이용석 비정규직노조 광주전남본부장은 저임금, 장시간노동, 만성적 고용불안에 인격적인 모멸까지 감내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자신의 몸을 태워 증언했다. 어느 한 해고 노동자는 '1970년 전태일의 유서와 2003년의 유서가 같아야 하는' 이 참혹한 현실에 절규했다.

이미 1998년 구조조정 이후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려왔다. 그러나 그 시절을 간신히 견뎌낸 노동자들에게 찾아온 것은 노동현장에서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공권력의 일방적인 사용자 편들기, 용역강제를 동원한 노조 파괴였다. 정부가 앞장서서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반노동, 친자본 정책이었다.

새 정부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이라는 공약마저 저버린 채 '해고는 보다 쉽게, 파업은 보다 어렵게'를 목표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사용자 대항권의 강화를 중심 내용으로 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강행하고 있으며, 노동운동을 적대시하는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거기에 더 나아가 경제자유구역, 투자자유협정을 서둘러 안착시키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더욱 암울한 노동권의 침해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전면적인 노동권 부정의 상황에서 표출된 노동자들의 분노에 대해 정부는 되레 강경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이 내년에 다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암울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 6. 터널 속 이주노동자...강제추방에

### '노예노동제'마저 유지 (55.7%)

지난해 3월 발표된 '불법체류 방지 종합대책'의 공포는 올해



###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3년 10대 인권소식 (3)

까지 이어져 이주노동자들을 위협했다. 강제출국 조치가 올해 1월과 3월 잇따라 유예되면서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실낱같은 희망을 안겨다 주었지만 이도 잠시, 올해 7월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병행 실시를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 법의 특례조항에 따라 국내에 체류중인 40여만명 이주노동자 중 체류기간이 4년이 넘은 20여만 명을 비롯해 정부의 '선택적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된 이주노동자들은 '단속'과 '추방'의 표적이 되었다. 11월 15일 강제출국 시한이 임박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은 '추방' 대신 '죽음'을 선택했다. 11월 11일 스리랑카 출신 다르카 씨가 지하철 선로로 뛰어 내린 데 이어 이튿날 방글라데시 출신 비루 씨도 일하던 공장 안에서 목을 땀다. 러시아 출신 안드레이 씨는 귀향선을 타고 가다 바다로 몸을 던졌고, 우즈베키스탄 출신 브르훈 씨도 인천의 한 공장 화장실에서 목을 매는 등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항거하는 죽음이 계속됐다. 마구잡이 단속과정에서 인권을 유린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이대로 내쫓길 수는 없다"는 이주노동자들은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며 11월 12일부터 경남, 마석, 명동성당, 성공회서울대성당 등 전국 곳곳에서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개의치 않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간사냥'의 고삐를 죄어나가고 있어 이주노동자 문제는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극한의 대립'으로 치달고 있다.

더욱이 끔찍한 사실은 7월 통과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현대판 노예제도'라 불리는 산업연수생제도를 그대로 유지시킨 것은 물론이고, 새로 도입된 고용허가제 역시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이주노동자들은 지금 감잡한 터널 속을 지나고 있다.

### 7. 농민 이경해 씨의 죽음, 자본의 탐욕을 찌르다 (48.5%)

간신히 버텨내고 있는 농민들의 힘겹고 가난한 삶마저 자본의 주머니를 불리기 위해 짓밟으려는 WTO 5차 각료회의가 끝내 한 농민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WTO가 농민을 죽인다." 9월 10일,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WTO 5차 각료회의(아래 칸쿤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참가한 한국 농민 이경해 씨가 이 같은 선전물을 가슴에 단 채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이 쳐 놓은 바리케이드 위에서 지니고 있던 칼로 자신의 심장을 찔렀다. 자본의 탐욕이 낳은 안타까운 죽음이였다.

당시 칸쿤회의에서는 새로운 무역체제를 출범시키기 위한 여러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수출보조금과 국내보조(추곡수매제 등)의 감축 등을 목표로 하

는 농업협정. 이는 거대 농업자본과 경쟁해야 하는 제3세계 농업의 몰락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농민들은 물론 빈국과 개발도상국마저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당연했다.

이경해 씨의 죽음으로 회의장 밖에서의 투쟁이 가열되고, '투자자유화협정'을 목표로 했던 '싱가포르 이슈' 협상에 대한 이견이 평행선을 달리자, 회의 마지막날 의장은 합의 실패를 선언하고 회의를 종료해 최종선언문 도출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전면적인 농업개방으로 농민을 말살시키려던 비인간적인 세계화가 또 다시 좌절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곧 농민들에게 희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칸쿤회의는 결렬되었지만 WTO 협상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칸쿤에서 중간 점검을 했던 도하계 발의제(DDA) 협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오는 15일 제네바에서 고위급 일반이사회가 개최돼 협상 재개 방안을 본격 논의하게 된다. 또한 이미 국내에서도 정부의 기만적인 농업정책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 농산물 개방 정책은 농민들의 목을 조이고 있다.

쌓여 가는 농가부채와 개방정책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 농민들은 한해 100여명이 넘게 농약을 마시고 죽음의 길을 택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농업개방정책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거부하고 농가부채를 해결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이경해 씨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 8. 국정원이 쏘아올린 감시위성, 테러방지법 재추진 (47.4%)

국가정보원의 권한 강화 음모, '테러방지법' 입법 시도가 2003년 하반기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9월 국정원은 지난해 제정이 무산된 테러방지법의 수정안을 다시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어지자,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주요 3당의원들은 공동으로 새로운 수정안을 발의하고 11월 14일 정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이안을 통과시켰다. 독소조항 중 일부가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행정기관들의 활동을 기획·조정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반인권, 반민주적 악법이라는 본질은 그대로 유지됐다. '테러'라는 모호한 개념에 기대어 국정원이 군 특수부대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는가 하면, 외국인에 대한 사찰과 출입국 규제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의 허가 없이 가능한 감청 권한이 확대된 것도 물론이다.

이에 2001년부터 테러방지법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싸웠던 인권사회단체들은 2003년에도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을 구성하고 입법 재추진을 막기 위해 나섰다. 9월 30일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개최해 테러방지법 반대 운동의 포문을 열었고, 10월과 11월에는 국회의원들을 만나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알렸다. 국제엠네스티, 유엔난민고등판무

###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3년 10대 인권소식 (4)

### 10. 집시법 개악 위기 ... '집회금지법' 비난 확산 (42.3%)

'외교공관 1백미터 이내 집회 전면금지'는 위헌.'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명백한 위헌성이 전제되지 않았는데도 외교공관 주변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결정했다. 미대사관과 같은 외교공관 앞은 물론이고, 외교공관의 유치를 통해 집회가 봉쇄돼 온 집회·시위의 성역들을 되찾게 만든, 오랜 가뭄 끝의 단비 같은 결정이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오래가지 않아 배신으로 반전됐다. 11월 들어 노동자대회와 부안 등에서 폭력시위가 등장하자 대통령은 그러한 폭력시위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찾아보려는 커녕 불법시위 엄단 지시를 내렸다. 이 기회를 놓칠세라 평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 개정을 호시탐탐 노려왔던 경찰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적극적인 로비를 펼쳤다. 행정위 법안심사소위는 공청회 한번 없이 11월 18일 경찰청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개정안을 작성하였고, 그 이튿날 행정위 전체회의에서 다수결로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 법률에서도 지나치게 많은 집회 제한·금지조항으로 문제가 빚어지고 있는 현실은 외면한 채, △주요도로 행진 금지 △학교나 군사시설 주변에서 집회 금지 △폭력시위를 이유로 동일 목적의 집회 금지 △침묵시위만 가능할 정도의 소음규제 △사복경찰관의 집회 출입 허용 등의 독소조항을 대거 강화하여 사실상의 '집회금지법'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더욱이 집회의 내용과 형식, 방법마저 경찰이 쥐락펴락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찰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인권단체들과 헌법학자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변협이 반대 의견을 내고, 국회 내에서도 위헌 논란이 불거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경제5단체들은 집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고 나선 반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밀실입법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금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 밖에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 분신과 손배·가압류 쟁점화(38.1%)와 △사회보호법 폐지 투쟁(38.1%)은 아쉽게도 공동 11위를 차지하면서 그 뒤를 이었다. 또 △이어진 장애인 추락 참사(29.9%)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발의(29.9%) △헌법재판소 외교공관 100m 집회 전면금지 위헌 결정(26.8%) △고 김옥분 씨(수지김) 가족 국가배상판결(25.8%) △대구지하철 참사(20.6%) △각종 집회에서의 경찰폭력 기승(19.6%) △백혈병 환자들 죽음으로 내몰린 클리백 약값 결정(17.5%) 등이 올해 주목을 받은 주요 인권소식이다.

관실,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협 등도 잇따라 국회에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국회 정보위에서 법안이 통과된 11월 14일에는 인권활동가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를 외치다 경찰에 연행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11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테러방지법안은 위헌적이라는 반대 의견이 많이 제기됨에 따라 일단 급행 통과를 위한 담판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이라크 현지 한국인 피격 사건 이후 정부가 12월 2일 테러방지법 제정을 조속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혀, 제2의 보안법 출현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 8. 잇단 생계형 자살, 빈곤이 부른 손짓 (47.4%)

'카드빚과 은행빚에 시달리던 주부가 아이들과 함께 투신 자살', '생활고 비관으로 일가족 4명 음독자살', '70대 할머니, 생활고 못 견뎌 장에손녀 살해' 등 생계형 자살과 사망 소식이 올해 연일 신문지상을 오르내렸다.

올 들어 생활고나 빚에 내몰려 자살을 선택한 사람은 하루 평균 3명꼴.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에는 생활고, 사업 실패에 따른 자살이 786건이었지만, 2001년 844건, 2002년 968건 등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으며, 올 7월까지만 해도 이미 408명이 목숨을 끊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생계형 자살이 잇따르는 요인에는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사회보장 체계의 허술함이 자리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의 바람막이가 되어주지 못한 현실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게다가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대부분의 서민들은 실업 혹은 불안정한 고용상태가 지속되면서 먹고사는 것만으로도 빚을 지게 되고, 여차해서 보증을 잘못 섰거나 환자가 생겨 큰돈을 끌어다 쓰면, 막대한 채무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계형 채무는 또 다른 빚을 낳게 되고, 악순환을 끊고 싶은 유혹은 이들을 죽음 외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몬다. 이는 분명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사회적 타살'이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올 최저생계비 35만6천여원에서 단지 1만원 가량 인상한 36만8223원으로 발표했다. 또한 사회복지예산은 올해 11조1300억원에서 9.2%가 증가한 12조1600억여원에 불과하다. 2년 전 겨울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주장하며 노상농성을 전개하다 참담한 외면 끝에 결국 자살로써 생을 마감한 최옥란 씨의 죽음으로부터 우리 사회는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셈이다. 당시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얼음장 최저생계비'에 기대 간신히 숨을 쉬고 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죽은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한다?

### 인권활동가들, 노 대통령 축사에 항의 침묵시위

"한국에서 세계인권선언은 죽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아래 '선언')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인권활동가들이 '선언'의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세계인권선언 55주년 기념식에 노무현 대통령이 축사차 참석했다. 오후 3시경 대통령이 연단에 오르자, 평화인권연대, 장애인노동권연대 등 '노동기본권 탄압 중단 및 이라크 파병철회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소속 인권활동가 15명이 좌석 중앙에 앉아 있다 일제히 일어섰다. 이들은 "근조 인권"에다 △이라크 파병계획 철회 △테러방지법 제정 철회 △집시법 개악 중단 △노동인권 보장 △부안 경찰폭력 책임자 처벌 등 요구사항을 덧붙인 손수건을 펼쳐 들고 침묵 항의시위를 벌였다. 시위가 시작되자마자 청와대 경호원들이 손수건을 빼앗으며 몸싸움을 벌이는 등 제지에 나섰으나, 시위는 축사가 끝날 때까지 20여분 동안 계속됐다.

그러자 노 대통령은 준비된 원고 대신 즉석연설을 시작해 "몇 분들이 제게 호소하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다"면서 "국가(경쟁사회에서 불리한 여건에 처한 약자들) 돕고 해결해 줘야 인권국가지 인권의 사각지대를 구경만 하는 것이 인권국가냐, 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내 말보다는 저의 실천이 모자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비판하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말고 가자"면서 달래기에 급급했다.

평화인권연대 손상열 상임활동가는 "오늘의 시위는 세계인권선언을 기념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지없이 파괴되고 있는 이 땅의 인권현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산적한 인권문제를 나서서 해결해야 할 대통령이 공권력을 앞세워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범용 상임활동가는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인권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야지 시종일관 어려운 문제니까 이해해 달라라는 식이었다"고 꼬집었다.

이날 평화유랑단 '평화바람' 단원 5명도 노 대통령 도착시각에 맞춰 세종

문화회관 주위에 늘어서 "인권을 죽여 국권을 세우라?", "이라크에 우리 군인들을 보내지 마세요"라고 쓴 피켓을 들고 각각 1인 시위를 벌였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 '선언'의 각 조항이 하나씩 낭독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와중에도 행사장 인근 감리교회관에서 단속추방에 저항해 농성을 벌이던 이주노동자 150여명 중 13명이 연행돼 "비판하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대통령의 발언을 무색케 했다. 이들은 지난달 14일부터 경남의국인노동자상담소에서 25일간 농성하다 지난 9일 상경, 감리교회관이 입주한 동화면세점 건물 현관에서 이날 플래카드를 들고 침묵시위를 벌이다 건물 뒷문으로 들어온 사복경찰과 출입국관리소 직원 40여명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강성준)

## 집시법 개악안·테러방지법안, 국회 통과 임박

### 법사위 심사소위 통과...오늘 전체회의 상정

집시법 개악안과 테러방지법안이 별다른 수정 없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두 법안이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본회의까지 쾌속질주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법안심사제2소위(아래 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어 행정자치위원회 통과안에서 일부만 수정한 채 집시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폭력시위 시 남는 기간의 당해 집회와 동일 목적의 다른 집회를 금지하도록 한 조항을 '남는 기간의 당해 집회'만 금지하도록 하고 △사복경찰관의 집회장 내 출입 및 지시 허용 조항을 삭제했다. 집회신고 제출기간은 '36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서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으로 연장됐다.

하지만 △학교·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 △교통신용 장애 시 도심행진 금지 △소음기준 초과 시 확성기 사용금지

및 처벌 등 주요 독소조항들은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그대로 통과됐다.

이날 테러방지법안도 일부 조항만 손질된 채 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실은 전했다. 정보위원회 통과안 가운데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산하에 설치하고 △국정원에 대테러활동의 기획·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독소조항들은 그대로 살아남았다.

게다가 심사소위는 국정원장의 특수부대 출동 요청권을 삭제하는 대신, 국방부장관·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 등 소속기관의 장이 특공대를 자체 출동시킬 수 있도록 해, 몇몇 부분은 오히려 더 개악됐다는 비판을 불러들였다.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군이 아무런 사전절차 없이, 계엄이 선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독자적인 판단만으로 특공대를 출동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은 명백한 위험"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두 법안 (2면에 계속)

## 활개치는 국가보안법, 뒷걸음질치는 인권

### 최근 국보법 관련 연행·구속자 줄이어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관련 연행·구속사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 97개 인권사회단체의 공동주최로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주대 조직사건 대책위 김상규 위원장은 "지난 3일 재학생과 졸업생 8명이 무더기로 연행된 데 이어, 8일과 9일에도 군복무 중이던 졸업생 김우석, 최준구 씨와 휴학생 천규철 씨가 추가로 기무사에 연행된 뒤 서울 근교 특전사 헌병대로 이송·수감되었다"며 공안탄압의 실상을 고발했다. 또 지난달 28일에는 대구지법이 11기 한총련 대의원 최용석 씨 선고재판에서 11기 한총련까지 이적단체로 낙인찍음으로써, 향후 학생운동에 대한 공안탄압의 기세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송두울 교수 대책위 신정완 운영위원장도 "보수언론들은 송 교수가 재판도 받기 전에 혐의 내용을 기정사실인 양 떠벌려 기득권 세력에게 유리한 정세를 제공하는 데만 관심을 두었다"고 할란하고, "시대정신은 남북간의 화해와 갈등 해소를 요구하는데도 여전히 권력의 핵심부에는 기득권 유지의 도구로 국가보안법을 이용하는 이들이 포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열리기 직전인 오전 10시경 82세의 고령자인 이종린 범민련 명예의장이 성북동 자택 앞에서 체포되어 옥인동 대공분실로 연행된 사실이 알려져 참석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범민련 활동과 관련해서는 국가보안법 제정 55주년을 맞은 지난 1일에도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이 연행된 바 있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연이은 국가보안법 연행·구속사태는 사회 민주화와 인권 영역의 전반적 후퇴현상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내년 총선을 앞둔 수구냉전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 규정했다. 단체들은 또 "반인권·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냉전수구세력의 필요에 따라 활

용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를 모았다. (양승훈)

## 침략전쟁 뒤 감춰진 이라크 여성의 경험

### 미군 성폭력 사례도 잇따라

일본군 성노예제도, 보스니아와 동티모르에서의 집단강간 등이 증명했던 바대로 전쟁의 폭력이 만들어낸 사슬의 핵심에는 언제나 여성들이 있어왔다. 하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라크 전쟁에서 검은 차도르 뒤에 숨겨진 이라크 여성들의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들어보기 힘들다. 후세인 정권의 여성억압을 부각시키며 그녀들의 해방을 위한 십자군을 자임했던 미국. 하지만 미국이 벌인 침략 전쟁에서 이라크 여성들의 인권은 향상되었을까.

지난달 23일 방한한 14세의 이라크 여성 아말 후세인 양은 10일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여성연구원의 주최로 열린 강연회에서 "길거리에 폭탄이 쏟아져 집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어려운 전쟁기간 동안, 여성들은 어린이들을 돌보고 목숨을 걸고 먹을 것을 구해야

한다"며 "전쟁 이후의 생활은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차 있다"고 토로했다.

이라크에서 지속적인 반전평화활동을 벌여왔고 지난달에도 이라크를 다녀온 '함께 가는 사람들'의 한산진 평화팀장은 "최근 현지 인권단체들의 조사로 미군에 의한 성폭력 사례가 잇따라 밝혀지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이 경우 이라크 여성들은 체계적인 치유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등 사회에서 설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밝혀진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팀장은 더욱이 "실업률이 50%를 넘어서는 등 경제가 파탄상태에 이르자, 최근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성매매를 벌이는 여성들이 자주 목격된다"면서 "외국인 남성들에게 '10달 러면 된다'고 속삭이는 알선업자들까지 등장했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여성들의 인권문제는 현지에서 아직까지 사회적인 문제로 다루어지지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한 팀장은 덧붙였다. (이진영)

(이면에서 이어짐)이 어둠의 종착역에 다다르는 것을 막기 위해, 11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소속 위원들에게 통과 반대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 회의가 열리는 오전 11시에는 국회 앞에서 긴급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국현)

# 만화사랑방

이동수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12월 12일(금)  
제 247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 인권·시민사회단체들, '아만적 폭거' 한 목소리

집회·시위에 관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상당수 포함된 집시법 개정안이 11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졸속적으로 통과되었다. 이로써 집시법 개악안은 다음 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의 최종 표결만을 남겨놓게 됐다.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던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회의 내내 암묵적 합의에 기반한 침묵으로 일관했다. 개악안의 통과를 막겠다던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은 안전결정을 가리키는 의사봉 소리가 나고서야 입실하는가 하면 최용규 의원은 병을 핑계로 회의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국회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민주당 합승회 의원의 주도하에 진행되었고, 이들 의원들은 집시법 개정안이 포함된 13개 법안을 회의시작 후 20분만에 모두 통과시켜 버렸다.

집시법 개악안이 이제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사회단체들은 시급히 보도·논평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민변은 이 날 성명서를 발표, 법사위 개정안이 "경찰의 개입과 통제를 제도화하고 강화"하는 내용들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평화인권연대 등 14개 인권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이번 집시법 개악안이 세계인권선언 20조,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조약 제21조, 헌법 제21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의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며 "인권단체들은 이번 집시법 개정안을 추호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집시법 개악안의 본회의

통과를 "국민들의 손과 발을 썩 썩 묶으려는 야만적인 폭거"라고 규정하였으며, 전국민중연대도 "위험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집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 방글라데시 노동자 컨테이너 박스 안 사망

### 이주지부 조합원 자카리아 씨, 마석 성생공단에서

단속추방에 내몰린 이주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지 못한 또 하나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 9일 서울경인지역평등노동 이주노동자지부(아래 이주지부) 조합원인 자카리아 씨가 단속 기간 중 숨어 지내던 마석 성생공단의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심장마비로 숨을 거둔 것.

11일 명동성당 농성천막에서 만난 이종사촌 자심 씨에 따르면, 자카리아 씨는 방글라데시 톨르람 대학에서 영문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나 98년 8월 어려운 집안 사정 때문에 한국으로 왔다. 그는 마석 성생공단의 냉장고 제조공장 조립라인에서 일하며 병든 부모님의 약값과 형, 누나 넷, 여동생의 결혼비용 등 생활비를 송금해 왔다. 지병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지난 8월 협심증 증세로 심장 수술을 받기도 했지만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는 설 수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자카리아 씨는 동료들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고 2001년 이주지부에 가입해 열심히 활동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마석분회 대의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동료들에 의하면 그 와중에 다니던 공장으로

통과할 경우 전면적으로 불복종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개악안에는 행자위가 제시한 집시법 개정안 가운데 '폭력시위 시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 및 동일 목적의 다른 집회 금지가능' 조항을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에 한해 금지하도록 고치고 '사복경찰관의 집회현장 출입 및 지시 가능' 조항을 삭제했지만, 대부분의 골격을 유지했다. (임국현)

형사가 찾아와 이주지부 소속 조합원 현황을 캐기도 했다. 이주지부 농성지원을 맡고 있는 이주지부 쏘냐 선전국장, 지난해 4월 이주노동자 집회에서 자카리아 씨가 선전차에 올라 거리 행진을 지도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자기 사진이 오른 것을 보며 좋아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이제 다시는 볼 수 없게 됐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그는 4년 이상 체류 이주노동자들이 대거 해고됐던 11월 10일 다니던 공장에서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갑자기 해고됐다. 그와 같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방도 같이 썼던 주엘 씨도 당시 같이 해고됐고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그는 "단속 때문에 퇴직금을 달라고 회사를 찾아가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카리아 씨는 지난달 15일부터 명동성당에서 시작된 '감제추방 반대, 전면 합법화' 농성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마석분회장 마문 씨는 "아마 이주지부 활동을 하다 잡혀 추방당하면 가족들의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단속 때문에 병원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외롭게 아파하다 죽은 것 같다"며 고개를 숙였다. (2면에 계속)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아동까지 고문

### OMCT, 파구금 아동 인권실태 고발하고 긴급 대응 촉구

많은 팔레스타인 아동들이 이스라엘 정부당국에 의한 자의적 구금과 고문의 위협 속에 내몰려 있다. 세계고문방지기구인 OMCT는 12일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시급히 이스라엘 정부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혀줄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OMCT는 긴급 호소문에서 "구금상태에 있는 많은 팔레스타인 아동들이 놀라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보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면서 특히 "이들 아동들이 불법적인 체포와 구금,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금시설 내에서의 고문과 가혹행위는 물론, 시설 내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생활조건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보고가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OMCT는 호소문에서 충격적인 고문 사례를 몇 가지 소개했다. 지난 4월 24일 16살의 메자드는 크파르 제바 근교에서 학교로 가던 택시 안에서 이스라엘 방위군에 의해 체포됐다. 메자드는 연행되는 과정에서 군인들에 의해 옷을 벗긴 채 수 차례 구타를 당했으며, 수갑을 짝 조이는 바람에 수개월 후에도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상처를 입었다. 메자드는 이후 여러 구금시설로 옮겨 다니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수 차례 고문을 당했으며, 일주일 넘게 독방 감금에 처해지기도 했다. 메자드는 현재 사문교도소에 수용돼 있다.

17살의 무함마드는 지난 9월 4일 자카리아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연행돼 아트지온 군 구금시설에 수용됐다. 그가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는 가족들의 호소는 묵살됐다. 무함마드는 사복차림의 4명의 수사관들에 의해 얼굴과 팔다리는 물론 성기까지 구타를 당했으며, 군은 전기봉 고문에도 그를 겁에 질리게 하려고 개까지 동원했다. 앞으로 2년이 넘게 투병생활을 해 왔던 무함마드는 체포 이후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했다.

OMCT는 특히 지난 8월 '평화 로드맵'이 폐기된 이래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의 자의적 구금이 다시금 크게

증가하면서 '임시 구금시설' 내에서의 과발수용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베들레헴 외곽에 위치한 아트지온 군 구금센터에서는 2.5평 감방에 성인과 아동의 구분 없이 7명이나 수용돼 있으며 기본적인 위생시설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 10월 현재 10명의 소녀들이 수용돼 있는 라를 여성교도소에는 방마다 최고 8명까지 수용돼 있어 피부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음식의 질이 형편없을 뿐만 아니라 교과서를 포함한 모든 책의 반입이 불허되고 있다.

OMCT는 이와 같은 행위들은 유엔 고문방지협약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스라엘 정부에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구금된 모든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 △시설 처우 수준의 개선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보장 △고문과 가혹행위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구제 제공 등을 촉구했다. OMCT는 또 이 같은 내용으로 국제사회에 이스라엘 정부에 항의하는 행동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자세한 내용은 [www.omct.org](http://www.omct.org)를 참고할 수 있다. (배경내)

(1면에서 이어짐) 쏘냐 씨는 "자카리아 씨의 외로운 죽음은 한국정부의 대책 없는 단속추방의 결과"라며 "이런 죽음은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지부는 동료들의 뜻에 따라 국내에서 이슬람식 추모식을 거행하고 명동성당에서 노제를 치른 후 시신을 고향으로 운구할 예정이다. (강성준)

### ◎ 바로잡습니다 ◎

11일자 '집시법 개악안·테러방지법안, 국회 통과 임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테러방지법안은 10일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를 통과하지 않고 '계속 심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일 심사소위에서는 법안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의를 봤으나, 몇몇 문구에 대한 이견으로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실은 테러방지법안 논의 당시 최 의원이 자리를 비워 정확한 심의 결과를 파악하지 못했다.

### 클릭! 인권정보자료

#### 『2003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

네이스(NEIS) 운영 현황, 구속노동자 및 손배·가압류 실태,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정부의 입장 등 2003년 인권상황을 살필 수 있는 국정감사자료집이 나왔다.

올해는 국회가 파행을 치달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예년에 비해 자료가 양적, 질적인 면에서 풍부하진 않다. 그러나 자료집에서는 노무현 정부 1년의 인권 현황을 평가할 수 있는 각종 인권 통계와 올해 발생한 인권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찾아볼 수 있다.

인권정보자료실에서 제공하는 국정감사 자료집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제공된 모든 자료 중 인권에 관한 것들만을 모아 상임위별로 묶어 재가공한 것이다. 원자료는 국회도서관 의회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 각 상임위 자료의 목록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내 인권정보자료실 초기화면에서 볼 수 있다.

□ 자료 제공 주요 상임위: 건설위원회, 국방위원회, 교육위원회, 노동환경위원회, 문화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정치자치위원회 등

□ 자료문의: 최은아 ([angelica-choi@hanmail.net](mailto:angelica-choi@hanmail.net), 02-741-5363) [최은아]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이들이 바라는 건 작은 보금자리”

### 사회단체들, 상도2동 강제철거 중단·주거권 보장 촉구

주위와 어둠, 굶주림과 외면 속에서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철거민들이 서울도심 하늘 아래 마지막 피난처를 지키며 처절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2001년말부터 시작된 상도2동 강제철거. 단돈 200만원을 이주비와 보증금이라고 제시받은 철거민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길거리에 나왔거나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며 맞서 싸우는 길뿐이었다. 긴 투쟁 끝에 남은 마지막 보루가 바로 고공농성장, ‘골리앗’이다.

지난 11월 28일 경찰과 철거용역은 이 마지막 보루마저 빼앗으려 무려 1500여명을 동원해 살인적인 강제철거를 시도하였다. 철거민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하자, 경찰과 철거용역들은 ‘골리앗’으로 들어가는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식료품과 의약품 반입을 차단했다. 급기야 11일 새벽에는 전기와 수도마저 끊었다. 이제 갓 돌을 넘긴 아기의 존재도, 60세가 넘는 할머니들의 존재도 그들에게는 고려할 바가 아니었다.

이에 전국민중연대와 전국빈민연합은 12일 오후 3시, 골리앗 앞에서 단전·단수 조치를 규탄하고 철거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경찰은 이들의 골리앗 접근을 가로막다 항의가 빗발치고 기자들의 카메라 세례를 받자 마지못해 진입을 허용했다. 다행히 단체들이 준비한 간 아이 분유를 비롯한 생활필수품을 철거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단체 대표들은 “혹한의 겨울철에 거리로 쫓겨나면 갈 곳도 없는 상도2동 철거민들은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생계의 터전에서 가족들끼리 따뜻하게 살 수

있는 작은 보금자리를 원할 뿐”이라며, 경찰과 동작구청, 건설사측에 강제철거 중단과 가수용 시설과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요구했다.

2003년 12월 13일(토)

제 247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기자회견 후 철거민들을 위해 의료지원활동에 나섰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종민 의사는 “어둠과 추운 너무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대부분의 철거민들이 감기에 걸린 상태며, 고혈압 등의 지병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분들도 여럿 계셨다”며 “약을 처방해드리기는 했지만, 주위환경이 중요하다”며 문제의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대표자들은 또 노랑진 (2면에 계속)

## 〈논평〉 ‘바보 노무현’의 인권 패러독스

올해 세계인권선언일은 암담했다. 국회에서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독소조항을 대거 포함한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단속추방을 피해 감리교회로 피신했던 이주노동자들을 단속반은 교회라는 피신처도 무시하고 무더기 연행했다. 80을 넘는 고령의 범민련 이종린 의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공분실로 연행됐다.

그날, 최근의 심각한 인권의 후퇴에 분노한 인권활동가들은 대통령의 면전에서 항의 시위를 했다. 국가인권위가 마련한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장에서 “근조 인권!” 인권이 죽어가고 있다고, 대통령이 알기나 하나고 시위했다.

그런 인권활동가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은 생떼를 쓰지 말라고 했다. 그는 “정부 또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것 아니다. 정부는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시장은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권력이 요구하니 노동자들의 생존권도 아랑곳없이 ‘노동의 유연화’를 강화해야 하고, 시장의 요구이니 투자유인책도 체결해야 하고, 그러니 인권침해의 총체적인 전시장인 될 경제자유구역도 밀어붙여야 한다고 그는 말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생존을 위협받지 않을 권리”가 첫 번째 인권이라고 일갈했다. 생존권을 위협받아 자결한 노동자들에게 “이제 분신을 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시대는 지났다”는 독설을 퍼부었던 바로 그 입으로 말이다. 어이가 없다. 시장권력을 핑계대면서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대통령이 생존권을 우선적인 인권으로 언급하는 패러독스에 기가 찰 뿐이다.

그가 말하는 ‘시장권력’-미국이 패권을 휘두르고, 초국적 금융자본이 지배하는-의 요구에 편승해 그는 생존의 벼랑에 선 부안 군민들과 노동자, 농민, 빈민들, 이주노동자들의 항의에 경찰의 몽둥이와 방패 찌기로 응대해 왔다. 거리 곳곳에서 피 흘리는 국민들을 향해 오기와 대결의식으로 뿔뿔 뿜친 그는 더욱 더 강한 폭력을 사주하는 시장권력의 앞잡이 모습만 보여 오지 않았던가.

그런 그가 “비판하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가자”고도 말했다. 그가 진정 같이 가고자 한다면 실천으로 답해야 한다. 파병 결정 철회, 테러방지법 제정 중단, 집시법 개악 중단 등 인권활동가들의 요구에 실천으로 답하지 않는 한, 시장권력의 앞잡이 노릇만 하는 대통령은 저항의 대상일 뿐이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감시카메라는 범죄자만 감시하지 않는다

### 국가인권위, ‘CCTV와 인권’ 토론회 열어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주택가 골목에도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나?”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폐쇄회로 TV(CCTV)를 도입하다가 인권침해 지적을 받은 가운데 12일 국가인권위가 주최한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토론회를 열었다.

강남구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을 설명한 강남녹색어머니회 신동화 회장은 “주부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범죄 위험에 처해있어서 대부분 찬성한다”며 확대실시를 주장했다. 이창무 교수(한남대 여성경찰행정학)도 “신체적인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기본적 욕구는 프라이버시 인권보다 우선한다”며 “감시카메라 설치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시카메라가 설치되더라도 범죄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함께하는시민행동 하승창 사무처장은 “통계수치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은 다른 지역도 범죄율이 하락하지는 않았는지, 범죄가 카메라 없는 지역으로 전이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 지난해 말 골목길에 감시카메라를 시범설치한 강남구의 경우 설치 후 범죄가 42.5% 줄어들었다고 홍보했으나, 올해 서울시 국감 결과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은 다른 지역도 범죄율이 감소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또 서울경찰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새로 설치한 폐쇄회로 TV를 이용해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사건 발생 후 범인을 체포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가 더 크다는 지적이다. 임지봉 교수(전국대 법학)는 “설치된 지역에서는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되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정보가 기록돼 사용중 지나 삭제 요구도 할 수 없다”며 “감시카메라는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김승환 교수(전북대 법학)도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삶의 편의성 때문에 인권의 주체들조차도 자신들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현실을 보지

못한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에 따라 토론자들은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감시카메라는 거리 불심검문과 비슷하면 서도 기록물이 남고 기록되는 정보도 많아 요건이 더 엄격해야 한다”며 “카메라 근처에 촬영 중이라는 표시를 하고 확대·투시 촬영이나 음성녹음을 금지하며 촬영기록도 7일~15일이 지

나면 폐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인권위는 이날 토론 결과를 참고해 폐쇄회로TV 도입에 대한 인권위 정책권고를 낼 예정이다. (강성준)

(이면에서 이어짐) 경찰서를 항의방문하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며 철거민들과 시공사의 협상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노랑진경찰서측은 이제까지 진행되지 못했던 협상을 13일 오후 3시 골리앗 근처에서 진행하자고 확답했으나, ‘단전·단수 문제’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했다. (양승훈)

## 가해자 손에 진상규명 맡길 수 있나

### 국회 과거사특위 민간인학살규명법안, 국방부 입김 강하게 작용

국가범죄의 가해자들 손에 범죄의 진상규명을 맡겨둘 수 있을까. 지난 10일 국회 과거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민간인학살 관련 통합법안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전쟁 전후 학살된 100만 민간인들의 원혼을 씻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국방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 ‘민간인학살진상규명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그 동안 대통령 직속의 독립 위원회의 설치를 주장해 왔던 유족들과 사회단체들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민간인학살의 직접적 책임자이기도 한 국방부는 그 동안 민간인학살 통합특별법의 제정을 계속 지연시켜 왔을 뿐 아니라,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법 제정 자체를 지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국무총리 산하에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고집해 왔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 국민위원회’(아래 범국민위) 이창수 집행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상태에서는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진상규명위원회에 국방부 소속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것이 분명하다”고 예견했다.

이에 따라 범국민위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어 “진상규명은 가해자로 의심되는 세력과의 타협이 아니라 독립적인 권한이 있는 독자 기관이 구성되어야만 가능하다”며 국무총리 산하 기구를 고집하며 진상규명의 진의를 훼손하려던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171개 인권사회단체들도 12일 성명서를 통해 “국방부는 해방 후 한국전쟁을 전후한 기간의 사회적 혼란 속에서 군이 국민에게 저지른 폭력, 그 과오에 대한 통렬한 반성도 없이 또다시 피해자와 그 유족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면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에 적극 동참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라”고 촉구했다.

‘제주4·3 진상규명 명예회복 추진 범국민위원회’ 박찬식 사무처장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인권의식을 갖고 진상조사를 벌일 위원들이 선임될지 의문스럽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4·3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독립적이지 못한 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을 외면하고 민과 관의 균형논리를 강조할 가능성이 높으며, 나아가 군·경의 책임자들이 가해자로 구체적으로 거론되면 오히려 진상조사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15일 과거사특위 전체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진영)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 개인정보영역 '네이스 분리운영'

### 교육정보위, "교무학사 등 3개영역 학교별 서버로"

전국민 감시통제시스템으로 거센 저항을 받아온 네이스(NEIS)에서 학생 개인정보 영역의 분리 운영이 합의됨에 따라 정부의 개인정보 불감증을 바로잡을 중대한 계기가 마련됐다.

15일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세중)는 7차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스 27개 영역 가운데 교무학사, 보건, 입학전학 등 3개 영역은 학교별로 서버를 구축하되, 시·도교육청별로 공공 혹은 민간기관에 관리를 위탁하고 △학교장에게 정보 수집과 관리 권한을 부여하며 △운영 감시를 위한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시·도교육청별로 두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학교는 비용 절감을 위해 한데 묶어 서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개인정보 영역을 학교별 서버로 구축하도록 하고 그 관리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 데 있다. 네이스공대위 오병일 집행위원장은 "네이스의 핵심인 전체 학생정보의 집적을 막아냈고 장기적으로 교육정보시스템을 각 학교별로 운영하기로 해 개인정보는 분산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또 "정보 수집과 시스템 관리 등 기술적인 권한도 개별 학교장에게 한정해 개인정보를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위험도 제거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네이스공대위는 이날 성명을 발표해 "기존의 행정 효율성 위주의 시스템 운영과 학내 관행에 제동을 걸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확정한 첫걸음"이라며 환영했다.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밖에서 열린 '회의결과 보

고대회'에서 "네이스를 폐기하지는 못해 아쉬움은 남지만 정보인권을 지킬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셈"이라고 적극 평가했다. 네이스 강행 철화를 요구한 지난 6월 21일 연가투쟁을 이유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석방된 원 위원장은 "이번 투쟁을 통해 이 땅 전체가 개인정보의 사각지대임을, 정보인권을 지키는 싸움이 얼마나 힘든지를 깨달았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보인권 사수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은

2003년 12월 16일(화)

제 247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여전하다. 네이스공대위는 이번 합의가 "시스템 운영 방식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일 뿐"이라며 "새 시스템에는 불가피하게 외부에 제공될 수밖에 없는 법정기록만 최소한도로 보관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독립적 감독기구'가 정부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될 수 있도록 위상과 역할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이스 도입 논쟁 때문에 묻혀 있던 '학교현장의 개인정보' 과제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보장하는 교육관련법 개정과 현행 50년 동안으로 규정되어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보관 기간의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편 석 달의 산고 끝에 나온 이번 합의를 16일 국무회의가 그대로 받아들일지 관심을 끌고 있다. (강성준)

## 인권 후퇴 저지 위해 국회 앞 촛불 밝힌다

### 인권단체들, 집시법 개악안 등 국회통과 저지행동 나서

인권을 크게 후퇴시킬 주요 법률안 등이 줄줄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저지행동에 나섰다. 집시법 개악안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이 18일째 본회의 통과절차만 남겨두고 있고 또 테러방지법안과 이라크 파병동의안까지 조만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단체들이 통과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고자 시위에 나선 것.

15일 평화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단체 활동가 10여명은 국회 앞 곳곳에 흩어져 촛불시위를 전개했다. 인권활동가들은 '집시법 개악 반대'와 '테러방지법 철회' 등의 피켓을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촛불을 든 채 국회를 향해 요구사항을 외쳤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국민들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회가 인권과 헌법정신에 입각해 신중

하게 법안통과를 결정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시위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촛불시위가 시작된 지 채 5분도 안돼 이들은 경찰들에 의해 둘러싸였다. 인권활동가들을 막아선 경찰은 "(당신들은) 불법행진을 한 전례가 있으며, 한번 불법 집회를 한 사람은 다시 불법을 저지를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비록 이날 1인 촛불시위는 활동가들의 집요한 요구로 겨우 성사될 수 있었지만, 1인시위조차 가로막고 나선 경찰의 행위는 경찰의 집회금지 제랑권을 더욱 확대시킨 집시법 개악안에 대한 우려를 현실화하는 것이었다.

인권단체들은 오는 18일까지 매일 오후 6시 국회 앞 촛불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17일에는 4대 주요 안전의 국회 통과반대 기자회견과 국회의원들의 반대대표를 축추하는 '국제인권조약' 전달식도 예정돼 있다. (임국현)

## 조이여울의 인권이야기

### 폭력의 낭만화

가끔 악몽처럼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였는데, 운동장 한 귀퉁이에서 웬 아저씨가 한 아주머니를 눌러놓고 발길질을 해대고 있었다. 그 옆에는 자식으로 보이는 언니, 오빠가 서 있었다. 수많은 학부모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말리지 않았다. 그 광경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는데, 나로 하여금 정말 이날의 일을 못 잊게 만든 건 주위 어른들의 태도였다.

"여자가 저렇게 뺨뺨해서 남편 비위를 못 맞추니까 두들겨 맞지."

"저러고 나도 내일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산다."

사람이 흠바닥을 뒹굴며 두들겨 맞고 있는 것을 보고도 '맛을 만 하다'론과 '부부싸움 칼로 물 베기'론을 버젓이 들이대는 것이었다. 어른들의 그런 반응을 접하면서, 이 세상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처음 감지했던 것 같다. 불행히도 그 이후 알게 된 세상은 훨씬 더 많이 잘못 돌아가고 있었다.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러 방식으로 '은폐'되거나 '정당화'되거나 심지어 '미화'된다. '집안 일'엔 남(특히 경찰)이 참견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 속에서, 많은 아내들이 죽거나 죽이기 전까지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강간 혐의로 전 애인을 고소한 여성은 검찰로부터 '전에도 같이 자 봤으면서 뭘 그러냐'는 소리를 듣는다. 반면 강간범들은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론에 힘입는다. 여자를 납치해서 강제결혼을 한 남성들의 이야기는 호탕한 무용담이다.

최근 헤어진 여자친구의 학교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인 남자의 얘기가 화제다. 남자는 대형 플래카드와 피켓을 동원해 여자의 이름을 밝히며 '내게 돌아오라'고 했고, 이를 보도한 매체는 '용감한 구애 시위'라 칭했다. 그 날 거리에선 남자를 격려해주고 어묵까지 떠 먹여줬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 역시 '그 놈은 용감했다'였다.

그러나 그런 식의 일방적인 애정공세를 당해 본 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반응은 달랐다. 한 마디로 '치를 떨었다'. 왜냐하면 그 남성의 행동은, 안 당해 본 사람은 그 고통을 모른다는 '스토킹' 행위이기 때문이다. 싫다는 사람을 쫓아다니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어떤 의견도 다 묵살하고, 사귀었을 때의 일을 직장 동료들에게 다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물리력까지 동반해 사람의 피를 바짝 말리는 범죤. 이것이 스토킹의 실체다.

스토킹 피해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말한다. 스토킹의 행위만큼이나 공포스럽고 괴로운 건 주위사람들의 왜곡된 시선이라고. "얼마나 사랑하면 그럴까", "남자의 순정을 안 받아주면 벌 받는다", "반드시 사랑을 쟁취하십시오" 따위의, 폭력을 낭만화시키는 또 다른 폭력들 말이다.

(조이여울 남은 여성주의 저널 <일다> 편집장입니다.)

##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8일 ~ 12월 15일)

1. 최악의 인권 주간  
인권활동가들, 세계인권선언 55주년 기념식에서 "근조 인권" 항의시위...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시장과의 싸움에서 항상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책임 회피 급급(12.10)/ 범민련 이종린 명예의장,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대공분실로 연행(12.10)/ 노사정위 '손배 가압류 제도개선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도 손배 가압류 개선안 합의 못봐(12.11)/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학교·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 주요도로 행진 금지, 지나친 소음규제 조항 등 그대로 유지(12.11)/ 박관용 국회의원·고건 국무총리 등 참석한 가운데 정부·정치권·농민단체 연석회의 개최...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과 4대 농어민지원특별법 19일 이전에 처리키로(12.11)/ 노 대통령과 4당 대표 회동, 전투병 포함한 3천명 규모 추가 파병안에 대체로 합의(12.14)

2. 겨울 거리, 나뭇구는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임금인상 목적 제외하고 외국인노동자 한해 4차례 사업장 이동 허용(12.8)/ 불법체류 단속 피해 농성 중이던 재중동포 김모 씨, 체불 임금 받으러 나섰다 서울 거리에서 동사...112에 여러 차례 전화 걸어 도움 요청했으나 경찰 외면(12.9)/ 남양주시 성생공단에서 방글라데시인 자카리아 씨 콘테이너 박스 안 심장마비로 숨져(12.9)/ 감리교회관에서 농성 중이던 이주노동자 13명, 단속반원에 의해 강제연행(12.10)

3. 오랜 가물 속 단비 같은 소식들  
정부 노사관계 선진화 최중안 발표...통상임금에 고정적 상여금, 각종 수당 포함하고 공익사업장 파업 시 긴급복귀 명령제 도입 백지화하기로(12.8)/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 위도 핵폐기장 부지 선정 과정에서 부안 군민 의사 반영 못한 점 사과하고 다른 지역 새로 유치신청 받기로(12.10)/ 교육정보화위원회, 교무학사 등 3개 개인정보영역 학교별 서버로 분리 운영키로 최종 합의(12.15)

4. 의문의 죽음, 의도된 은폐  
의문사 유가족들, 의문사 재발 방지 위한 법의학 발전과 생명 존중 위해 장기·시신 기증키로(12.9)/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1980년대 운동권 대학생들의 강제징집에 대한 당국과 문교부가 적극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문서 확보(12.10)/ 의문사위, 1991년 의문의 추락사 당한 박창수 전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사건 진상규명 위해 추락 실험...추락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가 평균보다 크게 멀어 당시 '투신 자살 결론' 의혹 더해(12.10)/ 의문사위, 1970년대 의문사 한 고 장준하 선생 숨진 날 행적 담은 중앙정보부 기록 증발된 사실 밝혀내...고의적 누락 의심(12.11)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구금시설내 인권 지침 나온다

### 국가인권위, 지침안 마련...교정공무원들 반발 거세

외부로부터 단절되어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는 구금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 예방지침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16일 국가인권위는 '구금시설내 인권침해유형 및 예방지침(안) 개발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지침안은 구금시설내 인권침해 영역을 △포승, 수갑 등 계구 사용 등 유형력 행사 △서신, 접견, 집필 등 외부교통 △의료 △기타 시설내 처우 △징벌 △권리구제절차로 구분하고 각각에서 인권침해의 원인과 판단기준, 예방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계구사용에 대해 한상훈 교수(국민대 법학)는 "보복이나 징벌의 목적으로, 심지어는 이의제기나 소장면담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사용되는 경우"와 "수갑을 너무 강하게 채워 손목뼈에 금이 간다든지, 수갑과 사슬을 동시에 사용해 식사나 용변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경우"를 예로 들며 현행 행형법령에 사용원칙이 규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지침안은 도주나 자해 방지 등 엄격한 사용요건을 정하고, 거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가죽수갑과 사슬의 사용도 금지했다.

지침안은 또 최소 월 2시간의 접견 시간을 보장하되 현행 월 4회인 접견횟수 제한을 폐지해 수용자가 자유롭게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견 시 신체적 접촉을 보장하고, 교도관이 접견 내용을 들을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서신 내용을 검열하고 발송불허·폐기하는 관행에 대해 지침안은 원칙적으로 교도관이 서신 개봉과 봉합을

수용자 면전에서 하도록 하고 위험물 검사도 내용은 읽지 않고 시각검사만으로 하도록 했다. 또 "현행 행형법이 규정하는 집필허가제는 집필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로 용인될 수 없는 제한조치"라며 구금시설의 장이 수용자에게 기본적인 집필용구를 제공하도록 했다. 나아가 신문·잡지 등 전통적인 외부교통 수단뿐만 아니라 전화·라디오·텔레비전 이용도 수용자의 권리로 보장했다.

또 지침안은 수용자 의료문제가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와 "교도소는 병원이 아니다"라는 교도관의 잘못된 인식이 결합돼 일어난다며 최소한 수용정원

2003년 12월 17일(수)

제 247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500명당 1명의 의사를 두고 치료비를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나아가 지침안은 현행 징벌규칙이 청소정돈 소홀 등 사소한 규율위반도 징벌사유로 못박아 자의적 적용이 가능한 점을 비판하고, 최대 2개월 동안 1평도 채 안 되는 독방에 수용자를 가두는 '금치' 기한도 4주로 낮추도록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 자리에는 법무부 교정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해 "이렇게 하면 재소자들을 어떻게 통제하란 말이냐?", "죄 지은 사람에게 기본권 제한은 당연하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는 "일선 교정공무원들에게 얼마나 인권의식이 없는지 확인됐다"며 어이없어했다.

이번 지침안은 법무부 등의 의견조치를 거쳐 약 6개월 후 인권위 권고 또는 의견표명 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어서 법무부와 국회의 관련법령 개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강성준)

## 건대생 김종곤 씨, 집행유예로 풀려나

### 향소심에서도 국가보안법 7조 위반 등 유죄 인정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종곤 씨(건국대 법대 학생회장)가 향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15일 서울지법 형사합소4부(재판장 이재환 부장판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김 씨에게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10월 1심에서는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오후 5개월여 만에 자유의 몸이 된 김종곤 씨는 "공안기관도, 법원도 자유민주주의 운운하는데,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정치·사상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인

가"라고 반문하면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특히 미디어 자료집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도서나 단체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들을 편집해 만든 학술자료집에 대해서까지 '이적표현물'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탄압하는 재판부와 판단의 잣대를 제공한 공안문제연구소를 강력 비판했다. 김 씨는 "수사과정에서 공안문제연구소가 이적표현물로 판단하면 재판부가 100% 수용한다면서 부인할수록 형량만 높아질 뿐이라는 협박을 자주 들었다"며 "책상머리에 앉아 자기들끼리 정해놓은 틀에 끼어맞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재단하는 공안문제연구소가 위법 여부까지 결정한다면 재판부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라며 비판했다. (배경내)

## 법정에서 펼쳐진 '경계인'의 반론

### 송두울 교수, 우리 사회 이분법 비판...학문의 자유 요구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송두울 교수 2차 공판이 16일 열렸다. 지난 1차 공판이 검찰측 심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이번 공판은 검찰의 심문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론이 중심이 됐다.

이번 공판에는 송 교수 가족을 비롯해 대책위 관계자들, 독일의 '한국협회' 라이너 베르링 회장, 독일대사관 직원, 그리고 우익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방청객으로 참여해 재판의 진행 과정을 유심히 지켜봤다.

변호인단은 송 교수가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면서 그 결론에 따라 북한을 방문, 연구활동을 수행하여 통일에 기여하려고 했다는 점을 송 교수의 입으로 직접 밝힐 수 있게 함으로써, 그의 학문활동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려는 검찰의 논리를 차근차근 반박해나갔다.

송 교수는 먼저 '내재적 접근법'에 대해 "사회주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련과 중국이 체제존재론적으로 연구된 것에 대한 방법론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며 "경험주의적이고 비교사회주의적인 방법론인 내재적 접근법은 정보를 대외적으로 내보내지 않는 북한사회를 연구함에 있어 더욱 필요한 접근법"이라고 밝혔다. '경계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는 경계인을 기회주의자로 인식하고 양 극단 가운데 하나를 빨리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초조함에 싸여 있다"고 지적하고 "중간이 지나는 생산성과 창조성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북한을 대남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검찰측의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이미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6·15 공동선언에서도 김정일과 김대중이 동등한 위치에 섰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또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은 상호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인 반면,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함께 북한을 자본주의 사회로 흡수 통합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오히려 남한이 아니었는가"라고 꼬집었다.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여부와 남

북통일학술회의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의 반론이 이어졌다. 송 교수가 노동당 정치국위원 김철수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변호인단은 "송 교수는 오히려 북한 상층통일전선의 포섭대상이었다"고 지적했다. 남북통일학술회의가 북한이 자신의 체제와 사상을 선전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 아니냐는 검찰

의 주장에 대해서는 "통일학술회의는 한겨레, 중앙일보, 한국일보, KBS 등이 주관하고 SK, 대우, 삼성 등이 협찬한 순수 학문회의였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마지막으로 "하인리히 하이네는 파리에서 13년동안 망명생활을 했지만 마지막 겨울은 고향에서 보내며 '겨울 동화'라는 유명한 작품을 남길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런 여유조차 없는가"라며 학문활동에 대한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송 교수의 3차 공판은 오는 23일 같은 곳에서 열린다. (임국현)

## 혁명은 인권영화제에 나오지 않는다?

### 엠네스티 국제영화제, <혁명은 TV에 나오지 않는다> 상영 취소 논란

지난달 6일부터 9일까지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렸던 엠네스티 국제영화제에서 <혁명은 TV에 나오지 않는다>란 작품이 갑작스레 상영을 거부당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아일랜드 출신인 두 제작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혁명은 TV에 나오지 않는다>는 지난해 4월 베네주엘라에서 차베스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감행된 '실폐한 쿠데타'의 면면을 생생히 묘사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휘된 민중의 힘을 보여준 작품이다. 특히 사영화된 베네주엘라의 주류 방송들이 진보적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쿠데타 세력들과 어떻게 공모하고 있는지를 잘 포착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엠네스티는 작품의 상영 예정일인 11월 9일을 며칠 앞두고 상영취소 결정을 내렸다. <혁명은 TV에 나오지 않는다>가 특수한 인권 이슈에 대해 "너무 편향적이고 불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 또 "엠네스티 베네주엘라 지부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이, 작품이 상영되면 자신이 물리적인 폭력을 당할 수도 있다고 전해왔기 때문에 직원 보호와 엠네스티 지부간의 연대차원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도 올 제7회 서울국제노동영화제를 통해 소개된 바 있는 이 작품은 엠네스티 국제영화제에 초청되기 이전에 이미 숱한 국제 영화제들에서 상영되어 수상을 했고, 유럽의 공영방송에 방영되면서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자, 베네주엘라 사영 방송국의 핵심 세력들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작품이 "쿠데타의 진실을 왜곡했다"며 작품 제작을 후원해준 유럽의 몇몇 방송국들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세계 각지의 방송국과 영화제 관계자들과 만나 압력을 넣어 왔다. 국내 노동영화제 측도 미국에 거주하는 한 베네주엘라인으로부터 상영에 관한 항의 이메일을 받은 바 있다.

국제엠네스티의 상영 거부에 대해 <혁명은 TV에 나오지 않는다>의 제작자들은 "보수 세력들이 벌이고 있는 캠페인의 목적이 바로 엠네스티 영화제가 결정한 상영 거부와 같은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구현되어야 할 가치인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하면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에 처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혁명은 TV에 나오지 않는다>를 지지하는 12개 단체들도 지난달 13일 성명서를 통해 "만약 엠네스티 영화제가 정말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쿠데타 세력들이 민주적인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벌였던 탈법적인 행위를 보여주고, 보수세력들이 미디어를 독식하면서 정확한 정보 접근이 차단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이 작품을 응당 상영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혁명은 TV에 나오지 않는다>의 상영을 지지하는 서명을 온라인 상에서 받고 있다. (이진영)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12월 18일(목)

제 247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정치 풍자 표현물이 선거법 위반?

### 중앙선관위 경직된 법 적용,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재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앙선관위)가 시사정치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라이브이즈닷컴'의 운영자 김태일 씨와 민중가요 노래패 '우리나라' 사이트의 운영자 강상구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 과도한 선거법 적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중앙선관위는 두 인터넷 사이트가 "물러가라 판나라", "그러한 나라에 살고 싶나요" 등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노래와 특정 입후보 예정자들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두 사이트의 운영자를 고발했다. 17대 총선과 관련해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중앙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탈법적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표현물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후보자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의 유포 등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라이브이즈닷컴'의 김태일 씨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정치를 풍자하고 패러디하는 작품이 선거법에 저촉되는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풍자와 해학을 담은 창작물에 대한 임의적인 유권해석으로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금지케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강상구 씨 역시 "예술 노동자들에게는 '생명'이나 다름없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감상해야 할 예술 작품을 감정하듯 다루는 자세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킹의 장여경 정책실장도

"정치적인 찬반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경직된 자세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장 정책실장은 또 "물량 공세를 할 수 있는 여력이 큰 정당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온라인 상에서 '흑색 선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행위와 정치적인 의사 표현과는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중앙선관위가 혼탁한 선거문화를 야기하는 선거운동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을 앞세워 선거법을

일상적인 정치 활동을 탄압하는 데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사이버 상의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한다는 목적으로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10월부터 1일 평균 11만건에 달하는 게시물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장 정책실장은 "기계적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상의 정치적 표현이 선거운동으로 둔갑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태일 씨와 강상구 씨는 이번 사건이 중앙선관위가 네티즌을 대상으로 제재조치를 취한 첫 사례인 만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판단, 향후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이진영)

## "집시법 개악하면 불복운동 나설 것"

### 오늘 본회의 상정...인권단체들, 4대 인권사안 반대표결 촉구

반인권·반민주적 개악이라는 빗발치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통과 저지를 위한 막바지 공세에 나섰다.

17일 오후 2시 전국민중연대 등 73개 사회단체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시법 개악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들은 "헌법을 위반한 악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기 때문에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해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며, "집시법이 개악될 시 민중불복운동과 법안 무효화를 위한 위헌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악법 폐지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 다산인권센터 등 27개 인권단체들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시법 개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인권단체들은 집시법 개악안과 더불어 연내 국회 상정이 예상되는 '이라크 파병 동의안'과 '테러방지법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 4대 인권사안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불러올 것이라 경고하며, 국회가 이들 법안을 부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인권단체들은 4대 인권사안의 반대 표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국회의원 270여 명 전원에게 이메일과 팩스로 전달하고, 의원 개개인의 4대 사안 표결 결과를 공표해 17대 총선에서 반인권 의원으로 홍보할 것임을 경고했다.

한편 18일 2시 본회의 개최에 앞서 인권단체들은 오전 11시부터 국회 앞에서 거리선전전을 진행한 후, 오후 1시 각계 사회단체들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개최해 집시법 개악안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마지막 힘을 모아야 할 계획이다. (양승훈)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① -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 조석영 씨

## "올해는 사회보호법 폐지되리라 믿었는데..."

《인권하루소식》은 얼어붙은 인권의 땅을 녹이기 위해 힘겹게 '겨울터널'을 지나고 있는 다섯 사람을 만나 노무현정부 1년의 인권성적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그는 소년 같은 미소를 지닌 사람이다. 하지만 사회보호법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투지와 집념으로 푹푹 뭉친 투사가 된다.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 조석영 씨. 그는 지난 8월말 출소한 이래 이달 17일까지 꼬박 64일째 '사회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왔다. "처음엔 근위병처럼 4시간씩 땀 흘리고 서 있었더니 죽겠더라고요. 이제는 익숙해져서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단식농성으로 사회보호법 흔들다

무려 23년간 악명을 떨쳐온 사회보호법은 올해 폐지의 문턱까지 다다랐다.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에 이어 최근 열린우리당이 폐지법안을 제출하기까지 청송의 피감호자들은 지난해부터 목숨을 건 집단 단식농성을 무려 5차례나 단행했다. 지난 5월의 네 번째 단식농성까지 그 중심에는 조석영, 항상 그가 있었다. "처음 일주일엔 입에 물 한 모금도 안 뱉습니다. 제가 물을 마시면 다른 사람은 죽을 땀이 되니까요."

그렇게 피감호자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스스로 주체가 되어 이 법의 폐지를 촉구하자, 사회에서도 점점 더 큰 메아리가 돌아왔다. "피감호자들의 단식농성이 사회보호법 폐지 흐름의 기폭제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복복에 대한 큰 두려움 없이 농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들 뒤에는 인권단체들이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감호자들이 '법 폐지' 요구를 내걸기까지 어려움도 많았다. 대부분은 '우리 힘으로는 폐지가 어렵다'는 현실론을 들며 처우개선을 요구하자고 했다. 그러나 그는 동료들을 하나둘 설득해 나갔다. "나무를 통째로 흔들어야 알밤이라도 떨어지지, 알밤 하나하나 들팔매질해서는 못 맞추면 그만 아니냐며 설득했지요." 그러자 동료들도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사람 말려죽이는 법이 사회보호법이지?"

그런 그도 처음에는 모범적으로 생활하다 하루 빨리 나가야겠다는 마음뿐이었다고 한다. 표창도 여럿 받았다. 그러나 청송에서 보고 느낀 사회보호법의 해악은 그를 조금씩 투사로 만들어갔다. 동료 몇몇과 단식농성을 모의하다 발각돼 엄청나게 맞고 62일간이나 사슬에 묶인 채로 징벌방에 갇힌 적도 있었지만, 그의 집념은 꺾이지 않았다.

"동료 수용자들 보면 대개가 저학력에 극빈층 출신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오지에다 가둬둔 채 사회에서 도태시키고 말려 죽이는 법이 바로 사회보호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출소해도 갈 곳 없는 사람들, 다행히 일자리를 구한다 해도 하루 15-16시간씩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며 일하다 때려치우고 또 다시 절도 같은 범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요."

청송에서 만난 한 동료는 출소 후 건 축자재 공장에 취직했다 손가락이 잘려 깎이를 한 상태에서 쓰레기 조각 일을 하다 발가락에까지 화상을 입었다고 한다. 그러고도 한글을 몰라 업무에 속아 보상금도 못 받고 쫓겨나

여기저기 전전하다 다시 청송으로 돌아왔다. "사회보호법에 대한 원한이 워낙 사무치다 보니 처음에는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출소자들이 그렇게 밟더라고요. 사회보호법 유지의 근거를 제공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차 사회 시스템의 문제가 보이더군요."

상황이 이런데도 법무부는 '사회보호'를 명분으로 보호감호제도의 개선을 고집하고 있다. '큰 도둑질'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국회에서도 기다리는 폐지법안 통과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

"국회 앞이 저를 성장시킵니다"

"올해는 꼭 폐지되리라 활짝같이 믿고 있었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국회앞에서 다양한 분들 만나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범죄자들은 지금까지 자기 하나 보며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파병반대나 국가보안법 폐지 시위하시는 분들 보며 남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청송에서부터 사회보호법 문제를 파고들다 보니 유사 법률인 구 사회안전법과 국가보안법의 존재까지 알게 됐다는 그는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시민 견기대회에도 참여했다.

출근하는 기분으로 매일 국회에 간다는 그는 작은 소망 하나도 키우고 있다. "법이 폐지되면 출소자 자활을 지원하는 일을 꼭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야 하나 있는 아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경내)

## 만화 사랑방

이동수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12월 19일(금)

제 248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장기간 상시 계구 착용은 위헌”

### 현재, ‘392일 금속·가족수갑 착용’ 전원 위헌 결정

무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용자에 게 금속수갑과 가족수갑을 채워, 구금 시설내 과도한 계구 사용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불러일으켰던 광주교도소측 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철퇴를 맞았다.

18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은 정모 씨가 광주교도소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그리고 과도하게 청구인의 신체거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불가능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모 씨는 법정에서 도주했다 광주교도소에 재수감된 2000년 3월 7일부터 이듬해인 2001년 4월 2일까지 총 392일 동안 금속수갑과 가족수갑에 묶여 양팔을 몸통에 완전히 결박당한 채 생활하게 되자, 2001년 3월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모 씨는 같은 해 4월 목포교도소로 이감된 후에도 계속해서 금속수갑과 가족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생활하다 466일째 되는 6월 18일이 되어서야 계구에서 풀려났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계구의 사용은 무엇보다 수용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제한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이루어져야 한다. 그 경우에도 가능한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금속수갑과 가족수갑을 이중 착용하여 식사, 용변, 취침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한 것은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정모 씨로부터 진정을 접수받은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이러한 계

구 사용이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국가인권위는 의견서를 통해 “현재 사용되는 가족수갑은 행형법에서 계구의 종류로 규정된 ‘수갑’의 문언적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가족수갑 사용의 불법성을 지적했으며, 지난 16일 발표한 ‘구금시설내 인권침해 예방지침(안)’에서도 가족수갑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배경내)

## 인간복제는 금지, 배아복제·이종 교잡은 허용

### 생명윤리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광범위한 예외 뒤

인간복제 등 생명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더불어 위기에 처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사회·종교단체들이 5년 전부터 제정을 요구해 온 생명윤리 관련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아래 생명윤리법안)은 단체들로부터 한계가 많은 것으로 비판받아 온 보건복지부 안을 그대로 수용해 우려를 낳고 있다.

생명윤리법안은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관련기관 산하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체세포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 유지 또는 출산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며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유전자검사를 금지하고 △유전정보를 이용하여 타인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반면 체세포핵이식과 배아 혹은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검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대통령령으로 허용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또 그 동안 시민·종교단체와 산업계 사이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배아복제’에 대해서는 △인공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보존기간이 경과된 잔여배아를 회귀·난치병 치료 등 대통령령이 정

하는 연구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이종간 교잡의 경우는 ‘핵이 제거된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그 반대의 경우는 허용했다.

이에 대해 사회단체들은 일단 생명윤리 관련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민우회 명진숙 사무국장은 “생명윤리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배아복제와 이종간 교잡을 허용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자 만들어진 본 법안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잔여배아를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데 대해서도 “난자매매 또는 연구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1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인간 유전정보 활용 부분에 있어서 예외 조항과 광범위한 (대통령령) 위임 사항을 두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았다”고 꼬집었다.

이 생명윤리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간복제와 이종간 착상 금지 조항은 공포한 날로부터 곧바로 효력을 얻게 되고, 나머지 조항들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임국현)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② - 평등노조이주지부 사별 지부장

## “노예의 노동, 이주노동자 스스로 해결해야죠”

‘세계 이주민의 날’을 하루 앞둔 17일, 명동성당 농성장은 너무나 추웠다. 석유난로 하나가 켜져 있지만 천막 틈새로 들이닥치는 바람은 어쩔 수 없다. 더구나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많아 감기는 기본이고 이빨 아픈 사람, 발에 동상이 걸린 사람도 있다.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네요. 하지만 농성은 계속됩니다.” 연신 콜록거리면서도 빛나는 눈빛을 내뿜는 사별 타파. 서울경인지역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지부장인 그는 지난달 15일부터 이곳에서 조합원 80여명과 함께 농성을 시작했다.

산업노예에서 노동운동가로

한국 땅을 처음 밟은 것은 94년 5월. “네팔에서는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요. 그러다 몇 년만 고생하면 기술도 배우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신문광고를 봤지요.” 네팔 트리뷰완대학 경제학과 2학년을 마친 그는 가족을 위해 산업연수생으로 한국행에 올랐다. “플라스틱 사출공장에서 일했는데 주간 11시간, 야간 13시간 일해도 월급은 40만원밖에 안됐어요. 게다가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25만원뿐이었지요.” 나머지는 도망치지 않으면 귀국할 때 돌려준다는 ‘강제적립금’이었다. “몇 달 후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 앞으로는 적립 안 했으면 좋겠다고 사정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라 노예였어요.” 차라리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그는 연수업체를 나와 석재공장, 양계장을 전전했다.

97년 겨울 IMF는 이주노동자라고 해서 봐주지 않았다. 당시 다니던 공장이 한 달에 절반만 돌아가자 그는 아르바이트로 새벽 신문배달을 했다. 99년 3월 배달 중에 덤프터에 치여 다리 심줄이 끊어지는 중상을 입기도 했다. “수술비도 없는데 회사는 그만둬야 했으니 눈앞이 캄캄했지요.” 바람 끝에 몰린 그는 ‘안양전진상복지관 이주노동자의 집’에서 살면서 치료를 받았다. “그곳 상담실에는 임금체불, 산재, 성폭력 문제로 이주노동자들이 끝없이

몰려들었어요. 이주노동자 문제는 스스로 일어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01년 만들어진 이주지부를 통해 노동운동에 뛰어든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숨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단속추방에 반대하며 명동성당 농성을 결심하기까지 고민도 많았다고 한다. “단속 날짜가 다가오니까 숨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과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생각이 겹쳤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미 숨어 버린 후였고요.” 하지만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앞서서 싸우면 친구들도 밖으로 나와 싸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막상 농성단을 꾸려보니 그 동안 한번도 활동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 친구들과 함께 연수제도, 고용허가제의 문제점부터 공부하고 토론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디가도 잡힐 테니 농성이라도 해야겠다던 친구들이 지금은 노동권이 뭔지 알게 됐어요. 농성에 지치다가도 생각이 많이 바뀐 친구들을 보면 힘이 납니다.”

고용허가제 얘기가 나오자 눈에 빛이 난다. “4년 이상 체류자는 모두 내보내고 싹 임금으로 일하는 새로운 인력을 들여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3년을 채우면 또 잡아서 내보내고요. 빈 자리에는 새 사람들이 또 들어오겠지요. 그러면서도 불만이 있어도 사업장을 옮길 수 없게 해놨습니다.” 한국정부의 비열한 분할 전략을 이야기하는 그의 눈에서는 분노가 타올랐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인권은 어디서 일할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같아요. 회사에서 잘 해주면 왜 옮길 생각을 하겠어요?”

이들의 농성은 성당 안에만 갇혀 있지 않았다. 추방 위협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노동청 앞에서 연달아 집회를 열었다. “아무리 위협해도 밖으로 나가 한국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우리 문제도 풀린다는 생각입니다.” 경찰의 신경도 곤두섰는지 성당 앞을 서성거리고 간혹 “나오면 잡는다”는 협박전화를

걸어오기도 한다. “성공회대성당이나 감리교회에도 이주노동자들이 농성하고 있지만 여기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문제를 풀려고 해서 그런지 표적 단속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거리행진 때도 이주지부 조합원 비두 씨와 자말 씨가 맨 앞에서 싸우다가 연행돼 추방을 앞두고 있다.

“우리도, 한국인도 함께 뭉쳤습니다”

사진을 찍으려다 보니 쓰고 있던 모자에 살짝 가려 삭발한 머리가 드러났다. 지난 14일 안산집회에서 삭발했다고 한다. 네팔에서는 삭발의 의미가 ‘항의표시’가 아니라 ‘슬픔’이란 뜻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식들이 머리를 깎는다는 것. “고향에 살아계신 부모님이 알면 안돼요”라며 너스레를 떨면서도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한마디 덧붙인다. “지금까지 단속이 시작되면 이주노동자들은 숨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뭉쳤고 지지하는 한국인들도 많으니까요.” (강성준)

## 집시법 개악안, 내주 본회의 상정 열린우리당, 수정안 마련

1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집시법 개정안이 열린우리당의 수정안 제출 시간 요구에 따라 상정이 연기됐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실은 “16일 당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했다”며 “이는 당론에 준하는 안”이라고 밝혔다.

수정안은 법사위 통과안이 사실상 집회허가제로 운용될 가능성을 높였다고 판단, 집회 제한 사유를 △주거지역이나 학교주변에서 ‘강렬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군대의 시설 출입과 이동 등 작전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주요도로 행진 시 편도차로의 1/2 또는 2개 차로를 초과해 점유한 경우로 한정했다. ‘강렬한 소음’의 기준은 법률에 명기하지 않고 대통령령 개정 사항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 국회 본회의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수정안과 법사위 통과안을 두고 표결 처리하게 된다.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추위도 날려버린 반전평화의 바람

### 유랑단 '평화바람' 올해 마지막 공연...파병반대 요구 뜨거워

평화유랑단 '평화바람'이 19일 저녁 6시 인사동 남인사마당에서 '전쟁없는 세상을 위한 평화마당'을 개최하며 올해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평화바람'은 지난달 14일 발족한 이래 신촌을 시작으로 홍대와 대학로, 인사동을 비롯한 서울 일대와 부천, 인천을 두루 거치면서, 반전평화·파병반대의 열망을 담은 작은 공연으로 평화의 바람을 일으켜왔다.

이날 유난히 추운 날씨 속에 진행된 공연에서 유랑단 단장 문정현 신부는 "올해 활동은 여기서 정리되지만 평화를 위한 우리들의 유랑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며 "내년에도 더욱 힘찬 활동으로 반전평화를 위한 마음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코앞에 다가온 한국군 추가 파병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이어졌다. 평화바람 공연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반전 뮤직비디오 '앗살람알라이쿰'의 최진성 감독은 '사람은 못 돼도 괴물만은 되지 마라'는 한 영화의 대사를 언급하며 "이미 괴물이 된 부시와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노무현이 국민들마저 괴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우리 모두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파병을 반드시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지난달 30일 한 달간의 이라크 현지 조사를 마치고 귀국해 평화바람 단원으로 활동 중인 김재복 수사도 "이라크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아이들이 탱크에 깔려 죽고, 무고한 시민들이 미군의 총에 맞아 죽어가는 비참한 일들이 하루에도 몇 건씩이나 일어나고 있다"며 전쟁을 반대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평화를 위하는 길에 모두가 끝까지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공연에서는 파병반대 병역거부자인 강철민 씨에 대한 지지와 그의 무죄석방을 탄원하는 서명과 모

금 활동도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강 씨는 지난 12일 광주 육군 31사단에서 열린 공판에서 군 검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받았지만, '파병이 철회될 때까지 어떠한 병역의무도 거부할 것'이라는 평화의 신념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7일 추가 파병 계획을 구체화하고 오는 22일까지 (22면에 계속)

### 〈논평〉 파병저지의 희망은 거리에 있다

기어이 침략군을 또 다시 이라크에 파견할 모양이다. 17일 노무현 대통령은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3000명 규모의 추가 파병안을 확정했다. 이 정도 규모면 전쟁 주도국인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규모 있는 침략국가 대열에 서게 된다. 이미 대통령과 4당 대표들과의 회동에서도 '이해된' 내용이나 국회에서도 일사천리로 통과될 것이다. 대략 내년 초 선발대가, 5월에는 본대가 파견된다고 한다. 지난 10월 18일 정부의 추가 파병 방침을 접한 이후, 시민들이 꼭기를 끊고 예순이 넘는 원로들이 찬바람 이슬겨울 거리에 나섰건만, 현역 군인마저 고난을 감수하며 파병 결정 철회를 요구했건만, 이들의 바람은 고스란히 짓밟혔다. "파병 결정 때문에 우리 아빠가 죽었어요"라는 아버지를 잃은 딸의 한 맺힌 호소도 정부와 국회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래도 파병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저항이 못내 두려웠던지 정부는 "이라크의 평화와 전후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눈속임을 시도한다. 하지만 '평화재건부대'라는 명칭 하나 바꿔 단다고 미군의 동맹군으로, 이라크 점령군으로 군대가 간다는 사실을 가릴 수는 없는 일이다. '비전투병이 섞인 헌성부대'라고 해서 파병반대 목소리가 잦아들 이유도 전혀 없다. 이라크인의 자치를 요구하며 점령군을 공격해온 이라크 저항세력들에게는 꺾어야 할 표적이 하나 더 늘어날 뿐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는 한미동맹관계를 내세워 파병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국민들을 몰아붙인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정부안이 나오기도 전인 이달 초 "조속히 파병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내달라"며 보냈다.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파병안 확정 뒤 "미국 국무장관이나 국방 장관도 고맙게 생각할 것"이라며 한술 더 떴다. 지난 4월 1차 파병에 반대의를 밝혔던 반전평화모임의 원로들이 수두룩 깔려있는 열린우리당은 이번에는 여당으로서 정부의 손을 들어 주고 있다. 침략전쟁이라는 본질은 입밖에 내지 않고 오직 국익을 핑계로 파병을 향해 달려가며 온 국민을 전범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파병동의안이 국회로 보내질 다가오는 주에는 더 이상 정부도 국회도 믿을 수 없다는 국민들의 거센 물결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은 뒤덮일 것이다. 이웃의 가슴에 총을 겨눌 수 없다는, 전범국가 국민이 될 수 없다는 양심의 소리는 '추가 점령군'을 보낼 것이 아니라 이미 파견된 서희·제마부대마저 철수시키라는 목소리로 들끓어지리라 믿는다. 희망은 오직 거리에 있다.

##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③ -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이호영 씨 "가시적 성과 없어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재빠르게 발을 놀리며 길을 걷는 시민들에게 애써 홍보 전단지 나눠주는 아주머니, 신장개업을 한다는 음식점 홍보를 위해 커다란 스피커 앞에서 짤막한 미니스커트 입고 몸이 부서져라 춤을 추는 옛된 여성,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지하철 계단을 묵묵히 걸레질하는 예순을 앞둔 아주머니...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행렬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비정규직 차별문제를 해결하겠노라 공연했던 노무현 정부 하에서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몸에 신나를 부여야 했다. 고 이용석 광주전남본부장의 분신이 도화선이 되어 돌아오른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대오 한 가운데는 생전 파업이라고는 처음 해본 여성노동자들이 있었다.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한 달이 넘게 지속된 농성장 한 칸을 변함없이 지키고 있었던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부 소속 여성 조합원 이호영 씨. 그녀가 처음 비정규직 노동자로 근로복지공단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지난 2002년 3월이었다. "사실 입사하고 처음 1년 동안은 노동조건에 대해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어요. 사회 생활이 다 그러려니, 계약직 노동자니까 그러려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죠."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동일한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도 정규직 노동자의 60%에 불과한 임금을 받아야 했고, 정규적으로 실시되는 '근무성적 평가' 탓에 담당자에게 밉보이면 언제든지 해고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러한 분노가 올해 4월 비정규직 노조 건설로 이어졌다.

하지만 호영 씨는 "처음 노조가 만들어졌을 때에도 조합원 가입이 썩 내키지는 않았다"고 고백한다. 아직도 노동자는 '근로자'일 뿐이고 '노조'와 '파업'은 금기어로 치부되는 이 땅에서, 노조를 설립해야 한다는 절박감과 노조에 대한 거리낌이 불가피하게 공존했을 것이다. 그랬던 그녀가 비정규직 노조의 한 조합원으로 10월말부터 40

일이 넘게 차디찬 농성장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지사가 누가 오느냐, 부장이 어떤 사람이나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평소에는 정규직 노동자들과 친하게 지내다가도, 업무 분담을 할 때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고스란히 온갖 잡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성 노동자에게 당연한 업무 가운데 하나로 치부되는 커피 심부름도 정말 하기 싫었지만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여성의 몫이 되는 일"이기에 쉽게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호영 씨는 말한다.

지난해 11월 근로복지공단 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8일 동안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야 했다. "회사에서 '여러분은 모두 다 우리 식구'라며 간이고 쫄고 다 빼줄 것처럼 하더니 막상 정규직 노동자들이 복귀하자 이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행동이 썩 바뀌더라고요. 소리낼 수 있는 단일한 창구가 없었던 비정규직들에게 노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어렵듯이 느꼈어요."

죽음, 그리고 40여 일간의 파업

10월 26일 이용석 광주전남본부장의 분신이 있는 바로 다음 날, 호영 씨를 포함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장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 산하기관인 공단에서부터 먼저 비정규직 채용을 중단하고 고용 안정을 보장하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를 내걸었지만, 사측과 노동부의 버티기는 완강했다. "따뜻한 구석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었던 농성장에 물려들던 추위가 가장 견디기 어려웠어요." 조합원들이 이렇게 차가운 농성장을 지켜내고 있는 동안, 이용석 씨의 시신도 차가운 냉동고 안에 놓여 있어야 했다.

처음 500여 명이 못되는 대오가 농성을 시작하였는데, 하나둘 빠져나가 결국에는 100여 명만 남았다. 사측의 회유와 협박이 계속 이어진 탓이다. "각 지사별로 농성장에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빼앗느냐를 수치화해서 인

농성을 방해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호영 씨는 굳건히 버텼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해볼 수 있을 때까지 해보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지사 동료들이 함께 버텨준 게 큰 힘이 되었어요."

결국 이달 6일, 향후 비정규직 직원 확대를 중단하고 정규직 채용 시 50%를 비정규직에서 충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노사타결이 이루어졌다. 38일만에 이용석 씨의 장례가 치러지고 모두들 다시 일터로 돌아갔지만, 당장에 달라진 점을 발견하기란 힘들다. "한 노동자의 죽음, 40여일 간의 파업, 혈서, 단식 등 이런 노력들에 비해서 얻은 성과들이 약소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땀땀하게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 소중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가시적인 무언가를 얻어내진 못했지만 이제부터라도 뭔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비정규직 자체가 없어져야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자존감마저 버릴 것을 강요하는 현실 앞에서 호영 씨는 당당히 말한다. "비정규직이라고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라고 인식하고 거기에 눈을 돌렸으면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기에 억울하면 시험을 쳐서 정규직 노동자가 되라는 현실의 속삭임에도 그녀는 "비정규직 노조의 최종 목표는 비정규직을 철폐해서 비정규직 노조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답한다. (이진영)

(41면에서 이어짐) 대미군사실무협의단의 협의를 통해 파병지역을 최종 선정 후 내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유랑단 '평화바람'은 내년 1월 둘째 주부터 활동을 재개, 반전평화의 열망으로 전국을 감성시키기 위한 유랑길에 다시 오를 예정이다. (양승훈)

### 인권운동사랑방 송년회

- 때: 12월 20일 늦은 7시
- 곳: 성균관대 앞 5th AVENUE
- 문의: 02-741-5363 / 016-286-3340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대법,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외면

### “시효 98년 2월 끝났다”...국회 특별법 통과만 희망

대법원이 시효 문제를 핑계로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의무를 외면했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강모 씨가 “88년 노태우 전대통령이 보상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88년 당시 노 전대통령은 “광주민중화운동, 공직자 해직, 삼청교육대 사건 등에 대해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특별담화를 발표했고 국방부에서 피해신고도 접수했지만 후속 조치는 없었다.

대법원은 “당시 대통령 담화는 시정 방침일 뿐 후임 대통령이 승계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전제하고 “노 전 대통령이 후속조치 없이 퇴임한 시점에 약속이 깨졌다고 보고 그 때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며 93년 2월 24일을 소멸시효 시점으로 봤다. 따라서 예산회계법의 국가배상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난 98년 2월 이후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동안 하급법원에서 “시효가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전향적 판결을 잇달아 내놨으나, 형식논리에만 집착한 이번 대법 판결은 흐름을 다시 역전시켰다. 지난 1월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김영감 부장판사)는 “특별담화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약속이므로 노 전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7월 부산지법 민사합의7부(재판장 황종국 부

장판사)도 “대통령의 약속과는 달리 14대·15대 국회에서도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16대 국회 개원 후 상당기간이 흐른 2001년 6월을 약속이 깨진 시점으로 본 바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보상법안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8월 이창복 의원이 발의한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여부와 명예회복 관련 사항을 다루도

2003년 12월 23일(화)

제 248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록 했다. 이 법안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명예회복’과 ‘보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정작 사건의 전말을 밝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다루지 않고 있다.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완전히 무시됐다. 또 심의과정에서 보상 대상자를 사망·실종·부상자와 유족으로 한정하고 “삼청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삭제해 근본적으로 ‘불법체포’에 해당하는 삼청교육대 운영에 역사적 면죄부를 주게 됐다. 억울하게 체포·감금된 데 대한 정신적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전영순 회장은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23년간 달고 있던 ‘강제’라는 이름표를 떼게 된다”며 “추후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성준)

## 국가인권위, 한나라당도 못 좇아가나

### 태스크포스팀 사회보호법 폐지 합의 못봐...한나라당 폐지 당론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이 폐지와 개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 결국 두 개의 안을 전 원위원회에 제출했다.

올 초 2003년 국가인권위 3대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된 사회보호법 문제를 연구, 검토하기 위해 구성된 태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은 오랜 기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 채 22일 사회보호법 폐지안과 단계적인 개선안 모두를 전원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처럼 의견이 갈라진 데에는 태스크포스팀 내 법률적 관점을 가진 학자들과 인권적 관점을 가진 시민단체 관련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 동안 사회보호법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 온 인권단체들은 이날 오후 3시 전원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회의 참석차 입장하는 위원들을 상대로 항의시위를 열고,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김덕진 활동가는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에서도 당론으로 폐지를 결정했는데, 국가인권위에서 폐지 권고를 내리지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폐지와 개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국가인권위를 비판했다. 또한 “민약 개정 권고안이 통과된다면 이는 사회보호법 폐지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위원장들 비롯한 몇몇 위원들이 (2면에 계속)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1 1년전 기대와 허탈한 현재

1년 전 느꼈던 감격과 설렘이 아직도 생생하다. 재야 인권변호사 출신 정치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정도로 한국사회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역시 인권변호사라고 불리던 이들이 국정원장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반세기 넘게 이 땅을 율아메었던 인권탄압의 굴레가 곧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지금은 허탈함과 실망감이 크다. 서슬퍼런 국가보안법도 여전히 있고, 노동자와 농민들의 생존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태로운 지경이다. 지난 1년 동안도 과거 정권과 마찬가지로 인권을 지키기 위해 많은 이들이 희생을 치러야 했다. 외국인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고, 한진중공업의 김주익 위원은 목숨까지 내던졌다. 농민들도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고소도로 통행로를 막으면서까지 자신들의 절박한 처지를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이경혜 열사는 자결을 통해 한국 농민뿐만 아니라 전세계 농민들의 절박한 현실을 호소했다. 핵폐기물로부터 생명과 환경을 위협받은 부안주민들은 매일 밤 촛불을 들고 시내로 모여야 했다. 상도동 철거민들은 공권력뿐 아니라 사설진압부대에 포위된 채 외로운 싸움을 해야 했다. 송두율 교수도 국가보안법이라는 분단과 반인권의 사슬이 얼마나 한국사회를 옥죄고 있는지 실감해야 했다.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힌 수백만 명은 경제인으로서의 권리를 정지당했다.

이처럼 대통령 한 사람을 당선시키는 것으로 회복될 정도로 한국사회의 반인권적 관습과 제도는 허술하지 않았다. 지난 겨울 대선에서의 승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끝인 줄 알고 착각했다. 결국 한해 동안 우리는 자유와 권리는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며 좌절해야 했다.

그러면 극복대상은 무엇인가? 정치적으로는 군사독재정권에 뿌리를 둔 보수야당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을 다수당으로 만든 국민들이 궁극적인 인권의 장애물이라 할 수 있다. 한국사회를 짓누르는 인권침해의 주범은 정치인들이나 관료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해온 국민들, 즉 지난 반세기동안 반인권적 이데올로기와 패러다임에 젖어 살아온 대다수 국민들이다.

한국사회 곳곳에 내재한 반인권의 굴레를 벗어버리지 못하면 인권현실은 개선되기 힘들다는 것을 올 한해 동안 뼈저리게 실감해야 했다. 그 중 가장 시급히 극복해야 할 대상이 언론이다. 반인권적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주류언론에 인권이란 딱 하나의 의미만 갖는다. 그들만의 인권, 즉 언론의 자유뿐이다.

인권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언론으로 인해 노무현 정권의 인권정책은 번번이 좌초됐다. 언론이 인권현실을 외면하고 왜곡시키기 때문에 많은 인권운동가들이 거리로 나섰다.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었기 때문이다. 인권운동차원에서 언론개혁운동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장호순님은 순천향대 신문방송학 교수입니다.)

##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15일 ~ 12월 22일)

1. 상황이 어찌 돼도 “파병은 GO”?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후세인 체포로 미군의 점령 명분 더욱 줄어들어 정치적 저항 도리어 확대될 것”이라 경고(12.15)/ 후세인 체포 이후에도 이라크 차량폭탄공격 잇따라(12.15)/ 노무현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관계 장관회의, 내년 3월경 3000명 규모 추가 파병안 확정(12.17)

2. 노무현 집권 1년 노동성적표  
노사정위원회, 노동계 법질서 지키고 경영계 손배가압류 자제한다는 내용의 선언적 합의문 발표...민주노총 “노동자 분신사살 내몬 손배가압류 해결책 없는 공허한 합의문”이라 맹비난(12.17)/ 노무현 정권 집권 첫째 구속된 노동자 204명, 사흘에 2명 풀로 구속되었다고 민주노총 밝혀...김영삼·김대중 정권과 비교해 61%와 14% 늘어나(12.22)

3. 교육 불평등, 갈수록 태산  
교육인적자원부,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 사이 유학간 초·중·고교생은 모두 1만132명”(12.15)/ 경기침체 장기화로 서울고교 수업료 못 낸 학생 1만9161명으로 크게 늘어...실업률은 한 학교당 무려 100명 넘어(12.19)/ 한국노동연구원, “7살 이하 미취학 어린이 일주일에 28.8시간 사교육 받는다”고 밝혀(12.21)

4. 제발 이렇게만 해다오!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 개인정보 3개영역 네이스에서 분리해 학교별 서버로 운영키로(12.15)/ 헌법재판소, 광주교도소측이 392일간 수용자에게 가족수감 등 계구 착용케 한 것은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침해”라며 위헌 결정(12.18)/ 미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 판타나모 미군기지에 수용된 660명 테러용의자들에게 변호인 접견권과 미국 사법제도 접근권 허용하라고 판결(12.18)/ 국회 정보위, 내년도 국정원 예산안에서 대공수사 관련 예산 150억원 줄이기로(12.18)/ 서울지법, 음주운전으로 사람 치어 재판에 회부된 미군 2사단 소속 살리나 병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 선고(12.19)

(11면에서 이어짐) 불참해 2주 뒤로 결정이 미뤄졌다. 이처럼 국가인권위가 사회보호법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 정당 및 국회는 사회보호법 폐지에 적극적인 나서고 있다. 지난 8월말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에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이, 지난 21일에는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각각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둔 상태. 한나라당은 나아가 22일 오전 정책의장단 회의를 열고 ‘사회보호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오늘 오전 이주영 인권위원장이 당 정책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제사법위 일정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연내에 폐지를 추진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임국현)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12월 24일(수)

제 248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법무부 징벌·계구 개선안 한계 많다

### 연속징벌·가속수감 폐지...민간측 의견 제대로 반영 안해

23일 법무부가 공청회를 열고 수용자 인권침해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징벌과 계구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법무부 개정안은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요소를 곳곳에 포진시키고 있어 비판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8월 교정실무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정 테스크포스 팀'(아래 TF 팀)을 구성해 징벌과 계구 제도의 개정 방향을 논의해 왔다. TF 팀에는 민변의 이상희 변호사와 인권운동사랑방 유혜정 상임활동가 등 3명의 민간위원들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법무부 안은 이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당히 후퇴된 안이었다.

우선, 징벌 규칙과 관련하여 법무부 안이 △연속 징벌을 폐지하고 △금지 징벌의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금지 징벌을 잇달아 집행하는 연속 징벌은 지난해에도 두 명의 수용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징벌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금지 징벌은 기간 중 서신, 접견, 독서, 운동 등을 모두 금지하여 '감옥 안의 감옥'으로 불려왔다.

그러나 개정안은 △금지 징벌 과정에서 여전히 집필과 면회, 도서, 운동을 제한하고 있고 △모호한 개념의 사용으로 징벌의 남발을 불러올 수 있으며 △징벌이 결정, 집행되는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상희 변호사는 "징벌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인 만큼 징벌을 부과할 만큼의 안전 및 질서를 해할 행위가 분명히 존재하여야 하는

데, 법무부 안에서는 군데군데 명확하지 않은 개념들이 쓰여 징벌이 과도하게 쓰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징벌규칙안 중 '다중을 선동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징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선동'의 구체적인 행위가 규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TF팀의 민간위원들은 "수용자 가족들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개정안에 징벌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징벌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법무부는 "징벌 위원회에 지역 인권관련 전문가를 참여케 하라"는 이들의 제안마저 거부했

다. 기존의 징벌위원회는 수용자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교도소 측이나 교도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불복제도로서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

계구와 관련하여도 가속수감을 폐지하는 등 일부 진전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소란방지용 안면보호구의 유지 △긴 사슬의 존속 △계구 사용 요건의 불분명함 등 계구가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징벌의 수단으로 기능할 여지를 여전히 남겨뒀다. 천주교인권위원회의 김덕진 활동가는 "수용자들에게 신체적 압박과 정신적 모멸감을 주는 계구를 사용하기에 앞서, 수용자에 대한 중점적인 관찰이나 보호실 수용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날 발표된 법무부안은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갖고 있어 민간위원들의 제안방향에 합치된 시행령과 행형법 개정의 필요성이 아울러 부각되었다. (이진영)

## 파병동의안, 끝내 국무회의 통과

### 비상국민행동, '국민 의사에 반하는 반민주적 결정' 비난

정부의 추가 파병 동의안이 23일 끝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동 의안 처리 절차가 국회 국방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게 됨에 따라 정부의 파병결정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국회가 쥐게 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국무회의를 열어 파병동의안을 의결하고, 24일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3000명 이내의 추가 파병 부대가 내년 4월부터 그해 말까지 이라크 현지에 머물게 된다. 부대의 지휘권은 한국 육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게 부여되며, 예상되는 2300억의 파병비용은 전액 한국이 부담한다.

파병부대는 키르쿠크가 포함된 이라크

북부 아타민 지역에 파병돼 현지 경찰 육성을 비롯한 재건·치안활동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22일까지 진행된 한미협상을 통해 확정됐다.

한편,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소속 단체들은 이날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파병동의안의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집회를 동시다발로 개최했다. 비상국민행동 공동대표 홍근수 목사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파병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스스로 민주주의정부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무회의가 파병안을 통과시키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파병동의안이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비상국민행동은(☞2면에 계속)

##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 거부권도 인권

### 영석고, "경례 거부자는 안 받는다"...헌법 기본권 우선돼야

경기도 의정부시 영석고등학교가 종교적인 이유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수 없다고 밝힌 응시생을 불합격 처리해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석고등학교는 이 학교에 응시한 ○중학교 3학년 박모 씨에 대해 성적과 관계없이 '국가, 사회, 학교 등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종교 및 기타 이념을 가진 학생은 불합격 처리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지난 15일 불합격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의정부지회 등 8개 단체들과 전교조 경기지부는 지난 20일과 22일 잇달아 성명을 발표, "특정 종교를 이유로 학생을 불합격시킨 학교측의 처사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교육받을 권리,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자 학교 측은 박 씨의 '종교' 때문이 아니라 그의 '국가관' 때문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를 이유로 학생의 교육권까지 박탈한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홍보부의 정운영 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생명이 없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우상숭배로 보고 거부해 왔으며 실제 거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우상숭배로 보는 것은 일반 기독교계도 마찬가지"라면서 "그렇지만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실제 학생의 교육권을 박탈한 경우는 76년 대법원까지 갔던 김혜여교의 사례를 제외하곤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76년 대법원도 학교측 손 들어줘

76년 대법원(재판장 이일규 대법관)은 김혜여자고등학교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학생 6명을 제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우상을 숭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종교적인 신념을 그 처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나라의 상징인 국기의 존엄성에 대한 경례를 우상숭배로 단정하고 그 경례를 거부한 원고들의 행위자체를 처분의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나아가 일부 학생들의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국기에 대한 경건한 마음까지 상하게 하여 학교질서에 혼란을 가져올 염려가 있으므로 학교측이 이들을 제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정운영 씨는 "당시 대법원 판결은 국가주의가 종교에 준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던 시대적 상황하에서 나왔던 것"이라며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동일한 일이 되풀이된 데 대해 어이없어했다.

송기춘 교수(경남대 법행정학부)도 "학교가 동일한 국가관을 학생들에게 요구하거나 자신의 종교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사립학교라고 할지라도 그 규정은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구속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미 판례는 경례 거부권 인정

반면 미국에서는 이미 1943년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할 수 있는 것도 헌법적 기본권이라는 판례가 확립된 바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월터 바네트 대 웨스트 버지니아 주교육위원회' 사건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학생들을 학교에서 내쫓을 수 있도록 한 웨스트 버지니아 국경경례법이 무효라고 선언했다. 잭슨 판사는 당시 판결문에서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 어떤 관리도 정치, 조국에, 종교 또는 기타 의견이 갈리는 문제에 있어서 정통성을 부여할 수 없으며, 시민들에게 그들이 품고 있는 신념을 말이나 행동으로 고백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는 90년대 중반 보스턴 라틴 스쿨의 12세 소년 데이비드 스피리출러가 "모두를 위한 자유와 정의가 보장되지 않는 한, 충성의 맹세는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위선적인 선언"에 불과하다며 '충성의 맹세'(Pledge of Allegiance)를 거부해 징계위기에 처했을 때 학교측의 징계를 철회시키는 결정적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다.

지금도 연방대법원에서는 국기를 바

라보며 국가에 대한 충성을 서약하는 '충성의 맹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두고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올 8월 덴버 연방지법도 공립학교 학생과 교사에게 충성의 맹세를 요구하고 있는 콜로라도 주법의 잠정 봉쇄를 결정했다. 이 같은 소송이 이어지는 것은 9·11 테러 이후 애국주의 물결을 타고 '충성의 맹세'가 국가적 수준에서 강요되자 이에 저항하는 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주의에 대한 성찰로 나아가야

이처럼 국기에 대한 경례와 국기에 대한 맹세의 강요는 종교의 자유뿐 아니라 국가주의를 거부하는 양심의 자유와도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 영석고 사건은 학교교육을 통해 국가주의가 일상적으로 강요되고 헌법재판소가 준법서약서마저 합헌이라고 결정하는 우리 사회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자리잡힌 것은 1950년 국무총리의 통첩과 문교부의 국기에 대한 예절에 관한 지시를 통해서였다. 일제 식민지시대 일장기에 대한 경례와 황국신민의 서사 암송을 강요당했던 우리가 해방 후 대상만 바꾸어 고스란히 폐습을 유지시켰던 것. 1970년대 박정희 유신독재를 거치면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마저 강요됐다. 평화인권연대 최정민 활동가는 "개인의 내심을 제도교육이나 국가가 외부로 표현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폐습에 대한 비판은 우리 사회에서 금기에 속한다. 지난 5월 유시민 의원은 "국기에 대한 경례 등은 군사파시즘과 일제 잔재이며 민주공화국에선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는 발언으로 호된 흥역을 치렀다. 송기춘 교수는 "준법서약서 합헌 결정에서 제시된 의견 역시 오랜 기간 동안 국가교육을 '잘' 받은 덕으로 볼 수 있다"며 "국기에 대한 맹세는 이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경내)

(☞1면에서 이어짐) 곧장 비상대기체제에 들어갔다. 정대연 기획국장은 "지속적인 반대집회 개최는 물론 국방위원회가 열리는 날부터 단식농성 돌입, 국회의원 전원 면담 등을 통해 파병반대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국현)



###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④ - 부안대책위 자원활동가 이경미 씨 **"부안의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김종규가 오늘 임시군의회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이번에도 등원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등원을 거부하면 생활보호자들이 돈을 못 받게 될 거라고 김종규는 협박을 합니다. 하지만 그놈한테 주민들 회유하려고 뿌릴 돈은 있나 봅니다..."

부안 버스터미널 앞에 멈춰선 방송차량에서는 연신 김종규 부안군수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핵반대를 상징하는 노란색 홍보물로 치장된 방송차 운전대에는 네 살 박이 아들을 옆에 태운 30대 아주머니가 타고 있었다. '핵폐기장 백지화·핵발전 주방 범부안군민 대책위'에서 홍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이경미 씨다.

낮에는 방송차에서, 밤에는 촛불집회로

부안에서 태어나 지금껏 살고 있는 부안 토박이 경미 씨는 진서면에서 유기농 벼농사를 짓고 있다. "95년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유기농에 관심이 많았어요. 세탁기 안 쓰고 손빨래하고 기름보일러 대신 장작을 때는 생활이 그때부터 시작됐지요." 첫 아이를 낳고 환경을 생각해서 천 기저귀를 쓰려고 했는데 병원에서는 일회용을 고집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쓰레기를 만들게 되는 것을 보고 스스로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싶었어요." 그런 그녀에게 핵폐기장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었다.

군수가 유치 신청 기자회견을 한 7월 11일, 경미 씨는 이웃들과 마찬가지로 큰 충격을 받았다. 이를 전 대책위 대표와의 면담에서도 염려할 필요 없었던 군수의 말을 철저히 믿고 있었던 참이었다. "처음에는 자기 맘대로 신청한 군수가 미워서 다들 일어섰지요. 핵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잘 몰랐어요."

7월 26일부터는 부안수협 앞 광장에서 촛불집회가 열리기 시작했다. "언론에서는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이대로 두면 핵폐기장이 들어설 참이니 너무 답답했어요. 주민들이 정확한 상황을 알려면 다같이 모여야 했지요. 모이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누가 부탁하지도 않았지만 그때부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다.

"시작할 때는 길어야 석 달이라고 생각했어요"라며 경미 씨는 살며시 웃어 보였다. 하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경미 씨는 부안수협 앞 반핵민주광장에서 촛불을 밝혀야 했다. 낮에는 방송차를 몰고 거리로 나섰다. 대학생들 몇 명과 이웃 아줌마들이 함께 했다. 저녁에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반핵 깃발을 나눠주고 직접 만든 선전물을 뿌렸다. 남편이 공무원이라서 깃발을 내걸지 못했다고 미안해하는 아줌마, 남편이 경찰인데도 촛불집회에 나가겠다고 해서 부부싸움이 날 뻔한 집도 봤다. "읍내라면 안 가본 곳이 없는데 핵폐기장 찬성하는 주민은 딱 한 명밖에 못 봤어요."

경찰폭력에 아이들까지 상처

8월 23일 전주 집회에서 경미 씨는 전경이 내리친 방패에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다. 이빨 5개가 부러져 나갔고 허리에는 군화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혔다. "아줌마라고 해서 봐주지 않더군요. 지시에 따라야만 하는 그 20대 청년들 가슴에도 평생 상처로 남겠지요."

경미 씨의 가장 큰 걱정은 아이들이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 동요를 부르면서 놀 나이에 반핵출정가를 부르고 저녁때 전경들이 나타나면 옆에 가서 욕을 하기도 한다. "아이들 사이에 제일 심한 욕이 예전에는 '김종규보다 나쁜 놈'이었는데 지금은 '노무현같은 놈'이에요. 아이들도 공이 노무현에게 넘어갔다는 걸 아나 봐요."

경미 씨가 겪은 고통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농민회 간부였다가 대책위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남편에게 지난달 수배가 떨어졌다. 경미 씨는 부안성당에 갇혀 지내게 된 남편 몫까지 해야 했다. 매일 촛불집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새벽 1시. 장작불까지 꺼져 차가운 방바닥에 아이들을 눕혀야 했고, 아침이 되면 잠이 덜 깬 아이들을 방송차에 태우고 또 돌아다니

야 했다. 여섯 살 박이 아들이 다니던 유치원도 그만 다니게 할 수밖에 없었다. 아흔이 넘는 아버지가 위독한데도 막내아들인 남편은 찾아갈 수도 없게 됐다.

"핵만 아니면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천 번도 넘게 들었어요." 하지만 열심히 한다고 이웃들이 아이 웃과 장작도 챙겨주고 김장까지 대신 해주 큰 힘이 됐다. 일년 농사를 건너뛰었다고 쌀을 가져다 준 이웃들도 있었다. "예전에도 친한 이웃기간이었지만, 이제는 더 가까워졌어요."

"돈 먹여 찬성자 모으고 다녀요"

지난 10일 산업자원부의 발표에 대해 경미 씨는 속임수라 잘라 말한다. 산업자원부가 "주민투표를 거쳐 다른 지역에서도 새로 유치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발표하자 여러 언론에서는 "사실상 백지화"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

"지금도 미장원에서 아줌마들 상대로 그릇 선물하는 사람들, 찬성 서명만 하면 1인당 3만원 준다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네요." 군수측이 조직하고 있는 이른바 '핵폐기장 유치단'에 이름만 달면 매달 60만원을 준다는 소문도 돈다. 공공근로하는 영세민들에게는 "촛불시위 나가지 말고, 노란 옷 입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한다. "누가 돈을 먹었는지 이웃들끼리는 다 알지요. 없는 것도 서러운데 이웃들한테 눈총까지 받게 하다니 얼마나 비열해요?" 게다가 정부는 다른 지역 유치 신청도 받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곳으로 가면 똑같은 문제가 생길 거예요. 에너지 정책이 바뀌어야 하는 건데, 부안 주민들 힘만으로는 안되지요."

"내년엔 가족과 바다를 보고 싶어요"

부안대책위는 지금 위도가 바라보이는 격포에서 올해 마지막날 '핵념 축제'를 열 준비를 하고 있다. 부안군이 해마다 열었던 '해념 축제'를 지역분위기 핑계로 열지 않자, 주민들이 이름을 바꿔 개최에 나선 것. 그날 이들은 저무는 2003년을 바라보며 핵 없는 2004년을 기대하는 촛불을 들 참이다. 경미 씨도 그 자리에 설 것이다. "내년에는 남편과 자식들과 함께 바다를 바라보고 싶어요." (강성준)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12월 25일(목)

제 248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인권활동가 30명 시위 도중 연행

### 국회 안 "4대 인권사안 통과 반대" 시위...밤늦게 모두 풀려나

연말연시의 분주한 분위기를 틈타 민주주의와 인권을 절박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국회를 향해 인권활동가들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24일 오전 11시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전국 27개 인권단체 소속 활동가 30명은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과병동의안, 집시법 개악안, 테러방지법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등 인권 4대사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표결 처리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인권활동가들은 국회 후생관 앞에 모여 "국회는 인권을 짓밟지 마라"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과 4대 인권사안의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국회 본관 앞 계단까지 침묵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시위가 시작되자마자 국회 경비대와 직원들이 출동해 시위행렬을 가로막고, 참가자들을 강압적으로 연행하기 시작해 결국 10여분만에 30명 전원이 경찰서로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취재 중이던 여기자에게 목살을 퍼붓는 등 과잉진압에 나서 활동가들과 기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연행자들을 방배, 강서경찰서 등 6개 경찰서로 5인씩 분산 수용해 시위참가 사유와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벌였다. 이날 연행된 다산인권센터 노영란 활동가는 "인권 4대사안의 국회 통과를 안 그래도 심각한 인권현실을 더욱 후퇴시키게 될 것"이라며 "이번 시위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인권사안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연행된 인권활동가들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강제 지문날인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수사자료표에 찍히는 지문날인을 전원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사실상 수사가 종결된 상태에서도 연행자들을 몇 시간 동안이나 경찰서에 붙잡아뒀다. 결국

### 경찰조사에서 지문날인 거부하고도 풀려났다

24일 국회 안에서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인권활동가 30명은 신원확인서와 수사자료표에 지문날인을 하지 않고서도 전원 풀려났다. 그 동안 합당한 법적 근거 없이 신원확인서류와 수사자료표에 지문날인을 일괄 강제해온 경찰 관행에 맞서 이를 거부한 인권활동가들이 전원 석방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지문채취불응) 조항에 따르면,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신원확인서류'에 지문날인을 요구할 수 있어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게까지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일은 위법이다. 다산인권센터 운영위원 김철준 변호사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신원확인서류에 지문날인을 하지 않고 풀려난 것은 당연할 일"이라며 "이번 조치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관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 변호사는 "신분증이 없다고 해서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피의자에게 영장없이 지문을 강제 채취하는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문조사 외의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입건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문 채취를 거부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지문채취불응)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지난해 9월 서울지법이 이 조항이 영장주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

또한 법무부령에 의한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2조는 '수사자료표'에 형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국가보안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 40여개 법률 위반 피의자에 대해 지문날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이에 해당하는 피의자들도 1)혐의 없음, 2)공소권 없음, 3)죄 안 됨, 4)각하, 5)참고인 중지 항목에 해당하면 지문날인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인권활동가 8명은 '불구속입건' 처리되고서도 수사자료표에 지문을 찍지 않고 풀려나왔다. 이날 시위로 연행됐던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형이 확정되지 않는 피의자에게 법원의 영장도 없이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며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경찰조사시 지문날인 반대와 관련한 자세한 지침은 지문날인반대연대 (<http://finger.jinbo.net>)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진영)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⑤ <끝> -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정은일 사무국장

# "복지대책은 걸음마 수준이고 편견의 벽은 강고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겨울은 난방비 부담에다 일감마저 줄어들어 1년 중 가장 냉혹한 계절이다. 하지만 혹한의 거리 한켠에 몸을 누일 수밖에 없는 노숙자들에게 겨울은 생과 사의 기로에서 힘겨운 사투를 벌여나가야 하는 시간이다. 이렇듯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양극화된 사회의 비인간적인 폭력을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노숙자들의 인권을 보듬기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다.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아래 전실노협)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정은일 목사가 바로 그 사람.

"예수도 기득권 세력에 맞서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서 싸웠지 않습니까? 가장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종교적 양심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는 IMF 위기 이후 노숙자들이 대거 늘어나자 이듬해인 98년 이 일에 뛰어 들었다. 그가 다섯 명의 상근자와 함께 이끌고 있는 전실노협은 그해 5월 노숙자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대책 수립을 위해 설립돼 현재 쉼터나 자활지원센터 등 개별 단체가 해내기에 벅찬 실무자 교육이나 정책 수립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보이지 않는 노숙자들도 많다

최근 정부 집계로는 전국에 4200명 정도의 노숙자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정 사무국장은 잘라 말한다. 한곳에 주로 모여있는 노숙자들만 통계에 잡히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담이 늘까봐 노숙자 규모를 축소 보고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 "요즘에는 무료 급식 시간 등에 관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어 굳이 모여 있지 않으려는 노숙자들이 많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규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요."

나아가 그는 노숙자의 의미를 정부가 너무 좁게 규정짓고 있다고 지적한다. 유엔은 '홈리스'(homeless)를 집이 없는 사람이나 임시보호시설 거주자 외에도 안정된 주거나 직업이 없는 사람,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주거에 사는 사람

까지 포괄하여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썸방, 쪽방촌, PC방 등에서 거처하는 일세를 내는 사람들도 언제든 거리로 나앉을 수 있는 (잠재적) 노숙자로 봐야 합니다." 영등포, 용산 등 서을 쪽방촌의 쪽방 수만 최소 3500여 개. 최근에는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 실업자나 카드빚에 물려 거리로 나온 신용불량자들마저 노숙자 대열로 들어 서고 있다.

'4대 권리' 확보가 가장 중요한 대책

그러나 정부의 노숙자 보호지원 대책은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쉼터 등 응급구호체계는 어느 정도 갖추어졌지만, 목욕시설이나 '드롭 인 센터'(Drop-in Center)와 같은 이용시설의 확충, 사회보장체계와의 연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으며, 전문적인 사회복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는 쉼터의 문제도 여전히 있다. "상황이 이러하더라도 우리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에 안 들어온다고 해서 미입소자들을 자활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낙인찍어서는 안되지요."

정 사무국장은 노숙자들을 특별집단으로 취급하기보다 전반적인 사회복지 체계 내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노숙자로서의 진입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주거, 의료, 교육, 노동의 4대 권리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노숙자의 자활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노숙자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회보장체계의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구조적 빈곤이 점차 심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안정된 교육기회와 인적 지원망을 얻기 힘든 빈곤층 아이들을 위한 정기 무료 건강검진 등 지원체계의 구축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주소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현실도 문제다. "먼저 긴급급여를 제공하면 쪽방이라도 마련해서 주소지 등록을 할 텐데, 주소지부터 마련해 오라는 식으로 정부의 방침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범죄집단으로 보는 편견의 벽 두터워 정 사무국장은 지난 6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노숙자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과 싸우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노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위험한 인물로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은 세월의 두께만큼이나 더 두터워졌다는 것. '치안' 중심으로 노숙자문제에 접근해온 정부 정책에도 간혹 터지는 노숙자의 범죄사건을 다루는 언론이 노숙자 전체를 범죄집단처럼 몰아가는 것도 그런 편견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남한테 사기치고 남 후리는 나쁜 사람들은 절대 노숙자가 되지 않는다"고 그는 단호히 말했다. 오히려 노숙자는 '범죄의 주체'라기보다 '범죄의 대상'이 되기 일쑤이며, 실령 생활고에 못 이겨 범죄를 저지른다 해도 생계형 범죄는 범죄가 아니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사회가 죄인이지 그 사람들이 뭐 잘못이 있겠습니까? 노숙자 중에는 무연고자나 고아 출신이 많습니다. 대물림된 빈곤과 가족해체, 교육기회 박탈 등으로 노숙자로 내몰린 사람들을 꺼안지는 못할망정 그들을 집단적 희생양 삼아 공격해서야 되겠습니까?"

노숙자들 스스로 권리 찾아 나서야

얼마 전 한 노숙자 지원단체가 당사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노숙자들의 개인 정보를 빼곡이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는 노숙자를 존엄성을 가진 인격체로서가 아니라 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 정 사무국장은 "이쪽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노숙자들의 요구와 바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숙자들을 대상화하지 말고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또 그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겠다는 이야기에 그는 머쓱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제가 뭐 고생입니까? 노숙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고생이죠."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중간사>

## 절망의 우물에서 길어올린 희망의 두레박

격랑과 시름해 온 2003년의 배가 곧 닻을 내리고 정박할 준비를 하고 있다. 때로는 광풍이, 때로는 순풍이 찾아오지 않는 해가 있겠는가. 올해는 유달리 격랑과 아픔의 연속이었다.

올 한해 우리의 마음을 묵직하게 짓눌렀던 절망의 기억들은 참으로 많다. 새해 벽두 우리에게 두산중공업의 한 늙은 노동자, 배달호 씨의 분신 소식이 날아들었다. 자신의 몸에 불을 당기기 이를 전, 그는 "아빠가 해 준 게 없어 너무 미안하다"며 작은딸을 껴안고 어깨를 들썩었다고 한다. 그 뒤를 이어 10월에는 김주익, 이용석, 이해남 씨가 손배·가압류와 노조탄압에 항거하며 자신의 몸뚱아리를 내던졌다. 이들의 죽음은 소유권에 짓눌린 노동기본권이 이 땅에서 가장 천대받는 인권이라는 사실을 뼈아프게 깨우쳐주었다.

3월에는 "이라크인의 절반은 어린이"라는 양심의 외침을 짓는 미국의 폭탄이 기어이 이라크로 향했다. '침략과 학살의 무법지대'로 변해버린 이 세계에서 한국정부와 국회는 참락군의 파병을 결정했다. 그 후 우리는 낯선 외국군의 총부리 앞에서 초점을 잃은 이라크 아이들의 눈동자와 어린 아들의 주검을 꺼안은 채 고개를 떨군 아버지, 원인 모를 질병과 정신적 고통으로 본국으로 후송되는 미군병사들의 모습을 '충격과 공포' 속에서 지켜봐야 했다.

추악한 전쟁이 낳은 악몽은 이라크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팔레스타인에서도, 아프간에서도 민간인과 평화운동가들은 학살군의 표적이 되어 숨겨졌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서도 가슴을 찢

르는 송곳 같은 소식들이 꼬리를 물었다.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달리던 대구 지하철은 화마에 휩싸인 채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송두율 교수는 이 땅의 민주주의 수준을 과소평가했다는 단 하나의 죄로 37년만에 찾은 고국땅에서 차가운 철창 아래 갇히는 신세가 됐다. 몸이 부서져라 일해온 노동자들은 고장난 몸을 이끌고 기계처럼 혹사당해야 했다. 멕시코 칸쿤에서는 한 농민이 자신의 심장에 칼을 꽂았고, 한 치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절망의 안개 속에서 가난한 가족들은 죽음의 배에 몸을 실었다. 목숨 걸고 세상에 나오던 장애인들은 정말 목숨을 잃어야 했으며, 이제는 쓸모 없어졌으니 나가라는 매몰찬 요구에 이주노동자들은 목을 매달았다.

그 사이 이제야 겨우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 민주주의와 자유를 함치나 되돌리려는 시도들이 폭주기관차처럼 내달렸다. 국경원과 경찰 권력에 인권을 진상하려는 테러방지법안과 집시법 개악안은 의사봉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그야말로 힘으로 굴복시키는 데 여념이 없다. 시장의 권력과 그 권력의 유지를 위한 억압적 질서를 '나라경제'나 '국익'이니 '공공의 안전'이니 하며 기꺼이 옹호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우리는, 절망적인 현실에 몸부림치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 민중들과 만났다. 우리가 부둥켜안아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며 서로의 가슴을 데워준 연탄불 같은 사람들을 만났다. 반년째 노란색 반핵 깃발이 힘차게 펴

2003년 12월 27일(토)  
제 248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리고 있는 부안의 주민들은 밀실행정을 밟먹듯 하는 정부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줬다. 부안도 안 되지만 다른 지역으로 핵폐기장이 옮겨가서도 안 된다는 그들에게서 조약한 넘비즘을 뛰어넘은 진정한 연대의 가치를 본다.

국적을 뛰어넘어 평화지킴이가 되어 이라크로 날아간 사람들, 파병반대 '소망의 나무'를 함께 키운 시민단식모임, 휴식을 포기하고 주말 거리를 달린 사람들, 학교의 탄압에도 반전뱃지 달고 열심히 학교간 아이들, 이라크에 총대신 꽃을 보내자며 전국 유랑을 시작한 '평화비행' 단원들, 군대 복귀를 거부한 한 이등병의 모습에서 평화의 씨앗이 우리 내부로부터 움트고 있음을 본다.

그리고 오늘도 '전과자' 조석영 씨는 피감호자들의 인권을 위해 사회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앞 1인시위에 나섰다. 동료를 떠나보낸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은 비정규직 철폐의 그날을 위해 꺼져가는 노동기본권에 생명을 걸고 나서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권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는 당연한 진실을 온몸으로 증거하고 있는 이들의 힘겨운 싸움들도 이어지고 있다.

올 한해 품었던 우리들의 소망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긴 '겨울터널'의 끝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다가오는 2004년에도 우리는 아주 긴 호흡으로 서로를 일으켜세워야 한다. 하지만 절망의 우물에서 희망의 두레박을 길어올리는 민중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의 질서가 조금씩 건설되고 있음을 본다.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 이달의 인권 (2003년 12월)

## 흐름과 쟁점

### 1. 침략동맹군 추가파병 임박

이미 이라크 파병방점을 굳혀놓고 규모와 시기를 조율하던 노무현 대통령이 4당 대표와 만나 전투병을 포함한 3천명 규모의 추가 파병안에 합의하면서 파병 일정이 본 궤도에 올랐다(12/14).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 미군에 생포되자(12/14) 부시 미 대통령은 "이라크 역사에서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대는 끝났다"며 기세를 올렸다(12/14). 파월 미 국무장관도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후세인의 체포가 파병국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있기를 희망한다"며 파병압력을 높였다(12/15). 이에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후세인 체포로 미군의 점령 명분이 더욱 줄어들어 정치적 저항은 도리어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고(12/15) 실제로 바그다드에서 차량폭탄공격이 잇따랐다(12/15). 그러나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관계 장관회의에서는 내년 3-4월경 3000명 규모의 추가 파병안이 확정됐고(12/17), 대미협의단은 미국에서 파병 시기와 주둔지, 지휘체계 등을 논의했다(12/18).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회원 1500여명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주변에서 시도한 '파병반대 인간띠잇기 대회'를 경찰력으로 무산(12/20)시킨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라크 키르쿠크 지역을 파병지로 하는 추가파병 동의안을 최종 확정해(12/23) 국회에 제출(12/24),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편 아르무사 아랍연맹 사무총장은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라크에는 외국병력의 주둔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외세가 민주주의 교육을 시킨다는 명분으로 이라크 문제에 개입하고 나선다면 이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파병국에 경고했다(12/24).

### 2. 이주노동자들의 서러운 겨울농성

지난달에 이어 강제출국 위협에 몰린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이 계속됐다. 농성 중이던 재중동포 김모 씨가 체불임금을 받으려 나갔다가 서울 거리에서 동사됐으며(12/9) 남양주시 성생공단에서 방글라데시인 자카리아 씨가 콘테이너 박스 안에서 심장마비로 숨졌다(12/9). 그럼에도 경찰과 단속반은 감리교회관에서 농성 중이던 이주노동자 13명을 강제 연행했고(12/10),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개최된 '강제추방으로 죽어간 이주노동자 추모제' 후 이어진 거리행진에서 한국인 농성지원단 2명을 연행했다(12/18). 하지만 안성기, 송강호 등 영화배우와 감독 102명이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12/17)하는 등 각계의 지원이 이어졌다. 지난달 시작된 이주노동자들의 농성도 이달 내내 서울 명동성당, 대한성공회 대성당, 한국기독교연합회관, 기독교백주년기념관과 경남, 대구, 안산, 마석 등 전국 곳곳에서 이어졌으나, 한국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 3. '악법제조기' 국회에 맞선 인권활동가들

지난달 국회 행자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악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위헌논란과 법사위 일부 의원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법안심사제2소위 추가심의에 부쳐졌다(12/8). 하지만 개악안은 학교·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 주요도로 행진 금지, 지나친 소음규제 조항 등을 그대로 둔 채 법사위를 결국 통과해(12/11) 본회의 통과 위기에 놓였다. 테러방지법안도 법안심사제2소위 심의에 부쳐져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에 인권의 후퇴를 저지하려는 인권단체들의 저항이 이어졌다. 인권활동가들은 세계인권선언 55주년 기념식에서 노 대통령의 축사에 맞서 항의 침묵시위를 벌였고(12/10), 나흘동안 매일 저녁 국회 앞에서 1인 촛불시위를 이어나갔다(12/15). 이어 인권활동가 30명이 국회 본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돼 8명이 불구속 입건됐다(12/24).

### 논평

- '차라리 식물국회'를 바라게 하지 말라(12. 6)
- '바보 노무현'의 인권 패러독스(12. 13)
- 파병저지의 희망은 거리에 있다(12. 20)
- <중간사> 절망의 우물에서 길어올린 희망의 두레박(12. 27)

### 인권이야기

- 박하순 - 농성장들을 돌며 든 생각(12. 3)
- 고근에 - 지하철 단상(12. 9)
- 조이여울 - 폭력의 낭만화(12. 16)
- 장호순 - 1년전 기대와 허탈한 현재(12. 23)

### 인권정보자료

- 「해외한국기업인권현황 백서」(12. 5)
- 「2003년 국감 주요상임위 자료집」(12. 12)

### 특집 -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 ①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 조석영 씨 - "올해는 사회보호법 폐지되리라 믿었는데..."(12. 18)
- ② 평등노조이주노동자부 사설 지부장 - "노예의 노동, 이주노동자 스스로 해결해야죠"(12. 19)
- ③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이호영 씨 - "가시적 성과 없어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12. 20)
- ④ 부안대책위 자원활동가 이경미 씨 - "부안의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12. 24)
- ⑤ 전국실직노숙자대책중교시민단체협의회 정은일 사무국장 - "복지대책은 걸음마 수준이고 편견의 벽은 강고합니다"(12. 25)

### 2003년 10대 인권소식

- 네이스 반대투쟁, 정보인권수호 대장정 닦아라
- 미 이라크전 개시...한국군, 침략군 일원 자처
- 반핵 깃발 아래 하나된 부안, 밀실행정에 경종
- 송두울 37년만의 귀국, 유린당한 양심
- '2003년 전태일들', 노동탄압에 항거
- 강제추방에 내몰린 터널 속 이주노동자
- 농민 이경해 씨의 죽음, 자본의 탐욕을 찌르다
- 국정원이 쓰아올린 감시위성, 테러방지법 재추진
- 잇단 생계형 자살, 빈곤이 부른 손짓
- 집시법 개악 위기...'집회금지법' 비난 확산

올 한해 인권하루소식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힘없고 가난한 이들의 죽음과 분노의 날이 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1월 6일자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드림>

# 2003년 10대 인권 뉴스

**올해의 열장을 소개합니다~!**

**10위 개악집시법** 9위는 생활고자살 8위는 테러 방지법제정 시도

**7위 자본의 탐욕** 6위 이주노동자탄압

**4위 색깔론머녀** 3위 막무가내 핵폐기장 2위 이라크학살

**1위 네이스~!**

이상으로 2003년 생각만해도 열나장나는 10대 열장이었습니다. 내년에는 2004년, 천사같이 착해지기를~!

농민 이경해, 머라 박아~, 선무당 77해교, 차가 알라, 5위 노동탄압, 부안~ 사랑해 내사랑 거부 하면, 죽도록 딸겨야!, USA 세계 평화를 위해 죽일게!

법적 근거 없이 공공부양증?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12월 29일(월)

호 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속보>

## 집시법 개악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집시법을 사실상 '집회시위 금지법'으로 바꾸는 집시법 개악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오후 5시 35분경 본회의 표결에 붙여진 집시법 개악안은 출석의원 191명 중 찬성 136명, 반대 37명, 기권 18명으로 법사위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이에 앞서 천정배 의원(열린우리당)이 집회 제한 사유를 좀더 엄격하게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 임종석 의원(열린우리당)이 찬성 발언을 했으나 출석의원 188명 중 찬성 61명, 반대 121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개악 법률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집회 중 사소한 방어적 폭력사태가 일어나더라도 이른바 '폭력시위'라는 구실로 당해 기간의 집회 시위가 금지되고 △주요도로에서는 질서유지인이 배치되는 평화행진도 금지되며 △초중고 학교시설과 군사시설 주변 집회가 금지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집회도 금지되는 등 집회시위의 자유가 사실상 말살된다. 또 집회 신고를 한 달 전부터만 받도록 해 미리 일정과 장소를 정해야 하는 대규모 집회 준비가 어렵게 됐다. 한편 외국 공관 주변에서는 공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소규모 집회와 휴일 집회만 가능하게 됐다. 이 법률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즉각 성명을 발표해 "도심에서는 집회시위를 하지 말고 사람도 없는 산 속이나 바다 가운데 가서 집회 시위 하란 이야기"라며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하위법을 과연 지켜야 하는지 심각한 의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또 "앞으로 집회시위 제한과 집회시위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격화되는 모든 책임은 정치권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또 민중연대, 민변 등 '집시법 개악에 반대하는 민중·시민·인권·노동단체'들도 긴급성명을 발표해 "정부의 정책이나 국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생존권적 위협을 받고 있는 민중들이, 항상적으로 차별을 당하고 있는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은 집회와 시위뿐이었다"며 "반민주, 반인권 독소조항들로 가득 찬 집시법이 공포 절차를 거쳐 발표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강력한 불복종운동과 함께 "경찰 당국의 침탈에 맞서 지속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고, 내년 국회에서 집시법 재개정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에 반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국회법사위에 제출했다. 이어 같은 달 28일 국가인권위 제1소위도 "개악안의 일부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를 침해한다"며 국회의장에게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또 29일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민변 최병모 회장, 서울대 김진균 명예교수, 불교인권위 진관 대표 등 사회각계 원로·대표들이 집시법 개악안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100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중요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단 한차례의 공청회나 여론 수렴 과정이 없이 입법을 강행하고 있고, 입법 논의를 시작하지 단 하루만에 기습적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면서 국회의원들에게 부결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인권하루소식

## 합본 21호 색인